국제학술심포지엄

# 관동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 100년: 진실·책임·기억

- 일시: 2023년 8월 30일 (수) 10:00~18:00
- 장소: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
- 주최: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 주관: 동북아역사재단 / 협조: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제학술심포지엄

# <관동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 100년: 진실 · 책임 · 기억>

1. 공동주최 :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2. 주　　관 : 동북아역사재단 / 협　　조 :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
3. 일시/장소 : 2023.8.30.(수) 10:00~18:00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

| | | | |
|---|---|---|---|
| 10:00~10:40 | **개막식** | | **사회: 남상구(동북아역사재단)** |
| 10:00~10:30 | 개회사 | 이영호 이사장(동북아역사재단) | |
| | 환영사 | 김인걸 위원장(국사편찬위원회), 안병우 원장(한국학중앙연구원), 한시준 관장(독립기념관) | |
| | 축사 | 유기홍 국회의원 | |
| 10:30~10:40 | 준비 및 휴식 | | |
| 10:40~11:50 | **제1부 진실** | | **사회: 배영미(독립기념관)** |
| 10:40~11:00 | 발표1 | 성주현(1923제노사이드연구소) |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희생자 명부에 대한 현황** |
| 11:00~11:20 | 발표2 | 정러징(鄭樂靜, 중국 원저우대) | **학살·수용·송환 : 관동대지진 기간 일본의 중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력 및 배척사건** |
| 11:20~11:50 | 토 론 | 김강산(성균관대), 니시무라 나오토(西村直登, 일본 도시샤대) | |
| 11:50~13:20 | 점심식사 | | |
| **13:20~15:00** | **제2부 책임** | | **사회: 장신(한국학중앙연구원)** |
| 13:20~13:40 | 발표1 | 이재승(건국대) | **식민지 제노사이드** |
| 13:40~14:00 | 발표2 | 사이토 가즈하루(斎藤一晴, 일본복지대) | **난징사건과 관동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을 연결시켜 생각하다** |
| 14:00~14:20 | 발표3 | 가토 게이키(加藤圭木, 일본 히토쓰바시대) | **식민지 지배책임과 조선인학살;일본인의 역사인식** |
| 14:20~15:00 | 토 론 | 공준환(서울대), 김인덕(청암대) | |
| 15:00~15:20 | 휴식 | | |
| **15:20~17:30** | **제3부 기억** | | **사회: 서종진(동북아역사재단)** |
| 15:40~16:00 | 발표2 | 이진희(미국 이스턴일리노이대) | **하버드발 간토학살 역사왜곡과 학살 부정론에의 대응** |
| 16:00~16:20 | 발표3 | 정영환(일본 메이지가쿠인대) | **관동대지진 때의 조선인 학살 부정론 비판** |
| 16:20~16:40 | 발표4 | 이소훈(경북대) | **혐오와 인종주의: 이슬람 혐오를 중심으로** |
| 15:20~15:40 | 발표1 | 이은정(경희대) | **2000년 이후 한국 현대예술에서 역사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소고** |
| 16:40~16:50 | 휴식 | | |
| 16:50~17:30 | 토 론 | 이현경(서강대), 가토 나오키(加藤直樹, 프리랜서) | |
| **17:30~18:00** | **마무리 발언 : 김민철 (국사편찬위원회)** | | |

<国際学術シンポジウム>

# 関東大震災朝鮮人・中国人虐殺100年: 真実・責任・記憶

1. 共同主催: 国史編纂委員会、独立記念館、東北亜歴史財団、韓国学中央研究院
2. 主　管: 東北亜歴史財団　/　協調: 関東虐殺100周期追悼事業推進委員会
3. 日時: 2023.8.30.(水) 10:00~18:00
4. 場所: ソウルグローバルセンタービル国際会議場

| | | | | |
|---|---|---|---|---|
| 09:00~10:00 | 受付 | | | |
| 10:00~10:30 | **開幕式** | | **☆司会: 南相九(東北亜歴史財団)** | |
| 10:00~10:30 | 開会辞<br>歓迎辞<br><br>祝　辞 | 李栄昊(東北亜歴史財団　理事長)<br>金仁杰(国史編纂委員会　委員長), 安秉宇　院長(韓国学中央研究院), 韓時俊(独立記念館　館長)<br>柳基洪(国会議員 ) | | 20分 |
| **10:30~10:40** | **準備** | | | **10分** |
| 10:40~11:50 | **第1部 真実** | | **☆司会: 裴姈美(独立記念館)** | |
| 10:40~11:00 | 発表1 | 成周鉉(青岩大) | 関東大震災における朝鮮人犠牲者名簿の現状 | 20分 |
| 11:00~11:20 | 発表2 | 鄭樂靜(温州大) | 虐殺、収容、送還:<br>関東大震災において日本の中国人労働者への暴力·排斥事件に関する研究 | 20分 |
| 11:20~11:50 | 討論 | 金剛山(成均館大), 西村直登(同志社大) | | 30分 |
| **11:50~13:20** | **お昼** | | | **90分** |
| **13:20~15:00** | **第2部 責任** | | **☆司会: 張シン(韓国学中央研究院)** | |
| 13:20~13:40 | 発表1 | 李在承(建国大) | 植民地ジェノサイド | 20分 |
| 13:40~14:00 | 発表2 | 斎藤一晴 ( 日本福祉大) | 南京事件と関東大震災における朝鮮人・中国人虐殺を結びつけて考える | 20分 |
| 14:00~14:20 | 発表3 | 加藤圭木(一橋大) | 植民地支配責任と朝鮮人虐殺:日本人の歴史認識の課題 | 20分 |
| 14:20~15:00 | 討　論 | ユンジュウンファン(ソウル大), 金仁徳(青岩大) | | 40分 |
| **15:00~15:20** | **休憩** | | | **20分** |
| **15:20~17:30** | **第3部 記憶** | | **☆司会: 徐鍾珍(東北亜歴史財団)** | |
| 15:20~15:40 | 発表1 | 李ジンヒ(イーストンイリノイ大) | ハーバード発関東虐殺の歴史歪曲と虐殺否定論への対応 | 20分 |
| 15:40~16:00 | 発表2 | 鄭栄桓(明治學院大) | 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否定論批判 | 20分 |
| 16:00~16:20 | 発表3 | 李ソフン(高麗大) | 嫌悪と人種主義 :イスラム嫌悪を中心に | 20分 |
| 16:20~16:40 | 発表4 | 李ウンジョン ( 慶熙大 ) | 2000年以降、韓国現代芸術における歴史の扱い方についての感想 | 20分 |
| **16:40~16:50** | **休憩** | | | **10分** |
| 16:50~17:30 | 討論 | 李ヒョンギョン(西江大), 加藤直樹 ( 作家) | | 40分 |
| **17:30~17:35** | **準備** | | | **5分** |
| **17:35~18:00** | 総合討論および纏め : 金ミンチョル (国史編纂委員会) | | | |

#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관동대지진 학살사건 100년을 맞이하여 동북아역사재단이 주관하고,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역사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학술심포지엄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번 심포지엄의 개최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23년 9월 1일, 일본 간토지방에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날조된 유언비어가 유포되었고, 이로 인해 계엄령이 선포된 가운데 학살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장한 군과 경찰, 자경단이 무고한 조선인 6,661명을 비롯하여 중국인 700여명, 그리고 일본인 사회주의자와 노동운동가, 일반 민중들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이 학살사건을 은폐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뜻있는 연구자와 양심적인 시민들의 협력과 노력으로 역사적 사실과 실태가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했고, 희생자를 기리는 추도비가 건립되고 위령제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2013년 관동대지진 90년을 맞아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단행본으로 간행한 바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100년을 목표로 연구와 학술사업을 3개년 사업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교양서와 정책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이번에는 자료집으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관련 번역 자료집』(1)을 간행했는데, 한국에서 처음으로 나온 자료집이라 하니, 얼마나 무심했는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 정책저널 『동북아역사포커스』 6호 (2023년 가을호)를 '관동대지진 100년, 조선인 학살 은폐와 진상규명의 역사'로 꾸몄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건에 대한 연구와 역사교육이 진척되어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계승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시의 학살사건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인들에 대한 차별과 민족문제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본사회에서는 반성은커녕 자이니치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와 증오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사회의 보수우경화와 함께 역사 수정주의론과 역사부정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 양국 관계는 개선되고 있지만 역사부정론이 고조된다면 역사문제로 인한 갈등은 다시 되풀이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관동대지진 학살사건을 ‘진실’, ‘책임’, ‘기억’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은폐된 역사적 진실을 드러내는 작업은 실증적이고 과학적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살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을지 규명하는 작업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과 책임규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역사부정론이 확산되고 있는 오늘날,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것인지 그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한국과 일본, 미국과 중국에서 오신 여러 석학들께서 이 사건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어두운 역사적 사건을 극복하고 동아시아의 화합과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위해 국내외에서 참여하신 발표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각 주제의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고민하시며 연구하신 결과를 오늘 공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문을 읽고 토론을 준비해주신 토론자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오늘 토론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술회의를 기획하고 추진해온 기획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팀은 동북아역사재단을 비롯하여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전문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수개월 동안 준비해 주셨습니다. 2023년, 100주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개최되는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이 동아시아의 우호증진과 평화에 기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 8월 30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이영호

# 開会辞

皆さま、お元気ですか。

関東大震災虐殺事件から100年を迎えまして、東北亜歴史財団が主管し、国史編纂委員会、独立記念館、韓国学中央研究院などの歴史機関の共同で主催する国際学術シンポジウムに参加している皆さまを歓迎いたします。とくに今回のシンポジウムの開催に大きな関心をよせてくださった＇ともに民主党＇の柳基洪議員に感謝申し上げます。

今から100年前の1923年9月1日、日本の関東地方で大きな地震が発生しました。このとき朝鮮人を対象にした捏造された流言飛語が流され、これによって戒厳令が公布されているなかで虐殺事件がおきました。武装した軍隊と警察、自警団が罪のない朝鮮人6、661人をはじめ、中国人約700人、そして日本人社会主義者と労働運動者、一般民衆を無惨にも虐殺しました。いままで日本政府はこの虐殺事件を隠蔽し、事実究明のための調査も妨害しました。しかし、使命をもっている研究者と良心的な市民の協力と努力で歴史的な事実と実態が徐々に明らかになり、犠牲者を悼む追悼碑が建立され、また慰霊祭が行わ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東北亜歴史財団では、2013年に関東大震災90年を迎えて国際学術会議を開催し、その結果を単行本に刊行しました。2021年からは、100年を目標に研究と学術事業を3ヶ年計画で行っています。毎年国際学術会議を開催し、教養書と政策リポートを発刊しました。今回は資料集として『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関連翻訳資料集(１)』を刊行しましたが、韓国では初の資料集ということです。どれほど無関心であったかという現実の前に痛ましい心情です。また、政策ジャーナル『東北亜フォーカス』 6号(2023年秋号)を「関東大地震100年、朝鮮人虐殺の隠蔽と真相究明の歴史」というテーマで企画しました。これからもこの事件に関する研究と歴史教育が進展され、歴史の真実を記憶して継承していくことに貢献するように願っております。

当時の虐殺事件は日本帝国による強制占領期の植民地朝鮮人に対する差別と民族問題から発生しました。にもかかわらず、今日、日本社会では反省ところか、在日韓国人を含めて外国人に対するヘイトスピーチとヘイトクライムが増加しています。日本社会の保守右傾化とともに歴史修正主義論と歴史否定論も拡大しております。最近、日本と韓国の両国関係が改善していますが、歴史否定論が高潮すると、歴史問題による葛藤は再び繰り返されるでしょう。

今回のシンポジウムでは、関東大震災虐殺事件を＇真実・責任・記憶＇という観点から検討します。隠蔽された歴史の真実を明らかにする作業は実証的で科学的に継続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虐殺に対する責任を誰に、如何に問うかを究明する作業も進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して真実と責任究明もできずに歴史否定論が拡散している今日、この事件をどのように記憶して継承すべきか、その方法を模索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今日、韓国と日本、アメリカと中国から来られた多くの碩学がこの事件を多角的に検討し、暗い歴史事件ををを克服し、東アジアの和合と未来指向的関係構築のための糸口を見つける契機をつくってくださるように期待します。

今回のシンポジウムのために、国内外から参加している発表者に深く感謝申しあげます。各主題の専門家として長く研究された結果を今日共有してくださって感謝します。また、発表文を読んで、討論を準備してくださる先生方にも感謝申し上げます。醒めた頭と熱い思いで今日の討論が豊かになることを願っております。そして学術会議を企画してきた企画チームの苦労に深く感謝します。企画チームは東北亜歴史財団をはじめ、国史編纂委員会、独立記念館、韓国学中央研究院の専門家で構成され、数ヵ月間準備してきました。2023年、100周期を迎える時点で開催される今回の国際シンポジウムが東アジアの友好増進と平和に貢献する意義深い場になることを祈願します。

改めて感謝申し上げます。

2023年 8月　30日

東北亜歴史財団　理事長　李　栄　昊

# 환 영 사

오늘 우리는 지난 100년 전에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단지 조선인, 중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본 관동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 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집단학살의 전모와 실태는 물론이고 가해의 책임 주체조차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채 100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분투해 온 학자와 활동가들에 의해 은폐돼 왔던 사건의 일부 조각들이 하나하나 밝혀져 왔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진실에 다가가기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피해구제, 배·보상,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라는 과거청산의 국제적 기준은 여전히 먼 세계의 이야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숱한 희생과 시행착오를 겪으며 인류사회가 성취한 이 규범이 왜 100년 전 관동 집단학살에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최근에는 집단학살이라는 사실조차 부정하려는 궤변들이 '하나의 견해'니 '생각의 자유'니 하는 외투를 뒤집어쓰고서 일부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만듭니다. 일본사회 내에서는 정부의 공식·비공식적인 지원을 받아 '역사전'이라는 이름하에 그들의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부정하는 주장이 여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본 학자는 이를 두고 1930년대의 '사상전'이 2000년대의 '역사전'으로 탈바꿈했다고 우려 섞인 진단을 한바 있습니다. 국제사회를 향해 공공연하게 학살과 범죄를 부정하는 논의들도 세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일본의 식민주의와 침략사를 부정하는 주장들이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귀향 수첩](1936)으로 유명한 시인이자 탈식민주의 사상가인 에메 세제르는, ([식민주의에 대한 담론](1955)에서, '어떤 식민주의도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라고 갈파한바 있습니다. 인종주의, 폭력과 차별에 기초하고 있는 식민주의는 모두 범죄입니다. 어떠한 미사여구를 동원하더라도 식민주의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관동 집단학살과 같은 제노사이드는 '식민지 제노사이드'라는 신조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일본 권력층의 책임과 가해자들의 범죄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개념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오늘 우리가 100년 전의 사건을 기억하고 재해석하려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20세기의 대량폭력과 집단학살의 배경에는 인종주의와 식민주의가 작동해왔습니다. 그것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2001년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세계회의'가 채택한 더번선언에서부터, 2021년 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보장의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이행기 정의 조치와 식민지 상황에서 자행된 심각한 인권 및 국제인도법 위반의 유산 해결]에 이르기까지 비록 더디지만 과거 유산을 극복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거세지는 역사의 반동에 쉬이 지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노력들에서 큰 위안과 힘을 얻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지난 50년간 생물학에서 이룬 눈부신 과학적 성취가 이 인문학적 통찰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자리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역사학과 사회학, 법학뿐만 아니라, 문학, 미학, 저널리즘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학술과 실천에서 분투하고 계시는 여러 분들을 모셨습니다. 국경과 민족을 넘고, 세대를 이어 우리가 안고 있는 해묵은 숙제를 해결하는 일에 함께 하신 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뜨겁게 환영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3년 8월 30일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김 인 걸

# 歓迎辞

今日、我々は過去100年前の悲劇的な事件を記憶するためにこの場に集まりました。単に朝鮮人、中国人という理由だけで日本の関東地域で数多くの人々が集団殺害されました。しかし、依然として集団虐殺の全貌と実態はもちろん、加害の責任主体さえ明確に究明できないまま100年を迎えました。

これまで真相を暴くために奮闘していらっしゃった学者及び活動家の方々によって隠蔽されてきた事件の一部が一つ一つ明らかになってきました。しかし、完全な真実に近づくにはまだ不十分な部分は多くあります。「真実究明と名誉回復、被害救済、賠償·補償、責任者の処罰、再発防止」という過去清算の国際基準は依然として遠い世界の話にとどまっています。数多くの犠牲と試行錯誤を経て人類社会が成就したこの規範が、なぜ100年前の関東集団虐殺には適用されずにいるのか残念な限りです。

最近では集団虐殺という事実さえ否定しようとする詭弁が「一つの見解」だとか「考えの自由」だとかいう外套を被って一部メディアを通じて広がっている事実は我々をより一層憂鬱にさせます。日本社会の中では、政府の公式·非公式な支援を受けて「歴史戦」という名の下、彼らの過去の植民地支配と侵略戦争を否定する主張が世論を主導しています。ある日本の学者はこれについて1930年代の「思想戦」が2000年代の「歴史戦」に変貌したと憂慮混じりの診断をしています。国際社会に向けて公然と虐殺や犯罪を否定する議論も広がっています。2010年代半ばからは国際機関を通じて日本の植民地主義と侵略の歴史を否定する主張が組織的に広がっています。

『帰郷ノート』(1939)で有名な詩人で脱植民主義思想家のエメ・セゼールは、『植民地主義論』(1955)において、「いかなる植民主義にも免罪符を与えられることはできない」と喝破しています。人種主義、暴力と差別に基づいている植民地主義はすべて犯罪です。いかなる美辞麗句をもっても、植民地主義が正当化されることはできません。従って関東集団虐殺のようなジェノサイドは「植民地ジェノサイド」という新造語を生むことができると存じます。これは日本の権力層の責任と加害者の犯罪性を総合的に規定した概念になるでしょう。このような試みは、今日我々が100年前の事件を記憶し、再解釈しようとする理由の一つでもあります。

20世紀の大量暴力と集団虐殺の背景には、人種主義と植民地主義が働いてきました。それが残した傷を癒すため、国際社会は2001年「人種主義、人種差別、外国人排斥及び関連する不寛容に反対する世界会議」が採択したダーバン宣言から、2021年国連「真実、正義、賠償、再発防止の保証の促進に関する特別報告書」の「移行期の正義措置と植民地状況で行われた深刻な人権及び国際人道法違反の遺産解決」に至るまで、遅ればせながら過去の遺産を

克服するためにたゆまぬ努力を傾けています。激しくなる歴史の反動に簡単に疲れたり絶望したりしないのは、まさにこのような努力から大きな慰めと力を得るからであるでしょう。

過去を記憶することは未来のためのことです。過去50年間の生物学において成し遂げた目覚ましい科学的成就が、この人文学的洞察が事実であることを証明しています。今日この場は我々の未来のための場だと存じます。より良い未来を作るために歴史学と社会学、法学だけでなく文学、美学、ジャーナリズムの領域に至るまで学術と実践のため奮闘していらっしゃる皆様にお越しいただきました。国境と民族を越え、世代を継いで我々が抱いている長年の宿題を解決する仕事に共にしてくださった発表者と討論者、そしてご参加くださったすべての方々を熱く歓迎し感謝の意をお伝えいたします。

2023年　8月　30日

国史編纂委員会　委員長　金仁杰（キム・インゴル）

# 환 영 사

안녕하십니까?
독립기념관 관장 한시준입니다.
먼저 국사편찬위원회와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저희 독립기념관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학술심포지엄 “관동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 100년 : 진실·책임·기억”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여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김인걸 위원장님, 동북아역사재단 이영호 이사장님, 한국학중앙연구원 안병우 원장님과 학술심포지엄 개최에 협력해주신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 관계자분들과 많은 관심 가져주신 유기홍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23년은 관동대지진 학살사건이 발생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23년 일본 관동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의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퍼졌고 수많은 한인들이 일본의 군, 경, 민간인들에게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과 일본인 학살 피해자도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한 경계심이 한인 학살의 배경에 있었고, 학살은 독립운동을 더욱 촉발시켰습니다. 학살사건 소식을 접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즉시 피해실태 조사, 대일항의서 송부, 피학살동포 추도회 개최 등을 실시하여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듬해 김지섭 의거 또한 이 학살에 대한 항의와 분노를 담았습니다.
독립기념관도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관동대지진 학살사건 100년을 맞이하여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관동대지진 학살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여, 이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에서 역사, 국제법, 예술,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참여해 주신 덕분에 심도 깊은 논의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좋은 발표와 토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30일
독립기념관 관장 한 시 준

# 歓迎挨拶

お元気でいらっしゃいますか。
独立記念館の館長、韓詩俊でございます。

まず、国史編纂委員会と東北亜歴史財団、韓国学中央研究院、そして独立記念館が共同主催する国際学術シンポジウム「関東大震災朝鮮人·中国人虐殺100年:真実·責任·記憶」に参加してくださった国内外からの多くの先生にお会いできて嬉しいです。国史編纂委員会の金仁杰委員長、東北亜歴史財団のイ・ヨンホ理事長、韓国学中央研究院の安秉佑院長と学術シンポジウム開催に協力してくださった関東虐殺100周忌追悼事業推進委員会関係者の方々と多くの関心を持ってくださった柳基洪議員にも感謝いたします。

2023年は関東大震災虐殺事件が発生して100年目になります。1923年、日本の関東地方で発生した大地震の被害が広がる中、根拠のないデマが広がり、数多くの韓国人が日本の軍、警、民間人により虐殺されました。そして中国人と日本人の虐殺被害者も発生しました。

韓国の独立運動に対する警戒心が韓国人虐殺の背景にあり、虐殺は独立運動をさらに触発しました。虐殺事件のニュースに接した大韓民国臨時政府は直ちに被害実態調査、対日抗議書の送付、被虐殺同胞追悼会の開催などを行い、事件の真相を把握し、さらに国際社会にそれを知らせるために努力しました。翌年、金祉燮義挙もこの虐殺に対する抗議と怒りを込めたものです。
独立記念館もこのような努力の延長線上で関東大震災虐殺事件100年を迎え、今回の学術大会を通じて関東大震災虐殺事件の真実を明らかにし、責任を究明したうえ、これを記憶しようとします。

韓国、アメリカ、中国、日本から歴史、国際法、芸術、社会学など多様な分野の専門家に参加していただいたおかげで深く議論できると存じます。多くの先生方の良いご発表と討論をお願いいたし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023年　8月　30日
独立記念館　館長、韓詩俊

#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울 관악구 갑 유기홍 의원입니다.
<관동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 100년 : 진실·책임·기억>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주제의 행사를 준비해주신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독립기념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간토대학살 100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간토대학살은 1923년 터무니없는 소문으로 우리 동포 6천 명을 포함한 중국인, 그리고 일본인들이 무고하게 학살당했습니다. 과거사를 직시하여 다시는 이러한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진상 규명입니다. 벌써 100년 전에 수많은 조선인이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학살당했는데 도대체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지금 아무도 그 정확한 숫자를 모르고 있습니다. 당시 임시정부 독립신문에 6천여 명이라고 추정했던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입니다.

간토학살 100주년인 지금까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지질 않았고 그 실상이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 발의한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올해 간토 대학살 100주기를 맞아 국회 의석을 가진 모든 정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님들까지 100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 해주셨습니다. 이번 100주기를 맞아서 간토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제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되어 한국과 일본, 중국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교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활동과 노력으로 관동대지진 학살사건에 관한 연구와 역사교육이 조금씩 진척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제학술심포지엄을 통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과거사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라는 측면의 진전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 번 <관동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 100년 : 진실·책임·기억>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30일
국회의원 유 기 홍

# 祝 辞

お元気でいらっしゃいますか。

国会教育委員会所属のソウル冠岳区甲の議員柳基洪（ユ・ギホン）でございます。

「関東大震災朝鮮人·中国人虐殺100年:真実·責任·記憶」国際学術シンポジウムの開催にあたり、心からお慶び申し上げます。意義深いテーマの行事を準備してくださった独立記念館、東北亜歴史財団、国史編纂委員会、韓国学中央研究院の関係者の皆様に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

今年で関東大虐殺100年を迎えます。ご存知のように関東大虐殺は1923年、とんでもないデマにより我々の同胞6千人を含む中国人、そして日本人が無辜の罪で虐殺されました。過去の歴史を直視し、二度とそのような痛い歴史を繰り返さないために誓う努力が必要と存じます。

現在、最も急がれるのは真相究明です。もう100年前に数多くの朝鮮人が日本東京のど真ん中で虐殺されたのに一体何人も亡くなったのか今誰もその正確な人数は把握できていません。当時、臨時政府の独立新聞においては6千人余りと推定していたのが今我々が知っている数字です。

関東虐殺100年の今に至るまでに、政府レベルの真相調査が行われておらず、その実状は完全に明らかになっておりません。そこで私が代表発議した「関東大虐殺事件真相究明および被害者名誉回復に関する特別法」は必ず通過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今年関東大虐殺100年を迎え、国会議席を持つすべての政党、そして無所属議員を含め100人の議員が共同発議してくださいました。今回の100年を迎えて関東特別法が必ず通過できるよう最善を尽くさせていただきます。

国際学術シンポジウムが開催され、韓国と日本、中国の専門家が膝を突き合わせて交流するのは意味あることだと存じます。この場に参加された皆様の活動と努力により関東大震災虐殺事件に関する研究と歴史教育が少しずつ進んでいます。国際学術シンポジウムによって、韓国だけでなく日本でも歴史に対する「責任」と「反省」という側面からの進展があることを期待いたします。

もう一度「関東大震災朝鮮人·中国人虐殺100年:真実·責任·記憶」国際学術シンポジウム開催をお祝いし、ご参加くださった皆様の健康と幸福をお祈りいたし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023年 8月 30日

柳基洪（ユ・ギホン）

# 목 차

1.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희생자 명부에 대한 현황 ····· 21
- 성주현(청암대)

2. 학살 · 수용 · 송환 : 관동대지진 기간 일본의
중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력 및 배척사건 ····· 45
- 정러징(鄭樂靜, 중국 원저우대)

3. 식민지 제노사이드 ····· 89
- 이재승(건국대)

4. 난징사건과 관동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을 연결시켜 생각하다 ····· 121
- 사이토 가즈하루(斎藤一晴, 일본후쿠시대)

5. 식민지 지배책임과 조선인학살; 일본인의 역사인식 ····· 139
- 가토 게이키(加藤圭木, 일본 히토쓰바시대)

6. 하버드발 간토학살 역사왜곡과 학살부정론에의 대응 ····· 157
- 이진희(미국 이스턴일리노이대)

7. 관동대지진 때의 조선인 학살 부정론 비판 ····· 169
- 정영환(일본 메이지가쿠인대)

8. 혐오와 인종주의:이슬람 혐오를 중심으로 ····· 195
- 이소훈(경북대)

9. 2000년 이후 한국 현대예술에서 역사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소고 ····· 211
- 이은정(경희대)

국제학술심포지엄
관동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 100년: 진실·책임· 기억

#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희생자 명부에 대한 현황

**성주현**(청암대)

#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희생자 명부에 대한 현황

성주현(청암대)

## 1. 머리말

이 논문은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피해자의 명부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23년 일본 관동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 이른바 관동대지진 당시 일본의 군경과 자경단에 의해 학살된 조선인은 6천여 명에 달한다.[1] 올해는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100주년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이 6천여 명의 학살된 조선인의 명단을 제대로 발굴하지 못하고 지낸 지도 100주년을 맞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중국인 역시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으로 오해를 받아 700여 명이 학살되었는데,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조사하고 명단을 확보하였다.

대한민국은 조선인학살 당시는 일제 강점으로 인한 식민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상규명과 명부 파악은 불가능하였다. 그렇지만 해방 후에도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은 차치하더라도 희생자 명단 역시 파악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한다. 다만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관련 명단은 『일본 진재시 피살자 명부』(1권 109매, 290명)가 있다. 이 명부는 1952년 12월 15일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내무부 장관에게, 우리가 일제하에 일제로부터 침략을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 수집하라고 한 지시에 의해 작성된 바 있다. 그렇지만 이 명부는 2013년 7월 주일한국대사관을 신청사로 이전할 때 과거사 관련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2]

관동대지진 당시 언론에서는 희생된 조선인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였다. 첫째는 참사(慘死)이다. 참사의 의미는 '비참하게 죽음'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나는 대지진으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인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다. 당시 언론에서 표현한 '참사'는 이 두 가지 의미 중 어느 것으로 해석해야 할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는 '학살'이다. 이는 일본 군경과 자경단에 의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셋째는 '행방불명'이다. 이는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일종의 '실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실종은 대부분 '죽음'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행방불명 역시 희생된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

1) 관동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의 수는 자료마다 다르지만, 『독립신문』에서 발표한 6,661명을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 사법성은 231명, 『報知新聞』은 519명, 『讀賣新聞』은 300명, 『東京日日新聞』은 432명,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는 2,613명, 내각부 중앙장재회의는 최소 1,053명, 최대 9,484명으로 산정한 바 있다.

2) 이외에도 「삼일운동시 피살자 명부」 1권(217매, 630명 수록)과 「일정시 피징용자 명부』 65권(18,322매, 229,482명 수록)이 같이 발견되었다.

한편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희생자'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사용된다. <국어표준사전>에 의하면 '희생을 당한 사람' 또는 '사고나 자연재해 따위로 애석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을 뜻한다. <다음 한국어사전>에는 '어떤 일이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거나 다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어떠한 일이나 사건으로 인해 죽거나 다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참사, 학살, 상해를 당한 사람을 '희생자'로, 보다 넓은 의미에서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자살의 경우 1명이 확인되고 있는데, 희생자 범위에 포함하였다.

또한 본고는 희생자 명단을 파악하기 위해 『동아일보』·『조선일보』·『매일신보』 등 국내에서 발간된 당시 신문류, 『關東震災と朝鮮人_현대사자료(6)』(강덕상, 1963)·『関東大震災における朝鮮人虐殺の真相と実態』(일본 조선대, 1963)·『かくされていた歴史_關東大震災と埼玉の朝鮮人虐殺事件』(관동대진재 60주년 조선인 피해자 조사추도실행위원회, 1987) 등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관련 자료집, 『關東大震災 朝鮮人虐殺の記錄-東京地區別1100の證言』(西崎雅夫, 2020)의 증언집, 『극웅필경』(최승만, 1970)의 회고록, 『大正大震火災誌』(警視廳編, 1926)·『大正大震火災誌』(神奈川縣 警察部, 1926)·『東京震災錄』(東京市役所, 1926)·『橫濱市震災誌』(1926) 등 일본의 보고서류이며, 군마현 조도지(成道寺)와 구본지(九品寺)·사이타마현(埼玉縣)의 쇼주인(正樹院)과 조센지(常泉寺)의 추모비, 그리고 2013년 발견된 『일본 진재시 피살자 명부』 등을 활용하였다.[3)]

## 2. 문헌자료의 조선인 희생자

### 1) 『關東震災と朝鮮人』(관동대지진과 조선인)

이 문헌자료는 일본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연구자 강덕상(姜德相)과 금병동(琴秉東)이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40주년을 맞는 1963년 일본 미스쯔서방(みすず書房)에서 출판한 자료집이다. 『현대사자료』는 1~18권까지 발행되었으며, 그중 여섯 번째가 『關東震災と朝鮮人』(이하 『현대사자료』(6))이란 제목으로 발행되었다. 이 자료집은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과 관련하여 유언비어, 계엄령, 조선인학살 사례 등을 관문서를 비롯하여 신문, 증언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강덕상은 경남 함양 출신의 재일교포 사학자로 재일조선인과 관련된 역사를 60여 년간 연구하였다. 특히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의 진상규명에 대해 심혈을 기울였다. 『현대사자료』(6)에는 조선인 희생자 32명이 확인되고 있다.

### 2) 『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の眞相と實態』(관동대진재 조선인학살의 진상과 실태)

이 문헌자료는 일본 재일본조선인총연맹(총련) 계열의 교육기관인 조선대학교에서 1963

3)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희생자 명단은 2022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학술용역으로 파악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조사하는 과정에서 명단의 중복, 누락, 오탈자 등으로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희생자 명단은 기존의 자료와 앞으로 새로 발굴될 자료 등을 통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년에 발행한 자료집이다. 조선대학교는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40주년을 맞아 그 진상을 규명하고 학살 실태를 신문, 증언 등 관련 자료를 모아 이 자료집을 편찬하였다.『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の眞相と實態』에서는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는 33명이 확인된다.

### 3)『동아일보』

『동아일보』는 1923년 9월 1일 발생한 관동대지진 관련 기사는 9월 3일 첫 보도를 시작하여 1924년 3월까지 관련 기사를 게재되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은 관동대지진으로 인한 일본의 상황, 재일조선인의 안부 여하, 국내의 관동대지진으로 인한 이재조선인 의연금 모금 현황, 자경단의 조선인학살 재판 동향, 조선인학살 추도 현황 등이다. 이러한 일련의 기사에서 조선인 피해와 관련된 것은 8건이, 행방불명 7명, 참사 25명, 자살 1명으로 모두 33명의 명단이 확인된다.

### 4)『조선일보』

『조선일보』 역시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자 관동대지진의 참상, 재일조선인의 안부, 이재동포구제회 조직과 의연금 모금 현황, 희생자 추도회 등 관련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들 기사 중 조선인 희생자와 관련된 기사는 12건이 확인되고 있다.『조선일보』에 보도된 희생자는 행방불명 4명, 참사 41명, 자살 1명으로 모두 46명의 명단이 확인된다.

### 5)『매일신보』

『매일신보』는 조선총독부 기관지였지만,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의 생사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였다. 대부분의 기사는 일본의 피해상황을 보도하였지만, 식민지배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일정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선인의 구호와 안위 여부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보도하였다. 이들 보도에는 귀환자와 행방불명에 대한 기사를 자주 게재하였다. 이중 행방불명과 관련된 기사는 3건으로, 21명이 명단이 확인된다.

### 6)『かくされていた歷史_關東大震災と埼玉の朝鮮人虐殺事件(감추어진 역사)』

이 문헌자료는 관동대지진 60주년을 맞아 사이타마현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을 조사 연구하는 시민단체가 '관동대진재 60주년 조선인 피해자 조사추도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1987년 간행한 자료집이다. 사이타마현의 경우 1923년 9월 3일 이후 조선인 희생자가 발생하였는데, 이 자료집에서는 4건이 확인되고 있다. 사이타마현에서 희생자의 명단이 확인된 것은 김창, 구학영, 김일영, 강대흥 등 4명이다.

### 7)『극웅필경(極熊筆耕)』

『극웅필경』은 1923년 9월 관동대지진을 현장에서 겪은 최승만[4]의 회고록으로 1970년 간행되었다. 최승만은 관동대지진 당시 YMCA 총무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는 관동대지진

이 발생하고 조선인학살이 잇따르자 천도교청년회 박사직 등과 '이재동포위문반'을 구성하고 조선인학살에 대해 조사하였다. 당시의 조사 활동을 정리한 「일본 관동진재시 우리 동포의 수난」이라는 글을 1970년 3월 『신동아』에 발표하였으며, 이를 『극웅필경』에 재수록하였다. 『극웅필경』에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상황은 모두 29명이 확인되고 있다.

### 8) 기타 문헌자료

기타 문헌자료는 김도형의 논문 「관동대지진 한국인 피살자 명부 자료의 분석」(『북악사학』)이다. 이 논문은 주일본한국대사관에서 발견된 명부를 분석한 것이다. 명부는 1951년 말에서 1952년 1월 중순에 작성되었다. 이 논문 중에는 『東京日日新聞』(지방축쇄판), 『報知新聞』, 『法律新聞』, 「判決文」 등의 기사를 통해 조선인 희생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조선인 희생자 25명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 3. 증언 자료의 조선인 희생자

본 학술용역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명부 실태조사를 위한 증언 자료는 『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の記錄-東京地區別1100の證言』을 활용하였다. 이 증언집은 니시자키 마사오(西崎雅夫)가 저술한 것으로 일본인이 1100여 명의 증언 모아 책으로 발간한 것이다. 증언집에는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학살과 폭행으로 인한 중상, 구타 등 다양한 피해 상황을 수록하고 있다.

이 자료집의 조선인 피해 현황은 학살 26명, 폭행 등 상해 42명으로 모두 68명이다. 학살은 자경단원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일본도, 엽총, 곤봉 등 흉기를 사용하였다. 상해 역시 자경단원에게 폭행, 구타 등을 당해 중상을 입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68명의 희생자 중에는 다른 자료에도 중복된 경우가 적지 않다.

## 4. 추도비 자료의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 자료는 모두 4건으로, 군마현(群馬縣)과 사이타마현(埼玉縣)에 집중되어 있다. 추도비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는 20명의 명단이 확인된다. 군마현 후지오카시(藤岡市)

---

4) 본관은 해주(海主). 호는 극웅(極熊)·극광(極光)이다. 보성중학교와 경성 중앙YMCA 영어과를 졸업했다. 1917년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東京] 외국어학교 러시아과에 입학했다. 1918년 도쿄 조선유학생학우회에 참여하여 편집위원으로 기관지 〈학지광〉의 발행에 관여하는 한편, 유학생들의 문예잡지였던 〈창조〉의 동인으로도 활동했다. 1923년 도쿄 도요대학[東洋大學] 인도윤리철학과를 졸업했으며, 1929년까지 도쿄 조선YMCA 총무로 활동했다. 1929년 8월 미국으로 건너가 스프링필드대학에서 수학했다. 1930년 10월 귀국하여 조선YMCA의 기관지인 〈청년〉의 주간을 맡아보다가 1931년 1월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 조선YMCA 총무로 활동했다. 1934년 귀국하여 〈동아일보〉 잡지부장과 〈신동아〉 주간을 역임했다. 8·15해방 후 한국민주당에 참여했고, 미군정청 문교부 교화국장과 제주도지사를 역임했다. 그뒤 연희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인하대학교 교수와 제주대학교 총장을 역임했으며, 이화학당, 성균관대학교, 중앙여자중·고등학교, 근명상업중·고등학교 등의 재단에 관여했다. 저서로는 〈극웅필경極熊筆耕〉(1970)·〈바르고 옳게 살자〉(1983)가 있으며, 유고로 〈나의 회고록〉(1985)이 있다.

조도지(成道寺) 추도비 17명, 구혼지(九品寺) 1명, 사이타마현 조센지(常泉寺) 1명, 쇼주인(正樹院) 1명 등 모두 20명의 명단이 확인된다.

이상의 문헌, 증언, 추도비 등에서 확인된 조선인 희생자 명단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문헌, 증언, 추도비에 나타난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상황

| 자료명 | 희생자 수 | 명단 | 비고 | |
|---|---|---|---|---|
| 현대사자료 6 | 31 | 차태숙, 양순이, 류호영, 하석수, 이동근, 달 이, 김수근, 김수범, 김월빈, 이왕원, 민인식, 한용조, 박인도, 강양순, 이순봉, 민춘용, 신응헌, 홍기백, 박명도, 이일필, 최희덕, 오관근, 구학영, 강대흥, 예상곤, 김원달, 김 모, 김 모, ●월봉, 정 모, 김 모 | 姜德相 | |
| 도쿄 증언 1100 | 68 | 김재근, 차태숙, 이순풍, 이흥순, 이희원, 이희현, 손봉원, 한용기, 최규석, 변용창, 한봉구, 박인도, 김사봉, 이원석, 이건재, 김영일, 배동주, 최연재, 조창순, 민춘용, 민춘용, 조창순, 박경득, 조묘성, 조정수, 조정하, 김용택, 김승중, 박순일. 고봉아, 박수인, 홍홍예, 이현모, 장덕경, 장선당, 김태엽, 최 선, 김금류, 최병희, 임선일, 신창범, 김정석, 노●진, 이경식, 권의덕, 허연관, 박재춘, 박도선, 박경진, 이영수, 김희백, 고학이, 이홍중, 송학백, 봉허도, 구철원, 김주영, 문기출, 민병옥, 김인수, 권칠봉, 정섬준, 김봉화, 김위광, 성리●, 홍기태, 민인식, 이성구 | 西崎雅夫 | |
|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의 진상과 실태 | 33 | 이춘용, 조창순, 한합예, 김영일, 김금류, 김용택, 김승중, 박 익, 고봉아, 박수인, 최병희, 한용석, 김영일, 박 기, 최규석, 이순봉, 손봉현, 홍홍우, 김현모, 박 모, 봉 모, 이근영, 정기우, 민국길, 김시, 강대흥, 김동우, 정숙개, 정숙용, 전석필, 정 모, 임선일, 신창범 | 조선대학교 (일본) | |
| 관동진재 조선인 희생자 위령지비 | 17 | 조수규, 이상호, 남성규, 천상곤, 김삼선, 김일출, 정귀풍, 김두성, 김인유, 이만수, 김동원, 허성일, 김성동, 조건원, 김동인, 이재호, 김현 | 1924 | 群馬縣藤岡市成道寺 |
| | 17 | 조수규, 병상곤, 정황봉, 이만수, 김성동, 이재호, 이상호, 김삼선, 김두성, 조정원, 김철현, 남성규, 김일출, 김인유, 허성일, 김동인 | 1957 | |
| 봉호지장존위 현광도보리 | 1 | ●봉호 | 群馬縣 高崎市 九品寺 | |
| 東京日日新聞 | 3 | 홍기태, 김원달, 황종균 | | |
| 報知新聞 | 24 | 한봉구, 박인도, 김사봉, 이원석, 이건재, 김동원, 조정원, 김철진, 김백출, 남성규, 김인유, 허일성, 김성래, 김천선, 김두성, 조수구, 천곡야, 정귀봉, 묘동곤, 김주홍, 김인수, 정용이, 김동인, 이상호 | | |
| 법률신문 | 4 | 신명개, 최석근, 이재호, 차봉조 | 群馬縣 | |
| 극웅필경 | 29 | 김동원, 김철진, 조정원, 김백출, 남성규, 김인수, 허일성, 김성례, 김두성, 정귀봉, 묘동근, 김주홍, 조수구, 천곡야, 정용이, 김동인, 이상호, 김 창, 정기우, 박경득, 김재근, 조묘성, 조정수, 조정하, 박단수, 이해용, 정인숙, 최만봉, 진상영 | 최승만 | |
| 동아일보 | 21 | 김재근, 김홍삼, 김정근, 김홍엽, 김창석, 김순갑, 김삼쇠, 최준석, 김한권, 이기포, 유규석, 이철우, 배우홍, 노봉문, 서막동, 김동하, 임남식, 임창식, 유위동, 정인영, 민인식 | | |
| 조선일보 | 42 | 김교경, 정진영, 신영련, 정인영, 안계용, 김한주, 김도현, 김덕현, 김원준, 김석봉, 김재일, 한민훈, 김재근, 김홍삼, 김정근, 김순갑, 김삼쇠, 김한권, 최병준, 김규복, 이기표, 김창석, 서막동, 배후홍, 이철우, 노봉문, 류 석, 전민철, 이전국, 이금호, 교태철, 이열성, 정승현, 정현빈, 장동수, 김한제, 윤용학, 지장용, 권선규, 전필란, 이이동, 송기일 | | |
| 매일신보 | 21 | 송달준, 한규정, 김순용, 염서금, 임남식, 임창식, 임경환, 신기환, 이창성, 이인덕, 윤봉익, 이찬희, 오준영, 박일병, 조복룡, 염일항, | | |

| | | | |
|---|---|---|---|
| | | 박한극, 이상규, 경록, 홍종위, 김광현 | |
| 감추어진 역사 | 4 | 김창, 강대흥, 구학영, 김일영 | 琦玉縣 |
| 感天秋雨信士 | 1 | 구학영 | 琦玉縣 |
| 朝鮮人姜大興墓 | 1 | 강대흥 | 琦玉縣 |
| 계 | 316 | | 중복 포함 |

## 5.『일본진재시 피살자 명부』의 조선인 희생자

2013년 7월 주일 한국대사관을 신청사로 이전할 때 세 종류의 명부가 발견되었다. 하나는 『3·1운동시 피살자 명부』 1권(217매, 630명 수록)이고, 두 번째는『일본진재시 피살자 명부』 1권(109매, 290명 수록), 세 번째는『일정시 피징용자 명부』 65권(18,322매, 229,482명 수록)이다. 이들 세 가지 명부가 작성된 배경은 1952년 12월 15일 개최된 제109회 국무회의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①3·1운동 살상자, ② 관동진재 희생자, ③ 제2차대전 징용 ·징병자 수, ④ 왜정하 애국사상운동 옥사자, ⑤ 미곡약탈량, ⑥ 금은 보물 반출량 , ⑦ 국채보험금 채권적 성질의 것 등의 항목에 대한 조사와 집계를 내무부에 지시하였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무부에서는 그해 12월 16일자로, 일제에 의해 희생된 대표적인 사건인 ① 3·1운동, ② 관동진재, ③ 징용·징병, ④ 애국사상운동 옥사자 등 네 가지 분야에 대해 통계자료를 작성하라고 하였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은, 1953년 1월 5일부터 7일까지 일본을 공식 방문할 때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일본 수상에게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들이 받은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희생을 당하거나 혹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조사하는 일은 단시일에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방일 때에는 이 명부를 가지고 가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제2차 한일회담이 1953년 4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개최되었기 때문에, 이 기간에 한국 측 대표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일본 진재시 피살자 명부』에 수록된 인원들은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출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전쟁의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조사 가능한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에만 조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일본 진재시 피살자 명부』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이 경상남도라는 점은 이 지역에 행정기관이 온전히 남아있었다는 점도 있지만, 일제강점기 재일조선인들 가운데 경상남도 출신자가 많았다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일본 진재시 피살자 명부』에 관동대지진 때 일제에 의해 학살을 당한 290명이 실려 있지만, 이들 중에는 3·1운동 등 관동대지진과 관련이 없는 명단이 상당하다. 이를 걸러내면 실제 관동대지진과 관련된 명단은 205명이 관동대지진 희생자로 파악된다.

그런데『일본 진재시 피살자 명부』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점은 피살 연도가 잘못 기재된 것이다. 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따라 관동대지진 피살자 수는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명부에 의하면 1921년, 1922년, 1924년 등 관동대지진이 발생한 연도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피살 지역은 도쿄 혹은 요코하마(橫濱)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살 상황은 '피살', '타살', '총살', '타박상' 등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관동대지진 당시 학살 또는 상해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는 명부 작성 당시에 연도를 착각하여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진재시 피살자 명부』의 조선인 희생자는 <표 2>와 같다.

<표 2> 『일본진재시 피살자 명부』의 조선인 희생자 명단

| 자료명 | 피살자 수 | 이름 |
|---|---|---|
| 일본 진재시 피살자 명부 | 205 | 이익호, 정상조, 김유필, 백운수, 백우개, 백소달, 백달이, 임소봉, 박판준, 전판병, 전판암, 김명도, 백용덕, 최봉순, 이사중, 권일섭, 오의수, 박유신, 이삼석, 박덕수, 박명수, 최만수, 김만이, 이상권, 김개학, 김상호, 정군팔, 김호철, 김팔암, 김점암, 최대준, 김태암, 장상진, 박백흥, 박태선, 김권이, 장기선, 김말술, 박무학, 박서동, 박용술, 박봉선, 유형식, 김용호, 최병식, 이 속, 이판암, 이 당, 이손술, 정암우, 정성현, 정세윤, 이운조, 도기학, 도의환, 도갑기, 박영화, 박재룡, 이수문, 김우생, 장교순, 김순이, 조판은, 박희태, 김문환, 서학운, 서중이, 박순암, 윤석순, 김분남, 김지엽, 이달출, 이영흥, 김수진, 박학조, 안덕수, 김민수, 김석현, 오현주, 박경운, 신영섭, 최봉술, 김소선, 김영태, 신경운, 박지용, 박계운, 박호인, 박소출, 여현회, 여능암, 여종원, 조성준, 차학기, 한용선, 김달선, 이용갑, 이언창, 박쾌특, 박위특, 김팽제, 최덕용, 이도술, 안해조, 박도인, 이차석, 이천석, 김수범, 박남필, 최상근, 구학룡, 이관수, 이명수, 김호범, 장상규, 조성도, 송세팔, 구유덕, 심상백, 박경이, 김재수, 김말룡, 김소룡, 김진욱, 오덕수, 김목환, 오시조, 사태근, 김치두, 김상주, 이순양, 공우용, 설인백, 설오주, 문재수, 권갑문, 김재만, 김덕수, 이상도, 손우팔십, 우덕기, 강정순, 정태열, 이점문, 전용문, 유정식, 윤 길, 이을판, 신만조, 신우준, 조석하, 천맹수, 정병환, 정판암, 이광국, 이광명, 이판개, 이소개, 정경규, 심학봉, 심 모, 하 모, 장석진, 박수재, 박성재, 박소송, 정종목, 김정대, 김정백, 권왕석, 전을생, 전갑룡, 최억환, 최상기, 오효근, 정덕로, 김정수, 김윤근, 최문봉, 김홍대, 김우명, 김삼명, 김수진, 김악개, 조공국, 박백오, 오우성, 남만이, 강상백, 이차세, 진경만, 진학승, 박준봉, 박윤두, 이만희, 표기식, 전우식, 임우권, 임만권, 임수권, 남진갑, 전암천, 박경표, 권유지, 구학용 |

## 6.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중 중복 희생자

위에서 살펴본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중에는 중복된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자료집, 증언집, 회고록 등에서 보이고 있다. 또한 신문의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해 각 신문마다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중복된 경우가 적지 않다. 군마현 후지오카 조도지의 추도비의 경우 관동대지진 직후인 1924년 건립한 것과 이후 1954년에 건립한 것과 희생자가 중복되고 있다. 그런데 이 추도비 건립 시기가 30년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희생자 이름이 달리 기록되었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중

중복된 사례는 적지 않은데,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중 중복된 사례[5)]

| 번호 | 희생자 | 기록 자료 | 회수 | 비고 |
|---|---|---|---|---|
| 1 | 김재근 | 증언1100, 극웅필경, 동아일보, 조선일보 | 4 | |
| 2 | 차태숙 | 현대사자료, 증언1100 | 2 | |
| 3 | 박인도 | 현대사자료, 증언1100, 報知新聞 | 3 | |
| 4 | 민인식 | 현대사자료, 증언1100, 동아 | 3 | |
| 5 | 민춘용 | 현대사자료, 증언1100 | 2 | |
| 6 | 구학영 | 현대사자료, 감추어진 역사, 대사관 | 4 | 구학용 |
| 7 | 강대흥 | 현대사자료, 진상과 실태, 감추어진 역사, 추모비 | 4 | |
| 8 | 김원달 | 현대사자료, 東京日日新聞 | 2 | |
| 9 | 조창순 | 진상과 실태, 증언1100 | 3 | |
| 10 | 김영일 | 진상과 실태, 증언1100 | 2 | |
| 11 | 김용택 | 진상과 실태, 증언1100 | 2 | |
| 12 | 김승중 | 진상과 실태, 증언1100 | 2 | |
| 13 | 고봉아 | 진상과 실태, 증언1100 | 2 | |
| 14 | 박수인 | 진상과 실태, 증언1100 | 2 | |
| 15 | 김금류 | 진상과 실태, 증언1100 | 2 | |
| 16 | 최병희 | 진상과 실태, 증언1100 | 2 | |
| 17 | 신창범 | 진상과 실태, 증언1100 | 2 | |
| 18 | 임선일 | 진상과 실태, 증언1100 | 2 | |
| 19 | 조수규 | 추도비(1924), 추도비(1957) | 2 | |
| 20 | 조수구 | 보지신문, 극웅필경 | 2 | |
| 21 | 이상호 | 추도비(1924), 추도비(1957), 報知新聞, 극웅필경 | 4 | |
| 22 | 남성규 | 추도비(1924), 추도비(1957), 報知新聞, 극웅필경 | 4 | |
| 23 | 김삼선 | 추도비(1924), 추도비(1957) | 2 | |
| 24 | 김일출 | 추도비(1924), 추도비(1957) | 2 | |
| 25 | 정귀봉 | 추도비(1924), 추도비(1957), 극웅필경 | 3 | |
| 26 | 김두성 | 추도비(1924), 추도비(1957), 報知新聞, 극웅필경 | 4 | |
| 27 | 김인유 | 추도비(1924), 추도비(1957), 報知新聞, | 3 | |
| 28 | 이만수 | 추도비(1924), 추도비(1957) | 2 | |
| 29 | 허성일 | 추도비(19234, 추도비(1957) | 2 | |
| 30 | 허일성 | 報知新聞, 극웅필경 | 2 | |
| 31 | 김성동 | 추도비(1924), 추도비(1957) | 2 | |
| 32 | 김동인 | 추도비(1957), 報知新聞 | 2 | |
| 33 | 이재호 | 추도비(1924), 추도비(1957), 법률신문 | 3 | |
| 34 | 천곡야 | 報知新聞, 극웅필경 | 2 | |
| 35 | 김주홍 | 報知新聞, 극웅필경 | 2 | |
| 36 | 김백출 | 報知新聞, 극웅필경 | 2 | |
| 37 | 김홍삼 | 동아, 조선 | 2 | |
| 38 | 김정근 | 동아, 조선 | 2 | |
| 39 | 김창석 | 동아, 조선 | 2 | |
| 40 | 김갑순 | 동아, 조선 | 2 | |

| | | | | |
|---|---|---|---|---|
| 41 | 김삼쇠 | 동아, 조선 | 2 | |
| 42 | 김한권 | 동아, 조선 | 2 | |
| 43 | 이철우 | 동아, 조선 | 2 | |
| 44 | 노봉문 | 동아, 조선 | 2 | |
| 45 | 서막동 | 동아, 조선 | 2 | |
| 46 | 정인영 | 동아, 조선 | 2 | |
| 47 | 홍기태 | 증언1100, 東京日日新聞 | 2 | |
| 48 | 정기우 | 진상과 실태, 극웅필경 | 2 | |
| 49 | 조정원 | 報知新聞, 극웅필경, 추도비(1954) | 3 | |
| 50 | 김동원 | 報知新聞, 극웅필경, 추도비(1954) | 3 | |
| 51 | 조묘성 | 증언1100, 극웅필경 | 2 | |
| 52 | 조정수 | 증언1100, 극웅필경 | 2 | |
| 53 | 조정하 | 증언1100, 극웅필경 | 2 | |
| 54 | 박경득 | 증언1100, 극웅필경 | 2 | |
| 55 | 김사봉 | 증언1100, 報知新聞 | 2 | |
| 56 | 한봉구 | 증언1100, 報知新聞 | 2 | |
| 57 | 이원석 | 증언1100, 報知新聞 | 2 | |
| 58 | 이건재 | 증언1100, 報知新聞 | 2 | |
| 59 | 최규석 | 진상과 실태, 증언1100 | 2 | |
| 60 | 김 창 | 극웅필경, 감추어진 역사 | 2 | |

위의 <표 3>에 의하면, 중복 기록된 희생자는 60건이다. 이들 중에는 희생자 이름이 기록에 따라 오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은 구학영이다. 『현대사자료』(6)과 『かくされていた歴史_關東大震災と埼玉の朝鮮人虐殺事件』에는 구학영(具學永), 대사관 명부에는 구학용(具學龍)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구학영과 구학용은 경남 울산 출신으로 동일한 인물이다.

이러한 사례는 문헌자료의 경우 신문 기사, 증언 등 원사료의 오류에서 기인하고 있다. 또한 일본어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잘못 기록된 것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오류와 오기는 앞으로 원사료를 확보하여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 7. 맺음말

이상으로 앞에서 살펴본 문헌자료, 증언, 추도비 등의 조선인 희생자를 파악해보았다. 그렇지만 이들 명단에 대해 한계가 없지 않다. 이는 원사료 또는 원사료를 판독하는 과정에서 기록된 오기이다. 특히 군마현 후지오카시 조도지의 '관동진재 조선인 희생자 위령지비'는 1924년과 1957년에 각각 건립되었는데, 이 위령비에 기재된 희생자 명단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5) 자료 중 '현대사자료'는 『현대사자료』(6), '증언1100'는 『관동대진재 조선인학살의 기록-도쿄지구별 1100의 증언』, '진상과 실태'는 『관동대진재 조선인학살의 진상과 실태』, '동아'는 『동아일보』, '조선'은 『조선일보』, '추도비'는 조도지 추도비, '대사관'는 주일한국대사관 명부이다.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을 학살한 후지오카사건이 발생한 다음 해인 1924년 6월 후지오카 경찰서에서 학살된 조선인을 기리는 비가 건립되었는데, 이 비에는 후지오카에서 학살된 17명의 조선인 명단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이 당시 만들어진 추도비는 현재 없고, 1957년 11월 1일에 다시 비를 세웠다. 후지오카사건으로 학살된 조선인 명단은 『극웅필경』에도 수록하고 있다. 후지오카 추도비와 『극웅필경』의 조선인 희생자 17명의 명단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24년 추도비 명단> : 趙秀圭, 李相浩, 南成奎, 茜相坤, 金三善, 金日出, 鄭貴風, 金斗星, 金仁唯, 李萬守, 金東元, 許成日, 金聲東, 趙建遠, 金洞仁, 李在浩, 金鉉

<1957년 추도비 명단> : 趙秀圭, 丙相坤, 鄭黃鳳, 李萬守, 金聲東, 李在浩, 李相浩, 金三善, 金斗星, 趙庭遠, 金喆鉉, 金東元, 南成奎, 金日出, 金仁唯, 許成日, 金洞仁

<극웅필경 명단> : 金東元, 金喆鎭, 趙庭遠, 金白出, 南成奎, 金仁洙, 許日成, 金聲來, 金斗星, 鄭貴鳳, 苗桐坤, 金周洪, 趙秀九, 泉曲野, 鄭龍伊, 金東仁, 李相浩(『극웅필경』, 77~78쪽)

위에서 보다시피, 1924년 추도비와 1957 추도비의 명단을 비교하면 7명은 이름의 한자가 동일하지만, 4명은 한자가 다르거나 비슷한 한자로 되어 있다. 1924년 추모비에는 천상곤이 1957년 비에는 병상곤으로, 정귀풍이 정황봉으로, 조건원이 조정원으로, 김현이 김철현으로 되어 있다. 문제는 어느 비의 명단이 정확한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 더하여 『극웅필경』과는 두 추모비와 비교할 때 김동원, 남성규, 김두성, 이상호 등 4명만 동일 인물로 확인된다. 여하튼 세 개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자료의 문제 또는 재수록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한 연구에 의하면 후지오카사건 희생자 중 이재호는 생존자라는 점에서 보다 확실한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淳昌郡에서 참사당한 희생자의 15명의 이름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淳昌郡에서 거행된 추도식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각각 보도하였는데, 희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동아일보 : 金在根 金洪三 金廷根 金洪燁 金昌錫 金順甲 金三釗 崔錫俊 金漢權 李起布 劉奎錫 李哲宇 裵禹洪 魯鳳文 徐莫童

조선일보 : 김재근 김홍삼 김정근 김순갑 김삼쇠 김한권 최병준 김규복 이기표 김창석 서막동 배우홍 이철우 노봉문 유석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아일보』에는 김홍엽, 최석준, 이기포, 유규석이, 『조선일보』는 최병준, 김규복, 이기표, 유석 등 각각 4명의 희생자 이름이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물론 최석준과 최병준, 이기포와 이기표, 유규석과 유석은 동일 인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어느 것이 정확한 이름인지 좀 더 명확하게 확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례는 원사료를 활용한 자료집과 증언집에서도 보이고 있다. 이로 볼 때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명단은 원사료와 이를 활용한 자료집, 증언집, 추도비 등을 보다 면

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이외에도 도쿄도 부흥기념관에 소장된 「震災死亡者調査表」에 83명의 '조선인 카드'가 확인되고 있다.[6] 이들 '조선인 카드'는 罹災下賜金을 신청하면서 작성된 것이다. 이들 83명의 조선인은 관동대지진 희생자에 포함되지만, 희생자 명단과 사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밝혀야 할 과제이다.

또한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요코하마(橫濱) 도린지(東林寺)에도 조선인 납골당에 관동대지진 당시 희생된 조선인 무연, 유연 유골 수십 위가 안치되어 있다.[7] 이 납골당은 재일조선인총연합회 가나가와현 본부가 관리하고 있는데, 역시 앞으로 조사해야 할 과제임을 밝혀둔다.

6) 北原糸子, 「關東大震災における下賜金について」, 『關東大震災記憶の繼承-歷史·地域·運動から現在を問う』, 日本經濟評論社, 2014, 46~49쪽 참조. 이 책에는 '安太星'이 확인되고 있다. 안태성은 경남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출신으로 26세였다. 희생 당시 주소는 京橋區 靈岸大阪 固洋丸 船內이다.

7)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편, 『일본지역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 동북아역사재단, 2019, 135쪽.

# 関東大震災における朝鮮人犠牲者名簿の現状

ソン·ジュヒョン(青巖大)

## 1. はじめに

この論文は1923年関東大震災当時の朝鮮人被害者の名簿を調査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1923年、日本の関東地域において発生した大震災、いわゆる関東大震災の際、日本の軍警と自警団によって虐殺された朝鮮人は6千名余りに達する[1]。今年は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100周年にあたるが、これまでこの6千名余りの虐殺された朝鮮人名簿をまともに発掘できずに歳月が経って100周年を迎えるようになったのが今日の状況である。また中国人も関東大震災の際に、朝鮮人と誤解され700名余りが虐殺されたが、これは国家的レベルで真相究明を調査し名簿を確保した。

大韓民国は朝鮮人虐殺当時は日本帝国主義による植民地状態であったため、真相究明と名簿の把握は不可能であった。しかし、解放後もこのような状況から抜け出せず、依然として進行形といえる。関東大震災の朝鮮人虐殺はともかく、犠牲者名簿も把握できなかったのは恥ずかしいことと言わざるを得ない。ただし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関連の名簿は『日本震災時被殺者名簿』(1冊109枚、290名)がある。この名簿は1952年12月15日に開催された国務会議で内務部長官に、我々が日本による植民地時代に日本帝国主義から侵略された史実を証明できる資料を調査収集するよう指示したことにより作成されたのである。ところが、この名簿は2013年7月、駐日韓国大使館を新庁舎に移転する際、歴史関連記録を確認する過程で発見された[2]。

関東大震災当時、マスコミでは犠牲になった朝鮮人に対して様々な表現を使っていた。第一は「惨死」という言葉である。惨死は「惨たらしく死ぬこと」を意味する。これには二つの意味があると考えられる。一つは大震災で惨めに死亡したということであり、もう一つは日本人に悲惨に殺されたということである。当時、メディアにより使われた表現である「惨死」というのはこの2つのうちどちらの意味で解釈すべきか正確に判断することは容易ではない。第二は「虐殺」という表現である。これは日本の軍警と自警団によって悲惨な死を遂げたことを明確に示している。第三は「行方不明」である。これは生死が確認できないもので、一種の「失踪」と言える。ところが、この失踪は大半が「死亡」と処理されるという点から行方不明も犠牲者の範囲に含めることができる。

---

1) 関東大震災当時虐殺された朝鮮人の数は資料によって異なるが、『独立新聞』で発表した6,661人を一般的に認めている。日本政府司法省は231名、『報知新聞』は519名、『読売新聞』は300名、『東京日日新聞』は432名、吉野作造は2,613名、内閣府中央防災会議は少なくとも1,053名、最大9,484名と算定している。

2) この他にも『三一運動時の被殺者名簿』1冊(217枚、630名 収録)と『日政時の被徴用者名簿』 65巻(18,322枚、229,482名収録)が一緒に発見された。

一方、本稿で取り上げようとする「犠牲者」はより広い意味で使われる。『国語標準辞典』によれば「犠牲になった人」または「事故や自然災害などで惜しくも命を失った人」を意味する。『タウム韓国語辞典』によると、「あることや事件によって死んだり怪我したり被害を受けた人」を意味する。これを総合的に見れば、犠牲者というのは「いかなることや事件によって死んだり負傷したり被害を受けた人」と言える。

このような観点から本稿は惨死、虐殺、傷害に遭った人を「犠牲者」として、より広い意味で使うことにする。そして自殺したケースが1名確認されているが、それも犠牲者の範囲に含めた。

また、本稿では犠牲者名簿を把握するために『東亜日報』・『朝鮮日報』・『毎日新報』など国内で発刊された当時の新聞類、『関東震災と朝鮮人-現代史資料(6)』(姜徳相、1963)・『関東大震災における朝鮮人虐殺の真相と実態』(日本朝鮮大、1963)・『かくされていた歴史-関東大震災と埼玉の朝鮮人虐殺事件』(関東大震災60周年朝鮮人被害者調査追悼実行委員会、1987)などの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関連の資料集、『関東大震災　朝鮮人虐殺の記録-東京地区別1100の証言』(西崎雅夫、2020)のような証言集、『極熊筆耕』(崔承萬、1970)といった回顧録、『大正大震火災誌』(警視庁編、1926)・『大正大震火災誌』(神奈川県警察部、1926)・『東京震災録』(東京市、1926)・『横浜市震災誌』(1926)など日本の報告書類、さらに群馬県成道寺と九品寺・埼玉県の正樹院と常泉寺の追悼碑、そして2013年に発見された『日本震災時被殺者名簿』などを活用した[3]。

## 2.文献資料の朝鮮人犠牲者

### 1) 『関東震災と朝鮮人』

この文献資料は、日本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研究者の姜徳相と琴秉東が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40周年にあたる1963年、日本のみすず書房から出版した資料集である。『現代史資料』は1~18巻まで発行されたが、そのうち6巻目が『関東震災と朝鮮人』(以下、『現代史資料』(6)と題して発行された。この資料集は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と関連してデマ、戒厳令、朝鮮人虐殺の事例などを官文書をはじめ新聞、証言などを調査し整理したものである。姜徳相は慶尚南道咸陽出身の在日韓国人歴史学者で、在日朝鮮人と関連した歴史を約60年間研究した。特に関東大震災の朝鮮人虐殺の真相究明に尽力した。『現代史資料』(6)には朝鮮人犠牲者32名が確認されている。

### 2) 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の真相と実態

この文献資料は、日本における在日本朝鮮人総連盟(総連)系列の教育機関である朝鮮大

3)　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犠牲者名簿は2022年「真実·和解のための過去史整理委員会」からの学術用役により把握した経緯がある。しかし、その後調査の過程で名簿の重複、脱落、誤字、脱字などで完璧にまとめ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ので、その把握は十分になされていない。犠牲者名簿は従来の資料と今後新たに発掘される資料などを以て着実に進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判断される。

学校が1963年に発行した資料集である。朝鮮大学校は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40周年を迎え、その真相を究明し虐殺実態を新聞、証言などの関連資料を集めてこの資料集を編纂した。『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の真相と実体』では、関東大震災における朝鮮人犠牲者は33名確認される。

### 3)『東亜日報』

『東亜日報』には、1923年9月1日に発生した関東大震災に関連した記事は9月3日に初報道を始め、1924年3月にかけて掲載されている。記事の主な内容は関東大震災による日本の状況、在日朝鮮人の安否、国内の関東大震災による罹災朝鮮人義援金募金の現況、自警団の朝鮮人虐殺裁判の動向、朝鮮人虐殺追悼の現状などである。このような一連の記事から朝鮮人被害に関連したものは8件で、行方不明7名、惨死25名、自殺1名で、計33名の氏名が確認される。

### 4)『朝鮮日報』

『朝鮮日報』も関東大震災が発生すると関東大震災の惨状、在日朝鮮人の安否、罹災同胞救済会の組織と義援金募金の現況、犠牲者追悼会など関連記事を掲載した。これらの記事のうち、朝鮮人犠牲者と関連した記事は12件確認されている。『朝鮮日報』に報道された犠牲者は行方不明4名、惨死41名、自殺1名で、計46名のリストが確認される。

### 5) 『毎日新報』

『毎日新報』は朝鮮総督府機関紙であったが、関東大震災当時、朝鮮人の生死に関しては非常に敏感であった。大半の記事は日本の被害状況を報道したが、植民地支配政策を広報する役割を一定に遂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点で朝鮮人の救護や安否についても適切に報道した。これらの報道には帰還者と行方不明に関する記事がたびたび掲載された。このうち行方不明と関連した記事は3件で、21名の氏名が確認される。

### 6)『かくされていた歴史－関東大震災と埼玉の朝鮮人虐殺事件』

この文献資料は関東大震災60周年を迎え、埼玉県における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を調査研究する市民団体が「関東大震災60周年朝鮮人被害者調査追悼実行委員会」を構成し1987年刊行した資料集である。埼玉県の場合、1923年9月3日以後、朝鮮人犠牲者が発生したが、この資料集では4件が確認されている。埼玉県で犠牲者の氏名が確認されたのはキム·チャン(김창)、ク·ハクヨン(구학영)、キム·イルヨン(김일영)、カン·デフン(강대흥)の4名である。

### 7)『極熊筆耕』

『極熊筆耕』は1923年9月、関東大震災を現場で自ら体験した崔承萬[4]の回顧録で1970年刊行された。崔承萬は関東大震災当時、YMCA総務として活動していた。彼は関東大震災が発生し朝鮮人虐殺が相次ぐと天道教青年会朴思稷などと「罹災同胞慰問班」を構成し朝鮮人虐殺について調査した。当時の調査活動をまとめた「日本関東震災時のわが同胞の受難」という文を1970年3月、『新東亜』に発表し、それを『極熊筆耕』に再収録した。『極熊筆耕』に関東大震災の朝鮮人犠牲者は計29名が確認されている。

### 8) その他の文献資料

その他の文献資料はキム·ドヒョンの論文、「関東大震災韓国人被殺者名簿資料の分析」(『北岳史学』)である。同論文は、在日本韓国大使館で発見された名簿を分析したものである。名簿は1951年末から1952年1月中旬に作成された。この論文の中には、『東京日日新聞』(地方縮刷版)、『報知新聞』、『法律新聞』、「判決文」などの記事を通じて朝鮮人犠牲者について言及している。朝鮮人犠牲者25名の名簿が確認できる。

## 3. 証言資料の朝鮮人犠牲者

学術用役「関東大震災朝鮮人犠牲者名簿実体調査」のための証言資料は『関東大震災　朝鮮人虐殺の記録-東京地区別1100の証言』を活用した。この証言集は西崎雅夫が著したもので、日本人が約1100人の証言を集めて発刊した本である。証言集には関東大震災当時の朝鮮人虐殺と暴行による重傷、殴打など多様な被害状況を収録している。

同資料集の朝鮮人被害状況は虐殺26名、暴行など傷害42名で計68名である。虐殺は自警団員に殺害されたもので、日本刀、猟銃、棍棒などの凶器が使用された。されに傷害も自警団員に暴行、殴打などを受けて重傷を負った事例がほとんどであった。この68名の犠牲者の中には、他の資料にも重複して見られるケースが少なくない。

---

4)　本貫は海州。号は極熊·極光。普成中学校と京城中央YMCA英語科を卒業した。1917年日本に渡り、東京外国語学校ロシア科に入学した。1918年東京朝鮮留学生学友会に参加し、編集委員として機関誌『学之光』の発行に関わる一方、留学生の文芸雑誌『創造』の同人としても活動した。1923年東京東洋大学インド倫理哲学科を卒業し、1929年まで東京朝鮮YMCA総務として活動した。1929年8月、米国に渡りスプリングフィールド大学で修学した。1930年10月に帰国し、朝鮮YMCAの機関紙である『青年』の主幹を務め、1931年1月に再び日本に渡り東京朝鮮YMCA総務として活動した。1934年に帰国し、『東亜日報』雑誌部長と『新東亜』の主幹を歴任した。8·15解放後、韓国民主党に参加し、米軍政庁文教部教化局長と済州道知事を歴任した。その後、延禧大学校·梨花女子大学校·仁荷大学教授と済州大学校総長を歴任し、梨花学堂、成均館大学校、中央女子中·高等学校、槿明商業中·高等学校などの財団に関与した。著書には『極熊筆耕』(1970)·『正しく生きよう(바르고 옳게 살자)』(1983)があり、遺稿として「私の回顧録」(1985)がある。

## 4. 追悼碑資料の朝鮮人犠牲者

追悼碑資料は計4件で、群馬県と埼玉県に集中している。追悼碑の関東大震災の朝鮮人犠牲者は20名のリストが確認される。群馬県藤岡市成道寺追悼碑17名、九品寺1名、埼玉県常泉寺1名、正樹院1名の計20名の氏名が確認される。

以上の文献、証言、追悼碑などで確認された朝鮮人犠牲者のリストは次の<表1>の通りである。

<表1>文献、証言、追悼碑に示された関東大震災朝鮮人犠牲者の状況

| 資料名 | 犠牲者数 | 氏名 | 備考 | |
|---|---|---|---|---|
| 現代史<br>資料 6 | 31 | 차태숙, 양순이, 류호영, 하석수, 이동근, 달　이, 김수근, 김수범, 김월빈, 이왕원, 민인식, 한용조, 박인도, 강양순, 이순봉, 민춘용, 신응헌, 홍기백, 박명도, 이일필, 최희덕, 오관근, 구학영, 강대흥, 예상곤, 김원달, 김　모, 김 모, ●월봉, 정　모, 김　모 | 姜徳相 | |
| 東京証言<br>1100 | 68 | 김재근, 차태숙, 이순풍, 이흥순, 이희원, 이희현, 손봉원, 한용기, 최규석, 변용창, 한봉구, 박인도, 김사봉, 이원석, 이건재, 김영일, 배동주, 최연재, 조창순, 민춘용, 민춘용, 조창순, 박경득, 조묘성, 조정수, 조정하, 김용택, 김승중, 박순일. 고봉아, 박수인, 홍홍예, 이현모, 장덕경, 장선당, 김태엽, 최　선, 김금류, 최병희, 임선일, 신창범, 김정석, 노●진, 이경식, 권의덕, 허연관, 박재춘, 박도선, 박경진, 이영수, 김희백, 고학이, 이홍중, 송학백, 봉허도, 구철원, 김주영, 문기출, 민병옥, 김인수, 권칠봉, 정섬준, 김봉화, 김위광, 성리●, 홍기태, 민인식, 이성구 | 西崎雅夫 | |
| 関東大震災<br>朝鮮人虐殺<br>の真相と実<br>態 | 33 | 이춘용, 조창순, 한합예, 김영일, 김금류, 김용택, 김승중, 박익, 고봉아, 박수인, 최병희, 한용석, 김영일, 박　기, 최규석, 이순봉, 손봉현, 홍홍우, 김현모, 박　모, 봉　모, 이근영, 정기우, 민국길, 김　시, 강대흥, 김동우, 정숙개, 정숙용, 전석필, 정　모, 임선일, 신창범 | 朝鮮大学校<br>(日本) | |
| 関東震災<br>朝鮮人<br>犠牲者<br>慰霊之碑 | 17 | 조수규, 이상호, 남성규, 천상곤, 김삼선, 김일출, 정귀풍, 김두성, 김인유, 이만수, 김동원, 허성일, 김성동, 조건원, 김동인, 이재호, 김현 | 19<br>24 | 群馬県<br>藤岡市<br>成道寺 |
| | 17 | 조수규, 병상곤, 정황봉, 이만수, 김성동, 이재호, 이상호, 김삼선, 김두성, 조정원, 김철현, 남성규, 김일출, 김인유, 허성일, 김동인 | 19<br>57 | |
| 봉호지장존위<br>현광도보리 | 1 | ●봉호 | 群馬県高崎市<br>九品寺 | |
| 東京日日新聞 | 3 | 홍기태, 김원달, 황종균 | | |
| 報知新聞 | 24 | 한봉구, 박인도, 김사봉, 이원석, 이건재, 김동원, 조정원, 김철진, 김백출, 남성규, 김인유, 허일성, 김성래, 김천선, 김두성, 조수구, 천곡야, 정귀봉, 묘동곤, 김주홍, 김인수, 정용이, 김동인, 이상호 | | |
| 法律新聞 | 4 | 신명개, 최석근, 이재호, 차봉조 | 群馬県 | |
| 極熊筆耕 | 29 | 김동원, 김철진, 조정원, 김백출, 남성규, 김인수, 허일성, 김성례, 김두성, 정귀봉, 묘동근, 김주홍, 조수구, 천곡야, 정용이, 김동인, 이상호, 김　창, 정기우, 박경득, 김재근, 조묘성, 조정수, 조정하, 박단수, 이해용, 정인숙, 최만봉, 진상영 | 崔承萬 | |
| 東亜日報 | 21 | 김재근, 김홍삼, 김정근, 김홍엽, 김창석, 김순갑, 김삼쇠, 최준석, 김한권, 이기포, 유규석, 이철우, 배우홍, 노봉문, 서막동, 김동하, 임남식, 임창식, 유위동, 정인영, 민인식 | | |
| 朝鮮日報 | 42 | 김교경, 정진영, 신영련, 정인영, 안계용, 김한주, 김도현, 김덕현, 김원준, 김석봉, 김재일, 한민훈, 김재근, 김홍삼, 김정근, 김순갑, 김삼쇠, 김한권, 최병준, 김규복, 이기표, | | |

| | | | |
|---|---|---|---|
| | | 김창석, 서막동, 배후홍, 이철우, 노봉문, 류 석, 전민철, 이전국, 이금호, 교태철, 이열성, 정승현, 정현빈, 장동수, 김한제, 윤용학, 지장용, 권선규, 전필란, 이이동, 송기일 | |
| 毎日新報 | 21 | 송달준, 한규정, 김순용, 염서금, 임남식, 임창식, 임경환, 신기환, 이창성, 이인덕, 윤봉익, 이찬희, 오준영, 박일병, 조복룡, 염일항, 박한극, 이상규, 경록, 홍종위, 김광현 | |
| かくされていた歴史 | 4 | 김창, 강대흥, 구학영, 김일영 | 琦玉県 |
| 感天秋雨信士 | 1 | 구학영 | 琦玉県 |
| 朝鮮人姜大興墓 | 1 | 강대흥 | 琦玉県 |
| 計 | 316 | | 重複含む |

## 5.『日本震災時の被殺者名簿』の朝鮮人犠牲者

2013年7月、駐日韓国大使館を新庁舎に移転する際、3種類の名簿が発見された。一つは、『3·1運動時の被殺者名簿』1冊（217枚、630名収録）、二つ目は『日本震災時の被殺者名簿』1冊（109枚、290名収録）、三つ目は『日政時の被徴用者名簿』65冊（18,322枚、229,482名収録）である。この3つの名簿が作成された背景には、1952年12月15日に開かれた第109回国務会議での李承晩大統領の指示がある。李承晩大統領は国務会議で、①三·一運動殺傷者、②関東震災の犠牲者、③第二次大戦の徴用·徴兵者数、④倭政下における愛国思想運動の獄死者、⑤米穀略奪量、⑥金銀財搬出量、⑦国債保険金、債権的性質のものなどの項目についての調査と集計を内務部に指示した。大統領の指示により内務部では同年12月16日付で、日本帝国主義により犠牲になった代表的な事件である①三·一運動、②関東震災、③徴用·徴兵、④愛国思想運動の獄死者の4つの分野に関して統計資料を作成するよう指示した。

当時、李承晩大統領がこのような指示を下したのは1953年1月5日から7日までの日程で日本を公式訪問する際、日本の吉田茂首相に植民地時代に韓国人が受けた被害を証明するためであった。ところが日本による植民地時代に犠牲になったり、あるいは被害に遭った事実を調査するのは短期間では不可能であったため、李承晩大統領の訪日の際にはこのリストを持参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第2回韓日会談は1953年4月15日から7月23日まで開催されたため、この期間に韓国側代表に渡されたものと推測される。

『日本震災時被殺者名簿』に収録された犠牲者は慶尚南道と慶尚北道出身が大半を占めている。朝鮮戦争の渦中にあったため、行政機関が調査可能な慶尚南道と慶尚北道に限って調査できた限界があったものと推定される。『日本震災時の被殺者名簿』で最も多くの割合を占めている地域が慶尚南道であることは、この地域にだけ行政機関が完全に残っていたためでもあるが、日本帝国主義による植民地時代に在日朝鮮人の中で慶尚南道出身が多かったことも影響を及ぼ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震災時の被殺者名簿』には関東大震災の際に日本によって虐殺された290名が載っているが、その中には3·1運動など関東大震災とは関係のないリストが相当数存在する。これを取り除けば、実際の関東大震災と関連した205名が関東大

震災の犠牲者と把握される。

ところが、『日本震災時被殺者名簿』で最も議論になっているところは、被殺年度が誤って記載されたことである。これを如何に判断するかによって、関東大震災の被殺者数は相当な差が生じる可能性がある。この名簿によると、1921年、1922年、1924年など関東大震災が発生した年度とは異なる記載が多いのである。それでも殺害地域は東京あるいは横浜と記載されており、殺害状況は「殺害」、「他殺」、「銃殺」、「打撲傷」などと記載されたことから関東大震災当時の虐殺または傷害と判断することができる。これは名簿の作成当時に年度を間違えて記載したものと推定される。『日本震災時被殺者名簿』における朝鮮人犠牲者は<表2>のとおりである。

<表2>日本における震災時の被殺者名簿の朝鮮人犠牲者名簿

| 資料名 | 被殺者数 | 氏名 |
|---|---|---|
| 日本震災時<br>被殺者名簿 | 205 | 이익호, 정상조, 김유필, 백운수, 백우개, 백소달, 백달이, 임소봉, 박판준, 전판병, 전판암, 김명도, 백용덕, 최봉순, 이사중, 권일섭, 오의수, 박유신, 이삼석, 박덕수, 박명수, 최만수, 김만이, 이상권, 김개학, 김상호, 정군팔, 김호철, 김팔암, 김점암, 최대준, 김태암, 장상진, 박백흥, 박태선, 김권이, 장기선, 김말술, 박무학, 박서동, 박용술, 박봉선, 유형식, 김용호, 최병식, 이 속, 이판암, 이 당, 이손술, 정암우, 정성현, 정세윤, 이운조, 도기학, 도의환, 도갑기, 박영화, 박재룡, 이수문, 김우생, 장교순, 김순이, 조판은, 박희태, 김문환, 서학운, 서중이, 박순암, 윤석순, 김분남, 김지엽, 이달출, 이영흥, 김수진, 박학조, 안덕수, 김민수, 김석현, 오현주, 박경운, 신영섭, 최봉술, 김소선, 김영태, 신경운, 박지용, 박계운, 박호인, 박소출, 여현회, 여능암, 여종원, 조성준, 차학기, 한용선, 김달선, 이용갑, 이언창, 박쾌특, 박위특, 김팽제, 최덕용, 이도술, 안해조, 박도인, 이차석, 이천석, 김수범, 박남필, 최상근, 구학룡, 이관수, 이명수, 김호범, 장상규, 조성도, 송세팔, 구유덕, 심상백, 박경이, 김재수, 김말룡, 김소룡, 김진욱, 오덕수, 김목환, 오시조, 사태근, 김치두, 김상주, 이순양, 공우용, 설인백, 설오주, 문재수, 권갑문, 김재만, 김덕수, 이상도, 손우팔십, 우덕기, 강정순, 정태열, 이점문, 전용문, 유정식, 윤 길, 이을판, 신만조, 신우준, 조석하, 천맹수, 정병환, 정판암, 이광국, 이광명, 이판개, 이소개, 정경규, 심학봉, 심 모, 하 모, 장석진, 박수재, 박성재, 박소송, 정종목, 김정대, 김정백, 권왕석, 전을생, 전갑룡, 최억환, 최상기, 오효근, 정덕로, 김정수, 김윤근, 최문봉, 김홍대, 김우명, 김삼명, 김수진, 김악개, 조공국, 박백오, 오우성, 남만이, 강상백, 이차세, 진경만, 진학승, 박준봉, 박윤두, 이만희, 표기식, 전우식, 임우권, 임만권, 임수권, 남진갑, 전암천, 박경표, 권유지, 구학용 |

## 6. 関東大震災の朝鮮人犠牲者のうち重複犠牲者

以上で検討した関東大震災の朝鮮人犠牲者の中には重複した事例が少なくない。これは資料集、証言集、回顧録などで見られる。また、新聞の場合、同一の事件について各新聞ごとに記事を掲載することで重複した場合が少なくない。群馬県藤岡市成道寺の追悼碑の場合、

関東大震災直後の1924年に建立したものとその後1954年に建てたものとの犠牲者が重複している。ところが、この追悼碑建立時期に30年の差があることによって犠牲者の名前が誤って記録されていることも確認された。以上で述べた関東大震災朝鮮人犠牲者のうち重複した事例は次の<表3>のとおりである。

<表3>関東大震災朝鮮人犠牲者のうち重複した事例[5)]

| 番号 | 犠牲者 | 記録　資料名 | 回数 | 備考 |
|---|---|---|---|---|
| 1 | 김재근 | 証言1100、極熊筆耕、東亜日報、朝鮮日報 | 4 | |
| 2 | 차태숙 | 現代史資料、証言1100 | 2 | |
| 3 | 박인도 | 現代史資料、証言1100、報知新聞 | 3 | |
| 4 | 민인식 | 現代史資料、証言1100、東亜日報 | 3 | |
| 5 | 민춘용 | 現代史資料、証言1100 | 2 | |
| 6 | 구학영 | 現代史資料、かくされていた歴史、大使館 | 4 | 구학용 |
| 7 | 강대흥 | 現代史資料、真相と実態、かくされていた歴史、追悼碑 | 4 | |
| 8 | 김원달 | 現代史資料、東京日日新聞 | 2 | |
| 9 | 조창순 | 真相と実態、証言1100 | 3 | |
| 10 | 김영일 | 真相と実態、証言1100 | 2 | |
| 11 | 김용택 | 真相と実態、証言1100 | 2 | |
| 12 | 김승중 | 真相と実態、証言1100 | 2 | |
| 13 | 고봉아 | 真相と実態、証言1100 | 2 | |
| 14 | 박수인 | 真相と実態、証言1100 | 2 | |
| 15 | 김금류 | 真相と実態、証言1100 | 2 | |
| 16 | 최병희 | 真相と実態、証言1100 | 2 | |
| 17 | 신창범 | 真相と実態、証言1100 | 2 | |
| 18 | 임선일 | 真相と実態、証言1100 | 2 | |
| 19 | 조수규 | 追悼碑(1924)、追悼碑(1957) | 2 | |
| 20 | 조수구 | 報知新聞、極熊筆耕 | 2 | |
| 21 | 이상호 | 追悼碑(1924)、追悼碑(1957)、報知新聞、極熊筆耕 | 4 | |
| 22 | 남성규 | 追悼碑(1924)、追悼碑(1957)、報知新聞、極熊筆耕 | 4 | |
| 23 | 김삼선 | 追悼碑(1924)、追悼碑(1957) | 2 | |
| 24 | 김일출 | 追悼碑(1924)、追悼碑(1957) | 2 | |
| 25 | 정귀봉 | 追悼碑(1924)、追悼碑(1957)、極熊筆耕 | 3 | |
| 26 | 김두성 | 追悼碑(1924)、追悼碑(1957)、報知新聞、極熊筆耕 | 4 | |
| 27 | 김인유 | 追悼碑(1924)、追悼碑(1957)、報知新聞、 | 3 | |
| 28 | 이만수 | 追悼碑(1924)、追悼碑(1957) | 2 | |
| 29 | 허성일 | 追悼碑(19234、追悼碑(1957) | 2 | |
| 30 | 허일성 | 報知新聞、極熊筆耕 | 2 | |
| 31 | 김성동 | 追悼碑(1924)、追悼碑(1957) | 2 | |
| 32 | 김동인 | 追悼碑(1957)、報知新聞 | 2 | |
| 33 | 이재호 | 追悼碑(1924)、追悼碑(1957)、法律新聞 | 3 | |
| 34 | 천곡야 | 報知新聞、極熊筆耕 | 2 | |
| 35 | 김주홍 | 報知新聞、極熊筆耕 | 2 | |
| 36 | 김백출 | 報知新聞、極熊筆耕 | 2 | |

| | | | | |
|---|---|---|---|---|
| 37 | 김홍삼 | 東亜日報、朝鮮日報 | 2 | |
| 38 | 김정근 | 東亜日報、朝鮮日報 | 2 | |
| 39 | 김창석 | 東亜日報、朝鮮日報 | 2 | |
| 40 | 김갑순 | 東亜日報、朝鮮日報 | 2 | |
| 41 | 김삼쇠 | 東亜日報、朝鮮日報 | 2 | |
| 42 | 김한권 | 東亜日報、朝鮮日報 | 2 | |
| 43 | 이철우 | 東亜日報、朝鮮日報 | 2 | |
| 44 | 노봉문 | 東亜日報、朝鮮日報 | 2 | |
| 45 | 서막동 | 東亜日報、朝鮮日報 | 2 | |
| 46 | 정인영 | 東亜日報、朝鮮日報 | 2 | |
| 47 | 홍기태 | 証言1100、東京日日新聞 | 2 | |
| 48 | 정기우 | 真相と実態、極熊筆耕 | 2 | |
| 49 | 조정원 | 報知新聞、極熊筆耕、追悼碑(1954) | 3 | |
| 50 | 김동원 | 報知新聞、極熊筆耕、追悼碑(1954) | 3 | |
| 51 | 조묘성 | 証言1100、極熊筆耕 | 2 | |
| 52 | 조정수 | 証言1100、極熊筆耕 | 2 | |
| 53 | 조정하 | 証言1100、極熊筆耕 | 2 | |
| 54 | 박경득 | 証言1100、極熊筆耕 | 2 | |
| 55 | 김사봉 | 証言1100、報知新聞 | 2 | |
| 56 | 한봉구 | 証言1100、報知新聞 | 2 | |
| 57 | 이원석 | 証言1100、報知新聞 | 2 | |
| 58 | 이건재 | 証言1100、報知新聞 | 2 | |
| 59 | 최규석 | 真相と実態、証言1100 | 2 | |
| 60 | 김창 | 極熊筆耕、かくされていた歴史 | 2 | |

<表3>によると、重複記録された犠牲者は60件である。彼らの中には犠牲者の氏名が記録によって誤記のこともある。代表的なのはク·ハクヨン(구학영)である。『現代史資料』(6)と『かくされていた歴史-関東大震災と埼玉の朝鮮人虐殺事件』には具学永(구학영)、大使館のリストには具学龍(구학용)と記録されている。具学永と具学龍は慶尚南道蔚山出身で同一人物である。

このような事例は文献資料の場合、新聞記事、証言など原史料の誤りに起因する。また、日本語で記録する過程で名前が誤って記録されたものも少なくない。このような誤りと誤記は今後原史料を確保してより綿密に確認する必要がある。

## 7.おわりに

以上、前述の文献資料、証言、追悼碑などに示された朝鮮人犠牲者について検討してみ

5) 資料の中で「現代史資料」は『現代史資料』(6)、「証言1100」は『関東大震災 朝鮮人虐殺の記録-東京地区別1100の証言』、「真相と実態」は『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の真相と実態』、「追悼碑」は成道寺の追悼碑、「大使館」は駐日韓国大使館のリストである。

た。しかし、これらのリストには限界と言わざるを得ない。それは原史料または原史料を判読する過程で生じた誤記のためである。特に群馬県藤岡市成道寺の「関東震災朝鮮人犠牲者慰霊之碑」は1924年と1957年にそれぞれ建立されたが、この慰霊碑に記載された犠牲者リストが同一ではない。

関東大震災当時、朝鮮人を虐殺した藤岡事件が発生した翌年の1924年6月に藤岡警察署で虐殺された朝鮮人を追悼する碑が建立されたが、この碑には藤岡で虐殺された17名の朝鮮人名簿が入っている。ところがこの当時建てられた追悼碑は現在なくなり、1957年11月1日に再び碑を建てるようになった。藤岡事件で虐殺された朝鮮人名簿は『極熊筆耕』にも収録されている。藤岡追悼碑と『極熊筆耕』の朝鮮人犠牲者17名の名簿は次のとおりである。

<1924年追悼碑の名簿> ： 趙秀圭、李相浩、南成奎、茜相坤、金三善、金日出、鄭貴風、金斗星、金仁唯、李萬守、金東元、許成日、金聲東、趙建遠、金洞仁、李在浩、金鉉

<1957年追悼碑の名簿> ： 趙秀圭、丙相坤、鄭黃鳳、李萬守、金聲東、李在浩、李相浩、金三善、金斗星、趙庭遠、金喆鉉、金東元、南成奎、金日出、金仁唯、許成日、金洞仁

<『極熊筆耕』の名簿> ： 金東元、金喆鎭、趙庭遠、金白出、南成奎、金仁洙、許日成、金聲來、金斗星、鄭貴鳳、苗桐坤、金周洪、趙秀九、泉曲野、鄭龍伊、金東仁、李相浩(『極熊筆耕』、77~78頁)

以上からも分かるように、1924年追悼碑と1957追悼碑の名簿を比べてみると、7名は名前の漢字は同一であるが、4人は漢字が違ったり似た漢字になっている。1924年の追悼碑には茜相坤であったのが1957年の碑には丙相坤に、鄭貴風が鄭黃鳳に、趙建遠が趙庭遠に、金鉉が金喆鉉になっている。問題は、どの碑の名簿が正確なのかである。

さらに、『極熊筆耕』とは両追慕碑を比較すると、金東元、南成奎、金斗星、李相浩の4名だけ同一人物として確認される。いずれにせよ、3つの記録が一致しないということは、原材料の問題または再収録される過程で誤りがあったと推定されるのでる。一方、ある研究によると、藤岡事件犠牲者のうち李在浩は生存者としていることからも、より確実な交差検証が必要であると言わざるを得ない。

また、淳昌郡で惨死された犠牲者の15人の氏名とも違いがある。淳昌郡で行われた追悼式を『東亜日報』と『朝鮮日報』がそれぞれ報道したのだが、犠牲者名簿は次の通りである。

『東亜日報』： 金在根(김재근)、金洪三(김홍삼)、金廷根(김정근)、金洪燁(김홍엽)、金昌錫(김창석)、金順甲(김순갑)、金三釗(김삼쇠)、崔錫俊(최석준)、金漢權(김한권)、李起布(이기포)、劉奎錫(유규석)、李哲宇(이철우)、裵禹洪(배우홍)、魯鳳文(노봉문)、徐莫童(서막동)

『朝鮮日報』： 김재근、김홍삼、김정근、김순갑、김삼쇠、김한권、최병준、김규복、이기표、김창석、서막동、배우홍、이철우、노봉문、유석

上記のように『東亜日報』には金洪燁、崔錫俊、李起布、劉奎錫が、『朝鮮日報』は최병준、김규복、이기표、유석의4名の犠牲者の氏名が異なって記録されている。もちろん崔錫俊(최석준)と최병준、李起布(이기포)と이기표、劉奎錫(유규석)と유석は同一人物と推定できるが、どちらが正確な氏名なのかより明確に究明する必要がある。

このような事例は原史料を活用した資料集と証言集でも見られる。その検討においては、関東大震災の朝鮮人犠牲者のリストは原史料とそれを活用した資料集、証言集、追悼碑などをより綿密に分析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課題を残している。

その他にも東京都復興記念館に所蔵されている「震災死亡者調査表」に83名の「朝鮮人カード」が確認されている[6]。これらの「朝鮮人カード」は、罹災下賜金を申請する際に作成されたものである。この83名の朝鮮人は関東大震災の犠牲者に含まれるが、犠牲者リストとその理由については今後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である。

また、神奈川県横浜道林寺にも朝鮮人納骨堂に関東大震災当時犠牲になった朝鮮人無縁、有縁遺骨数十体が安置されている[7]。

この納骨堂は在日朝鮮人総連合会神奈川県本部が管理しているが、やはり今後調査すべき課題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ておく。

6) 北原糸子、「関東大震災における下賜金について」、『関東大震災記憶の継承-歴史·地域·運動から現在を問う』、日本経済評論社、2014、46~49頁参照。この本には「安太星」が確認されている。安太星は慶尚南道陜川郡青徳面仰津里出身で26歳であった。犠牲当時の住所は京橋区霊岸大阪固洋丸船内である。

7) 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団編、『日本地域朝鮮人犠牲者追悼碑』、東北亜歴史財団、2019、135頁。

국제학술심포지엄
관동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 100년: 진실·책임· 기억

# 학살·수용·송환: 관동대지진 기간 일본의 중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력 및 배척 사건

정러징(鄭樂靜, 중국 원저우대)

# 학살, 수용, 송환: 관동대지진 기간 일본의 중국인 노동자를 폭력하고 배척한 사건에 대한 연구 *

정러징(鄭樂靜, 윈저우대)

1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 경제가 고도의 성장을 하면서, 일본 국내 노동력 부족 문제가 나타났다. 중일간 경제력 차이로 저장, 산둥, 푸젠과 광둥 등 지역의 농민과 수공업자들은 생계를 위해 속속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들은 주로 운반, 토목, 도로 건설, 거멀장, 이발, 식당, 뺑끼(페인트), 인쇄 등 육체 노동에 종사했다. 중국인 노동자들은 차이나타운으로 진출하는 것보다 도쿄, 요코하마, 오사카 등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신도시에서 기회를 찾고 싶어했다. 중국인 노동자 규모가 나날이 늘자, 일본인 노동자와 중국인 노동자 사이에 이익 충돌도 빈번해졌다. 각 지역에서 중국인 노동자를 적대하거나 배척하는 등 충돌 사건이 수차례 벌어졌고 심지어 사상자도 발생했다. [2]일본정부는 국내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인 노동자 배척을 강화하였는데, 중국인 노동자의 신규 입국을 금지하는 한 편, 일본 국내 중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단속과 송환이 강화되었다. 이런 조치들은 단기간내에 중국인 노동자의 급증을 막을 수 있었으나, 중국인 노동자를 완전히 국외로 추방하는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다. [3]일본 정부의 중국인 노동자 배척 정책이 더욱 가혹해지자 중국인 노동자는 장사꾼으로 위장해 일본으로 입국한 뒤 육체 노동에 종사했다. 중국인 노동자들은 경찰에 붙잡혀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대부분 즉시 귀국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시를 옮겨 다니며 일본 내에서 생계를 이어간다. 그러나, 1923년 9월 급작스럽게 발생한 관동대지진으로 일본 정부의 중국인 노동자 배척 정책은 탄력을 받는다. 일본 군대와 민간인(軍民)은 지진이라는 대혼란을 틈 타 700여 명의 재일 중국인을 잔인하게 살해했는데 그 중 대다수 피해자는 중국인 노동자이다. 이후 일본 정부는 증거를 없애는 한 편 생존한 중국인노동자를 구금하고, 중국으로 송환해 재일 중국인 노동자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고자 했다.

1923년 일본의 중국인 학살 사건에 관한 일본 학계의 연구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

* 본 논문은 2022~2024년 중국교련(中國僑聯) 과제인 '중국인배척정책의 관점에서 근대 일본 중국인 노동자 사회 변천 연구(排華政策視域下近代日本華工社會變遷研究)' (항목코드: 22CZQK207)의 중간 성과이다.

2) 예를 들어 1922년 10월 도쿄 스미다강(隅田川) 연안의 운반공 300여 명은 서명을 통해 경시청 외사과에 청원을 넣어 그들의 경쟁자인 중국인 노동자를 송환할 것을 요청했다. 1923년 2월, 중국인과 일본인 노동자 300여 명은 요코하마시 타카시마역에서 혈투를 벌였고 양측 모두 다수의 인원이 다쳤다. 1923년 5월, 도쿄 혼조, 후카가와의 작업반장은 그의 책임하에 있는 지역의 운송 공장에 중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1923년 7월 지바현 호쿠소철도주식회사(北總鐵道株式會社)는 철로 레일 부설일을 하는 일본인 노동자들이 단체로 중국인 노동자 추방 운동을 벌였다. 法政大學大原社會問題研究所 編『日本労働年鑑』第4巻，法政大學出版局，1923年，404쪽，法政大學大原社會問題研究所編『日本労働年鑑』第5巻，大原社會問題研究所出版部，1924年，55쪽，神奈川縣知事安河內麻吉「本邦労働者ト支那労働者ノ爭鬪ニ関スル件」,『支那労働者入國取締関係一件　　第一巻』, 外務省記録 MT.3.9.4.121，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소장 참고

3)[1] 鄭樂靜):「20世紀初日本排斥華工政策與旅日浙南華工群體」,『華僑華人歷史研究』2015年 第1期

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재일 중국인 노동자 학살 사건 연구, [4]둘째, 중국인 노동자 작업반장인 왕시톈(王希天)에 관한 테마 연구, [5]셋째, 중국의 일본 재난 구휼과 중국인 이재민 구제 활동에 관한 연구다. [6]하지만 지금까지 지진 발생 후 일본의 중국인 노동자 송환 문제에 관한 논문은 보지 못했다. 그래서 본고는 이전의 연구를 참고하여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이 소장한 『외무성기록(外務省記錄)』과 대만중앙연구원근대사연구소문서관(臺灣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檔案館)이 소장한 「일본진재참살화교안(日本震災慘殺華僑案)」등 미간행 문서를 통해 지진 발생 후 일본의 중국인 노동자 학살 참상을 상세히 재현하고, 일본 정부가 중국인 노동자를 구금하고 송환한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학계의 해당 분야 연구 중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부분을 보완하고자 한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지도 편달 바란다.

## 1. 중국인 노동자 학살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44초, 일본 관동 지역에서 진도 7.9의 강진이 발생해 10여 만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7]도쿄, 요코하마 두 지역의 대부분 건물이 무너져 잿더미로 변했고, 수도와 전기, 교통 및 통신 등 기간 시설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는 순식간에 대혼란에 빠졌다. '조선인이 방화를 했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등 각종 유언비어가 사방으로 퍼졌고, 그 중 중국인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소문까지 겹쳐 [8][3]지진 발생 후 일본인의 공포심이 극에 달했다. 9월 1일 한밤중에 군대는 치안 유지라는 명목으로 도쿄의 중국인 노동자 거주지인 미나미카쓰시카군 오시마마치(南葛飾郡大島町, 現도쿄시 고토구 오지마마치)로 진군한다.

---

4) 중문으로 된 주요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章誌誠「일본이 관동 대지진 기간 저장성 출신 재일 중국인노동자 학살과 북양정부가 일본 당국과의 교섭(日本在關東大地震期間慘殺浙籍旅日華工與北洋政府對日本當局的交涉)」,『浙江學刊 』1990年 第6期, 천톄젠(陳鐵健)「일본정부 오시마마치와 왕시톈 살인사건의 진상을 덮다(日本政府掩蓋大島町和王希天血案的真相)」,『浙江社會科學』2000年 第5期. 일문으로 된 주요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仁木ふみ子『震災下の中國人虐殺』, 青木書店, 1993年, 伊藤泉美「〈横浜大震災中之華僑狀況〉に見る関東大震災前後の横浜華僑社會」,『横浜開港資料館紀要』2002年第20號, 今井清一監修, 仁木ふみ子編「史料集 関東大震災下の中國人虐殺事件」, 明石書店, 2008年

5) 중문으로 된 주요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창춘왕시톈연구회 编「왕시톈기념문집(王希天纪念文集)」창춘출판사, 1996年. 지린성당안관 编 「왕시톈당안사료선편(王希天档案史料选编) 」, 창춘출판사. 1996年. 일문으로 된 주요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今井清一「大島町事件・王希天事件と日本政府の対応」, 藤原彰・松尾尊兊 编『論集現代史』, 筑摩书房, 1976年 , 171~206쪽. 田原洋 「関東大震災と王希天事件」, 三一书房, 1982年

6) 중문으로 된 주요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왕지린(王繼麟)「중국각계의 일본 관동대지진에 대한 구휼(中國各界對日本關東大震災的賑濟)」,『史學月刊』 1987年 第1期, 리쉐즈(李學智) 「1923年 중국인의 일본 지진 재난에 대한 구휼 행동(1923年中國人對日本震災的賑濟行動)」,『近代史研究』1998年 第3期, 다이화(代華)「민족주의와 인도주의(民族主義與人道主義)」,合肥工業大學出版社), 2015年. 일문으로 된 주요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帆刈浩之「広東幇華人ネットワークによる横浜華僑救済ー関東大震災時の横浜・神戸・香港・広東」,「徳島大學総合科學部人間社會文化研究」1998年第5號, 辻村しのぶ「関東大震災と仏教者ー日中関係を軸として」,『國學院大學日本文化研究所紀要』2004年第93號, 藤秀太郎「関東大震災をめぐる日中関係ー王一亭と王希天を中心に」, 川口浩編「日本の経済思想」, ぺりかん社, 2016年, 301~328쪽

7)[2] 今井清一:「横浜の関東大震災」, 有鄰堂, 2007年, 27쪽

8)[3] 姜徳相、琴秉洞 編:「関東大震災と朝鮮人」, みすず書房, 1963年, 154~156쪽

9월 2일, 일본 정부는 계엄령을 발표했다. 군대, 경찰과 자경단(自警團. 청년단, 소방단과 재향군인 등 일반 국민으로 구성)이 공동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계엄지역의 범위를 계속 확대한다. [9]9월 2일 오후 4시, 위술(衛戍)사령관은 군대에 다음과 같은 경비 훈령을 하달한다. "만일 위법 행위로 치안 질서를 해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제지하고, 경고 후에는 무기를 사용해도 된다". 다음날, 군대는 "혐의가 의심되는 조선인은 전부 경찰 또는 헌병에 넘겨 적절히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10][4] 흉흉한 계엄 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유언비어는 일본 군인과 민간인들이 조선인과 중국인을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라고 선동했다. 불과 수일만에 수천명의 무고한 조선인이 야만적으로 살육당했다. 동시에 참혹한 학살은 힘 없는 무고한 재일 중국인 노동자도 피할 수 없었다. 지진 발생 전 도쿄에 있던 중국인은 5000명으로 그 중 유학생은 1500명, 노동자가 3500명이었다. [11][5] 요코하마의 중국인은 5721명으로, 광둥 사람이 42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저장 사람이 829명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12][6] 지진 발생 후 며칠 동안, 관동 지역의 700여 명의 중국인 노동자가 일본 군인과 민간인에 의해 학살당했다. 도쿄의 오시마마치(大島町), 스나마치(砂町). 가메이도마치(龜戶町) 와 요코하마의 고야스(子安町). 신메이마치(神明町), 다카시마마치(高島町) 등 중국인 노동자 거주지에 대학살이 집중되었고, 오시마마치에서만 200여 명의 중국인 노동자가 살해당했다.

## 재일 중국인 노동자는 왜 지진 발생 후 학살당했나?

사실, 지진이 발생하기 전부터 일본인 노동자와 중국인 노동자 사이에 이익 갈등이 있었다. 1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대량의 중국인 노동자가 일본으로 건너와 일을 했다. 하지만 1920년부터 일본은 심각한 경제 위기가 시작된다. 특히 워싱턴 회담 이후인 1922년 일본은 군축을 시작했고, 이로 인해 국내 군수 공장, 조선소 등에서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한다. 경제 불황을 맞이한 일본인 노동자들은 실업 또는 실업에 대한 두려움을 중국인 노동자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중국인 노동자가 저렴한 임금으로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본 각지에서 일본인 노동자와 중국인 노동자 간 충돌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 일본 정부는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한 편 일본 국내의 중국인 노동자의 본국 송

9) 9월 2일 계엄지역은 도쿄시, 에바라군(荏原郡), 토요타마군(豊多摩郡), 키타토시마군(北豊島郡), 미나미아다치군(南足立郡), 미나미카쓰시카군(南葛飾郡) 이며, 9월 3일 도쿄부와 가나가와현 모두 포함되었고, 9월 4일 지바현과 사끼다마현도 계엄 범위에 포함되었다.

10) 仁木ふみ子:「関東大震災中國人大虐殺」, 巖波書店, 1991年, 14~17쪽

11) 「外國人罹災狀況調査ノ件」,『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學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一巻』, 外務省記録MT.6.3.1.8-17-17,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소장. 周一川의 고증에 따르면, 1923년에 적어도 1828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周一川:「近代中國留日學生人數考辨」,『文史哲』2008年 第2期 참조

12) 孫士傑:「華僑震災前人數之統計」, 1923년9월1일, 요코하마 대지진 속 화교 상황, 中研院近代史研究所檔案館 소장

환을 강화한다. 일본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중국인 노동자 단속 활동을 시작하던 무렵 관동대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발생으로 인한 대혼란 속에서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면서 중국인 노동자는 일본인 노동자의 1순위 복수 대상이 되었다.

### (1) 도쿄 중국인 노동자 학살 상황

중국인 노동자 학살은 주로 도쿄와 가나가와의 중국인 노동자 거주지에서 발생했다. 특히 도쿄 오시마마치에서의 학살이 가장 참혹했다.

20세기 초, 일본 도쿄의 스미다강(隅田川)과 아라카와(荒川) 유역에 신규 공장이 많은 공장이 들어섰다. 석탄과 원자재 등 물자들이 강을 따라 끝없이 도쿄로 운송되었다. 그래서 이 지역 부근에 하역, 운반 등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모여 살았다. 그들은 공장과 부두 근처의 오시마마치(大島町), 카메이도마치(龜戶町), 오오지마치(王子町), 미나미센주마치(南千住町)와 미카와시마마치(三河島町) 등지에 거주했고 그 중 오시마마치는 당시 도쿄의 중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중심지였다. 중국인 노동자 단체인'중화민국교일공제회(中華民國僑日共濟會)'(1922년 9월 21일 설립) 사무소는 오시마마치 3 정목(丁目, 초메) 278 번지에 있었다. 중국인 노동자는 대부분 중국인이 운영하는 여인숙에서 단체 생활을 했고 보통 한 방에 10~15명이 거주했다. 하루 방값에 기타 유지비를 더한 비용은 0.15~0.18 엔화 정도 했다. [13][7] 지진 발생 전 오시마마치에만 여인숙이 85곳 있었고 입주자의 70%는 저장성 칭톈(青田) 사람들이었다. 미카와시마마치와 미나미센주마치, 오오지마치 3곳에도 여인숙이 50여 곳이 있었고, 입주자의 80%는 저장 원저우 사람이었다. [14][8] 만일 여인숙 면적을 다다미[15] 12장이라고 계산하면 다다미 1장 당 한 사람이 살았다고 치면 약 2000여명 이상이 오시마마치, 미카와시마마치, 미나미센주마치, 오오지마치에 거주했다고 추산할 수 있다.

지진으로 인해 오시마마치 1 정목과 2정목의 대부분 건물은 불에 타버렸고 5정목의 중국인 노동자 여인숙은 무너졌다. 그래서 중국인 노동자들은 8정목의 여인숙으로 피난을 갔다. [16][9] 지진 발생 후 자경단은 수차례 오시마마치의 중국인 노동자 여인숙으로 몰려와 인원수를 확인하고 중국인 노동자들은 단 한 사람도 도망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9월 3일 오전, 자경단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오시마마치 일대의 일본 주민은 모두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17] 당일 오전 두 발의 총성을 시작으로 오시마마치의 중국인 노동자

---

13) 日華學會:「東京市附近支那労働者調」,『支那労働者入國取締関係一件 第一巻 』, 外務省記録MT.3.9.4.121 ,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소장, 647~660쪽
14) 中華民國僑日共濟會:「共濟」,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소장, 1923年, 15~16쪽
15) 다다미는 일본 전통 가속의 마루방에 까는 돗자리다. 다다미 사이즈는 일반적으로 폭 90cm, 길이 180cm, 면적 1.62 평방미터로, 일본어에서는 '첩(畳)' 이라고 부르고 일본인도 습관적으로 '첩'이라는 단위로 방의 면적을 표시한다.
16) 仁木ふみ子:「震災下の中國人虐殺」, 青木書店 , 1993年 , 31쪽
17) 「十一月九日丸山大迫両人大島行中國人労働者被害事件調査八丁目惨殺ノ件」,『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ノ被害及救済ニ関スル件 第四巻』, 外務省記録 6.3.1.8-17-16 ,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소장

학살 사건의 서막이 열렸다. 사병 두 명이 보병총을 들고 오시마마치 6정목의 중국인 노동자 전부를 여인숙에서 나오게 한 후 8정목으로 끌고 갔다. [18] 그날 오후, 군대, 경찰, 자경단 등 300여 명이 총으로 무장한 채 오시마마치 8정목의 林合吉, 周進順, 林合發, 夏日豐, 張廣進, 吳元昌, 陳益順 등 7 곳의 중국인 노동자 여인숙을 포위했고 중국인 노동자 174명을 8정목의 공터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갑자기 일본인이 소리를 질렀다. "지진이다. 모두 엎드려!" 중국인 노동자들이 땅으로 엎드리던 그 순간 일본인이 칼과 몽둥이 등 흉기로 중국인 노동자들을 향한 무차별 학살이 진행되었다. 귀가 잘린 채 동료의 시체 사이로 기절해 쓰러진 황즈롄(黃子連)[19] 만 생존했고, 나머지 173명은 현장에서 비명횡사했다. 곳곳이 시체로 나뒹굴었고 유혈이 낭자했다. 이 사건은 다름아닌 9월 3일 오시마마치 집단 학살 사건으로, 역사는 이를 '오시마마치 사건'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광명 대낮에 일본 군인과 민간인이 합동으로 자행한 비인간적인 만행이었다. 100여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일본인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 당시 대학살의 처참한 상황을 느낄 수 있다.

"그 날(9월 3일) 우리는 너무 두려워서 밖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무장한 사병 두 명이 뒤쪽의 숙소에서 중국인 노동자 100여명에게 동쪽으로 가라고 지시했죠. 내가 직접 봤어요"(오시마마치 중국인 노동자 숙소 관리자 利島家 딸의 증언) [20]

"학살은 대낮에 발생했고, 중국인의 비명소리를 들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시체들이 공터에 방치되어서 시체 냄새가 코를 찔렀죠. 그리고 이틀 내내 태워서, 잿더미가 쌓였어요. 당시 우리 아버지도 도끼와 죽창을 가져갔죠" (오시마마치 소년 2명의 증언) [21]

"대여섯 명의 사병과 경관 몇 명 그리고 수많은 일본인이 200여 명의 중국인을 포위했어요. 일본인들은 도끼, 쇠갈고리, 죽창, 일본도를 들고 있었고 측면에서 중국인을 죽이기 시작하더니 中川水上署의 순사도 미친 듯이 학살에 가담했어요. 중간에 두 발의 총성이 있었는데 아마 도망가는 사람들 쏜 것 같아요. 그 당시 같은 동포의 잔인한 행동들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시마마치 주민 木戶四郎 증언) [22]

"9월 3일 늦은 저녁 학살 현장에 갔어요 중국인들은 사방으로 겹겹이 포위당해서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 없었죠. 정말 참혹했습니다. 학살은 다음날 해질 저녁까지 계속됐어요" (오시마마치 7정목 주민 巖崎留次郎 증언) [23]

---

18) 「支那人被害ノ実情踏査記事」,「本邦変災並救護関係雑件　関東地方震災関係」, 外務省記録I.6.0.0.5-2,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소장, 389~400쪽

19) 황즈롄은 저장성 원저우시 어우하이취(甌海區) 저야진(澤雅鎮) 캉위안촌(坑源村) 사람이다. 황즈롄은 1923년 4월 일본으로 건너갔고 9월 3일 오시마마치 사건에 휘말린다. 그는 구사일생으로 학살 현장에서 도망쳐 오시마마치 7 정목의 빈 방에 숨어들었다가 일본 폭도에 발각되어 구타를 당한 후 묶인 채 7정목 코마츠가와(小松川) 경찰서로 이송된다. 이후 지바현 나라시노 군영으로 압송되어 10월 12일 상하이로 송환된다. 오시마마치 사건의 유일한 증인으로서 황즈롄은 상하이로 돌아온 후 즉시 오시마마치 사건을 폭로한다.

20) 「收王督辦正廷等呈　陳報赴日本調查僑日學生商工人等因災被害情形　編號附陳用備簪核而資交涉由」(附件一號　譯丸山傳太郎報告), 日本震災慘殺華僑案　第四冊, 03-31-8-2, 中研院近代史研究所檔案館 소장

21) 「支那人被害ノ実情踏査記事」,「本邦変災並救護関係雑件　関東地方震災関係」, 外務省記録 I.6.0.0.5-2,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소장, 389~400쪽

22) 「支那人被害ノ実情踏査記事」,「本邦変災並救護関係雑件　関東地方震災関係」, 外務省記録 I.6.0.0.5-2,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소장, 389~400쪽

23) 仁木ふみ子:「震災下の中國人虐殺」, 青木書店, 1993年, 35쪽

오시마마치 학살 사건 외에도 도쿄의 다른 지역의 중국인 노동자 학살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했다. 중국인 노동자인 판뤼파(潘瑞發)의 증언에 따르면 지진이 발생한 지 3일째 되던 날, 그와 두 명의 동료는 기차를 타고 미카와시마로 향하던 길이었는데 그 중 동료 한 명이 역에서 일본인이 휘두른 쇠갈고리에 죽었다고 한다. [24]그리고 또 다른 중국인 노동자인 린뤼창(林瑞昌)의 증언에 따르면 원저우 셴자이산촌(仙宅山村)의 70여 명이 일본에 건너와 일하고 있었는데 생존자는 단 두 명이라고 한다. 린뤼창과 함께 일본으로 간 린원타오(林文桃)는 일본인의 쇠갈고리에 맞아 크게 다쳐 미나미센주의 여인숙으로 도망간 후 죽었고, 린치칭(林啟清)과 린디창(林迪昌)은 일본인에 의해 다쳤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송환된 후 원저우 부두에서 죽었다고 한다. [25][17]

### (2) 가나가와현 중국인 노동자 학살 상황

도쿄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유언비어가 가나가와현까지 번지면서 현지의 일부 중국인 노동자들 역시 잔인하게 살해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가나가와현에서 학살된 중국인은 97명, 부상자 24명, 실종자 2명으로 모두 123명이 피해를 입었다. 그 중 대부분의 피해자가 저장성 출신 중국인 노동자다. [26]학살은 9월 1일부터 6일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2일과 3일 최고조에 이르렀고 요코하마시를 중심으로 학살이 이루어졌다. 아토 이즈미(伊藤泉美)의 연구 통계에 따르면, 고야쓰(子安町) 신메이마초(神明町)와 다카시마마치(高島町) 등 3곳에서만 일본 경찰, 군대, 상인과 노동자에 의해 잔혹한 공격을 당한 저장 출신 중국인 노동자만 42명에 이른다고 한다. [27] 중앙연구원근대사연구소당안관(中央研究院近代史所檔案館)이 소장한 「일본진재참살화교안(日本震災慘殺華僑案)」역시 가나가와현에서 중국인 학살 정황이 있었음을 증명했다. 여기에 수록된 중국인 노동자 리우겅난(留庚南)의 증언은 요코하마시 고야쓰에서 중국인 노동자 7명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다. [28] 중국인 노동자 우랑싼(吳讓三)은 자신도 고야쓰에 살았었는데 9월 1일 일본인에게 붙잡혔고 다음날 오후 심하게 맞아 머리 세 군데가 다쳐서 일본 적십자병원으로 실려가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29]

> 칭톈현 여우주샹(青田縣油竹鄉) 출신으로 살아서 귀국한 중국인 노동자 주무쿤(朱木坤)은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9월 1일 요코하마에 있었어요. 여우주 사람이 십여 명 죽었습니다. 여우주샹 출신만 20명이 있었죠. 샹헝촌(上黃村)의 두 형제는 가와사키에서 요코하마로 가는 길에 살해당했습니다. 도망쳐서 살아남은 사람은 정말 적었죠. 지진 발생 후 저 역시 밖으로 나갔는데, 멀리서 일본인이 쇠갈고리 같은 것을 들고 사람을 죽이면서 제 쪽으로 오는 걸 봤

24) 仁木ふみ子:「震災下の中國人虐殺」, 青木書店, 1993年, 181쪽
25) 仁木ふみ子:「震災下の中國人虐殺」, 青木書店, 1993年, 181쪽
26)伊藤泉美:「関東大震災と横浜華僑社會」,『横浜開港資料館紀要』1997年 第 15號
27) 伊藤泉美:「関東大震災と横浜華僑社會」,『横浜開港資料館紀要』1997年 第 15號
28) 「收王督辦正廷等呈 陳報赴日本調查僑日學生商工人等因災被害情形 編號附陳用備簋核而資交涉由」(附件一號 譯丸山傳太郎報告), 日本震災慘殺華僑案 第四冊, 03-31-8-2, 中研院近代史研究所檔案館 소장
29) 「收王督辦正廷等呈 陳報赴日本調查僑日學生商工人等因災被害情形 編號附陳用備簋核而資交涉由」(附件一號 譯丸山傳太郎報告), 日本震災慘殺華僑案 第四冊, 03-31-8-2, 中研院近代史研究所檔案館 소장

습니다. 그 중 한 명이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아는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제 이름을 부르더니 외쳤어요 "빨리 도망가. 그들이 널 죽일 거야!". 다른 일본인 두 명이 그 말을 듣더니 묻더군요"아는 사람이야?" 그 일본인이 "응"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덕분에 전 살았죠. 일본인은 밖에서 보이는 사람은 바로 죽이고, 집안에 들어와 샅샅이 뒤졌습니다. 침대 밑에 숨어있던 사람도 끌어내서 죽였죠" 30)

그 외에도 가나가와현 아시가라시모군(足柄下郡) 도이촌(土肥村)에서 중국인 노동자 살해 사건이 발생했는데 주오키나와중화민국총영사관은 이 사건을 예의주시했다. 노무 작업반장 위안순솬(阮順軒) 은 십여 명의 중국인 노동자를 데리고 1922년 9월 도쿄에서 가나가와현 도이촌에 왔는데, 일본인 작업반장 中森文次郎 밑에서 철도 건설에 종사했다. 1923년 9월 4일 오후 2시 갑자기 일본인 백 여 명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몰려와 다짜고짜 중국인 노동자를 구타하기 시작했고 3명이 죽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한다. 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위안위칭(阮玉卿), 천자오밍(陳昭明)과 천바오톈(陳寶田) 등 세 명은 산으로 피난을 했는데 불행히도 자경단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되었다고 한다. 사건 발생 후 작업반장 위안순솬은 이 사건을 주오키나와총영사관에 알렸고 총영사관은 즉시 이 사건을 주일중화민국공사관에 보고했으며 가나가와현청에 서한을 보내 중국인 노동자 보호를 요청한다. 11월 13일, 총영사관은 핑리투(馮勵圖)를 현장에 파견해 조사를 진행하고, 오다와라(小田原) 경찰서장에게 생존한 위안순솬 등 12명을 총영사관에 호송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 후 위안순솬 등 4명은 증인 자격으로 요코하마에서 머물고, 나머지 중국인 노동자는 11월 22일 중화회관(中華會館)이 배표를 마련해주어 안전하게 상하이로 돌아왔다. 총영사관의 교섭 노력으로 가나가와현 오다와라 경찰서는 일본인 살인범 여덟 명을 체포해 입건한다. 요코하마 지방 법원은 해당 사건을 수리한 후 살인범 中島卯之助 등을 기소했다. 이 사건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중국인 노동자 살상 사건 중 몇 안되는 사건이다. 31)

## 2. 중국인 노동자 수용

지진 발생 후 일본 군인과 민간인의 중국인 대학살에 대해 일본외무성은 만일 이를 막지 못하면 훗날 심각한 국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즉각 인식했다. 9월 4일, 외무성 구미국 국장 마쓰다이라 츠네오(松平恒雄)와 아시아국 국장 데부치 가쓰지(出淵勝次)는 관동계엄국사령부 사령관 후쿠다 마사타로(福田雅太郎)와 회담을 진행했다. 마쓰다이라 츠네오는 조선인 학살 사건이 조선반도와 러시아, 위만의 조선인의 귀에도 들어갔다며, 조선인이 보복을 할까 두렵다고 말했다. 그래서 군대가 나서서 지금 생존한 재일조선인을 보호해줄 것을 희망했다. 데부치 가쓰지는 조선인 학살 광풍이 재일 중국인까지 번질까 우려했다.

30) 仁木ふみ子:「震災下の中國人虐殺」, 青木書店, 1993年, 181~200쪽

31)「收駐橫濱代理總領事事務孫士傑呈 日本青年團慘殺我國僑工呈送名單及診斷書請鑒核由」, 日本震災慘殺華僑案 第一冊, 中研院近代史研究所檔案館 소장,「收駐橫濱孫代理總領事呈 僑工陳昭明等三人被日本青年團慘殺一案呈報辦理情形連同馮雇員報告書等件請鑒核備案由」, 日本震災慘殺華僑案 第二冊, 03-31.7-2, 中研院近代史研究所檔案館 소장

그는 중국인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학살을 방임하면 골치 아픈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그래서 군대가 중국인을 보호해줄 것을 청했다. [32] 계엄사령부는 9월 4일 <중국인과 조선인을 나라시노 포로 수용소에서 수용한다(將支鮮人收容至習誌野舊俘虜收容所)>는 명령을 내렸고 생존한 조선인과 중국인을 함께 군대 수용소로 압송한다. 그래서 경시청은 9월 4일부터 중국인 노동자'보호'를 명목으로 생존한 중국인 노동자 집단 수용(安置)에 착수하여 가메이도마치(龜戶町)의 300명, 미나미센주마치(南千住町)의 50~60명, 오오지마치(王子町)의 50~60명을 수용했다. [33]

9월 7일 중화민국 임시대리공사 장위완제(張元節)는 데부치 가쓰지를 예방해 재일 중국인 이재민 구제 대책을 논의하며, 일본측에 유학생을 먼저 귀국시키고, 중국 상인은 각자 뜻에 따라 귀국 여부를 결정하게 하며, 중국인 노동자는 재난 발생 후 재건에 필요한 인력 이외에는 본국으로 강제 송환해줄 것을 요구한다. [34] 때마침 지진이 발생 전부터 시행한 중국인 노동자 단속 활동 효과가 미미해 골치 아프던 중 일본 정부는 이번 지진이 중국인 노동자를 한번에 귀국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외무성은 내무성, 육군성, 경시청, 공사관까지 적극적으로 동원해 9월 7일부터 12일까지 매일 '중국인 구호 협상 회의(救護中國人協商會議)'를 6차례 개최해 [35]중국인 피해 상황 조사, 중국인 집단 수용, 송환선 마련 등 긴급 조치를 논하고, 송환을 위한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

9월 7일 첫 번째 협상 회의에서'중화민국구제위원회(中華民國救濟委員會)'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인 이재민의 행방을 신속히 조사해, 공사관이 외무성에 보고했다. 육군성은 공사관의 조사 보고에 따라 중국인 이재민을 적절히 수용한다. [36]9월 8일 2차 협상회의는 도쿄 중앙과 서남 지역의 중국인 노동자와 중국 상인을 공사관에 두기로 결정한다. 동북 지역의 중국인 노동자를 현지에 수용 또는 고쿠부다이(國府臺) 군영 및 나라시노 군영으로 모으기로 한다. [37][27]사실 이 결의 전에 육군은 9월 2일 중국인 노동자를 포위하여 체포하고, 도쿄 각지에 수용된 중국인 노동자를 나라시노 군영으로 한꺼번에 이송시켰다. 예를 들면, 9월 5일, 고쿠부다이 야전중포병제7연대(野戰重炮兵第七連隊)에 구금된 중국

32) 「鮮人及支那人ノ救恤保護ニ関スル件」,『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ノ被害及救済及ニ関スル件　第一巻』, 外務省記録 MT.6.3.1.8-17-16 ,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소장

33) 「在京浜支那人現況ノ件」,『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學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三巻』, 外務省記録 MT.6.3.1.8-17-17 ,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소장

34)『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學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二巻』, 外務省記録 MT.6.3.1.8-17-17,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소장

35) 매번 회의 참석 인원은 변동이 있었고, 다음의 사람이 참가했다. 외무성아시아국국장 出淵勝次、외무성아시아국 제3과장, 외무성아시아국사무관 官守島伍郎, 육군성군사과장 山下奉文, 육군보병 佐藤大佐, 참모본부 奧大尉, 내무성경보국외사과장 大塚惟精, 주일본중화민국공사관임시대리공사 장위안제(張元節). 공사관비서관 첸수이순(錢稐孫), 일화학회(日華學會) 山井格太郎, 중화민국구제위원회 고문 黑澤禮吉, 일본승려 水野梅曉, 중화유일기독교청년회(中華留日基督教青年會) 주임 간사 馬伯援, 미국청년회 간사 등이다.

36) 중화민국구제위원회 인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대리공사 장위안제 위원장, 1등 비서관 장홍제(江洪傑), 3등 비서관 첸수이순(錢稐孫), 주요코하마영사관 부영사 순스제(孫士傑), 수행원 양췌룬(楊雪倫)이 위원을 역임하고, 黑澤禮吉는 고문을 맡았다.「支那人救護打合會（第一回）」,『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學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三巻』, 外務省記録 MT.6.3.1.8-17-17 ,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소장 참고

37)「支那人救護打合會（第二回）」,『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學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三巻』, 外務省記録 MT.6.3.1.8-17-17 ,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소장

인 350명을 나라시노 군영에 보냈고 [38]9월 6일, 오시마마치 3정목의 700여 명의 중국인은 경찰 백 여명에게 포위돼 체포된 후 나라시노 군영으로 압송되었다. [39]

나라시노 군영의 중국인 노동자 수용 상황은 외무성과 공사관의 시찰보고서(9월 21일 현지 시찰)를 통해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40]

나라시노 군영에 구금된 중국인은 모두 1690명으로 대부분이 중국인 노동자이며 모두 지진 발생 후 도쿄의 혼조(本所)와 후카가와(深川)에서 오시마마초로 피난을 온 사람들로 9월 6일 이후 나라시노 군영에 차례로 수용되었다. 수용된 중국인은 두 개 반으로 나뉘었는데 제 1수용반(新병사 4동)과 제2 수용반(舊병사 3동)이다. 제 1 수용반에는 모두 850명 중국인이 있었는데 푸젠(福建) 출신 33명(포목상 27명, 부녀자 3명, 아동 3명) 이외에는 모두 원저우에서 온 노동자로, 작업반장인 천푸싱 (陳福興)이 책임자였다. 제 2 수용반은 중국인 840명 있고 모두 원저우에서 온 청장년층 노동자로, 천샹푸(陳薌圃)[41]가 책임자다.

보고서에는 당일 중국인의 건강 상태를 시찰한 기록이 있는데 환자 30명, 중증환자 5~6명으로 모두 일반 질병이나 지진으로 상해를 입은 이들이다. 수용 기간 동안 3명이 급성 폐렴, 위장병과 이하선염으로 사망했다. 장위안제가 중국인 노동자의 다리에 붕대를 보고 다친 이유를 물어보니 주위의 중국인 노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진으로 집이 무너져 다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군영에서 급식을 제공했는데 모두에게 매일 쌀 두 홉, 보리 두 홉 및 부식품을 살 수 있는 15엔이 제공되었고, 고구마가 자주 배급되었다고 한다. 화재 예방을 위해 모든 급식은 군대가 책임을 졌다. 대부분 중국인 노동자는 옷과 이불을 소지하고 있었고 그 외에 이불이 없는 이들에게 군대가 차렵 이불을 제공했다. 마지막 보고서에는 군영의 거주지, 의료실과 화장실 등은 깨끗하고 질서 있게 운영되었고, 중국인 역시 매우 조용하며 규칙을 지키고 실외 마당에서 운동을 하거나 노래를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공사관 일행의 방문을 영접하기 위해 일본은 사전에 영지를 청소하고 중국인 노동자에게 함구령을 내려 학살 사건의 진상을 폭로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나라시노 군영의 실제 상황은 어찌된 것일까? 1923년 11월 8일 원저우뤼후동향회(溫州旅滬同鄉會)가 외교부에 보낸 보고서에는 군영에서 중국인 노동자의 생활을 기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찰청에서 100여명을 파견해서 오시마마치, 미카와시마 등에서 거주한 화교 1600여 명을 사방에서 불러모아 지바 나라시노 군영에 구금했다. 화교들은 학대를 당했고 감옥에 갇혔다. 매일 식사로 계란 크기의 주먹밥 세 개 나왔을 뿐 한 끼 식사량에 못 미치는 양이었다. 밤에는 딱딱한 돌을 베게 삼고 바닥에서 잠을 자는 등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너무 추워

38) 중국인 350명은 1923년 9월 3일 고쿠부다이의 야전 중포병 제7연대(野戰重炮兵第七連隊)로 수감되었다.
39) 仁木ふみ子:「震災下の中國人虐殺」, 青木書店, 1993年, 47쪽
40) 1923년 9월 21일, 주일중화민국공사관 참사관 장위안제(장위안제는 1923년 5월 9일~9월 19일까지 주일중화민국공사관 대리 공사를 역임. 1923년 9월 18일 스뤼번(施履本)이 부임 후, 장위안제는 참사관을 역임)는 육군성, 경시청, 외무성 관료의 안내에 따라 미나미센주마치와 나라시노 군영의 중국인을 위문하고 시찰한다. 그 후 외무성 문화사무국 사무관 岡部長景와 장위안제 참사관은 시찰 보고서를 제출한다.
41) 천샹푸(陳薌圃), 칭톈 사람. 일본 메이지 대학을 졸업한 재일 유학생으로 중화민국교일공제회(中華民國僑日共濟會) 교류 주임을 역임

서 아프기 일쑤였으며, 지키는 병사들은 무섭기 그지없었다. 그들은 뜻대로 안되면 채찍질을 했다. 그 기간 중국인이 휴대한 물건은 모두 압수당했고, 중국어를 할 수 있는 밀정이 옆에서 감시하고 있어, 각 대표가 군영으로 위문 왔을 때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게 했다. [42]

이 보고서는 중국인 노동자가 군영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했고, 일본군이 마음대로 구타한 실제 상황을 언급했다. 군영에서 중국어를 할 줄 아는 밀정이 옆에서 감시를 하고 있어, 공사관 일행이 방문을 해 중국인 노동자가 혹시 다치거나 피해를 입었는지 물어도 해당 노동자는 두려워서 학살 사건의 자초지종을 솔직하게 말하기 어려웠다.

## 3. 중국인 노동자 송환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진 발생 후 일본 정부는'보호'라는 명목으로 각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피난간 중국인 노동자를 지바현 나라시노 군영으로 압송해 육군이 관리하게 하거나 도쿄 미나미센주마치 관할 경찰서가 집중 수용하고 식량을 공급했다. 동시에 공사관이 전체 중국인 노동자의 귀국을 책임지고, 외무성은 송환 작업에 착수했다.

9월 11일 제 5차 중국인 구호 협상 회의에서 중국인 귀국 사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한다. 회의에서 공사관의 첸수이순(錢穟孫) 비서는 귀국을 희망하는 유학생이 700~800여명, 중국인 노동자는 1200명 내외라고 보고했다. 회의는 공사관이 귀국 명부를 작성하고 외무성은 이들에게 비자와 여권을 발급해주기로 결정한다. [43][30] 9월 12일 제 6차 중국인 구호 협상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송환 방안을 논의하였다. 귀국을 희망하는 중국인 교포는 14일 오후 시바우라에서 출항하는 일본 선사의 송환선을 타고 귀국할 수 있었다. 이 송환선을 타지 못하면 16일 출항하는'南生号'를 탈 수 있다. [44]그리고 철을 실은 선박을 예비용으로 배치해 [45][31]중국인 교포 송환 작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당시 나라시노 군영의 중국인 노동자는 1690명, 미나미센의 중국인 노동자는 1200명으로 모두 2900명이었다. [46][32]중국인 노동자 송환 작업의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육군성, 내무성과 외무성이 협력해 송환선을 배선한다. (2) 시바우라의 시미즈구미(清水組) 창고를 임시 수용소로 정하고, 경시청이 장소 임대와 배치에 필요한 설비를 책임진다. (3) 나라시노 군영과 미나미센에 수감된 중국인 노동자는 육군 관헌(官憲) 및 내무 관헌(官憲)이 시바우라 임시 수용소까지 호송을 책임진다. (4) 시바우라 임시 수용소의 음식

42) 「收溫州旅滬同鄉會會長黃溯初呈　日人乘災慘殺華僑謹具表臚陳事實迫祈迅準提出嚴重交涉由」, 日本震災慘殺華僑案第一冊, 中研院近代史研究所檔案館 소장

43)「支那人救護打合會（第五回）」,『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學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三巻』, 外務省記録 MT.6.3.1.8-17-17,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소장

44) 9월 11일 오후 첸수이순은 出淵勝次를 예방하여, 현재 요코하마 항구에 정박한 고베 중화회관이 빌린'南生號'를 중국인 이재민을 호송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다.「支那船南生號入港ニ関スル件」,『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學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三巻』, 外務省記録MT.6.3.1.8-17-17,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소장 참조

45)「支那人救護打合會（第六回）」,『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學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三巻』, 外務省記録MT.6.3.1.8-17-17,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소장

46) 「支那労働者送還ノ件」,『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學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一巻』, 外務省記録 MT.6.3.1.8-17-17,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소장

할당은 외무성이 책임지며, 경시청이 배급을 책임진다. (5)외무성은 중국 정부에 송환 상황 보고를 책임지며, 중국인 이재민이 중국에 도착한 후의 관련 사항을 적절히 인수인계한다 (6) 모든 비용은 일본 정부의 지진 재난 구호 비용으로 지불한다. [47][33]그래서 외무성은 도쿄시 내 중국인 노동자와 상인을 시바우라 임시 수용소로 옮기는 것을 책임지며, 나라시노 군영의 중국인 노동자는 육군의 지시 하에 쓰다누마 역(津田沼站)에서 전용 열차를 타고 긴시조 역(錦系町站)에 도착한 후 걸어서 시바우라 임시 수용소로 갔다.

시바우라 임시수용소는 9월 14일에 문을 열어 9월 30일 닫을 때까지 모두 1242명의 중국인을 받았는데 대부분이 남성이었고, 여성은 35명, 아동 4명이엇다. 원저우 출신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산둥, 광둥, 푸젠 순이었다. 중국인 노동자 70%, 유학생 20%, 화상 및 기타가 10% 내외였다. 외무성은 모리시마 고로(守島伍郎) 사무관을 주임으로 파견하고, 고토(後藤) 사무관을 부주임으로 임명해 시바우라 임시수용소를 총괄하게 하여 음식, 위생, 경비, 의료 등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한다. 모든 송환선 스케줄이 확정된 후 하루 전 위로금 교환권(중국에 도착한 후 고향으로 돌아갈 교통편 보조금)을 중국인 노동자에게 제공하고, 승선 당일 육군의 군용 트럭을 배차해 짐을 운반해주고, 해군 바지선을 제공해 중국인 노동자가 송환선에 승선하도록 돕는다. [48][34]

표1. 시바우라 임시 수용소 인원 증감 현황 일람표

| 日期 | 入所人数 | 出所人数 | 在所人数 |
|---|---|---|---|
| 9月14日 | 652 | 412 | 240 |
| 9月15日 | 148 | 232 | 156 |
| 9月16日 | 0 | 0 | 156 |
| 9月17日 | 24 | 0 | 180 |
| 9月18日 | 0 | 0 | 180 |
| 9月19日 | 105 | 0 | 285 |
| 9月20日 | 132 | 6 | 411 |
| 9月21日 | 78 | 0 | 489 |
| 9月22日 | 0 | 100 | 389 |
| 9月23日 | 42 | 0 | 431 |
| 9月24日 | 1 | 0 | 432 |
| 9月25日 | 31 | 0 | 463 |
| 9月26日 | 6 | 0 | 469 |
| 9月27日 | 2 | 0 | 471 |
| 9月28日 | 1 | 458 | 14 |
| 9月29日 | 20 | 0 | 34 |
| 9月30日 | 0 | 34 | 0 |

자료 출처: 「送還中華民國人芝浦収容ノ件」，『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學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三巻』， 外務省記録MT.6.3.1.8-17-17，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소장

47)[33]「支那労働者送還ノ件」,『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學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一巻』, 外務省記録 MT.6.3.1.8-17-17，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소장

48)[34] 「送還中華民國人芝浦収容ノ件」,『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學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三巻』, 外務省記録 MT.6.3.1.8-17-17，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소장

중국인 노동자(소수의 상인 포함)의 귀국 노선은 대체로 4가지였다. 첫번째, 일본 정부가 준비한 전용 송환선을 타고 시바우라에서 출발해 상하이로 직행, 두번째, 시바우라에서 출발해 고베에 도착 후 고베에서 중일간 정기 선박으로 갈아탄 수 상하이로 출발, 셋째, 나가사키에서 출발해 상하이로 직행, 넷째, 요코하마를 출발해 상하이로 직행하는 것이다.

9월 15일부터 10월 29일까지, 게이힌(京濱) 지역의 중국인 노동자와 상인은 모두 3671명으로 각각 13차례로 나뉘어 귀국했다(표2참조). 그 중 일본 정부가 선박 다섯 척을 중국인 이재민을 수송하는 전용 송환선으로 배선했는데 9월 15일 출항한 송환선 치토세마루(千歲丸)는 공사관에 수용된 중국인 노동자 및 상인(주로 상인) 403명과 유학생 및 가족들 243명이 승선했다. [49]9월 28일 출항한 송환선 오비사마마루(弘濟丸)는 도쿄시 내 중국인 노동자가 주로 승선했다. 9월 30일 송환선 하쿠아이마루(博愛丸), 10월 2일 송환선 초이산마루(長順丸)와 10월 6일 송환선 치토세마루는 나라시노 군영에 수용된 중국인 노동자들이 승선했다.

표2. 본국으로 송환된 중국인 노동자 인원수와 승선한 송환선 통계표

| 회차 | 출발 일자 | 도착 일자 | 노선 | 선박명 | 중국인노동자수 | 비교 |
|---|---|---|---|---|---|---|
| 노선1： 시바우라-상하이 | | | | | | |
| 1 | 9月15日 | 9月21日 | 시바우라-상하이 | 千歲丸 | 403 | 전용 선으로 송환 |
| 합계 | 403 | | | | | |
| 노선2: 시바우라-고베-상하이 | | | | | | |
| 2 | 9月22日 | 9月23日 | 시바우라-고베 | 上海丸 | 101 | |
| | 9月27日 | - | 고베-상하이 | 熊野丸 | 103 | |
| 합계 | 103 | | | | | |
| 3 | 9月28日 | 9月29日 | 시바우라-고베 | 長崎丸 | 29 | |
| | 10月1日 | - | 고베-상하이 | 弘濟丸 | 43 | |
| 합계 | 43 | | | | | |
| 4 | 9月28日 | 9月30日 | 시바우라-고베 | 弘濟丸 | 450 | 전용 선으로 송환 |
| | 10月1日 | - | 고베-상하이 | 弘濟丸 | 450 | |
| 합계 | 450 | | | | | |
| 5 | 9月30日 | - | 시바우라-고베 | 博愛丸 | 452 | 전용 선으로 송환 |
| | - | - | 고베-상하이 | 博愛丸 | 452 | |
| 합계 | 452 | | | | | |
| 6 | 10月2日 ※1 | - | 시바우라-고베 | 长顺丸 | 525 | 전용 선으로 송환 |
| | - | - | 고베-상하이 | 博愛丸 | 525 | |
| 합계 | 525 | | | | | |
| 7 | 10月6日 | - | 시바우라-고베 | 千歲丸 | 743 | 전용 선으로 송환 |
| | - | - | 고베-상하이 | 선박회사 기선 | 743 | |
| 합계 | 743 | | | | | |

49) 관동대지진 후 이재민이 된 유학생과 그 가족은 모두 442명으로 5차례로 나뉘어 귀국길에 오른다. 유학생 구제와 송환은 다른 논고에서 논의한다.

| | | | | | | |
|---|---|---|---|---|---|---|
| 노선3: 나가사키-상하이 | | | | | | |
| 8 | 9月23日 | - | 나가사키-상하이 | 近江丸 | 215 | |
| 9 | 9月25日 | - | 나가사키-상하이 | 千歳丸 | 501 | |
| 10 | 9月29日 | - | 나가사키-상하이 | 熊野丸 | 29 | |
| 11 | 10月2日 | - | 나가사키-상하이 | 日光丸 | 17 | |
| 합계 | 762 | | | | | |
| 노선4: 요코하마-상하이 | | | | | | |
| 12 | 10月20日 | - | 요코하마-상하이 | 北野丸 | 83 | |
| 13 | 10月29日 | - | 요코하마-상하이 | 春洋丸 | 107 | |
| 합계 | 190 | | | | | |
| 귀국 중국인 노동자 총인원 | | 3671※2 | | | | |

注： ※1長順丸는 1923년 10월 2일 시바우라에서 출항한 후 좌초되어, 수리를 한 후 10월 7일 다시 출항한다. 「長順丸座州ニ関スル件」, 『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學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一巻』, 外務省記録MT.6.3.1.8-17-17,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소장 참조 ※2 외무성기록의 통계 데이터에는 귀국 송환 중국인 노동자 3677명이다. 이 데이터는 9월 20일 시바우라에서 長崎丸에 승선해 고베에 도착 후 현지에 머무르기로 결정한 중국인 노동자 6명까지 포함된 수치이다. 필자는 정확한 귀국 중국인 노동자는 3671명이라고 생각한다. 『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學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二巻』, 外務省記録MT.6.3.1.8-17-17,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참조

자료 출처: 본 표는 다음의 문서를 참조해 작성했다. 「罹災支那人送還事務ノ為ノ神戸出張ノ件報告」, 『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學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一巻』, 外務省記録MT.6.3.1.8-17-17,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소장, 「罹災支那人送還方針ノ決定及其ノ実行」, 『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學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二巻』, 外務省記録MT.6.3.1.8-17-17,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소장

나라시노 군영의 중국인 노동자는 이번 송환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3차례에 나누어 송환이 진행됐다. 1차 송환은 9월 30일 博愛丸, 2차 송환은 長順丸, 3차 송환은 10월 6일 千歳丸를 통해 중국으로 송환되었다.

9월 21일, 주일본 중화민국 공사관 참사관인 장위안제(前 대리공사)는 육군성, 경시청, 외무성 관료의 안내에 따라 미나미센과 나라시노 군영에 있는 중국인 노동자를 위문하고 시찰했고 그들에게 빨리 귀국할 것을 권고한다. 미나미센의 오쿠마치(尾久町)를 시찰할 때 장위안제는 원저우 출신 중국인 노동자와 의사 소통이 안되어 편지를 작업 반장에게 남긴다. 그 내용은 도쿄는 앞으로 일자리가 너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중국인 노동자들은 이번에 일본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송환선을 통해 귀국해야 하며, 작업 반장도 최대한 빨리 귀국 희망 명부를 작성해 제출하라는 것이었다.[50][35]이후 일행이 나라시노 군영으로 왔을 때 이곳에 수용된 다수의 중국인 노동자들은 도쿄에 계속 남거나 오사카, 나가사키 등지로 건너가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다. 장위안제는 지진 발생 후 도쿄는 일자리가 없고, 지금은 현금이 있다고 해도 나라시노 군영을 떠나면 먹을 음식도 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 빨리 귀국해서 추가 구제금을 타라고 설득한다. 그리고 중국인 노동자 책임자인 천푸싱과 천샹푸에게 즉시 중국인 노동자 명부를 작성하라고 명령한다.[51][36]

50) 「南千住及習誌野ニ避難中ノ支那人慰問旁支那代理公使等ノ視察ニ関スル件」, 『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學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三巻』, 外務省記録 MT.6.3.1.8-17-17,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소장

9월 28일, 공사관의 첸수이순 비서관은 나라시노 군영을 재차 방문해 중국인 송환 업무를 논의한다. 중국인 노동자가 일본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말고 차라리 이 기회를 통해 전원이 귀국하는 것이 공사관의 뜻이었다. 군영에 반 달 이상 수감된 중국인 노동자들도 점점 생각이 달라지더니 하루빨리 귀국하고 싶어했다. 다만 일부는 장사, 임대, 채무 등 마무리 못한 일이 있어 일본에 당분간 머무르고 싶어했다. [52][37]

이로써, 나라시노 군영에 수용된 1차 귀국 중국인 노동자 452명이 9월 30일 博愛丸에 승선, 2차 525명은 10월 2일 長順丸에 승선해 귀국한다. 10월 3일과 4일, 공사관 첸수이순 비서는 나라시노 군영을 다시 찾아와 남은 중국인 노동자들이 이번에 한꺼번에 귀국할 것을 설득한다. 3차 귀국 중국인 노동자는 모두 706명으로 남은 중국인 노동자 중 일본에 계속 남고 싶어하는 사람은 58명이었다.[53] 다른 환자5명와 통역 2명은 환자 곁에서 머물며 나라시노 군영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다. [54][38]3차 귀국자는 706명으로 신체 건강한자 694명, 환자 12명이었다. 일본은 환자 12명과 경비가 필요한 중국인 3명을 차량 두 대로 별도로 압송했고, 나머지 중국인 노동자는 15명씩 나뉘어 이동했는데, 각 분대는 분대장 1명과 사병이 책임졌다. 육군은 10월 5일 새벽 3시부터 중국인 노동자 인원수를 파악했다. 6시경 전체 출발해 쓰다누마(津田沼)역으로 걸어가 7시 30분 전용 열차에 탑승했다. 9시에 긴시조(錦系町)역에 도착해 다시 걸어서 오후 1시에 시바우라 승선 지점에 도착했다. 모든 중국인 노동자는 승선 전 교환용 빨간색 표를 받았는데 이 표를 위로금 10엔으로 교환했고 귀국하는 배에 몸을 실었다. [55][39]10월 19일, 나라시노 군영에 머물며 치료하던 환자와 통역은 아요야마(青山) 적십자 병원으로 이송된다. [56][40]이로써 나라시노 군영에 수용된 중국인 이재민 전원이 군영을 떠났다.

앞서 언급한 일본 정부가 시바우라에서 상하이 직행 및 시바우라에서 고베를 거쳐 상하이로 가는 노선 외에, 중국인 762명이 4차례에 나뉘어 나가사키에서 배를 타고 귀국했는데, 이들 중국인은 귀국 위로금을 받지 못했다. 10월 19일까지 나라시노 군용에 있던 중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게이힌 지역의 대부분 중국인 이재민은 귀국하는 배에 순조롭게 승선

51) 「南千住及習誌野ニ避難中ノ支那人慰問旁支那代理公使等ノ視察ニ関スル件」, 『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學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三巻』, 外務省記録 MT.6.3.1.8-17-17,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소장

52) 「支那公使館員等ノ支鮮人収容訪問ノ件」, 『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學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一巻』, 外務省記録 MT.6.3.1.8-17-17,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소장

53) 이 58명은 5,60~100위안 정도의 자금을 소지하거나 상품 선적 및 하역증을 갖고 잠시 일본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이들이다. 그들은 10월 5일 3차 귀국 중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나라시노 군영을 떠났다. 그 중 43명은 오시마마치로 갔고, 천샹푸가 감독을 맡았다. 15명은 미카와시마마초로 가, 우펑치(吳鳳岐)의 관리를 받았다. 「習誌野ノ収容中ノ支那労働者並ニ商人第三回帰國乗船ノ為メ習誌野収容所ヨリ芝浦へ輸送打合ニ関スル件」, 『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學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三巻』, 外務省記録MT.6.3.1.8-17-17,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소장 참조

54) 「在習誌野支那人送還終了ノ件」, 『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學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二巻』, 外務省記録 MT.6.3.1.8-17-17,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소장

55) 「習誌野ノ収容中ノ支那労働者並ニ商人第三回帰國乗船ノ為メ習誌野収容所ヨリ芝浦へ輸送打合ニ関スル件」, 『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學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三巻』, 外務省記録 MT.6.3.1.8-17-17,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소장

56) 「在習誌野支那人送還終了ノ件」, 『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學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二巻』, 外務省記録 MT.6.3.1.8-17-17,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소장

했다. 하지만 귀국을 희망한 자 중 무상 귀국 선박에 승선하지 못한 이도 일부 있었다. 공사관의 중재로 일본 정부는 추가로 선박 두 척을 배선해 중국인을 귀국시켰다. 10월 20일 중국인 83명이 기타노마루(北野丸)를 타고 요코하마에서 출발해 상하이로 향했다. [57] [41]10월 29일 중국인 190명은 신요마루(春洋丸)를 타고 요코하마에서 출발해 상하이로 향했다. 이로서 일본 정부의 중국인 귀국 사업은 일단락을 막을 내렸다. 모두 4113명 중국인을 송환하고, 그 중 유학생 및 그 가족이 442명, 중국인 노동자와 상인이 3671명이다.

## 4. 결론

관동대지진 발생 후 일본에서 벌어진 재일 중국인 노동자 학살, 구금 및 송환은 근대 일본 정부가 시행한 중국인 노동자 배척 정책의 산물이다. 일본은 非이민국가로서 메이지 시대부터 줄곧 외국인 단순 기능 인력과 비숙련 노동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원칙을 고수했다. 일본 정부는 예전에도 중국인 노동자의 대량 입국이 시작되기 전부터 1899년 敕令 第352號 <조약 또는 관례에 따라 거주 자유가 없는 외국인의 거주 및 영업에 대한 사항(關於根據條約或慣例不具有居住自由的外國人的居住及營業的事項)>과 內務省令第42號(1899년), 內務大臣訓令 第728號 (1899년), 內務省令 第1號 <외국인 입국에 관한 사항(關於外國人入境的事項)> (1918년) 등 법령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중국인 노동자의 일본 국내 입국을 철저히 막았다. 후에, 1차 세계 대전 기간, 일본 자본주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노동력이 극도로 부족하자 일본 정부는 중국인 노동자가 입국하여 국내 노동력시장으로 유입되는 상황을 암묵적으로 허용했다.

호시절은 오래 가지 않았다. 1922년 일본 경제 위기가 발발하고 국내 실업률이 치솟기 시작하면서 중국인 노동자는 일본인 노동자가 실업을 당해 분풀이하는 첫 번째 희생양이 되었다. 각 지역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중국인 노동자를 적대하고 배척하는 과정에서 충돌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일본 정부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인 입국 심사를 재차 강화하고, 일본 국내 중국인 노동자의 송환을 강화했다. 일본 각 지방 관청은 앞다투어 외무성에 중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금지하고, 불법 노동자를 검거 송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 정부의 중국인 노동자 배척 조치는 비록 중국인 노동자의 증가 속도를 어느 정도 억제하고 국내 일본인 노동자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었지만, 중국인 노동자를 완전히 일본 국외로 추방한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런데 1923년 9월 발생한 대지진은 일본 정부의 중국인 노동자 배척 정책 실시를 가속화했다. 지진 발생 후 일본 군인, 경찰, 자경단은 700여 명의 힘없고 무고한 중국인 노동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했다. 사건 발생 후 일본 정부는 학살 사건이 폭로되어 중일 외교 분쟁을 불러일으킬까 두려워 '보호구제'라는 미명하게 생존한 중국인 노동자를 마음대로 구금했고, 이 기회를 이용해 집단 강제 송환을 실시해 재일 중국인 노동자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고자 했다. 심지어, 중국인 노동자의 재입국을 막기 위해 1924년 12월 28일 관동청 경무국장은 <일본 국내로 들어오

57) 『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學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二巻』, 外務省記録 MT.6.3.1.8-17-17,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소장

는 중국인 노동자 단속 및 식별 표준 (前往日本內地的中國人勞動者取締及識別標準)>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불법 이민 단속 방법과 상세한 중국인 노동자 인증 표준을 명확히 한다. [58][42] 일본 각 지역 세관은 이 표준에 따라 중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을 강화한다. 비록 지진 발생 후에도 적지 않은 중국인 노동자가 생계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왔으나 그 규모는 지진 발생 이전보다 훨씬 못 미친다. 1927년 쇼와 금융 대공황과 1930년 쇼와 시대 공황 이후, 일본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했고 노동력 수요가 급감했다. 중일 정국도 혼란이 발생했다. 1931년 만주사변(918사변), 1937년 노구교사변이 발생하면서 재일 중국인 노동자는 귀국 피난길에 올랐다. 중일 관계가 악화되자 일본은 1939년 내무성령 제 6호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송환에 관하여 (關於外國人的入境、滯留以及遣返)>를 발표하고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였고, 이후 재일 중국인 노동자는 점차 줄어들었다.

58) 今井清一감수 , 仁木ふみ子 編『史料集　関東大震災下の中国人虐殺事件』, 明石書店 , 2008年 , 872~876쪽

# 虐殺、収容、送還:
## 関東大震災において日本の中国人労働者への暴力·排斥事件に関する研究[1)]

鄭樂靜(溫州大)

第一次世界大戦中、日本経済が高度な成長を遂げ、日本国内の労働力不足問題が現れた。日中間の経済力の差で浙江、山東、福建、広東などの地域の農民や手工業者は生計のために続々と日本に渡った。彼らは主に運搬、土木、道路建設、床屋、食堂、ペイント、印刷など肉体労働に従事した。中国人労働者たちはチャイナタウンに進出するより東京、横浜、大阪など産業化が急速に進んでいた新都市で機会を探したがった。中国人労働者の規模が日々増えると、日本人労働者と中国人労働者の間で利益衝突も頻繁になった。各地域で中国人労働者を敵対したり排斥するなど衝突事件が屡々起き、さらに死傷者も発生した。[2)]日本政府は国内の社会的葛藤を解消するために中国人労働者排斥を強化したが、中国人労働者の新規入国を禁止する一方、日本国内の中国人労働者を対象に取り締まりと送還が強化された。このような措置は短期間内に中国人労働者の急増を防ぐことができたが、中国人労働者を完全に国外に追放する目的を成し遂げ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3)]。日本政府の中国人労働者排斥政策がより一層苛酷になると、中国人労働者は商人に偽装して日本に入国した後、肉体労働に従事した。中国人労働者たちは警察に捕まり本国への帰国命令を受けたが、大部分が直ちに帰国せず手段と方法を選ばず都市を転々とし、日本国内で生計を立てていた。しかし、1923年9月に突然発生した関東大震災で日本政府の中国人労働者排斥政策は弾みがついた。日本軍と民間人は震災という大混乱に乗じて700人余りの在日中国人を残酷に殺害したが、そのうち大半の被害者は中国人労働者であった。以後、日本政府は証拠をなくす一方で生存した中国人労働者を拘禁し、中国に送還することで在日中国人労働者問題をまとめて解決しようとした。

1923年、日本の中国人虐殺事件に関する日本学界の研究は目に見える成果を収めた。その主な内容は第一に在日中国人労働者虐殺事件に関する研究[4)]、第二に中国人労働者作業班長である王希天に関するテーマ研究[5)]、第三に、中国の日本災害救援と中国人被災者救済活

---

1) 本論文は2022~2024年中国僑聯課題である「中国人排斥政策の観点から近代日本中国人労働者社会変遷研究(項目コード:22CZQK207)の中間成果である。

2) 鄭樂靜「20世紀初日本排斥華工政策與旅日浙南華工群體」『華僑華人歷史研究』2015年第1期。

3) 鄭樂靜「20世紀初日本排斥華工政策與旅日浙南華工群體」『華僑華人歷史研究』2015年第1期。

4) 中文の主な研究成果は以下の通りである。章誌誠「日本による関東大震災期間中に浙江省出身の在日中国人労働者虐殺及び北洋政府と日本当局との交渉(日本在關東大地震期間慘殺浙籍旅日華工與北洋政府對日本當局的交涉)」『浙江学刊』1990年、第6期、陳哲健「日本政府は大島町と王希天殺人事件の真相を覆い隠す(日本政府掩蓋大島町和王希天血案的真相)」『浙江社会科学』2000年第5期。日本語による主な研究成果は以下の通りである。仁木ふみ子 『震災下の中国人虐殺』、青木書店、1993年、伊藤泉美「〈横浜大震災中之華僑狀況〉に見る関東大震災前後の横浜華僑社会」『横浜開港資料館紀要』 2002年第20號、今井清一監修、仁木ふみ子編「史料集関東大震災下の中国人虐殺事件」、明石書店、2008年。

5) 中文で書かれた主な研究成果は以下の通りである。長春王希天研究会编 『王希天記念文集』 長春出版

動についての研究[6]である。だが、これまで震災発生後、日本の中国人労働者送還問題に関する論文は見られなかった。そこで本稿は、従来の研究を参考にして、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が所蔵する『外務省記録』と台湾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文書館が所蔵する「日本震災惨殺華僑安」など未刊行文書から地震発生後の日本による中国人労働者虐殺の惨状を詳細に再現し、日本政府が中国人労働者を拘禁して送還した具体的な状況を詳しく調べ、学界の該当分野への補完に資することを目指す。不十分な部分については皆様のご指導ご鞭撻を頂ければ、幸いに存ずる。

## 1. 中国人労働者虐殺

1923年9月1日午前11時58分44秒、日本関東地域でマグニチュード7.9の強震が発生し、約10万人が死亡或は行方不明になった[7]。東京、横浜両地域の大部分の建物が崩れ灰に変わり、首都と電気、交通および通信など基幹施設が麻痺し社会秩序はあっという間に大混乱に陥った。「朝鮮人が放火をした、朝鮮人が井戸の毒を入れて暴動を起こした」など各種デマが四方に広がり、そのうち中国人が暴動を起こしたという噂まで重なり[8]、震災発生後日本人の恐怖心が極に達した。9月1日深夜、軍隊は治安維持という名目で東京の中国人労働者居住地である南葛飾郡大島町（現東京市江東区大島町）に進軍した。

9月2日、日本政府は戒厳令を発表した。軍隊、警察と自警団（青年団、消防団と在郷軍人など一般国民で構成）が共同で社会秩序を維持し、戒厳地域の範囲を拡大し続けた[9]。9月2日午後4時、衛戍司令官は軍隊に次のような警備訓令を下達する。「万が一違法行為により治安秩序を害する者がいれば直ちに制止し、警告後は武器を使用してもよい」。翌日、軍隊は「疑惑が疑われる朝鮮人は全て警察または憲兵に渡して適切に処理せよ」と命令される[10]。凶暴な戒厳の中で手に負えないほど広がるデマは、日本軍人と民間人をして朝鮮人と中国人が手当たり次第に捕まえて殺すよう扇動した。わずか数日で数千人の罪のない朝鮮人が野蛮に殺戮された。同時に残酷な虐殺は力のない無実の在日中国人労働者も避けられな

---

社、1996年。吉林省档案官編 『王希天档案史料選編』、長春出版社。1996年。日本語による主な研究成果は以下の通りである。今井清一「大島町事件・王希天事件と日本政府の対応」、藤原彰・松尾尊兌編『論集現代史』、筑摩書房、1976年、171~206弩。田原洋「関東大震災と王希天事件」、三一書房、1982年。

6) 中文の主な研究成果は以下の通りである。王繼麟 「中国各界の関東大震災に対する救済(中國各界對日本關東大震災的賑済)」『史学月刊』 1987年 第1期、李学智 「1923年中国人の日本地震災害に対する救済行動(1923年中國人對日本震災的賑済行動)」『近代史研究』 1998年 第3期、代華「民族主義と人道主義(民族主義與人道主義)」、合肥工業大学出版社、2015年。日本語による主な研究成果は以下の通りである。帆刈浩之 「広東幇華人ネットワークによる横浜華僑救済ー関東大震災時の横浜・神戸・香港・広東」、「徳島大学総合科学部人間社会文化研究」1998年 第5號、辻村しのぶ「関東大震災と仏教者ー日中関係を軸として」『国学院大学日本文化研究所紀要』2004年 第93号、藤秀太郎「関東大震災をめぐる日中関係ー王一亭と王希天を中心に」、川口浩編「日本の経済思想」、ぺりかん社、2016年、301~328頁。

7) 今井清一「横浜の関東大震災」有鄰堂、2007年、27頁。

8) 姜徳相『琴秉洞編「関東大震災と朝鮮人』みすず書房、1963年、154~156頁。

9) 9月2日の戒厳地域は東京市、荏原郡、豊多摩郡、北豊島郡、南足立郡、南葛飾郡であり、9月3日に東京府と神奈川県の両地域が含まれ、9月4日に千葉県と埼玉県も戒厳範囲に含まれた。

10) 仁木ふみ子『関東大震災中國人大虐殺』巖波書店、1991年、14~17頁。

かった。震災発生の前に東京にいた中国人は5000人で、そのうち留学生は1500人、労働者が3500人であった[11]。横浜の中国人は5,721人で、広東人が4,241人で最も多く、浙江人が829人で二番目に多かった[12]。震災発生後、数日間関東地域の700人余りの中国人労働者が日本軍人と民間人によって虐殺された。東京の大島町、砂町、亀戸町と横浜の子安町、神明町、高島町など中国人労働者居住地に大虐殺が集中し、大島町だけで200人余りの中国人労働者が殺害された。

在日中国人労働者はなぜ震災発生後に虐殺されたのか？

事実、震災が発生する前から日本人労働者と中国人労働者の間に利益葛藤が生じていた。第1次世界大戦期間中、日本の経済が飛躍的に発展し、大量の中国人労働者が日本に渡ってきて職に就いた。しかし1920年から日本は深刻な経済危機が始まった。特にワシントン会談後の1922年、日本は軍縮を始め、これによって国内軍需工場、造船所などで大規模の失業者が発生した。経済不況に陥った日本人労働者たちは失業または失業に対する恐怖を中国人労働者のせいにし始めた。彼らは中国人労働者が低賃金で仕事を奪ったと思った。それで日本各地で日本人労働者と中国人労働者間が衝突する事件が多数発生した。日本政府は社会葛藤を解消するために中国人労働者の入国を禁止する一方、日本国内の中国人労働者の本国送還を強化した。日本政府が全方位的に中国人労働者に対する取り締まりを始めた頃、あいにく関東大震災が発生した。震災発生による大混乱の中であらゆるデマが飛び交い、中国人労働者は日本人労働者の第一順位の復讐対象となった。

### (1) 東京における中国人労働者虐殺の状況

中国人労働者虐殺は主に東京と神奈川の中国人労働者居住地において発生した。特に、東京大島町での虐殺が最も残酷であった。

20世紀初頭、日本東京の隅田川と荒川流域に新く工場が多く建設された。石炭や原材料などの物資が川沿いで延々と東京に輸送された。それでこの地域付近に荷役、運搬など肉体労働に携わった中国人労働者が集まって暮らしていた。彼らは工場と埠頭近くの大島町、亀戸町、王子町、南千住町と三河島町などに住み、その中でも大島町は当時東京の中国人労働者が働いて生活する中心地であった。中国人労働者団体である「中華民国僑日共済会」(1922年9月21日設立)事務所は大島町3丁目278番地にあった。中国人労働者の多くは中国人の運営する宿屋で団体生活をし、大体一部屋に10~15人が居住した。1日当りの部屋代にその他の維持費を加えた費用は0.15~0.18円程度であった[13]。震災発生の前、大島町だけで宿屋が85ヵ所あり、入居者の70%は浙江省温州出身であった。三河島町と南千住町、王子町の3ヶ

11) 「外國人罹災狀況調査ノ件」『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支那人（留學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第一巻』外務省記録　MT.6.3.1.8-17-17、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所蔵。周一川の考証によりば1923年に少なくとも1,828人の中国人留学生が日本で勉強していた。周一川「近代中國留日學生人數考辨」『文史哲』2008年　第2期参照。

12) 孫士傑「華僑震災前人數之統計」、1923年9月1日、横浜大震災の中の華僑の状況、中研院近代史研究所檔案館所蔵。

13) 日華學會「東京市附近支那労働者調」『支那労働者入國取締関係一件第一巻』、外務省記録MT.3.9.4.121、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所蔵、647~660頁。

所にも宿屋が50ヶ所余りあり、入居者の80%は浙江温州人だった[14]。もし旅館の面積を畳[15]12畳と計算すれば、畳1畳当たり1人が住んでいたとすれば、約2000人以上が大島町、三河島町、南千住町、王子町に居住していたと推算できる。

震災により大島町1丁目と2丁目の大部分の建物は焼失し、5丁目の中国人労働者宿屋は崩れた。それで中国人労働者たちは8丁目の宿屋に避難した[16]。震災発生の後、自警団は数回にわたり大島町の中国人労働者の宿屋に押し寄せ、まず人数を確認し、中国人労働者はただ一人も逃げられないと警告した。9月3日午前、自警団は家ごとに歩き回り、大島町一帯の日本住民は全員外に出られないと警告した[17]。当日の午前、2発の銃声を皮切りに大島町の中国人労働者虐殺事件の序幕が開かれた。兵士2人が歩兵銃を持って大島町6丁目の中国人労働者全員を宿屋から連れ出した後、8丁目に連れて行った[18]。その日の午後、軍隊、警察、自警団など300人余りが銃を持って武装したまま大島町8丁目の林合吉、周進順、林合発、夏日豊、張廣進、呉元昌、陳益順など7ヶ所の中国人労働者宿屋を包囲し中国人労働者174人を8丁目の空き地に追い込んだ。そして突然日本人が大声を上げた。「地震だ。皆伏せて!」中国人労働者が地面に伏せたその瞬間、日本人が刀や棒などの凶器で中国人労働者に対する無差別虐殺が進行された。耳が切られたまま同僚の遺体の間で気絶して倒れた黄子連[19]だけが生存し、残りの173人は現場で非業の死を遂げた。あちこちが死体に転がり、流血が横行した。まさにこの事件は9月3日の大島町大量虐殺事件で、歴史はこれを「大島町事件」と言う。この事件は真っ昼間に日本軍人と民間人が合同で行った非人間的な蛮行であった。100年余りが経った今も、我々は依然として日本人目撃者の証言を通じて当時の大虐殺の凄惨な状況を感じることができる。

「その日（9月3日）、私たちはとても怖くて外に出られませんでした。しかし武装した兵士2人が後方の宿舎で中国人労働者100人余りに東に行くよう指示しました。私が自ら見ました。」（大島町中国人労働者宿舎の管理者である利島家の娘の証言）[20]

「虐殺は真昼に発生し、中国人の悲鳴を聞きました。その後、数日間死体が空き地に放置され、死体の匂いが鼻を刺しました。そして二日中燃やして、灰が積もりました。当時、私の父も斧と竹槍を持っていきました」（大島町少年2名の証言）[21]

---

14) 中華民國僑日共済會「共済」、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所蔵、1923年、15~16頁。
15) 畳は日本の伝統家屋の床の間に敷くござである。畳のサイズは一般的に幅90cm、長さ180cm、面積1.62平方メートルで、日本語では「畳」と呼び、日本人も習慣的に「畳」という単位で部屋の面積を表示する。
16) 仁木ふみ子「震災下の中國人虐殺」、青木書店 、1993年 、31頁
17) 「十一月九日丸山大迫両人大島行中國人労働者被害事件調査八丁目慘殺ノ件」『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支那人ノ被害及救済ニ関スル件第四巻』外務省記録　6.3.1.8-17-16、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所蔵。
18) 「支那人被害ノ実情踏査記事」「本邦変災並救護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関係」外務省記録I.6.0.0.5-2、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所蔵、389~400頁。
19) 黄子連は浙江省温州市甌海區澤雅鎮坑源の人である。黄子連は1923年4月に日本に渡り、9月3日大島町事件に巻き込まれた。彼は九死に一生を得て虐殺現場から逃げ出し、大島町七丁目の空き部屋に隠れていたが、日本の暴徒に発覚して殴打された後、縛られたまま七丁目の小松川警察署に移送される。その後、千葉県習志野郡営に押送され、10月12日上海に送還される。大島町事件の唯一の証人として黄子連は上海に戻った後、直ちに大島町事件を暴露した。
20) 「收王督辦正廷等呈陳報赴日本調查僑日學生商工人等因災被害情形編號附陳用備咨核而資交涉由」（附件一號譯丸山傳太郎報告、日本震災慘殺華僑案第四冊、03-31-8-2、中研院近代史研究所檔案館　所蔵。

「5、6人の兵士と警官数人、そして数多くの日本人が200人余りの中国人を包囲しました。日本人は斧、鉄の鉤、竹槍、日本刀を持っていて側面から中国人を殺し始め、中川水上署の巡査も狂ったように虐殺に加担しました。途中で2発の銃声がありましたが、おそらく逃げる人たちを撃ったと思います。その当時、同じ同胞の残忍な行動を見るに堪えませんでした」(大島町民木戸四郎の証言)[22]

「9月3日夜遅く虐殺現場に行きました。中国人は四方に幾重にも包囲されて逃げたくても逃げられませんでした。本当に残酷でした。虐殺は翌日の夕暮れまで続きました」(大島町七丁目住民の巖崎留次郎の証言)[23]

大島町虐殺事件の他にも東京の他地域においての中国人労働者虐殺事件が少なからず発生した。中国人労働者である潘瑞発の証言によると、震災発生から3日目の日、彼と2人の同僚は列車に乗って三河島に向かう途中であったが、そのうちの同僚一人が駅で日本人が振り回した鉄の鉤で死んだという[24]。そしてまた別の中国人労働者である林瑞昌の証言によると、温州仙宅山村の70人余りが日本に渡って働いていたが、生存者はたった2人だという。林瑞昌と共に日本に渡った林文桃は、日本人の鉄の鉤に当たって大怪我をし、南千州の宿屋に逃げた後死亡し、林啟清と林迪昌は日本人によって負傷したが治療を受けられず送還された後、温州埠頭で死亡したという[25]。

### (2) 神奈川県における中国人労働者虐殺の状況

東京の朝鮮人と中国人が暴動を起こしたというデマが神奈川県まで広がり、現地の一部中国人労働者もやはり残酷に殺害された。統計によると、神奈川県で虐殺された中国人は97人、負傷者24人、行方不明者2人で計123人が被害を受けた。そのうち大部分の被害者が浙江省出身の中国人労働者であった[26]。虐殺は9月1日から6日まで集中的に行われたが、2日と3日頂点に達し横浜市を中心に虐殺が行われた。伊藤泉美の研究統計によると、子安町、神明町と高島町の3カ所だけで、日本の警察、軍隊、商人や労働者によって残酷な攻撃を受けた浙江出身の中国人労働者だけでも42人に上るという[27]。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檔案館所蔵の「日本震災惨殺華僑案」もまた神奈川県において中国人虐殺の情況があったことを証明する。ここに収録された中国人労働者の留庚南の証言は、横浜市子安町で中国人労働者7人が殺害されたという事実を確認している[28]。中国人労働者の吳讓三は、自分も子安町に住

21) 「支那人被害ノ実情踏査記事」本邦変災並救護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関係」外務省記録I.6.0.0.5-2、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所蔵、389~400頁。
22) 「支那人被害ノ実情踏査記事」、「本邦変災並救護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関係」外務省記録I.6.0.0.5-2、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所蔵、389~400頁。
23) 仁木ふみ子「震災下の中國人虐殺」、青木書店、1993年、35頁。
24) 仁木ふみ子「震災下の中國人虐殺」、青木書店、1993年、181頁。
25) 仁木ふみ子「震災下の中國人虐殺」、青木書店、1993年、181頁。
26) 伊藤泉美「関東大震災と横浜華僑社會、『横浜開港資料館紀要』1997年 第15號。
27) 伊藤泉美「関東大震災と横浜華僑社會、『横浜開港資料館紀要』1997年 第15號。
28) 「收王督辦正廷等呈 陳報赴日本調查僑日學生商工人等因災被害情形 編號附陳用備謺核而資交涉由」(附件一號 譯丸山傳太郎報告)、日本震災慘殺華僑案 第四冊、03-31-8-2、中研院近代史研究所檔案館所蔵。

んでいたが、9月1日に日本人に捕まり、翌日午後ひどく殴られ、頭部の3ヵ所を怪我して日本赤十字病院に運ばれ治療を受けたと述べた[29]。

青田県油竹郷出身で生きて帰国した中国人労働者朱木坤は次のように回顧する。

「9月1日横浜にいました。油竹郷出身が十数人死にました。油竹郷出身だけで20人いました。上黄村の2人兄弟は、川崎から横浜に向かう途中で殺されました。逃げて生き残った人は本当に少なかったです。震災発生後、私も外に出たのですが、遠くから日本人が鉄の鉤のようなものを持って人を殺しながら私の方に来るのを見ました。そのうちの一人が一緒に働いたことのある知り合いの日本人でした。彼は私の名前を呼んで叫びました。「早く逃げろ。彼らが君を殺すぞ！」他の日本人二人がその話を聞いたら聞きました。「知ってる人？」　その日本人が「うん」と答えました。そのおかげで私は助かりました。日本人は外では見える人をすぐ殺し、家の中に入って隅々まで探しました。ベッドの下に隠れていた人も引きずり出して殺しました。[30]」

その他にも神奈川県足柄下郡土肥村で中国人労働者殺害事件が発生したが、駐沖縄中華民国総領事館はこの事件を注視した。労務作業班長の阮順軒は十数人の中国人労働者を連れて1922年9月東京から神奈川県土居村に来たが、日本人作業班長の中森文次郎の下で鉄道建設に従事した。1923年9月4日午後2時、突然100人余りの日本人が刀と棒を持って駆けつけ、いきなり中国人労働者を殴打し始め、3人が死亡し、2人が重傷を負ったという。また地震が発生した時、阮玉卿、陳昭明と陳宝田の3人は山に避難したが、残念ながら自警団によって残酷に殺害されたという。事件発生後、作業班長の阮順軒はこの事件を駐沖縄総領事館に知らせ、総領事館は直ちにこの事件を駐日中華民国公使館に報告し、神奈川県庁に書簡を送り中国人労働者の保護を要請した。11月13日、総領事館は馮勵図を現場に派遣して調査を行い、小田原警察署長に生存した阮順軒ら12人を総領事館に護送するよう要請した。その後、阮順軒など4人は証人資格で横浜に留まり、残りの中国人労働者は11月22日中華会館が乗船券を用意してくれて安全に上海に帰ってきた。総領事館の交渉努力で神奈川県小田原警察署は日本人殺人犯8人を逮捕し立件した。横浜地裁は当該事件を受理した後、殺人犯の中島卯之助らを起訴した。この事件は日本政府が公式に認めた中国人労働者殺傷事件の中で数少ない事件である[31]。

## 2. 中国人労働者の収容

震災の発生後、日本軍人と民間人による中国人大虐殺について、日本外務省は「万が一これを防げなければ、後日深刻な国際問題になりかねない」と直ちに認識した。9月4日、外務省欧米国局長の松平恒雄とアジア局長の出淵勝次は関東戒厳局司令部司令官の福田雅太郎

29) 「收王督辦正廷等呈陳報赴日本調查僑日學生商工人等因災被害情形編號附陳用備瞥核而資交涉由」(附件一號譯丸山傳太郎報告)、日本震災慘殺華僑案第四冊、03-31-8-2、中研院近代史研究所檔案館所蔵。

30) 仁木ふみ子「震災下の中國人虐殺」、青木書店、1993年、181~200頁。

31) 「收駐橫濱代理總領事事務孫士傑呈日本青年團慘殺我國僑工呈送名單及診斷書請鑒核由」、日本震災慘殺華僑案第一冊、中研院近代史研究所檔案館所蔵、「收駐橫濱孫代理總領事呈僑工陳昭明等三人被日本青年團慘殺一案呈報辦理情形連同馮雇員報告書等件請鑒核備案由」、日本震災慘殺華僑案第二冊03-31.7-2、中研院近代史研究所檔案館所蔵。

と会談を行った。松平恒雄は、「朝鮮人虐殺事件が朝鮮半島とロシア、沿海州の朝鮮人の耳にも入った」とし、「朝鮮人が報復をするのではないかと恐ろしい」と述べた。そのため、軍隊が進んで今生存している在日朝鮮人を保護することを希望した。出淵勝次は、朝鮮人虐殺の狂風が在日中国人にまで広がるのではないかと懸念した。彼は「中国人は外国人であるため、虐殺を放置すれば悩ましい外交問題になりかねない」と心配した。それで軍隊が中国人を保護することを要請した[32]。戒厳司令部は9月4日、「中国人と朝鮮人を習志野捕虜収容所で収容する」という命令を下し、生存した朝鮮人と中国人を共に軍隊収容所に押送する。そこで警視庁は9月4日から中国人労働者「保護」を名目に生存した中国人労働者集団収容に着手し、亀戸町の300人、南千住町の50~60人、王子町の50~60人を収容した[33]。

9月7日、中華民国臨時代理公使の張元節は出淵勝次を表敬訪問し在日中国人被災者救済対策を議論し、日本側に留学生を先に帰国させ、中国商人は各自の意思によって帰国するかどうかを決定させ、中国人労働者は災害発生後再建に必要な人数以外は本国に強制送還することを要求した[34]。ちょうど地震が発生する前から施行した中国人労働者取り締まり活動効果が微々たるもので頭を痛めていたところ、日本政府は今回の震災が中国人労働者を一度に帰国させる絶好の機会だと考えた。そこで外務省は内務省、陸軍省、警視庁、公使館まで積極的に動員し、9月7日から12日まで毎日「救護中国人協商会議」を6回開催し[35]、中国人被害状況の調査や中国人集団の収容、送還船の用意などの緊急措置について議論し、送還に向けた事前準備に入った。

9月7日の第1回交渉会議で「中華民国救済委員会」を設置することを決定した。中国人被災者の行方を迅速に調査し、公使館が外務省に報告した。陸軍省は公使館の調査報告により、中国人被災者を適切に収容する[36]。9月8日、第2回交渉会議は東京中央と西南地域の中国人労働者と中国商人を公使館に置くことを決める。東北地域の中国人労働者を現地に収容または国府台軍営および習志野軍営に集めることにする[37]。実はこの決議の前に陸軍は9月2日中国人労働者を包囲して逮捕し、東京各地に収容されていた中国人労働者を習志野軍営にまとめて移送させた。例えば、9月5日、国府台野戦重砲兵第7連隊に拘禁された中国人350人

---

32) 「鮮人及支那人ノ救恤保護ニ関スル件」『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ノ被害及救済及ニ関スル件　第一巻』、外務省記録 MT.6.3.1.8-17-16、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所蔵。

33) 「在京浜支那人現況ノ件」、『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学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三巻』、外務省記録 MT.6.3.1.8-17-17、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所蔵。

34) 『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学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二巻』、外務省記録 MT.6.3.1.8-17-17、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所蔵。

35) 毎回会議への出席人数は変動があり、次の者が参加した。外務省アジア局局長の出淵勝次、外務省アジア局第3課長、外務省アジア局事務官の官守島伍郎、陸軍省軍事課長の山下奉文、陸軍歩兵佐藤大佐、参謀本部の奥大尉、内務省警保局外事課長の大塚惟精、駐日本中華民国公使館臨時代理公使の張元節、公使館秘書官の錢稼孫、日華学会の山井格太郎、中華民国救済委員会顧問の黒澤禮吉、日本僧侶の水野梅暁、中華留日基督教青年会の主任幹事馬伯援、米国青年会幹事などである。

36) 中華民国救済委員会の人的構成は以下の通りである。代理公使の張元節委員長、1等秘書官の江洪傑、3等秘書官の錢稼孫、駐横浜領事館副領事の孫士傑、随行員の楊雪倫が委員を歴任し、黒澤禮吉は顧問を務めた。「支那人救護打合會（第一回）」、『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支那人（留学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三巻』、外務省記録　MT.6.3.1.8-17-17、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所蔵参考。

37) 「支那人救護打合會（第二回）」、『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学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三巻』、外務省記録 MT.6.3.1.8-17-17、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所蔵。

を習志野軍営に送り[38]、9月6日、大島町三丁目の700人余りの中国人は警察100人余りにより包囲され逮捕された後、習志野軍営に押送された[39]。

習志野郡営の中国人労働者収容の状況は、外務省と公使館の視察報告書（9月21日現地視察）から大まかに把握できる[40]。

習志野軍営に拘禁されている中国人は計1,690人で、ほとんどが中国人労働者であり、全て震災後、東京の本所と深川から大島町に避難してきた人々で、9月6日以降習志野軍営に次々と収容された。収容された中国人は2つの班に分かれたが、第1収容班(新兵士4棟)と第2収容班(旧兵士3棟)であった。第1収容班には計850人の中国人がいたが、福建出身33人(呉服商27人、婦女子3人、児童3人)以外は全員温州から来た労働者で、作業班長の陳福興が責任者であった。第2収容班は中国人840人がおり、全員温州から来た青壮年層労働者で、陳蘐圃[41]が責任者であった。

報告書には当日、中国人の健康状態を視察した記録があるが、患者30人、重症患者5~6人で、いずれも一般疾病や地震で　傷害を負った人々だ。収容期間中に3人が急性肺炎、胃腸病と耳下腺炎で死亡した。張元節が中国人労働者の足の包帯を見て怪我をした理由を尋ねると、周囲の中国人労働者が異口同音で地震で家が崩れ負傷したと話したという。軍営で給食を提供したが、皆に毎日米2合、麦2合および副食品を買える15円が提供され、サツマイモがよく配給されたという。火災予防のためにすべての給食は軍隊が責任を負った。大部分の中国人労働者は服と布団を所持しており、その他に布団がない人々に軍隊が薄綿布団を提供した。最後の報告書には軍営の居住地、医療室とトイレなどはきれいで秩序正しく運営され、中国人も非常に静かで規則を守り屋外で運動をしたり歌を歌ったと記録されている。

公使館一行の訪問を迎えるために日本は事前に軍営内を清掃し、中国人労働者に口止め命令を下し虐殺事件の真相を暴露できないように防いだということが分かる。では習志野軍営の実際の状況はいったいどのようなものだろうか。1923年11月8日、温州旅滬同郷會が外交部に送った報告書での軍営で中国人労働者の生活を記録した内容は次の通りである。

> 警察庁から約100人を派遣し、大島町、三河島などに居住した華僑1600人を四方から呼び集め、千葉習志野軍営に拘禁した。華僑たちは虐待を受け、刑務所に入れられた。毎日の食事で卵ぐらいのおにぎりが3つ出ただけで、1食の食事量にも満たない量であった。夜は硬い石を枕にして床で寝るなど苦痛は言葉では言い表せない。寒すぎて調子がなるのは常で、守る兵士たちは恐ろしかった。彼らは思い通りにいかないとむち打ちをした。その期間、中国人が携帯した物は全て押収され、中国語ができる密偵がそばで監視しており、各代表が軍営に慰問に来た際にも事実通り言えないようにした[42]。

---

38) 中国人350人は1923年9月3日、国府台の野戦重砲兵第7連隊に収監された。
39) 仁木ふみ子「震災下の中國人虐殺」、青木書店、1993年、47頁。
40) 1923年9月21日、駐日中華民国公使館参事官張元節(張元節は1923年5月9日~9月19日まで駐日中華民国公使館代理公使を歴任。1923年9月18日、施履本が赴任後、張元節は参事官を歴任)は陸軍省、警視庁、外務省官僚の案内により南千住町と習志野軍営の中国人を慰問し視察する。その後、外務省文化事務局事務官の岡部長景と張元節参事官は視察報告書を提出する。
41) 陳蘐圃、青田出身。日本の明治大学を卒業した在日留学生で、中華民国僑日共済会の交流主任を歴任。
42) 「收温州旅滬同鄉會會長黃溯初呈　日人乘災慘殺華僑謹具表臚陳事實迫祈迅準提出嚴重交涉由」、日本

この報告書は中国人労働者が軍営で食べ物と服が不足し、日本軍が勝手に殴打した実際の状況に触れた。軍営で中国語ができる密偵がそばで監視をしており、公使館一行が訪問して中国人労働者にもし負傷したり被害を受けたのかを尋ねても該当労働者は恐ろしくて虐殺事件の一部始終を率直に話すことが難しかったのである。

## 3. 中国人労働者の送還

前述したように震災の発生後、日本政府は「保護」という名目で各地域にばらばらになって避難した中国人労働者を千葉県習志野軍営に圧送し陸軍が管理させたり、東京南千住町管轄警察署が集中収容し食糧を供給したりした。同時に公使館がすべての中国人労働者の帰国に対して責任を負い、外務省は送還作業に着手した。

9月11日、第5回中国人救護交渉会議で中国人帰国問題を公式に論議した。会議で公使館の銭穆孫秘書は帰国を希望する留学生が700~800人余り、中国人労働者は1200人内外だと報告した。会議は公使館が帰国名簿を作成し、外務省は彼らにビザとパスポートを発給することを決める[43]。9月12日の第6回中国人救護交渉会議では具体的な送還方案を議論した。帰国を希望する中国人僑胞は14日午後、芝浦から出港する日本船会社の送還船に乗って帰国することができた。この送還船に乗れなかった場合、16日に出港する「南生号」に乗ることができた[44]。そして鉄を積んだ船舶を予備用に配置し[45]中国人僑胞送還作業が公式に始まる。

当時習志野軍営の中国人労働者は1,690人、南千住の中国人労働者は1,200人で計2,900人であった[46]。中国人労働者送還作業の具体的な方案は次の通りである。(1)陸軍省、内務省と外務省が協力して送還線を配船する。(2)芝浦の清水組倉庫を臨時収容所と定め、警視庁が場所賃貸と配置に必要な設備の責任を負う。(3)習志野軍営と南千住に収監された中国人労働者は陸軍官憲および内務官憲が芝浦臨時収容所まで護送の責任を負う。(4)芝浦臨時収容所の食糧割当ては外務省が責任を持ち、警視庁が配給を担当する。(5)外務省は中国政府に送還状況報告の責任を負って、中国人被災者が中国に到着した後の関連事項を適切に引継ぎする。（６）すべての費用は日本政府の震災救援費用から支払う[47]。そこで外務省は東京市内の中国人労働者と商人を芝浦臨時収容所に移す責任を負い、習志野軍営の中国人労

震災惨殺華僑案第一冊、中研院近代史研究所檔案館所蔵。

43)「支那人救護打合會（第五回）」、『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学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三巻』、外務省記録 MT.6.3.1.8-17-17，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所蔵。

44) 9月11日午後、銭穆孫は出淵勝次を表敬訪問し、現在横浜港に停泊している神戸中華会館が借りた「南生号」を中国人被災者の護送に使用できると明らかにする。「支那船南生号入港ニ関スル件」、『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支那人（留学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三巻』、外務省記録MT.6.3.1.8-17-17、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所蔵参照。

45)「支那人救護打合會（第六回）」、『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学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三巻』、外務省記録MT.6.3.1.8-17-17，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所蔵。

46)「支那労働者送還ノ件」、『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学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一巻』、外務省記録 MT.6.3.1.8-17-17、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所蔵。

47)「支那労働者送還ノ件」、『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学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一巻』、外務省記録 MT.6.3.1.8-17-17、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所蔵。

働者は陸軍の指示の下、津田沼駅から専用列車に乗って錦系町駅に到着した後、歩いて芝浦臨時収容所に移動した。

芝浦臨時収容所は9月14日開所し、9月30日に閉所するまで計1,242人の中国人を受け入れていたが、大半が男性で、女性は35人、児童4人であった。温州出身が最も多く、次に山東、広東、福建の順であった。中国人労働者が70%、留学生が20%、華商およびその他が10%内外であった。外務省は守島伍郎事務官を主任として派遣し、後藤事務官を副主任に任命して芝浦臨時収容所を総括させ、飲食、衛生、警備、医療などを適切に運営さでた。すべての送還船スケジュールが確定した後、一日前に慰労金引換券(中国に到着した後、故郷に帰る交通便補助金)を中国人労働者に提供し、乗船当日陸軍の軍用トラックを配車して荷物を運び、海軍バージ船を提供して中国人労働者が送還船に乗船できるよう支援した[48]。

表1. 芝浦臨時収容所の人数増減の現況一覧表

| 日期 | 入所人数 | 出所人数 | 在所人数 |
|---|---|---|---|
| 9月14日 | 652 | 412 | 240 |
| 9月15日 | 148 | 232 | 156 |
| 9月16日 | 0 | 0 | 156 |
| 9月17日 | 24 | 0 | 180 |
| 9月18日 | 0 | 0 | 180 |
| 9月19日 | 105 | 0 | 285 |
| 9月20日 | 132 | 6 | 411 |
| 9月21日 | 78 | 0 | 489 |
| 9月22日 | 0 | 100 | 389 |
| 9月23日 | 42 | 0 | 431 |
| 9月24日 | 1 | 0 | 432 |
| 9月25日 | 31 | 0 | 463 |
| 9月26日 | 6 | 0 | 469 |
| 9月27日 | 2 | 0 | 471 |
| 9月28日 | 1 | 458 | 14 |
| 9月29日 | 20 | 0 | 34 |
| 9月30日 | 0 | 34 | 0 |

出典:「送還中華民國人芝浦収容ノ件」『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支那人（留学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第三巻』、外務省記録 MT.6.3.1.8-17-17、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所蔵。

中国人労働者（少数の商人を含む）の帰国路線は概ね4つであった。第一に、日本政府が準備した専用送還船に乗って芝浦から上海へ直行、第二に芝浦から神戸に到着後、神戸から日中間定期船舶に乗り換えて上海へ出発、第三に長崎を出発して上海へ直行、第四に横浜を出発して上海へ直行することであった。

9月15日から10月29日まで、京浜地域の中国人労働者と商人は計3,671人でそれぞれ13回に分かれて帰国した（表2参照）。そのうち日本政府が船舶5隻を中国人被災者を輸送する専

48) 「送還中華民國人芝浦収容ノ件」、『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学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三巻』、外務省記録 MT.6.3.1.8-17-17，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所蔵。

用送還船として配船したが、9月15日出港した送還船千歳丸は公使館に収容されていた中国人労働者および商人403人と留学生、その家族243人が乗船した[49]。9月28日出港した送還船の弘済丸は、東京市内の中国人労働者が主に乗船した。9月30日に送還船の博愛丸、10月2日に送還船の長順丸と10月6日に送還船の千歳丸は習志野軍営に収容された中国人労働者たちが乗船した。

表2. 本国に送還された中国人労働者の人数と乗船した送還船の統計表

| 順番 | 出発日付 | 到着日付 | 路線 | 船舶名 | 中国人労働者数 | 備考 |
|---|---|---|---|---|---|---|
| 路線1：芝浦-上海 | | | | | | |
| 1 | 9月15日 | 9月21日 | 芝浦-上海 | 千歳丸 | 403 | 専用船で送還 |
| 計 | | | | | | 403 |
| 路線2:芝浦-神戸-上海 | | | | | | |
| 2 | 9月22日 | 9月23日 | 芝浦-神戸 | 上海丸 | 101 | |
| | 9月27日 | - | 神戸-上海 | 熊野丸 | 103 | |
| 計 | | | | | | 103 |
| 3 | 9月28日 | 9月29日 | 芝浦-神戸 | 長崎丸 | 29 | |
| | 10月1日 | - | 神戸-上海 | 弘済丸 | 43 | |
| 計 | | | | | | 43 |
| 4 | 9月28日 | 9月30日 | 芝浦-神戸 | 弘済丸 | 450 | 専用船で送還 |
| | 10月1日 | - | 神戸-上海 | 弘済丸 | 450 | |
| 計 | | | | | | 450 |
| 5 | 9月30日 | - | 芝浦-神戸 | 博愛丸 | 452 | 専用船で送還 |
| | - | - | 神戸-上海 | 博愛丸 | 452 | |
| 計 | | | | | | 452 |
| 6 | 10月2日※1 | - | 芝浦-神戸 | 長順丸 | 525 | 専用船で送還 |
| | - | - | 神戸-上海 | 博愛丸 | 525 | |
| 計 | | | | | | 525 |
| 7 | 10月6日 | - | 芝浦-神戸 | 千歳丸 | 743 | 専用船で送還 |
| | - | - | 神戸-上海 | 船舶会社汽船 | 743 | |
| 計 | | | | | | 743 |
| 路線3:長崎-上海 | | | | | | |
| 8 | 9月23日 | - | 長崎-上海 | 近江丸 | 215 | |
| 9 | 9月25日 | - | 長崎-上海 | 千歳丸 | 501 | |
| 10 | 9月29日 | - | 長崎-上海 | 熊野丸 | 29 | |
| 11 | 10月2日 | - | 長崎-上海 | 日光丸 | 17 | |
| 計 | | | | | | 762 |
| 路線4:横浜-上海 | | | | | | |
| 12 | 10月20日 | - | 横浜-上海 | 北野丸 | 83 | |
| 13 | 10月29日 | - | 横浜-上海 | 春洋丸 | 107 | |
| 計 | | | | | | 190 |
| 帰国中国人労働者数　総計 | | | | | | 3671※2 |

49)　関東大震災後、被災者となった留学生とその家族は計442人で、5回に分けて帰国の途につく。留学生の救済と送還は他の論考で議論する。

注：※1長順丸は1923年10月2日芝浦を出港した後座礁し、修理をした後10月7日再び出港する。「長順丸座州ニ関スル件」、『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支那人（留学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一巻』、外務省記録　MT.6.3.1.8-17-17、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所蔵。

※2　外務省記録の統計データには帰国送還中国人労働者は3,677人である。このデータは9月20日、芝浦から長崎丸に乗船して神戸に到着した後、現地に留まることを決めた中国人労働者6人まで含まれた数値である。筆者は正確な帰国中国人労働者は3,671人だと見られる。『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学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二巻』、外務省記録MT.6.3.1.8-17-17、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参照。

資料出典:本表は以下の文書を参照して作成した。「罹災支那人送還事務ノ為ノ神戸出張ノ件報告」、『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学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一巻』、外務省記録MT.6.3.1.8-17-17、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所蔵、「罹災支那人送還方針ノ決定及其ノ実行」、『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支那人（留学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第二巻』、外務省記録 MT.6.3.1.8-17-17、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所蔵。

習志野軍営の中国人労働者は今回の送還業務で最も重要な対象であり、3回に分けて送還が進行された。1回目の送還は9月30日に博愛丸、2回目の送還は長順丸、3回目の送還は10月6日に千歳丸によって中国に送還された。

9月21日、駐日本中華民国公使館参事官である張元節（元代理公使）は陸軍省、警視庁、外務省官僚の案内に従って南千住と習志野軍営にいた中国人労働者を慰問し視察し、彼らに早く帰国するよう勧告する。南千住の尾久町を視察する際、張元節は温州出身の中国人労働者と意思疎通ができず、手紙を作業班長に残す。その内容は東京は今後職があまりにも減るので、中国人労働者は今回日本政府が無償で提供する送還船を通じて帰国しなければならず、作業班長もできる限り早く帰国希望名簿を作成し提出しろということであった[50]。以後、一行が習志野軍営に来た時、ここに収容された多数の中国人労働者は東京に残り続けるか大阪、長崎などに移り働き続けたいという意思を明らかにした。張元節は震災発生後、東京は仕事がなく、今は現金があるとしても習志野軍営を離れると食べ物も買えないので、この機会を通じて早く帰国して追加救済金をもらうよう説得する。そして、中国人労働者責任者である陳福興と陳蘐圃に直ちに中国人労働者名簿を作成するように命令する[51]。

9月28日、公使館の錢稼孫秘書官は習志野軍営を再度訪れ、中国人送還業務を議論する。中国人労働者が日本で働き口を得られず生計に困難を経験するよりは、この機会を通じて全員が帰国してほしいというのが公使館の意思であった。軍営に半年以上収監された中国人労働者たちに少しずつ考えが変わり、一日も早く帰国したがった。ただ、一部は商売、賃貸、債務など終えられなかった用務があり、日本に当分留まりたがっていた[52]。

50)「南千住及習誌野ニ避難中ノ支那人慰問旁支那代理公使等ノ視察ニ関スル件」、『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学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三巻』、外務省記録 MT.6.3.1.8-17-17、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所蔵。

51)「南千住及習誌野ニ避難中ノ支那人慰問旁支那代理公使等ノ視察ニ関スル件」、『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学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三巻』、外務省記録 MT.6.3.1.8-17-17、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所蔵。

52)「支那公使館員等ノ支鮮人収容訪問ノ件」、『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学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一巻』、外務省記録 MT.6.3.1.8-17-17、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所蔵。

これを以て習志野軍営に収容された第1次帰国中国人労働者452人が9月30日博愛丸に乗船、第2次の525人は10月2日長順丸に乗船して帰国した。10月3日と4日、公使館の銭稼孫秘書は習志野軍営を再び訪れ、残った中国人労働者が今回一度に帰国することを説得した。第3次帰国中国人労働者は計706人で、残った中国人労働者のうち日本に残ることを希望する人は58人であった[53]。他の患者5人と通訳2人は患者と一緒に留まり、習志野軍営病院で治療を受け続けた[54]。第3次帰国者は706人で、身体健康な者694人、患者12人であった。日本は患者12人と警備が必要な中国人3人を車両2台に別途圧送し、残りの中国人労働者は15人ずつ分かれて移動したが、各分隊は分隊長1人と兵士が責任を負った。陸軍は10月5日午前3時から中国人労働者の人数を把握した。6時頃、全員が出発して津田沼駅まで歩いて7時半に専用列車に乗った。9時に錦系町駅に到着し、再び歩いて午後1時に芝浦乗船地点に到着した。すべての中国人労働者は乗船前に交換用赤色の切符を受け取ったが、この切符を慰労金10円に交換し帰国船に乗った[55]。10月19日、習志野軍営に滞在しながら治療していた患者と通訳は、青山赤十字病院に移送された[56]。これで習志野軍営に収容された中国人被災者全員が軍営を離れた。

前述した日本政府が芝浦から上海直行および芝浦から神戸を経て上海に向かう路線の他に、中国人762人が4回に分けて長崎から船で帰国したが、これら中国人は帰国慰労金を受け取れなかった。10月19日まで習志野軍用にいた中国人労働者を含む京浜地域の大部分の中国人被災者は帰国する船に順調に乗船した。しかし、帰国を希望した者のうち、無償帰国船舶に乗船できなかった者も一部いた。公使館の仲裁で日本政府はさらに船舶2隻を配船し、中国人を帰国させた。10月20日、中国人83人が北野丸で横浜を出発し、上海に向かった[57]。10月29日、中国人190人は春洋丸で横浜を出発し、上海に向かった。これで日本政府による中国人帰国事業は一段落した。計4,113人の中国人を送還し、そのうち留学生およびその家族が442人、中国人労働者と商人が3,671人であった。

---

53) この58人は560~100元程度の資金を所持しているか、商品の船積みおよび荷役証を持ってしばらく日本に滞在できるよう許可された人たちである。彼らは10月5日、第3次帰国中国人労働者たちと共に習志野軍営を離れた。そのうち43人は大島町に行き、陳蘐圃が監督を務めた。15人は三河島町に行き、呉鳳岐の管理を受けた。「習誌野ノ収容中ノ支那労働者並ニ商人第三回帰國乗船ノ為メ習誌野収容所ヨリ芝浦へ輸送打合ニ関スル件」、『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支那人（留学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三巻』、外務省記録MT.6.3.1.8-17-17、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所蔵参照。

54) 「在習誌野支那人送還終了ノ件」、『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学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二巻』、外務省記録 MT.6.3.1.8-17-17、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所蔵。

55) 「習誌野ノ収容中ノ支那労働者並ニ商人第三回帰國乗船ノ為メ習誌野収容所ヨリ芝浦へ輸送打合ニ関スル件」、『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學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三巻』、外務省記録 MT.6.3.1.8-17-17、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所蔵。

56) 「在習誌野支那人送還終了ノ件」、『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學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二巻』、外務省記録 MT.6.3.1.8-17-17、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所蔵。

57) 『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學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二巻』、外務省記録 MT.6.3.1.8-17-17、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所蔵。

## 4．おわりに

関東大震災の発生後、日本で起きた在日中国人労働者虐殺、拘禁および送還は近代日本政府が施行した中国人労働者排斥政策の産物である。日本は非移民国家として明治時代からずっと外国人単純技能人材と非熟練労働者の入国を禁止する原則を堅持した。日本政府は、中国人労働者の大量入国が始まる前から1899年の勅令第352号「条約又は慣例により居住の自由がない外国人の居住及び営業に関する事項」及び内務省令第42号(1899年)、内務大臣訓令第1号（1899年）「外国人入国に関する事項」を次々と発表し、中国人労働者の入国を徹底的に取り締まった。その後、第一次世界大戦中、日本の資本主義経済が飛躍的に発展し、労働力が極めて不足すると日本政府は中国人労働者が入国して国内労働力市場に流入する状況を暗黙的に許容した。

良き時代は長続きしなかった。1922年、日本経済危機が勃発し日本国内失業率が急騰し始め、中国人労働者は日本人労働者が失業に遭い腹いせをする最初の犠牲になった。各地域で程度の差はあるが、中国人労働者を敵対し排斥する中で衝突事件が相次いで発生した。日本政府は社会的葛藤を緩和するために中国人入国審査を再度強化し、日本国内の中国人労働者の送還を強化した。日本各地方官庁は先を争って外務省に中国人労働者の入国を禁止し、不法労働者を検挙送還することを要請した。日本政府の中国人労働者排斥措置は中国人労働者の増加速度をある程度抑制し、国内日本人労働者の不満を鎮めることができたと雖も、中国人労働者を完全に日本国外に追放するという目的は達成できなかった。ところが1923年9月に発生した大地震は日本政府の中国人労働者排斥政策の実施を加速化した。地震発生後、日本軍人、警察、自警団は700人余りの武力で無実な中国人労働者を残酷に殺害した。事件発生後、日本政府は虐殺事件が暴露され日中外交紛争を呼び起こすことを恐れ「保護救済」という未明に生存した中国人労働者を勝手に拘禁し、この機会を利用して集団強制送還を実施し在日中国人労働者問題を一括して解決しようとした。さらに、中国人労働者の再入国を防ぐため、1924年12月28日関東庁警務局長は「日本国内に入ってくる中国人労働者取り締まりおよび識別標準」を発表し、具体的な不法移民取り締まり方法と詳細な中国人労働者認証標準を明確にした[58]。日本の各地域の税関は、この標準に従って中国人労働者の入国制限を強化した。たとえ地震発生後にも少なくない中国人労働者が生計のために日本に渡ってきたとしても、その規模は地震発生以前にはるかに及ばない。1927年の昭和金融大恐慌と1930年の昭和時代の恐慌以後、日本は深刻な経済危機に直面し労働力需要が急減した。日中政局も混乱が発生した。1931年満州事変（9·18事変）、1937年に盧溝橋事変が発生し、在日中国人労働者は帰国避難の途についた。日中関係が悪化すると、日本は1939年内務省令第6号「外国人の入国、滞在及び送還に関して」を発表し、中国人の入国を全面的に制限し、その後在日中国人労働者は次第に減少した。

58)今井清一監修、仁木ふみ子 編『史料集　関東大震災下の中国人虐殺事件』、明石書店、2008年、872～876頁。

# 屠杀、收容、遣返：关东大地震期间日本暴力排斥华工事件探析*

鄭樂靜(溫州大)

一战期间日本经济一路高歌猛进，国内劳动力匮乏问题凸显。在中日间巨大经济差距的吸引下，浙江、山东、福建和广东等地的农民和手工业者纷纷赴日谋生，主要从事搬运、土木、修建铁路、锔碗、理发、餐饮、油漆、印刷等体力劳动。比起进入传统的唐人街来，华工们更青睐于前往东京、横滨、大阪等工业化快速发展的新兴城市寻找工作机会。随着华工规模的日益壮大，日本劳动者与华工之间的利益冲突也越发尖锐,各地相继爆发了多起抵制华工的冲突事件，甚至造成人员伤亡。[1]日本政府为了缓和国内社会矛盾，不断加大排斥华工的力度，一方面严禁新来中国劳工入境，另一方面加紧对日本境内华工进行取缔和遣返，这些举措虽然在短时间内抑制了华工人数快速增加的势头，但是并没有达到将华工彻底驱赶出境的目的。[2]面对日本政府日趋苛刻的排斥华工政策，中国劳工往往佯装成小商贩蒙混进入日本，入境后转向从事体力劳动。即使是被警察抓获并勒令回国的华工，大多也没有主动立即回国，而是设法换个城市继续做工谋生。然而，1923年9月发生的一场突如其来的关东大地震，助推了日本政府的排华进程。日本军民趁着地震后的混乱，残忍地杀害了700余名旅日中国人，其中绝大多数受害者是华工。事后，日本政府一边销毁罪证，一边围捕拘禁幸存华工，并将其集体遣送回中国，企图一劳永逸地解决旅日华工问题。

目前学界关于1923年日本屠杀中国人事件的研究已经取得了非常可观的成果,主要聚焦于三个方面：一是关于屠杀旅日华工商事件的研究；[3]二是有关华工领袖王希天的专题研究；[4]三是中国赈济日灾及救济灾侨的相关研究。[5]但是，迄今未见研究地震后日本遣返华工问题

---

* 本文系2022-2024年度中国侨联课题“排华政策视域下近代日本华工社会变迁研究”（项目编号：22CZQK207）的阶段性成果。

1) 例如1922年10月,东京隅田川沿岸的300余名搬运工联名向警视厅外事课请愿,要求遣返他们的竞争者华工；1923年2月，中日劳动者300余人在横滨市高岛站械斗，双方都有多人受伤；1923年5月,东京本所、深川的工头对其所负责地区的运送工厂提出不要雇佣华工的要求；1923年7月,在千叶县北总铁道株式会社从事铺设铁路轨道工作的日本劳动者集体发起了驱逐华工的运动等。参见法政大学大原社会问题研究所编:《日本労働年鑑》第4卷，法政大学出版局，1923年，第404页；法政大学大原社会问题研究所编:《日本労働年鑑》第5卷，大原社会问题研究所出版部，1924年，第55页；神奈川县知事安河内麻吉:《本邦労働者ト支那労働者ノ争闘ニ関スル件》,《支那労働者入国取締関係一件　第一巻》，外務省記録MT.3.9.4.121，日本外务省外交史料馆藏。

2) 郑乐静:《20世纪初日本排斥华工政策与旅日浙南华工群体》,《华侨华人历史研究》2015年第1期。

3) 中文主要研究成果有，章志诚:《日本在关东大地震期间惨杀浙籍旅日华工与北洋政府对日本当局的交涉》,《浙江学刊》1990年第6期；陈铁健:《日本政府掩盖大岛町和王希天血案的真相》,《浙江社会科学》2000年第5期。日文主要研究成果有，仁木ふみ子:《震災下の中国人虐殺》，青木书店，1993年；伊藤泉美:《〈横浜大震災中之華僑状況〉に見る関東大震災前後の横浜華僑社会》,《横浜開港資料館紀要》2002年第20号；今井清一监修，仁木ふみ子编:《史料集　関東大震災下の中国人虐殺事件》，明石书店，2008年。

4) 中文主要研究成果有，长春王希天研究会编:《王希天纪念文集》,长春出版社，1996年；吉林省档案馆编:《王希天档案史料选编》，长春出版社，1996年。日文主要研究成果有，今井清一:《大島町事件・王希天事件と日本政府の対応》，藤原彰・松尾尊兊编:《論集現代史》，筑摩书房，1976年，第171-206页。田原洋:《関東大震災と王希天事件》，三一书房，1982年。

5) 中文主要研究成果有，王继麟:《中国各界对日本关东大震灾的赈济》,《史学月刊》1987年第1期；李学智:《1923年中国人对日本震灾的赈济行动》,《近代史研究》1998年第3期；代华:《民族主义与人道主义》,合肥工业大学出版社，2015年。日文主要研究成果有，帆刈浩之:《広東幇華人ネットワークによる横浜華

的专论，因此本文在参考前人研究基础上，利用日本外务省外交史料馆所藏《外务省记录》和台湾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档案馆所藏《日本震灾惨杀华侨案》等未刊档案资料，细致再现地震后日本屠杀华工惨况，翔实钩沉日本政府拘禁和遣返华工具体过程，试图弥补学界在该领域研究相对薄弱的缺憾。不当之处，希请方家批评指正。

## 一、屠杀华工

1923年9月1日上午11时58分44秒，日本关东地区发生了7.9级强烈地震，造成10余万人丧生和失踪。[6]东京、横滨两地的大部分建筑化为灰烬，水电、交通及通讯等近乎瘫痪，一时之间社会秩序陷入极度混乱，有关朝鲜人纵火、投毒、暴动的谣言四处流传，其中也夹杂着不少有关中国人暴动的蜚语，[7]加剧了地震后日本民众的恐慌心理。9月1日深夜，军队以维持治安为名，进驻东京华工聚居区——南葛饰郡大岛町（现东京市江东区大岛町）。

9月2日，日本政府发布戒严令，社会秩序由军队、警察和自警团（由青年团、消防团和在乡军人等普通民众组成）协同维持，并且不断扩大戒严区域范围。[8]9月2日下午4点，卫戍司令官对军队下达了"如果有违法行为扰乱治安秩序者，应该给予制止，如若警告之后，可以使用武器"的警备训令。次日，军队又收到把"有嫌疑的朝鲜人全部交给警察或宪兵进行适当处理"的命令。[9]人心惶惶的戒严，愈演愈烈的谣言，煽动了日本军民开始大肆捕杀朝鲜人和中国人。短短数日间，数千名无辜的朝鲜人被野蛮杀戮。同时，一场惨绝人寰的屠杀也悄然降临到了手无寸铁的旅日华工身上。地震前在东京的中国人约5000人，其中留学生约1500人，华工商约3500人。[10]在横滨的中国人为5721人，其中广东人最多，为4241人，浙江人其次，为829人。[11]地震后的数日间，关东地区共有700余名华工惨遭日本军民的屠杀，集中于东京的大岛町、砂町、龟户町以及横滨的子安町、神明町、高岛町等华工聚居区，仅大岛町一地就有200多名华工被杀害。

旅日华工为何在地震后惨遭屠杀？

其实早在地震前，日本劳动者和华工之间就存在极大的利益矛盾。虽然一战期间日本经济高速发展，吸引了大量中国劳工赴日做工，然而从1920年起日本发生了严重的经济危机。特别是华盛顿会议以后的1922年，日本缩减军需，国内的兵工厂、造船厂等出现了大量失业

---

僑救済－関東大震災時の横浜・神戸・香港・広東》,《德島大学総合科学部人間社会文化研究》1998年第5号；辻村しのぶ:《関東大震災と仏教者－日中関係を軸として》,《國學院大學日本文化研究所紀要》2004年第93号；藤秀太郎:《関東大震災をめぐる日中関係－王一亭と王希天を中心に》, 川口浩编:《日本の経済思想》, ぺりかん社, 2016年, 第301-328页。

6) 今井清一:《横浜の関東大震災》, 有邻堂, 2007年, 第27页。

7) 姜德相、琴秉洞編:《関東大震災と朝鮮人》, みすず書房, 1963年, 第154-156页。

8) 9月2日的戒严区域为东京市、荏原郡、丰多摩郡、北丰岛郡、南足立郡、南葛饰郡，9月3日涵盖了整个东京府和神奈川县，9月4日千叶县和琦玉县也被划入戒严范围。

9) 仁木ふみ子:《関東大震災中国人大虐殺》, 岩波书店, 1991年, 第14-17页。

10) 《外国人罹災状況調査ノ件》,《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学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一巻》, 外務省記録MT.6.3.1.8-17-17, 日本外务省外交史料馆藏。另据周一川考证1923年至少有1828名中国留学生在日本学习，参见周一川:《近代中国留日学生人数考辨》,《文史哲》2008年第2期。

11) 孙士杰:《华侨震灾前人数之统计》, 1923年9月1日，横滨大震灾中之华侨状况，中研院近代史研究所档案馆藏。

者。面对萧条的经济，日本劳动者将失业或者害怕失业的情绪转移到了华工身上。他们认为，华工以低廉的工资夺取了他们工作的机会。于是，日本各地相继爆发了多起日本劳动者和华工的冲突事件。日本政府为了缓和社会矛盾，一方面禁止新来中国劳工入境，另一方面加大遣返日本国内华工的力度。就在日本政府如火如荼地开展取缔华工运动之际，发生了关东大地震。在地震后的混乱之中，在谣言的煽动之下，华工成了日本人报复的首选对象。

## （一）东京屠杀华工状况

屠杀华工事件主要发生东京和神奈川的华工聚居区，其中以东京大岛町最为惨烈。

20世纪初，日本东京的隅田川和荒川流域新建了很多工厂，煤炭和原材料等物资源源不断沿江运入东京。因此这附近聚集了众多从事卸货、搬运等体力劳动的华工。他们居住在工厂及码头附近的大岛町、龟户町、王子町、南千住町和三河岛町等处，其中大岛町是当时东京华工们工作和生活的中心地区，华工团体“中华民国侨日共济会”（1922年9月21日成立）的事务所便是设在大岛町3丁目278番地。华工一般在中国人开的客栈里集体生活，往往是10至15人挤在一间屋里,一天的房费加上其他费用为0.15-0.18日元。[12]地震前仅大岛町一处就有85家客栈，入住者的70%是浙江青田人，三河岛町、南千住町和王子町这三处有50余家客栈，入住者的80%是浙江温州人。[13]若按照每个客栈12枚榻榻米[14]的面积来计算，每一枚榻榻米住1人的话，约有2000人以上居住在大岛町、三河岛町、南千住町和王子町。

在地震中，大岛町1丁目和2丁目的大部分建筑被大火烧毁，5丁目的华工客栈倒塌，因此华工们都聚集到8丁目的华工客栈避难。[15]地震后，自警团多次来到大岛町的各华工客栈清点人数，并警告全体华工，一个人也不许逃跑。9月3日上午，自警团更是挨家挨户告诫大岛町一带的日本住民一律不许出门。[16]当天上午以两声枪响为信号，拉开了大岛町屠杀华工事件的序幕。两名士兵手持步枪，将大岛町6丁目的华工悉数从客栈赶出，强行带到8丁目。[17]中午时分，军队、警察、自警团等三百余人手持枪械包围了大岛町8丁目的林合吉、周进顺、林合发、夏日丰、张广进、吴元昌、陈益顺等7处华工客栈，将174名华工赶到8丁目的一片空旷的荒地上。而后，忽然有日本人喊道：“地震来了，大家趴下！”就在华工们伏地的刹那，日本人举起刀棍等凶器对华工进行大肆虐杀。除了黄子连[18]　因耳朵被砍晕死过去，被压在同伴的尸

12) 日華学会:《東京市附近支那労働者調》,《支那労働者入国取締関係一件　第一巻》, 外務省記録MT.3.9.4.121，日本外务省外交史料馆藏，第647-660页。

13) 中华民国侨日共济会:《共济》, 日本外务省外交史料馆藏，1923年，第15-16页。

14) 榻榻米是日本传统的铺地垫。榻榻米的尺寸一般为宽90cm，长180cm，面积1.62平方米。在日语中称为“畳”，日本人习惯性用“畳”来表示房间面积。

15) 仁木ふみ子:《震災下の中国人虐殺》, 青木书店，1993年，第31页。

16) 《十一月九日丸山大迫両人大島行中国人労働者被害事件調査八丁目惨殺ノ件》,《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ノ被害及救済ニ関スル件　第四巻》, 外務省記録6.3.1.8-17-16，日本外务省外交史料馆藏。

17) 《支那人被害ノ実情踏査記事》,《本邦変災並救護関係雑件　関東地方震災関係》, 外務省記録I.6.0.0.5-2，日本外务省外交史料馆藏，第389-400页。

18) 黄子连，浙江省温州市瓯海区泽雅镇坑源村人。黄子连于1923年4月赴日，于9月3日遭遇大岛町事件。他九死一生从屠杀现场逃离后，躲在大岛町7丁目的一间空屋里，被日本暴徒发现，一阵殴打后被捆绑送到7丁目的小松川警察署，之后又被押送到千叶县的习志野军营，10月12日被遣送回到上海。作为大岛町事件的唯一证人，黄子连回到上海后立即披露了大岛町事件。

体下得以幸存以外，173人当场毙命，尸体横陈，血流成河。这就是9月3日发生在大岛町的集体屠杀事件，史称“大岛町事件”。这是光天化日之下，日本军民共同参与的灭绝人性的暴行。时隔近百年我们依旧能够从当时日本民众的证言中感受到当年大屠杀的凄惨场面。

“那一天（当是9月3日）我们很怕，没有外出，但是武装的两个士兵从后面那些宿舍内引出百数名中国劳动者赶往东方去，那是我们亲见的。”(大岛町华工宿舍管理者利岛家的女儿的证言)[19]

“屠杀发生在中午左右，能听到中国人的悲叫声，之后数日尸体被遗弃在空地上，臭气冲天，后来整整烧了两天，在焦土上撒上了煤炭渣。当时我们的父亲也拿着劈柴刀和竹枪去了。”（大岛町的2名少年的证言）[20]

“五、六名士兵和数名警官以及众多民众包围了200多名中国人，民众手持斧头、铁钩、竹枪、日本刀等，从一侧屠杀中国人，中川水上署的巡查也像疯了一样加入屠杀，其间还有两声枪响，或许是射杀逃跑者，我当时都不敢正视自己同胞的这种残虐行为。”（大岛町住民木户四郎的证言）[21]

“9月3日傍晚，我去了屠杀现场一看，中国人被重重包围住，想逃都逃不掉，真是惨不忍睹，骚乱一直持续到太阳下山。”（大岛町7丁目住民岩崎留次郎的证言）[22]

除了发生在大岛町的屠杀事件以外，东京其他地区的华工惨遭杀害者亦不在少数。比如据华工潘瑞发证言，地震后的第三天，他和两位同伴坐火车出发前往三河岛，其中一个同伴刚到站就被日本人用铁钩杀死了。[23]另有华工林瑞昌证言，温州仙宅山村有70人去日本做工，幸存者仅2人，和林瑞昌一起去日本的林文桃被日本人用铁钩打伤后逃回南千住的客栈后死去，林启清和林迪昌被日本人所伤，未获及时治疗，被遣送回国后，到了温州的码头就过世了。[24]

## （二）神奈川县屠杀华工状况

随着东京的朝鲜人和中国人暴动的谣言蔓延到神奈川县，当地的部分华工也遭到了残忍的杀戮。据统计，神奈川县内被屠杀的中国人有97人，受伤者24人，失踪者2人，合计受害者共123人，其中绝大部分遇难者为浙江籍华工。[25]屠杀集中于9月1日到6日之间发生，以2日和3日为盛，屠杀地点以横滨市为主。据伊藤泉美的研究统计，仅子安町、神明町和高岛町三地，惨遭日本警察、军队、商人和劳动者毒手的浙江籍华工商就有42人。[26] 中研院近代史研究所档案馆所藏的《日本震灾惨杀华侨案》也印证了发生在神奈川县的屠杀中国人的情况。其中收录的华工留庚南的证言，证实了横滨市子安町有华工7人被杀。[27] 华工吴让三声

19) 《收王督办正廷等呈　陈报赴日本调查侨日学生商工人等因灾被害情形　编号附陈用备詧核而资交涉由》（附件一号　译丸山传太郎报告），日本震灾惨杀华侨案　第四册，03-31-8-2，中研院近代史研究所档案馆藏。
20) 《支那人被害ノ実情踏査記事》,《本邦変災並救護関係雑件　関東地方震災関係》, 外務省記録I.6.0.0.5-2，日本外务省外交史料馆藏，第389-400页。
21) 《支那人被害ノ実情踏査記事》,《本邦変災並救護関係雑件　関東地方震災関係》, 外務省記録I.6.0.0.5-2，日本外务省外交史料馆藏，第389-400页。
22) 仁木ふみ子:《震災下の中国人虐殺》, 青木书店，1993年，第35页。
23) 仁木ふみ子:《震災下の中国人虐殺》, 青木书店，1993年，第181页。
24) 仁木ふみ子:《震災下の中国人虐殺》, 青木书店，1993年，第181页。
25) 伊藤泉美:《関東大震災と横浜華僑社会》,《横浜開港資料館紀要》1997年第15号。
26) 伊藤泉美:《関東大震災と横浜華僑社会》,《横浜開港資料館紀要》1997年第15号。
27) 《收王督办正廷等呈　陈报赴日本调查侨日学生商工人等因灾被害情形　编号附陈用备詧核而资交涉由》

称自己曾侨居在子安，9月1日被日本人抓去，次日中午惨遭毒打导致头部三处受伤，被送到日本红十字会医院医治。[28]另有青田县油竹乡的幸存归国华工朱木坤回忆道："9月1日我在横滨。油竹的人死了十几人。光油竹乡就有20人。上黄村的两兄弟在从川崎去横滨的途中被杀了。逃出来活下来的人很少。地震后，我也出门了。远远地看见日本人用铁钩什么的一边杀人一边朝我这边走过来。其中有一个我认识的一起做过工的日本人。他喊着我的名字，说：'快点逃啊！他们要来杀你啦。'其他的两个日本人听见了，问他：'是你认识的人吗？'那个日本人回答：'是的。'我因此才得救。日本人除了在外面看见人就杀，还到家里来搜查，把藏在床底的人也拉出来杀掉。"[29]

此外，神奈川县足柄下郡土肥村发生的一起杀害华工事件，引起了中华民国驻横滨总领事馆的高度关注。包工头阮顺轩带着十余名华工于1922年9月从东京来到神奈川县土肥村，在日本包工头中森文次郎手下从事铁路修建。一种说法是，1923年9月4日下午2时突然有一百余名日本人手持刀棍蜂拥而来，不分青红皂白对华工进行殴打，导致3人惨死，2人重伤。还有一种说法是，地震发生时，阮玉卿、陈昭明和陈宝田三人逃到山上避难，不幸被自警团残忍杀害。事后工头阮顺轩将此案禀报驻横滨总领事馆，总领馆立即将此事上报中华民国驻日公使馆，并致函神奈川县厅，要求保护华工。11月13日，总领馆派专员冯励图前往现场进行调查，并请小田原警察署将幸存华工阮顺轩等12人护送到总领事馆进行安顿。之后，除了阮顺轩等4人留在横滨作为证人以外，其余华工于11月22日由中华会馆购买船票安全送回上海。在总领馆的努力交涉下，神奈川县小田原警察署终于将8名日本凶犯缉拿归案。横滨地方裁判所受理该案件后，起诉了凶犯中岛卯之助等人。该事件是日本政府公开承认的为数不多的杀伤华工事件之一。[30]

## 二、收容华工

面对地震后日本军民对中国人的疯狂杀戮，日本外务省立即意识到如果不加以制止，日后必将成为重大国际问题。9月4日，外务省欧美局局长松平恒雄、亚洲局局长出渊胜次、条约局局长山川端夫一同与关东戒严司令部司令官福田雅太郎进行会谈。松平认为屠杀朝鲜人一事已经传到朝鲜半岛、俄罗斯及伪满的朝鲜人耳中，唯恐朝鲜人会采取报复手段，因此希望军队能够出面救恤保护目前幸存的在日朝鲜人。出渊胜次对屠杀朝鲜人的浪潮波及旅日中国人表示忧虑，他觉得正因为中国人是外国人，恐怕放任屠杀会成为棘手的外交问题，因此也请军队对中国人进行救恤保护。[31]于是戒严司令部于9月4日下达《将支鲜人收容至习志野

（附件五号　留日学生各团体联席会调查报告书），日本震灾惨杀华侨案　第四册，03-31-8-2，中研院近代史研究所档案馆藏。

28) 《收王督办正廷等呈　陈报赴日本调查侨日学生商工人等因灾被害情形　编号附陈用备詧核而资交涉由》（附件十八号　金衢严处旅沪同乡会来函又孙永吉交来原函），日本震灾惨杀华侨案　第四册，03-31-8-2，中研院近代史研究所档案馆藏。

29) 仁木ふみ子:《震災下の中国人虐殺》，青木书店，1993年，第181-200页。

30) 《收驻横滨代理总领事事务孙士杰呈　日本青年团惨杀我国侨工呈送名单及诊断书请鉴核由》，日本震灾惨杀华侨案　第一册，中研院近代史研究所档案馆藏；《收驻横滨孙代理总领事呈　侨工陈昭明等三人被日本青年团惨杀一案呈报办理情形连同冯雇员报告书等件请鉴核备案由》，日本震灾惨杀华侨案　第二册，03-31.7-2，中研院近代史研究所档案馆藏。

旧俘虏收容所》的命令，将幸存的朝鲜人和中国人统一押送至军营收容。因此警视厅从9月4日开始以“保护”华工为名，着手对幸存华工的集体安置，收容了300名华工在龟户町、五六十名华工在南千住町、五六十名华工在王子町。[32]

9月7日中华民国临时代理公使张元节拜访出渊胜次协商救助灾侨对策，提出了希望日方优先安排留学生回国，让华商按照各自的意愿决定是否回国，华工除了灾后重建需要的人员以外一律强制遣送回国的要求。[33]恰好此时的日本政府也正为地震前取缔华工运动收效甚微而苦恼，认为这次震灾正是将华工一次性遣返回国的绝佳机会。于是外务省积极地牵头和内务省、陆军省、警视厅、公使馆等，从9月7日至12日连日召开了6次“救护中国人协商会议”，[34]实施了调查中国人罹灾状况、集中收容中国人、调配轮船等应急措施，为遣返工作做了充分的前期准备。

9月7日的第一次协商会议决议设置“中华民国救济委员会”，火速调查罹灾中国人的下落，由公使馆汇总报告给外务省。再由陆军省根据公使馆的调查报告，对中国灾侨进行适宜的安置。[35]9月8日的第二次协商会议决议将东京中央及西南方面的华工商安顿至公使馆，东北方面的华工商就地安置或者集中到国府台军营及习志野军营。[36]其实在该决议之前，陆军早已从9月2日开始围捕华工，并将东京各地收容的华工统一转押至习志野军营。比如9月5日，收押在国府台野战重炮兵第七连队的350名中国人被转移至习志野军营。[37]9月6日，大岛町3丁目的约700名中国人被百余名警察围捕后，被押送至习志野军营。[38]

关于习志野军营内的华工收容状况，可以通过外务省和公使馆的视察报告书（9月21日现地视察）略窥一二。[39]

收押在习志野军营的中国人合计1690人，绝大部分为华工，都是地震后从东京的本所、深川等地到大岛町避难，于9月6日以后渐次被收容到习志野军营的。收容的中国人被分为两班，第一收容班（新兵舍4栋）和第二收容班（旧兵舍3栋）。第一收容班共有850名中国人，除了33名福建人（27名布匹行商贩、3名妇女和3名儿童）以外都是来自温州的劳工，由工头陈福兴负责。第二收容班共有840名中国人，全部是来自温州的青壮年劳工，由陈芗圃[40]负责。

---

31) 《鮮人及支那人ノ救恤保護ニ関スル件》,《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ノ被害及救済及ニ関スル件　第一巻》, 外務省記録MT.6.3.1.8-17-16，日本外务省外交史料馆藏。

32) 《在京浜支那人現況ノ件》,《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学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三巻》, 外務省記録MT.6.3.1.8-17-17，日本外务省外交史料馆藏。

33) 《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学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二巻》, 外務省記録MT.6.3.1.8-17-17，日本外务省外交史料馆藏。

34) 《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学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二巻》, 外務省記録MT.6.3.1.8-17-17，日本外务省外交史料馆藏。

35) 中华民国救济委员会的人员构成如下：代理公使张元节任委员长，一等秘书官江洪杰、三等秘书官钱稼孙、驻横滨领事馆副领事孙士杰、随员杨雪伦任委员，黑泽礼吉担任顾问。参见《支那人救護打合会（第一回）》,《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学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三巻》, 外務省記録MT.6.3.1.8-17-17，日本外务省外交史料馆藏。

36) 《支那人救護打合会（第二回）》,《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学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三巻》, 外務省記録MT.6.3.1.8-17-17，日本外务省外交史料馆藏。

这350名中国人于1923年9月3日被收押到国府台的野战重炮兵第七连队。

38) 仁木ふみ子:《震災下の中国人虐殺》, 青木书店，1993年，第47页。

39) 1923年9月21日，中华民国驻日公使馆参事官张元节（张元节于1923年5月9日至1923年9月18日任中华民国驻日本公使馆代理公使。1923年9月18日施履本赴任后，张元节任参事官。）在陆军省、警视厅、外务省官员的陪同下慰问并视察了南千住町和习志野军营的罹灾中国人。事后，外务省文化事务局事务官冈部长景和张元节参事官均提交了视察报告书。

报告书中记载视察当日中国人的健康状况为，患病者30名，其中重症者五六名，均为普通疾病或因地震受伤，收押期间有3人因患急性肺炎、肠胃病和耳下腺炎死亡。张元节看到一名华工脚绑绷带，询问受伤原因时，周围的华工均异口同声称其为地震中房屋倒塌所致。军营中的伙食状况为每人每日能分到白米两合、麦两合以及购买副食品用的15钱日元以外，还经常分发番薯等。为了防止火灾，所有的伙食都由军队负责。大部分华工都随身携带了衣服和被子，军队另外分发薄被给未携带被褥者。最后报告书还记载，军营的居所、医疗室和厕所等处都干干净净，井然有序。中国人非常安静，遵守规矩，在室外的草地上运动、唱歌。

显而易见，为了迎接公使馆一行的来访，日方事先将营地进行清扫，并给华工下了封口令，防止其泄露屠杀事件真相。那么，习志野军营的实际情况又如何呢？1923年11月8日，温州旅沪同乡会提交给外交部的一份报告书中对华工在军营中的生活描写如下：

> 警察厅派警百余人，将大岛町、三河岛等处居住之华侨一千六百余人，四面兜拿，拘禁于千叶习志野军营内。待遇酷虐，逾于在狱之囚，日食蛋大之饭团三枚，不足抵平时一餐之量，夜则枕石卧板，苦趣犹不堪言。且天气寒热不常，疾病丛生，守卫兵士又极凶残，稍不如意，鞭棍立下。间有华人携来物件均被取去，并有能操华语之侦探在旁监视，故各代表来营慰问亦不获尽情陈诉。[41]

这份报告书道出了华工在军营内缺衣少食，被日本军警随意打骂的实际情形。由于军营中有通晓中文的侦探在一旁监视，公使馆一行来访之时虽问及华工为何受伤，但华工因畏惧而无法将屠杀的原委相告。

## 三、遣返华工

如上所述，地震后日本政府借“保护”之名，将分散在各地避难的华工统一押送至千叶县习志野军营由陆军管理，或者集中收容至东京南千住町由辖区警察署供给食粮，同时由公使馆负责动员全体华工归国，外务省着手安排遣返事宜。

9月11日的第五次救护中国人协商会议正式探讨罹灾中国人归国事宜。会上公使馆钱稼孙秘书汇报了希望回国的留学生有七八百人、华工商有一千二百人左右。会议决定由公使馆统计制作回国人员名簿，由外务省统一发给签证和护照。[42] 9月12日的第六次救护中国人协商会议制订了具体遣返方案，即希望回国的中国灾侨可乘坐14日下午芝浦起航的日本邮船公司的轮船回国，如若赶不上这趟轮船，可乘坐16日起航的“南生号”，[43]另有满铁的轮船作为备用，[44]由此正式启动遣返罹灾中国侨民的工作。

---

40) 陈芗圃，青田人，日本明治大学毕业的留日学生，担任中华民国侨日共济会交际主任。

41) 《收温州旅沪同乡会会长黄溯初呈　日人乘灾惨杀华侨谨具表胪陈事实迫祈迅准提出严重交涉由》，日本震灾惨杀华侨案第一册，中研院近代史研究所档案馆藏。

42) 《支那人救護打合会（第五回）》，《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学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三巻》，外務省記録MT.6.3.1.8-17-17，日本外务省外交史料馆藏。

43) 9月11日下午钱稼孙拜访出渊胜次，表示目前停泊在横滨港的神户中华会馆租用的“南生号”轮船可用于护送中国灾侨。参见《支那船南生号入港ニ関スル件》，《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学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三巻》，外務省記録MT.6.3.1.8-17-17，日本外务省外交史料馆藏。

44) 《支那人救護打合会（第六回）》，《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学生ヲ含ム）救

当时在习志野军营的华工为1690人，南千住的华工约1200人，合计约2900人。[45]遣返华工的具体方案为：（1）由陆军省、内务省和外务省协力调配遣返用船舶；（2）将芝浦的清水组仓库作为临时收容所，由警视厅负责租借场地和配置所需设备；（3）被关押在习志野军营和南千住的华工由陆军官宪及内务官宪负责护送至芝浦临时收容所；（4）芝浦临时收容所的食物调配由外务省负责，分发由警视厅负责；（5）外务省负责向中国政府汇报遣返状况，并适宜地交接灾侨抵达中国后的相关事项；（6）所有费用由日本政府的一般震灾救护费用支出。[46]于是外务省负责将东京市内的华工商转移到芝浦临时收容所，习志野军营的华工则在陆军的带领下从津田沼站乘坐专用列车到锦系町站，然后徒步至芝浦临时收容所。

芝浦临时收容所从9月14日开设到9月30日关闭为止，一共接收了1242名中国人，几乎都是男性，只有35名女性和4名儿童。籍贯以温州籍居多，山东、广东、福建籍其次。华工占七成，留学生占两成，华商及其他人员仅占一成。外务省派遣守岛伍郎事务官作为主任，后藤事务官作为副主任负责芝浦临时收容所的统筹管理，在膳食、卫生、警备、医疗等方面均给予了妥当细致的安排。每当轮船班次确定后，提早一天将慰问金兑换券（作为抵达中国后的回乡交通补贴）发给华工，乘船当日派出陆军的军用卡车来搬运行李，并准备了海军的接驳船将华工们送至轮船。[47]

表1　芝浦临时收容所人员增减情况一览表

| 日期 | 入所人数 | 出所人数 | 在所人数 |
|---|---|---|---|
| 9月14日 | 652 | 412 | 240 |
| 9月15日 | 148 | 232 | 156 |
| 9月16日 | 0 | 0 | 156 |
| 9月17日 | 24 | 0 | 180 |
| 9月18日 | 0 | 0 | 180 |
| 9月19日 | 105 | 0 | 285 |
| 9月20日 | 132 | 6 | 411 |
| 9月21日 | 78 | 0 | 489 |
| 9月22日 | 0 | 100 | 389 |
| 9月23日 | 42 | 0 | 431 |
| 9月24日 | 1 | 0 | 432 |
| 9月25日 | 31 | 0 | 463 |
| 9月26日 | 6 | 0 | 469 |
| 9月27日 | 2 | 0 | 471 |
| 9月28日 | 1 | 458 | 14 |
| 9月29日 | 20 | 0 | 34 |
| 9月30日 | 0 | 34 | 0 |

济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三卷》，外務省記録MT.6.3.1.8-17-17，日本外务省外交史料馆藏。

45)《支那労働者送還ノ件》，《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学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一卷》，外務省記録MT.6.3.1.8-17-17，日本外务省外交史料馆藏。

46)《支那労働者送還ノ件》，《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学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一卷》，外務省記録MT.6.3.1.8-17-17，日本外务省外交史料馆藏。

47)《送還中華民国人芝浦収容ノ件》，《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学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三卷》，外務省記録MT.6.3.1.8-17-17，日本外务省外交史料馆藏。

资料来源：《送還中華民国人芝浦収容ノ件》，《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学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三巻》，外務省記録MT.6.3.1.8-17-17，日本外务省外交史料馆藏。

华工（含少数商人）的回国路线大致有4种：第一种，乘坐日本政府准备的专用轮船从芝浦直达上海；第二种，先从芝浦出发前往神户，再从神户转乘中日间的定期轮船前往上海；第三种，从长崎直达上海；第四种，从横滨直达上海。

9月15日至10月29日，京滨地区的华工商共计3671人，分为13批顺利回国（参见表2）。其中日本政府专门调度了5艘轮船作为运输罹灾中国人的专用轮船，9月15日起航的遣返专用轮千岁丸主要乘载了收容在公使馆的403名华工商（以商人为主）和243名留学生及其家属随员。[48]9月28日起航的遣返专用轮弘济丸主要乘载了收容在东京市内的华工。9月30日的遣返专用轮博爱丸、10月2日的遣返专用轮长顺丸和10月6日的遣返专用轮千岁丸主要乘载了收容在习志野军营的华工。

表2 遣返回国华工商人数和乘坐船舶统计表

| 批次 | 出发日期 | 抵达日期 | 航线 | 船名 | 华工商人数 | 备注 |
|---|---|---|---|---|---|---|
| 路线一：芝浦－上海 | | | | | | |
| 1 | 9月15日 | 9月21日 | 芝浦－上海 | 千岁丸 | 403 | 遣返专用轮 |
| 合计 | | | | | | 403 |
| 路线二：芝浦－神户－上海 | | | | | | |
| 2 | 9月22日 | 9月23日 | 芝浦－神户 | 上海丸 | 101 | |
| | 9月27日 | - | 神户－上海 | 熊野丸 | 103 | |
| 合计 | | | | | | 103 |
| 3 | 9月28日 | 9月29日 | 芝浦－神户 | 长崎丸 | 29 | |
| | 10月1日 | - | 神户－上海 | 弘济丸 | 43 | |
| 合计 | | | | | | 43 |
| 4 | 9月28日 | 9月30日 | 芝浦－神户 | 弘济丸 | 450 | 遣返专用轮 |
| | 10月1日 | - | 神户－上海 | 弘济丸 | 450 | |
| 合计 | | | | | | 450 |
| 5 | 9月30日 | - | 芝浦－神户 | 博爱丸 | 452 | 遣返专用轮 |
| | - | - | 神户－上海 | 博爱丸 | 452 | |
| 合计 | | | | | | 452 |
| 6 | 10月2日 ※1 | - | 芝浦－神户 | 长顺丸 | 525 | 遣返专用轮 |
| | - | - | 神户－上海 | 博爱丸 | 525 | |
| 合计 | | | | | | 525 |
| 7 | 10月6日 | - | 芝浦－神户 | 千岁丸 | 743 | 遣返专用轮 |
| | - | - | 神户－上海 | 邮船公司轮船 | 743 | |
| 合计 | | | | | | 743 |
| 路线三：长崎-上海 | | | | | | |
| 8 | 9月23日 | - | 长崎-上海 | 近江丸 | 215 | |
| 9 | 9月25日 | - | 长崎-上海 | 千岁丸 | 501 | |

48) 关东大地震后罹灾留学生及其家属随员共计442人，分5批被护送回国。关于留学生的救护和遣送，另撰文探讨。

| | | | | | | |
|---|---|---|---|---|---|---|
| 10 | 9月29日 | - | 长崎-上海 | 熊野丸 | 29 | |
| 11 | 10月2日 | - | 长崎-上海 | 日光丸 | 17 | |
| 合计 | 762 | | | | | |
| 路线四：横滨－上海 | | | | | | |
| 12 | 10月20日 | - | 横滨－上海 | 北野丸 | 83 | |
| 13 | 10月29日 | - | 横滨－上海 | 春洋丸 | 107 | |
| 合计 | 190 | | | | | |
| 总计归国华工商人数 | 3671※2 | | | | | |

注：※1　长顺丸于1923年10月2日从芝浦起航后搁浅，经过修缮于10月7日再次起航。参见《長順丸座州ニ関スル件》,《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学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第一巻》, 外務省記録MT.6.3.1.8-17-17，日本外务省外交史料馆藏。※2外务省记录的统计数据为遣返回国华工商3677人，该数据将9月20日从芝浦乘坐长崎丸前往神户后决定留在当地的6名华工商也计算在内，因此笔者认为正确的回国华工商人数是3671人。参见《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学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二巻》, 外務省記録MT.6.3.1.8-17-17，日本外务省外交史料馆藏。

资料来源：本表参照以下档案制成：《罹災支那人送還事務ノ為ノ神戸出張ノ件報告》,《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学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一巻》, 外務省記録MT.6.3.1.8-17-17，日本外务省外交史料馆藏；《罹災支那人送還方針ノ決定及其ノ実行》,《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学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二巻》, 外務省記録MT.6.3.1.8-17-17，日本外务省外交史料馆藏。

习志野军营的华工是此次遣返工作的重中之重，一共被分为三批集体遣返。第一批于9月30日乘坐博爱丸，第二批于10月2日乘坐长顺丸，第三批于10月6日乘坐千岁丸被送回中国。

9月21日，中华民国驻日公使馆参事官张元节（前代理公使）在陆军省、警视厅、外务省官员的陪同下慰问并视察了南千住和习志野军营的华工，劝说其尽快回国。在南千住尾久町视察之际，张元节由于跟温州籍华工之间言语不通，便留下书信给华工工头，意为今后东京就业机会稀少，华工们应趁此次日本政府提供的免费轮船回国，并令华工工头尽快提交希望回国者的名簿。[49]随后一行人前往习志野军营，此处收容的多数华工希望继续留在东京或前往大阪、神户等地做工。张元节极力劝说道，地震后东京等地并无就业机会，即使身上有些现金，离开习志野军营后恐怕连粮食都买不到，应趁此次机会回国，还能得到些额外的救济金，并令华工负责人陈福兴和陈芗圃立即编制华工名簿。[50]

9月28日，公使馆钱穟孙秘书官再次前往习志野军营协商遣返华工事宜。公使馆的意向是华工们与其在日本找不到工作而生活困顿，倒不如趁机全员回国。被关押在军营逾半月之久的华工也逐渐转变想法，希望能尽快回国，仅有一部分人因为有生意买卖、租赁、债务等事务没有处理完，希望继续留在日本。[51]

由此，习志野军营收容的第一批归国华工452人于9月30日乘坐博爱丸，第二批525人于10月2日乘坐长顺丸启程回国。10月3日和4日，公使馆钱穟孙秘书又来到习志野军营，劝诱

49)《南千住及習志野ニ避難中ノ支那人慰問旁支那代理公使等ノ視察ニ関スル件》,《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学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三巻》, 外務省記録MT.6.3.1.8-17-17，日本外务省外交史料馆藏。

50)《南千住及習志野ニ避難中ノ支那人慰問旁支那代理公使等ノ視察ニ関スル件》,《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学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三巻》, 外務省記録MT.6.3.1.8-17-17，日本外务省外交史料馆藏。

51)《支那公使館員等ノ支鮮人収容訪問ノ件》,《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学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一巻》, 外務省記録MT.6.3.1.8-17-17，日本外务省外交史料馆藏。

剩余的华工商趁此次机会一并回国。第三批归国华工共计706人，剩余华工中选择继续留在日本的为58人，[52]另有5名患病者和2名翻译员陪同患病者留在习志野军营医院接受治疗。[53][38]第三批归国华工的706人中，身体健康者694名，患病者12名。日方将这12名病人和3名需要警戒的中国人用两台车另外押送，其余华工们被分为15个分队，每个分队由1名分队长和士兵负责。陆军于10月5日凌晨3点开始查点华工人数，6点整队出发步行至津田沼车站，乘坐7点30分发车的专用列车，于9点到达锦系町车站，然后继续步行，于下午1点到达芝浦的乘船地点。每位华工商在上船前分到一张兑换用的红票，凭借此票换取10日元的慰问金，然后踏上回国轮船。[54]10月19日，滞留在习志野军营养病的患者和翻译被送往青山红十字医院。[55]至此为止，习志野军营收容的中国灾侨全部离开军营。

除了上述日本政府安排的从芝浦直达上海以及芝浦经由神户前往上海的航班以外，有762名中国人分4批从长崎乘坐轮船回国，这些中国人没有领到回国慰问金。至10月19日为止，包括习志野军营的华工在内的京滨地区的绝大部分罹灾中国人都顺利踏上归国的轮船。但是还有一小部分希望回国者没赶得上之前的免费回国轮船。在公使馆的翰旋之下，日本政府另增两班轮船运送中国人回国。10月20日，83名中国人乘坐北野丸从横滨出发前往上海。[56]10月29日，190名中国人乘坐春洋丸从横滨出发前往上海。至此，日本政府运送罹灾中国人回国的事业告一段落，一共遣返中国人4113人，其中留学生及家属随员442人，华工商3671人。

## 四、结语

关东大地震后日本对旅日华工的屠杀、拘禁和遣返是近代日本政府推行的排斥华工政策的产物。日本作为一个非移民国家，自明治时期以来一直贯彻严禁外国人单纯劳动者和非熟练劳动者入境的原则。日本政府早在尚未有华工大量入境的苗头之前就未雨绸缪地于1899年制订了敕令第352号《关于根据条约或惯例不具有居住自由的外国人的居住及营业的事项》，与内务省令第42号（1899年）、内务大臣训令第728号（1899年）、内务省令第1号《关于外国人入境的事项》（1918年）等系列法令，将中国劳工彻底地拒于日本国门之外。后来，因一战期间日本资本主义经济的飞速发展所带来的劳动力极度匮乏，使得日本政府不得不睁只眼

52) 该58人因持有五六十至一百元左右的资金或者商品装船提货单而被允许暂时留在日本。他们于10月5日，和第三批归国华工一起离开习志野军营，其中43名前往大岛町，由陈芗圃监督，15名前往三河岛町，由吴凤岐管理。参见《習志野ノ収容中ノ支那労働者並ニ商人第三回帰国乗船ノ為メ習志野収容所ヨリ芝浦ヘ輸送打合ニ関スル件》，《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学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三巻》，外務省記録MT.6.3.1.8-17-17，日本外务省外交史料馆藏。

53) 《在習志野支那人送還終了ノ件》，《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学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二巻》，外務省記録MT.6.3.1.8-17-17，日本外务省外交史料馆藏。

54) 《習志野ノ収容中ノ支那労働者並ニ商人第三回帰国乗船ノ為メ習志野収容所ヨリ芝浦ヘ輸送打合ニ関スル件》，《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学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三巻》，外務省記録MT.6.3.1.8-17-17，日本外务省外交史料馆藏。

55) 《在習志野支那人送還終了ノ件》，《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学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二巻》，外務省記録MT.6.3.1.8-17-17，日本外务省外交史料馆藏。

56) 《変災及救済関係雑件/関東地方震災ノ件　支那人（留学生ヲ含ム）救済及送還ニ関スル件　第二巻》，外務省記録MT.6.3.1.8-17-17，日本外务省外交史料馆藏。

闭只眼，默许华工入境填补日本国内的劳动力市场。

然而好景不长，1922年以后日本经济危机爆发，国内失业率攀升，华工首当其冲成为了日本劳动者发泄失业情绪的替罪羊，各地相继爆发了不同程度的抵制华工的冲突事件。日本政府为了缓和社会矛盾，不得不再次强化中国人入境审查，加大遣返日本国内华工的力度。日本各地方官厅争相向外务省汇报当地禁止中国劳工入境和检举遣返非法华工的状况。日本的排斥华工举措虽然在一定程度上抑制了华工人数增加的速度，也缓和了国内日本劳动者的不满情绪，但是并没有达到将华工彻底驱赶出日本的目的。而1923年9月的这场大地震，加速了日本政府排斥华工政策的实施进程。地震后，日本军队、警察和自警团残忍地杀害了700余名手无寸铁的无辜华工，事后又唯恐屠杀事件暴露会引发中日外交交涉，于是借着“保护救济”之名，大肆围捕拘禁幸存华工，并趁机将其集体遣送回国，以图一劳永逸地解决旅日华工问题。更甚者，为了防止华工再次赴日，1924年12月28日关东厅警务局长发布《前往日本内地的中国人劳动者取缔及识别标准》，明确了具体的取缔非法移民的方法和详细的中国劳工认定标准，[57]日本各地海关依据此标准加强了限制中国劳工入境的力度。虽然地震后仍有不少华工赴日谋生，但人数已大大不如地震前。1927年的昭和金融恐慌和1930年的昭和恐慌之后,日本陷入了严重的经济危机,对劳动力的需求骤减。而中日政局也发生动荡,1931年的九一八事变、1937年的卢沟桥事变引发大批旅日华侨华人回国避难。随着中日关系恶化,日本于1939年公布了内务省令第6号《关于外国人的入境、滞留以及遣返》,全面限制中国人入境，至此以后旅日华工群体日渐式微。

57) 今井清一監修，仁木ふみ子編:《史料集　関東大震災下の中国人虐殺事件》，明石書店，2008年，第872-876页。

국제학술심포지엄
관동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 100년: 진실·책임· 기억

# 식민지 제노사이드

이재승(건국대)

# 식민지 제노사이드

이재승(건국대)

## 1. 식민지 제노사이드

식민지 백성을 위한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는다.[1] 설혹 그러한 국제법이 있더라도 효과적 실행체제가 없다. 물론 구제 수단의 불완전성은 국제법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은 국내법에 비하면 여전히 갈길이 멀다.[2]'금지되지 않은 것은 허용된다'와 같은 단순한 사고는 국제법에서는 글자 그대로 타당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관동대학살에 1948년 집단살해처벌협약은 시제법으로서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당시에 대학살을 금지하는 국제규범이 부재하다는 주류적 입장[3] 앞에 서면, 이러한 '국제법적 공백'이 진정한 공백인지를 캐묻도록 한다. 그리하여 국제법의 원천과 역사로 돌아가도록 한다. 국제법의 법원 또는 원천은 조약법뿐만 아니라 법전으로 밀어 올린 관습법, 나아가 인간의 관행에 법리적 확신을 부여하는 자연법적 사고(법의 일반원칙과 학자의 견해)까지 포함한다. 처음부터 법적 확신과 법적 관행, 명백한 적용사례와 같은 완성태만을 국제법이라고 하였다면 국제법은 존재할 수도 없었고 국제군사재판소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해아래 완성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온갖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편린들을 발견하고 발명하고 혁신하는 작업만이 필요하다. 식민지 제노사이드의 불처벌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배적 해법 아래 억압당한 이탈적 해법을 발견하고 이를 대항적 비전으로 발전시키는 비판적이고 형성적인 사고가 필요하다.[4]

발제자는 관동대학살(關東大虐殺, Kantō Massacre)[5]을 식민지 제노사이드(colonial genocide)로 부른다. 식민지 잔학행위(colonial atrocities)라는 말이 포섭 범위가 넓어서 이 말도 널리 사용된다. 이러한 말이 널리 쓰이고 있지만 국제형사법의 영역에서 독립적인 범죄 유형으로 확립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용어는 식민제국의 극단적 폭력에 대한 역사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일깨운다. 동시에 식민제국의 군대나 경찰이 식민지(정착

1) 국제법에서는 제3세계접근법이라는 유형적 사고가 존재한다. Makau Mutua & Antony Anghie," What is TWAIL?", *ASIL Proceedings of Annual Meeting*, 2000, Vol. 94, pp. 31-40.

2) 하트는"국제법이 정말 법인가?(Is International law really Law?)"라고 질문하면서 실증주의적 법관념의 검증적 한계사례로 국제법을 논의한다. H.L.A. Hart, The Concept of Law 3rd. Oxford U.P., 2012, p. 214.

3) 정다은은 관동대학살에 대한 집단살해처벌협약의 적용가능성 및 대학살 당시 제노사이드 금지규범의 존재가능성을 부정하고 대신 일본형법상 살인죄를 중심으로 일본의 국가책임을 인정한다. 또한 일본에서 국내적 구제절차의 완료를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전제라고 주장한다. 정다은, 관동대진재 조선인 학살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 제노사이드와 국가책임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학위논문, 2021/2.

4) 이탈주의적 원리에 대해서는 로베르토 웅거/ 이재승 옮김, 비판법학운동, 앨피, 2019, 179쪽 이하.

5) 보스톤 학살(Boston Massacre)은 1770년 3월 보스톤에서 식민당국에 항의하는 시민중 11명이 영국군의 총에 맞아 5명이 사망하였고, 관동대학살은 1923년 관동지역 일대에서 최소 6,000여명 이상의 조선인이 사망하였는데 똑같이 masscre라고 표현된다. 영어표현에서 여러 사람이 억울하게 사망하면 똑같이 massacre라고 부르는 것 같다.

지)에서 저항하는 원주민들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사건들(스페인과 미국의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 독일의 헤레로-나마족 학살, 일본의 동학농민군 학살)을 떠올리게 한다. 관동대학살의 현장이 식민지가 아니라 일본의 심장부라는 점이 이례적이지만 식민체제의 설치와 유지에 관한 폭력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국제법학자들은 전쟁과 평화의 이분법에 따라 식민상태를 평화상태로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식민체제는 본질적으로 평화상태가 아니라 변형된 전쟁상태(강점상태)라고 본다. 식민지 제노사이드 혹은 식민지 잔학행위와 같은 용어는 식민주의 또는 제국주의 시대의 야만을 잘 표현해 주기 때문에 이 용어들은 앞으로도 유용할 것이다. 우선 식민지 지배책임과 관련해서 현재의 규범적 상황을 요약해 보겠다.

첫째로, 제2차 세계대전 후 도쿄나 뉘른베르크에 설치된 국제군사재판소는 1930년대 후반 이후 추축국들의 행위를 전쟁범죄의 틀 안에서 처벌하였을 뿐 그전의 국제범죄나 식민지 잔학행위들을 처벌대상으로 다루지 않았다. 특히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1919년 이후에는 식민지범죄로서 제노사이드를 범하지 않았다.

둘째로, 1990년대 이후 설치된 임시 국제군사재판소(ICTR, ICTY, 캄보디아특별법정)와 상설 국제형사재판소(ICC)도 규정에 명시된 관할범죄만 처벌해 왔다. 특히 국제형사재판소는 도입과정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장래의 범죄만을 처벌하는 할인정책을 채택함으로써[6]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식민지범죄를 다룰 수 없게 되었다.

셋째로, 국제사회는 식민지 인민의 자결권(right of self-determination)[7]이나 발전권(right to development)[8]에 대한 중요한 결의를 이끌어내었으나 식민지 범죄에 대한 명시적인 책임추궁 수단으로 발전시키지 못하였다.[9] 1985년 이탈리아 법학자 아고(Ago)가 작성한 국가책임 잠정초안에서 잠시 왔다가 삭제된 식민지범죄[10]가 개념적 최대치였다.

넷째로, 식민지범죄에 대한 민사적인 국제책임을 판단할 강제적인 국제재판소가 부재하고, 가칭 '식민지 지배책임의 청산에 관한 협약'에 기초한 '식민책임청산위원회'와 같은 기

---

6) 국제형사재판소규정 제24조(소급효 금지)
1. 누구도 이 규정이 발효하기 전의 행위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 The right of peoples and nations to self-determination(1952), A/RES/637; 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1960), A/RES/1514(XV).

8)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1986), resolution /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A/RES/41/128; The right to development(2017), resolution /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A/RES/71/192.

9) 유엔총회는 원주민의 경제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비난하였다. Question of Territories Under Portuguese Administration(1966), A/RES/2184(XXI); The Policies of Apartheid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1966), A/RES/2202(XXI)

10) 잠정초안 제19조
② 국제공동체의 근본적 이익의 보호를 위해서 전체 공동체가 그 위반행위를 범죄라고 인정할 정도로 본질적인 국제의무에 대한 국가의 침해에서 기인하는 국제적인 위법행위는 국제범죄를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효력있는 국제법의 규칙에 따라 무엇보다도 다음의 행위에서 국제범죄가 유래한다.
(a) 침략행위의 금지와 같이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국제적인 의무의 심각한 위반
(b) 폭력에 의한 식민지배의 설치나 유지의 금지와 같은 인민의 자결권의 유지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국제의무의 심각한 위반
(c) 노예제, 제노사이드, 인종격리정책의 금지와 같은 인간의 보호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국제의무의 광범위한 규모에서 심각한 위반
(d) 대기 및 해양의 대규모 오염의 금지와 같은 인간환경의 보호와 보존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국제의무의 심각한 위반
④ 제2항의 국제범죄에 이르지 않는 국제위법행위는 국제불법행위(an international delict)를 구성한다.

구도 없다. 따라서 식민지 지배책임을 묻는 과정은 당사국들간의 협상밖에 남지 않는데, 이러한 협상의 결과는 국제정의와 법리가 아니라 협상력의 격차와 경제적 필요에 좌우된다. 강대국은 법적 책임을 부인하고 신생국은 피 묻은 돈을 경제협력과 우호의 증거로 받아들인다.[11]

다섯째로, 식민제국과 원주민의 무력충돌(인디오, 동학농민군, 헤레로 원주민 등)을 헤이그 협약의 적용대상인 전쟁으로 불러야 하는지 의문을 품게 한다. 오히려 식민제국이 전쟁을 빌미로 전쟁의 합법적 이미지를 찬탈하여 일방적인 섬멸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전쟁이란 용어는 기본적으로 무기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정상적인 전쟁[12]에 한정해야 한다. 압도적인 대량살상무기로 합법적 전쟁을 빙자하여 저항하는 원주민에 대한 섬멸(annihilation)은 처음부터 식민지 제노사이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영어판 위키피디어에는 Kantō Massacre[13] 항목이 등재되어있지만'제노사이드 목록'(list of genocide)[14] 및 '역사 속의 제노사이드들'(genocides in the history)[15] 항목은 수많은 제노사이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동대학살과 남경대학살 등 일본에 의한 제노사이드는 현출되어 있지 않다.[16] 어쨌든 위키피디어의 관련 항목을 개관하면 인류역사가 제노사이드의 역사임을 알 수 있다. 제노사이드는 종족적 구분의 습속과 동시에 시작된 것 같다. 클라스트르는 기록을 갖지 않은 미개 민족들 사이에서도 민족말살이 자행되었다고 지적한다.[17] 16세기 유럽인중 가장 고매한 인물 라스 카사스(Bartolomé de las Casas) 신부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스페인 사람들이 자행한 약탈과 살육을 원주민 파괴의 역사에서 자세히 기록하였다.[18] 최근에 나온 저작들은 북미에 정착한 유럽인들이 특히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자행한 인디언 대학살(말살)을 식

11) 2008년 이탈리아와 리비아간에 우호협력조약(Treaty of Friendship, Partnership and Cooperation Between the Italian Republic and the Great Socialist People's Libyan Arab Jamahiriyya)이 체결되었다. 이탈리아는 매년 2억불씩 25년간 총 50억불을 원조의 형식으로 리비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조약은 배상(repar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조약 제8조 제1항에 따라 50억불은 리비아의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투자하며, 이탈리아 기업들이 독점적으로 사업에 참여한다는 내용이었다. 반대로 리비아당국은 리비아인들이 이탈리아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국경통제의무를 져야 했다.

12) 전쟁은 무기대등의 원칙에 따라 시합하듯이 수행해야 하며, 재판도 마찬가지이다. Huizinga의 아곤주의(agonism) 사상은 <호모 루덴스>, <중세의 가을>에 나타난다. 칸트는 <영구평화론>에서 화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대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섬멸전이 금지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프란시스 리버는 <리버 코드>에서 칸트의 통찰에 덧붙여 '전쟁 중에도 신 앞에서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인도성의 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동학농민전쟁에서 우금치는 전장터가 아니라 동학농민군을 상대로 한 일본군의 무기성능시험장에 불과하였다. 라스 카사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동학도(원주민)는 마땅히 일본군(스페인사람들)에게 전쟁을 개시할 권리가 있지만 일본군은 동학도를 살해할 권리가 없다.

13) https://en.wikipedia.org/wiki/Kant%C5%8D_Massacre

14)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genocides#List_of_genocides

15) https://en.wikipedia.org/wiki/Genocides_in_history

16) 이는 아시아의 제노사이드가 연구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Frank Jakob(ed), *Genocide and Mass Violence in Asia: Genocide and Mass Violence in the Age of Extremes Vol.1*, Walter de Gruyter, 2019.

17) 삐에르 클라스트르/변지현·이종영 옮김, 폭력의 고고학, 울력, 2002, 67쪽 이하.

18) Las Casas, A Short Account of the Destruction of the Indies[Brevísima relación de la destrucción de las Indias], 1542.

민지 제노사이드(colonial genocide), 아메리카 제노사이드(American Genocide), 아메리카 홀로코스트(American Holocaust)로 부르기도 한다. 그것은 버팔로 사냥과 다를 바 없는 인간사냥이었다. 20세기 초반 독일군대가 아프리카에서 원주민 저항세력을 대규모로 학살하여 최근까지 독일과 나미비아 간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제1차세계대전중 1915년 전후로 1백 여만 명에 이르는 아르메니아인을 대규모로 학살했음에도 현재 튀르키에 정부는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를 공식적으로 부인한다.

제노사이드는 범죄 중의 범죄로 취급된다. 아렌트가 말한 '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범죄'이다. 식민지 제노사이드는 식민지 잔학행위(colonial atrocities) 중 가장 극단적인 범죄에 해당한다. 식민지 잔학행위를 식민화의 범죄(crimes of colonization)와 식민체제 아래서의 범죄(crimes under the colonial regime)로 나눈다면, 전자는 식민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범죄이고, 후자는 식민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범죄이다. 제노사이드는 어느 상황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 조선침략, 동학농민학살, 의병학살, 외교권강탈, 군대해산, 병합조약 등을 식민화의 범죄라고 한다면, 3.1운동 진압, 관동대학살, 전시강제동원, 역사교육금지, 한국어사용금지, 독립운동가박해, 자원수탈, 강제동원, 위안부 등은 식민체제 아래서의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잔학행위들 중에는 국제인권법 내지 국제인도법상 독자적인 범죄와 불법행위로 접근할 수 있는 사례[19]가 있는 반면, 식민체제의 총체적 불법성을 전제해야만 온전하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례도 있다.[20]

## 2. 인도에 반한 범죄로서 제노사이드

### 1) 신조어 제노사이드

유대계 폴란드 법률가 라파엘 렘킨이 1944년 <점령된 유럽에서 추축국의 지배(Axis Rule in Occupied Europe)>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제노사이드라는 신조어를 사용하였고, 이 용어는 불과 2년 만에 유엔의 결의문에 반영될 정도로 대성공을 거두었다.[21] 렘킨은 1933년 국제연맹이 개최한 형법통일을 위한 마드리드 회의에서 야만범죄(Crime of barbarism/crime of vandalism)라는 대체개념도 사용하였다. 렘킨은 제노사이드를 대량살해(mass killing)에 입각한 민족의 즉각적인 파괴로 한정하지 않고, 민족 생존의 본질적 기초를 파괴하기 위한 일련의 조종 행위들까지도 포함하였다. 다양한 행위 유형들은 집단살해처벌협약 제2조에 대체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보호집단에 관한 렘킨의 개방적 구상은 1946년 유엔결의[22] 및 집단살해처벌협약의 기초작업에까지 유지되다가 최종안에서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집단 네 가지로 한정되었다.

---

19)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상 불이행에 대한 위헌결정(2011. 8. 30. 2006헌마788; 원폭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상 불이행에 대한 위헌결정(2011. 8. 30. 2008헌마648)

20) 미쓰비시 강제징용사건(대법원 2012.5.24. 2009다22549); 신일본제철 강제징용사건(대법원 2018.10.30. 2013다61381 전원합의체판결)

21) William Schabas, *Genocide in International Law: the crimes of crimes*, Cambridge U. P., 2000, p. 25.

22) UN General Assembly, The Crime of Genocide, 11 December 1946, A/RES/96.

1945년 10월 뉘른베르크 국제군사법정에서 연합국 검사가 제노사이드 죄목으로 기소하였으나 법정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국 재판부는 당시에 genocide를 독립적인 범죄로 수용하지 않았으며 이를 대체로 인도에 반한 죄로 다루었다.[23] 국제사회는 이러한 뉘른베르크 재판의 경험과 한계를 고려하면서 1948년 집단살해처벌협약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집단살해처벌협약을 과거에 발생한 식민지 제노사이드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집단살해처벌협약은 과거에 발생한 사건에도 적용된다거나 장차 발생하게 될 사건에만 적용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적용반대론은 시제법의 문제[24]로 접근하여 협약 발효일 이전 또는 1940년대 이전에 발생한 제노사이드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집단살해처벌협약을 국제관습법의 확인조약으로 보는 경우 제노사이드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1946년 유엔총회 결의는 향후의 제노사이드의 방지와 처벌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제노사이드의 처벌에 대한 관심도 포기하지 않았다.[25] 유엔 체제가 등장한 후 최초의 다자조약인 집단살해처벌협약의 적용범위를 1968년 조약에관한비엔나협약의 일반규정으로 확정해버릴 수 있는지 의문이다.[26] 오히려 1945년 국제군사재판소 규정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발생한 사건들을 처벌하기 위한 협약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1968년 공소시효 부적용협약의 초점은 도리어 협약발효일 이후 발생한 범죄가 아니라 1945년 이전에 발생한 범죄들에 맞추어 졌다.

세계인권선언 제11조는 행위시에 국내법이나 국제법상 범죄가 성립되는 작위와 부작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자유권규약(1966) 제15조는 동일한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하고(제1항), 나아가 행위시에 국제사회에 의해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들에 따라 범죄가 되는 작위나 부작위가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제2항). 그런데 죄형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이 국제법의 영역에서는 조약법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정이 중요하다. 국제법상 금지는 국제관습법이나 법의 일반원칙에서도 나올 수 있다. 물론 관동대학살 당시에 제노사이드 금지규범이 조약법이 아니더라도 국제관습법이나 법의 일반원칙이나 국제관행으로 존재하는지가 중요하다.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이 재판에서 국제법으로 고려하는 기준은 네 가지이다.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

23) 국제군사재판소헌장 제6조 제1항 (c)인도에 반하는 범죄: 이 재판소의 관할 범죄의 수행을 위하여 또는 그와 연관되어 전쟁 전 또는 전쟁 중 민간인 주민에 대하여 자행된 살해, 절멸(extermination), 노예화, 강제이송 여타 비인도적인 행위들 또는 정치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사유에 기한 박해들, 다만 행위지의 국내법 위반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24) 조약에관한비엔나협약 제28조(조약의 불소급) 별도의 의사가 조약으로부터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달리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조약 규정은 그 발효 이전에 당사국에 관련하여 발생한 행위나 사실 또는 없어진 사태에 관하여 그 당사국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24조.

25) "인종적, 종교적, 정치적 및 여타 집단들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되었을 때 많은 사례의 제노사이드가 일어났다./제도사이드 범죄의 처벌은 국제적인 관심사안이다(Many instances of such crimes of genocide have occurred when racial, religious, political and other groups have been destroyed, entirely or in part./The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is a matter of international concern.)"UN General Assembly, The Crime of Genocide, 11 December 1946, A/RES/96. 이 두 문장에서 과거의 범죄는 후회의 대상이고, 장래의 범죄만이 처벌의 대상이라는 차단적 견해를 읽어내기 어렵다.

26) 조약에관한비엔나협약 자체의 소급효가 문제되었다. 협약의 논의과정에서 미국대표 Kierney는 비엔나협약 발효일 이후 채택된 조약에 대해서 비엔나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비엔나협약 제4조에 반영되었다.

국제협약,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 국제관습,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사법판결 및 제국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학자의 학설 등이다(제38조).

제노사이드라는 신조어가 1944년에 만들어졌다는 사정으로 인해 제노사이드 금지규범이 집단살해처벌협약 이전에는 없을 것이라고 속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1948년 협약이 채택되기 이전의 상황은 국제법의 본질에 더 부합하는 국제관습법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살을 금지하는 국제규범이 이미 존재했다고 한다면 이를 새로이 제노사이드로 부르는 것은 소급적인 재분류에 불과할 뿐이다. 오늘날 제노사이드 금지규범은 강행규범(jus cogens)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셀튼은 강행규범의 원천을 자연법, 공공정책, 법의 일반원칙, 동의에서 찾는다.[27] 그러나 언제부터 집단살해가 국제법적으로 금지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살인의 금지가 자연법이나 종교규범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집단살해 금지의 원천도 자연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자연법이 계약적 국제법으로 전환되어 갔다. 종교적 소수 집단(프로테스탄트)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는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재확인된다. 19세기에는 유럽의 기독교국가들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 안에서 기독교도에 대한 박해가 이루어지자 기독교도의 보호와 소수민족의 독립을 지지하기 위해 인도적 개입을 감행하였다.[28]

인도에 반한 범죄의 개념적 기원[29]으로 알려진 아르메니아인 대학살과 관련하여 1915년 프랑스 영국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대학살을 "문명과 인도에 반하는 범죄(crimes against civilization and humanity)"로 규탄하고, 대학살에 관여한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결의하였다.[30] 미국측의 반대로 그러한 범죄의 법적 내용이 구체화되지 못했지만, <전쟁의 장본인에 대한 책임과 전쟁의 법과 관습의 위반에 대한 형벌의 집행에 관한 위원회의 보고서 1919>는 '인도성의 법(laws of humanity)', '인도성의 법에 대한 위반(offense against laws of humanity)', '인도성의 법에 대한 침해(breach of laws of humanity)'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이 보고서는 또한 오늘날 인도에 반하는 범죄라고 불릴만한 범죄 대부분을 리스트로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에 참여한 국가들은 "중앙 제국들과 그 동맹국인 터키 및 불가리아에 의한 전쟁은 확립된 전쟁의 법과 관습 및 인도의 기초적인 법을 위반하여 야만적이고 불법적인 수단으로 수행되었다"고 결의하였다. 제노사이드는 1944년 이후 온갖 범죄 중에서 최악의 범죄로 상승하였다. 제노사이드로 처벌한 실제 사례의 유무로 국제법의 존재여부를 판정한다면 국제법에 대한 오해를 강화하고 국제법의 형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다.

---

27) Dinah Shelton, JUS GOGENS, Oxford U. P., 2021, p. 2.

28) Vahakn Dadrian, "Genocide as a Problem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The World War I Armenian Case and Its Contemporary Legal Ramifications", 14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4(1989), pp. 232-242.

29) 오늘날 국제법에서 정형화된 인도에 반하는 범죄(crime against humanity)의 또 다른 기원은 노예제이다. 링컨은 1860년대 남북전쟁기에 노예제를 비난하면서 이 용어를 사용하였고, 그보다 앞선 1815년경 프랑스 혁명의 파고가 지나간 후 유럽의 각국대표들은 회합에서 노예제 폐지와 노예거래의 금지를 촉구하면서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였다.

30) M. Cheriff Bassiouni, Crimes Against Humanity in International Criminal Law, Kluwer Law In ternational , 1999, p. 64.

### 2) 국제군사재판소헌장상 인도에 반하는 범죄

[뉘른베르크]국제군사재판소헌장 제6조 (c)와 극동군사재판소헌장 제5조 (c)는 공히 인도에 반한 죄의 성립 시기를 '전쟁전이나 전쟁중(before or during the war)'으로 상정함으로써 평화시의 범죄(peacetime crimes against humanity/peacetime genocide)까지 열어두었다. '전쟁전'은 어느 시점까지 포함할 것인지도 문제이다. 일본의 범죄는 제1차세계대전 종결, 만주침략, 아니면 중일전쟁 발발시점까지 포섭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독일의 범죄는 나치체제의 출범 혹은 오스트리아 합병 혹은 폴란드 침공까지 포섭할 것인지 규정상 분명하지 않다. 조문화작업에서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개념적 규정 과제와 임시 군사재판소의 관할범위에 대한 실용적 규정 과제가 충돌했다고 할 수 있다.[31] 뉘른베르크에 설치된 국제군사재판소는 나치체제 등장 시점부터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실제로 재판에서는 제2차대전 발발 이후에 자행된 범죄에 한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국제군사재판소규정들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관해 몇 가지 개념적 혁신을 이루었지만"이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여타 범죄의 실행이나 그러한 범죄와 관련하여(in execution of or in connection with any crime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Tribunal)"벌어진 경우만 처벌하도록 하였다(war nexus). 이는 결론적으로 평시 제노사이드의 배제를 의미한다. 상설국제형사재판소가 아닌 임시 국제군사재판소로서는 예정된 한계라고 볼 수 있다.

극동군사재판소는 인도에 반한 범죄에 대한 존중에서는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에 미치지 못했다. 군사재판소는 대체로 추축국들의 범죄를 전쟁범죄든 인도에 반하는 범죄든 어느 것으로든 처벌할 수 있었으며 대체로 두 가지 범죄를 병합하여 기소하고 유무죄를 판단하였다. 극동군사재판소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C)를 독자적인 소인(訴因)으로 다루지 않았던 반면[32], [뉘른베르크]국제군사재판소는 인도에 반한 죄를 독립적인 죄목으로 유죄를 선고하였다.[33]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는 유대인에 대한 범죄를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취급하였다면, 극동군사재판소는 아시아인에 대한 민족적 박해와 학살을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독립하여 다루지 않은 점도 두드러진다. 개념적으로 보자면 관동대지진은 평시 제노사이드나 평시 인도에 반하는 죄이지만 국제군사재판소의 규정은 전쟁과의 관련성을 가진 인도에 반하는 범죄만을 관할범죄로 삼았다. 1945년 국제군사재판소헌장의 인도에 반하는 범죄는 정확한 개념 정의가 아니라 당면한 재판소의 작업범위의 제한으로 해석한다. 어쨌든 1950년 유엔총회가 채택한 <뉘른베르크 원칙>은 국제군사재판소헌장과

31) 렘킨은 국제군사재판소규정의 성안과정에서 평시 인도에 반하는 범죄(평시 제노사이드)가 배제되는 것에 매우 실망했다고 한다. William Schabas, Nuremberg and The Drafting of The Genocide Convention, *Washington University Global Studies Law Review, Vol. 21*(2022), p. 74.

32) 시미즈 마사요시, "뉘른베르크 재판의 재검토", 일본의 전쟁책임 자료센터 펴냄/서각수.신동규 옮김, 세계의 전쟁책임과 전후보상, 동북아역사재단, 2009, 93-96쪽.

33) 핵심전범재판의 피고인중 슈트라이허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30년대초부터 나치박해에 관여한 선동적인 글쓰기)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되었고, 폰 쉬라흐는 1940년 이후 오스트라아 비엔나 총독으로서 오스트리아인 및 유대에 대한 박해 등을 이유로 인도에 반하는 죄로 처벌되었다. IMT, judgment of 1 October 1946, in The Trial of German Major War Criminals.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sitting at Nuremberg, Germany, Part 22 (22nd August ,1946 to 1st October, 1946), p. 501, 512.

마찬가지로 인도에 반한 범죄의 전쟁 관련성을 요건으로 삼았지만, 1954년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 법전 초안>은 전쟁 관련성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다.

### 3) 전쟁관련성과 인도주의 원칙

문명국에 의해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은 이미 1899년 및 1907년 전쟁의 법과 관습에 관한 헤이그협약 전문의 마르텐스 조항(문명국가의 법원칙, 인도주의 법, 공공양심에서 나오는 명령)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헤이그협약상 개별적인 인권보호조항뿐만 아니라 마르텐스 조항도 관동대학살과 관련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연합국 통제위원회법률 제10호(Control Council Law No. 10) 제6조 제3항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로 제시된 금지들은 1863년 미군형법(Liber Code), 1899년 헤이그협약, 1907년 헤이그협약, 1864년 제네바협약, 1929년 제네바 협약에 포함되어 있다. 나중에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는 이러한 규범들을 국제관습법으로 인정하였다.[34] 제1차 세계대전 후 파리강화회의 과정에서 당시까지 국제적인 관행으로 축적된 금지규범을 바탕으로 전쟁범죄 목록이 작성되어 제시되었다.[35] 그런데 헤이그 협약을 포함하여 국제인도법 및 마르텐스 조항은 전쟁 관련성(war nexus)으로 인해 관동대학살과 같은 평시 제노사이드 또는 평시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버티고 있다. 필자는 관동대학살 당시에도 소수 집단에 대한 국가의 박해와 말살은 국제관습법 위반이라고 판단한다.

우선 인도주의 원칙의 전쟁관련성으로 인해 평시에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평시에 인정되는 자유와 권리들이 전시에 함부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있을 수 있어도, 전시에도 금지된 바가 평시에 허용될 수 있다는 주장은 과도하게 현학적으로 보인다. 전시에 인권이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기 때문에 전시에 인권의 핵심적 내용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인데, 평시에는 인권을 더 침해해도 된다는 면허장을 국제법이 발급했다고 한다면 국제법은 질서가 아니라 무질서를 추구하는 것이다. 인도주의 원칙은 전시상황에서만 출현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평시에도 국가공권력은 인도주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유권규약 제4조(공공 비상사태의 일탈조치)도 전쟁뿐만 아니라 다른 비상사태에서도 불가침적인 권리를 명시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이러한 보호의 중첩적 과정을 원리적으로 표현한다.[36] 1948년 집단살해처벌협약도 평시 제노사이드를 금지대상으로 규정한다(제1조). 이 조항은 당연한 것을 확인한 규범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마르텐스 조항이 인도주의 법(laws of humanity)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도주의 원칙(principle of humanity)이 마르텐스 조항에 반영된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도 인도주의 원칙이 전시와 평시에 모두

34) M. Cheriff Bassiouni, 앞의 책, p. 71.

35) 1919 Report of the Commission on the Responsibility of the War, and on Their Punishment (excerpts), https://assets.cambridge.org/97811087/29086/excerpt/9781108729086_excerpt.pdf

36) 제4조(긴급사태하의 일탈조치)
1.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긴급사태가 발생하고, 또 긴급사태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선포된 경우, 가맹국은 사태의 긴급성에 비추어, 필요한 한도 안에서, 이 협약에 따라 지게 되는 다른 의무에서 일탈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조치는 국제법에 따라 지게 되는 다른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고, 또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사회적 출신을 유일한 이유로 하는 차별을 그 속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적용되는 법의 일반원칙이며 전시보다 평시에는 더 엄격하다는 점을 인정했다.[37]

다음으로 전쟁관련성에 입각한 주장은 평시 제노사이드는 국내정치의 문제로서 국제법의 영역이 아니라는 인식을 깔고 있다. 그러나 평시에도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라면 국내적 문제로 머물지 않는다. 인도적 개입의 문제는 오늘날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정식화되었지만, 개입전쟁의 기원은 국제법학자 프란치스코 비토리아[38]나 휴고 그로티우스[39]에게서 찾을 수 있고, 19세기 이래로 현재까지 수많은 개입 사례들을 제시할 수 있다. 오펜하임은 1920년 출간된 국제법(3판)에서 19세기 후반 오스만 제국의 기독교도 박해에 대항하여 유럽이 개입한 사례를 거론한 후 "많은 법률가들은, 평시 및 전시에(in time of peace and war) 종교적 박해와 끝없는 잔인한 행동들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인도성을 명분으로 한 개입이 행사되는 때에는 개입이 허용되고 심지어 개입이 권리의 기초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열강들이 이러한 이유로 과거에 개입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리하여 1827년 혁명적 그리스와 투르크간의 투쟁 동안에 자행된 잔인한 행동들에 대해 여론(public opinion)이 경악하였기 때문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이 투쟁에 개입하였다. 그리고 튀르키예에서 기독교도에 대한 박해를 중단시키기 위해 수시로 개입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러한 개입들을 허용하는 국제법규범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일리가 있다. 다른 한편, 여론과 열강의 태도가 그러한 개입을 지지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며, 아마도 개입이 열강의 집단적 개입의 형태로(in the form of a *collective* intervention: 원문 이탤릭체) 행사된다는 조건 아래서 인도성을 명분으로 한 개입들(interventions in the interest of humanity)이 허용된다는 규범을 조만간 국제법이 인정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고 밝힌다.[40]

오펜하임의 고민은 나중에 유엔 체제의 등장으로 기본적으로 해결되었다. 그의 고민의 중점은 개입의 상황적 요건-금지규범의 위반-이 아니라 (무력)개입의 방식-집단적 collective-에 있었다고 본다. 한 국가의 국내적 정치가 야기한 집단에 대한 박해가 국제적 사안으로 상승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국내의 소수집단에 대한 박해는 대체로 평시 제노사이드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어쨌든 대지진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하여 질서를 회복한다는 기만적 명분 아래 군대와 민간이 합작하여 이민족을 말살한 사건에 대해 평시의

---

37) 영국은 1946년 코르푸 해협을 국제수로로 규정하고 무해통행권을 주장하며 두 척의 군함을 파견하였는데 분쟁수역이라는 입장을 가진 알바니아가 해당수역에 기뢰를 설치하여 두 척의 군함을 파괴하고 다수의 수병을 사망케 하였다. 이 사건의 유엔의 권고로 영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알바니아를 제소하였고 국제사법재판소는 알바니아에게 844,000 파운드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알바니아의 의무는"전시에 적용할 수 있는 1907년 헤이그협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널리 인정된 원칙들, 이를테면, 전시보다 평시에 더욱 엄격한 인도주의의 기초적인 고려들(elementary considerations of humanity)에 근거한다."고 판결하였다. Corfu Channel Case(UK v. Alb.)(Merits), 1949 ICJ Rep. 4,22(Apr. 9). Theodor Meron, *The Humanization of International Law*, Martinus Nijhoff, 2006, p. 21.

38) 비토리아는 인디오 원주민 통치자의 전제나 인신공희를 강요하는 관행을 시행하는 경우 극악무도한 관행을 멈주게 하고 무고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 개입전쟁을 개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물론 라스 카사스는 이러한 제국주의적 견해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Francisco Vittoria, *De Indis recenter Inventis*, Relectio Prior, Sectionis.Ⅲ. 15.

39) Grotius, On the Law of War and Peace, Bk. Ⅱ, Chap. XXV(VIII). 외국의 주권자가 해당 국민을 억압하는 경우에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40) L. Oppenheim, *International law: A Treatise Vol.I.*- Peace, Longmans, Green and Co., p. 229.

학살이므로 인도성 원칙의 효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국제법의 상식에도 반한다. 최소한 관동대학살 시점에 국가내의 소수집단에 대한 박해와 말살을 금지하는 국제사회의 규범이 존재하였다고 여겨진다. 물론 오늘날 국제사회는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공공의 비상사태에서 최소한 공통적으로 적용할만한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Minimum Humanitarian Standards 참조).

### 4) 합병국가의 국제법상 보호의무

관동대학살과 관련해서 한일병합조약과 관련해서 검토해보자. 대한민국과 일본은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에서 한일 병탄 조약을 포함하여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일본정부는 1965년 당시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한국정부는 체결시점부터 원천적으로 무효로 보았고, 한국의 대법원은 2018년 한일병합이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밝혔다. 을사늑약이나 한일병합조약의 귀결로 병합(annexation)은 이른바 식민화의 범죄 crime of colonization)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동대학살의 책임을 논의하기 위해 병합조약의 내용을 재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병합조약도 중요한 국제법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불법적인 병합이지만 사실상 병합이 이루어졌으므로 병합(annexation) 또는 정복(subjugation)을 관철한 국가는 병합된 국가의 국민을 자국민과 동일하게 보호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를 진다. 정복국가는 새로운 국민으로서 병합된 지역 주민의 재산을 박탈하거나 국적인으로서의 보호를 방기할 수 없다는 점이다.[41] 이러한 국제법의 원칙은 한일병합조약 에서도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제6조 일본국 정부는 앞에 기록된 병합의 결과로 완전히 대한제국의 시정을 위임하여 해당 지역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대한제국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전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이 조항은 반도 거주자뿐만 아니라 관동지방으로 이주한 대한제국인도 포함할 것이다.

## 3. 제노사이드 요건에 대한 재검토

제노사이드의 요건으로 보통 보호집단(protected group), 범행(actus reus), 범의(mens rea) 세 가지를 논의하지만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 제노사이드의 주체와 부인행위를 추가해 보았다. 집단, 범행, 범의라는 요건과 관련해서 제노사이드의 요건을 다시 규정해야 한다는 흐름도 널리 감지할 수 있다.

첫째, 제노사이드 범죄의 주체에 관한 요건이다. 범죄의 주체는 자연인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는 제노사이드 범죄의 주체가 아니다. 비유적으로 국가에게 제노사이드 방지의무와 처벌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 자체가 제노사이드 범죄자가 되지는 않는다. 물론 국가는 제노사이드 범죄에 있어서 책임주체로 등장한다. 국가범죄(crime of state)라는 용어는 정치사회학적 시각에서는 통합적 실체개념으로 유용성을 갖

41) L. Oppenheim, 앞의 책, p. 398.

지만 법학적 관점은 오히려 권력자들의 음모적 범죄라는 형사적 차원(자연인)과 피해구제에 관한 책임이라는 비형사적 차원(법인)으로 구분한다. 제노사이드는 극단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책임이 발생하고, 국제적 강행규범의 위반이기 때문에 배상책임도 발생한다. 형사책임은 제노사이드 범죄의 기획과 실행에 관여한 개인들(권력자, 각료, 군경지휘관, 실행자들)에게 추궁한다. 관동대학살 과정에서 계엄을 선포하고 조선인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공직자들, 유언비어로 학살을 부추기는 언론인들, 현장에서 조선인을 제압하고 학살에 가담한 군인, 경찰, 자경단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군대나 경찰, 관료조직과 같은 국가기관이나 그 소속하는 개인의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고 민사적인 국가책임이 발생한다.[42] 국가기관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공권력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는 단체나 개인의 행위도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43] 국가기관이나 그에 속하는 개인 또는 공권력 행사 권한을 부여받는 민간인이 권한을 넘어 위법행위를 자행한 경우에도, 사실상의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경우에도 그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국가의 관여 없이 민간인이나 민간조직이 범죄를 주도적으로 저질렀다면 국가에게 책임이 귀속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국가가 통제불가능한 상황에서 민간인이 주도적으로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국가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레고리 스탠튼의 제노사이드 10단계(분류, 상징화, 차별, 비인간화, 조직화, 양극화, 준비, 박해, 절멸, 부인) 중 5단계인 조직화에서 알 수 있듯이 가해자들이 어떤 집단으로 조직되지 않으면 제노사이드가 일어날 수 없다. 자연발생적인 제노사이드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들이 일본의 군경과 자경대간의 조직적 연계활동(국가주도의 자경대조직, 자경대에 대한 무기공급과 희생대상자배분, 불처벌)을 확인해주었기 때문에 일본정부의 국가책임은 분명히 존재한다.

둘째, 제노사이드의 보호집단 또는 표적집단(targeted group)에 관한 요건이다. 표적집단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호받아야 할 집단이다. 관동대학살에서 표적집단이 된 조선인이나 중국인은 각기 민족 혹은 민족과 국적에서 일본인과 구별되기 때문에 집단살해처벌협약상 표적집단의 관문은 쉽게 통과한다. 그래도 표적집단의 재규정에 대한 담론을 간략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 렘킨의 원래 입장과 유엔의 결의[44]는 다양한 유형의 집단을 예정하였는데 집단살해처벌협약(1948)은 집단을 국민적(national), 민족적(ethnical), 인종적(racial) 또는 종교적(religious) 집단으로 한정하였다(제2조). 당시의 채택과정에서 국민적 집단, 민족적 집단, 인종적 집단, 종교적 집단은 안정적이고 귀속적인 특징을 보여주는데, 정치적 집단에서 중요한 사상이나 신념은 유동적이고 선택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본 것이다.[45] 국적이나 종교도 변경 가능한 반면, 정치적 신념은 바꾸기 어렵다. 정치적 학살이 자행될 때 가족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도륙하는 행태는 정치적 신념의 불변성과 계속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여겨진다.[46] 또한 종교적, 인종적, 민족적, 국민적 집단도 특정한 사

42) 국가책임초안 제4조.
43) 국가책임초안 제5조.
44) 총회결의는 집단에 대하여 '인종적, 종교적, 정치적 그리고 여타 집단들'로 표현하면서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다. UN General Assembly, *The Crime of Genocide*, 11 December 1946, A/RES/96.
45) William A. Schabas, "The "Odious Scourge": Evolving Interpretations of the Crime of Genocide," *Genocide Studies and Prevention: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1(2006), p. 98-99.
46) Beth van Schaack, "The Crime of Political Genocide: Repairing the Genocide

회 안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보유하기 때문에 제노사이드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치적 집단이나 정치적 집단살해가 더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캄보디아에서 자행된 대량학살이나 제주4.3사건과 같은 대학살을 제노사이드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제노사이드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지 반문한다. 제노사이드를 범죄의 극한이라는 전제 위에서 그렇게 묻는다.

집단적 제약성을 돌파하려는 다양한 제노사이드 개념들이 존재한다. genocide를 대체하거나 변형하는 개념으로 ethnocide, politicide, sociocide,[47] gendercide, democide, cultural genocide, linguistic genocide 등이다. 이러한 용어들이 모두 물리적 신체적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본에 의한 역사왜곡이나 역사교육 금지, 조선어교육 금지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시도로서 민족말살(ethnocide)이다. 이러한 규정들이 보여주는 특징, 집단의 한정성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국제형사재판소규정 제7조(인도에 반하는 범죄)에서 엿보인다.[48] 표적 집단의 한정성 문제는 몇 가지 새로운 유형의 집단을 추가함으로써 해결될 수는 없다. 표적집단은 표적으로 삼고자 하는 가해자들의 시각에서 계속 생성되고 확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어떤 사람이 어떤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점 때문에 표적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제노사이드에 해당한다.[49]

셋째. 제노사이드 행위(genocidal act)에 관한 요건이다. 제노사이드처벌협약 제2조는 1. 집단구성원의 살해 2. 집단구성원에게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해악을 가하는 행위 3. 집단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 물리적인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생활조건에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 4. 집단 안에서 출생의 방지를 의도하는 조치를 부과하는 행위 5. 집단의 아동을 다른 집단으로 강제적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제노사이드 범죄로 규정하였다. 처벌협약에서는 집단구성원의 살해만을 제노사이드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심지어 민족의 정체성을 파괴하기 위한 정책이나 소수민족에 대한 과도한 동화정책도 제노사이드의 범죄로 문제될 수 있다. 관동대학살은 본질적으로 조선민족의 구성원을 겨냥한 대규모 학살이므로 제노사이드를 인정하는 데에 난점은 없다. 다만 형사법정은 특정한 행위자를 제노사이드 범죄자로 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제노사이드 범죄의 실행행위가 문제된다. 제노사이드 범행(genocidal act)은 작위(commission)나 부작위(ommission)에 의해서 가능하다. 예컨대, 정부의 고위당국자나 민간인이 제노사이드 범죄의 계획에 관여하거나 군경의 지휘부가 대학살을 지도하거나 현장에서 학살에 관여했다면 작위에 의한 제노사이드이다. 그러나 제노사이드를 저지할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제노사이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저지하지 않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제노사이드이다.[50]

---

Convention's Blind Spot", The Yale Law Journal, Vol. 106(1997), pp. 2259-2291.

47) sociocide는 사회적 하층(장애인, 빈곤층, 집시, 부랑아)에 대한 심각한 박해와 수용 등을 의미한다.

48) 국제형사재판소규정 제7조(인도에 반한 죄) 제1항
아. 이 항에 규정된 어떠한 행위나 재판소 관할범죄와 관련하여, 정치적.인종적.국민적.민족적.문화적 및 종교적 사유, 제3항에 정의된 성별 또는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다른 사유에 근거하여 어떠한 동일시될 수 있는 집단이나 집합체에 대한 박해.

49) Thomas W. Simon, Defining Genocide, Wisconsin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15(1996), p. 251.

50) The Prosecutor v. Jean Kambanda (Judgement and Sentence), ICTR 97-23-S,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ICTR), 4 September 1998, para. 39.(iii)(ix), available at: https://www.refworld.org/cases,ICTR,3deba9124.html [accessed 23 July 2023] . 르완다 국제군사재판소는 캄반다가 르완다 수상으로서 진행중인 학살을 알고 있었고, 아동과 주민들을 위한 보호조

관동대학살에서 일본의 군대와 경찰은 적극적으로 조선인을 학살하였고 자경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심지어 조선인의 외부탈출을 막고 구출한다는 미명 아래 수용소로 나포하여 살해하거나 조선인을 자경단에게 배정하여 학살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집단살해처벌협약 제3조는 ⅰ) 집단살해 ⅱ) 집단살해를 위한 공모 ⅲ) 집단살해를 범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교사(direct and public incitement to commit genocide)ⅳ) 집단살해의 미수 ⅴ) 집단살해의 공범과 같은 제노사이드 범죄의 다양한 단계를 설정하여 각각의 관여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는 학살이 자행되거나 임박한 상황에서 증오 발언을 하거나 민족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언론인을 제노사이드 교사범으로 처벌하였다.[51]

넷째, 표적집단을 파괴하려는 의도(genocidal intent)에 관한 요건이다. 렘킨은 집단을 파괴할 의도(intent to destroy)를 확인할 수 있는 행위를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앞서 설명한 집단살해처벌협약 제3조에 반영되었다. 실제로 앞의 행위가 발생하였다면 파괴할 의도와 같은 특별한 고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없지 않다. 파괴할 의도는 매우 엄격한 주관적 요건이므로 이러한 요건은 자칫 범죄자들에게 도피구를 제시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52] 인도에 반하는 범죄의 성립에는 차별적인 의도에 입각한 공격만으로 충분하지만, 제노사이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적집단을 파괴한다는 고의가 필수적이다. 개인을 특정한 민족집단에 소속하였다는 이유로 살해하였다면 그로써 제노사이드에 해당한다. 감당할 수 없는 대지진이라는 자연적 폭력 앞에서 인간의 집단적 광기로 대칭성을 찾으려는 원시적 제사적 무의식의 폭력, 조선인을 범죄자집단이나 악의 종족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조선인의 비인간화[53]가 이루어졌다. 우발적 자연적 재난 앞에서 발생하였지만 일본의 근대사에서 축적된 조선인에 대한 혐오감정이 조선인을

---

치를 요청받았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량학살에 이르렀기 때문에 부작위(ommission)에 의한 제노사이드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51) The Prosecutor v. Nahimana, et al. (Nahimana) 2003(ICTR). [불처벌투쟁원칙(UN Principles to Combat Impunity, 2005)]을 기초한 Orentlicher는 Hate Speech를 제노사이드로 처벌한 것을 국제형사법의 확장해석이라고 비판하고, 일종의 소급처벌이라고 지적한다. 나아가 오렌트리허는 제노사이드처벌협약의 성안과정에서 참가자들이 hate speech와 direct and public incitement to commit genocide를 구별했다고 지적한다. 소련대표들이 원래 두 가지 다 처벌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하였는데, 다른 나라의 대표들은 이 제안을 거부하였다고 한다. Diane F. Orentlicher, “Criminalizing Hate Speech: A Comment on the ICTR’s Judgmentin The Prosecutor v. Nahimana, et al.”, *Human Rights Brief* Vol. 13, no. 1 (2005), pp. 1-5. 의도주의(intentionalism)에 충실할 것인가, 적절한 타이밍에 국제법의 형성발전을 옹호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52) Siswo Pramono가 “An Account of the Theory of Genocide(2002)”에서 제노사이드처벌협약이 가해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많이 만들어 놓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제노사이드 요건과 관련해서 제노사이드를 3등급으로 분류하였다. “파괴할 의도”라는 것을 과도하게 강조하면 제노사이드처벌협약이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파괴할 의도”가 분명하고 동시에 제노사이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급 제노사이드(first-degree genocide)로 규정하고, 파괴할 의도가 불분명하지만 제노사이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급 제노사이드(second-degree genocide)로, 의도나 범행이 결여되어 있지만 과오로 의해 어떤 집단이 불가피하게 파괴된 경우에는 삼급 제노사이드(third-degree genocide)로 규정한다. 삼급 제노사이드는 제노사이드를 경제발전이나 지구적 자본주의와 같은 정책의 부산물로 보기도 한다. John Ahni Schertow,“The Need to Redefine Genocide”, https://intercontinentalcry.org/the-need-to-redefine-genocide/

53) 조센징 또는 불령선인은 나치시대의 비아리안의 지칭어로서 인간쓰레기(Untermensch)나 집시, 유전병, 정치적 이단자, 동성애자 등의 지칭어인 반사회적 존재(Asoziale)와 같은 의미를 가졌다고 본다. 다른 한편, 유사시에는 전쟁에까지 내몰리기도 하였으니 조센징은 스파르타의 국가노예(heilotai)와 유사해 보이기도 한다.

상대로 폭력적으로 분출된 것이다. 조선인에 대한 극단적 차별과 증오의 에너지는 4-50년 전부터 관동대지진 직전의 3.1운동에 이르기까지 내적으로 축적되어 유대인 학살의 문화적 정치적 조건으로서 반유대주의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식민지 출신 백성[54]에 대한 차별과 혐오, 일본인의 민족적 편견, 제1차 세계대전 후 경기침체나 하층노동자간의 경쟁, 3.1운동에 대한 반발감, 다이쇼 데모크라시에 대한 불만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점도 지적된다. 일본의 내각, 일본의 군대, 경찰, 자경단에 이르기까지 고위직에서 평범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조선인에 대한 지독한 편견을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이다. 심지어 요코하마시의 조선인 중 50-90%가 학살되었다고 한다. 또한'15엔50전(주고엔고주센)'의 발음이 생사를 가르는 판별어(shibboleths)였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불행하게도 이 단어의 발음을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조선인만이 아니었다. 제노사이드를 위한 국가적 계획이나 정책은 제노사이드 범죄의 구성요소가 아니다.[55] 매우 우발적인 상황에서 대량학살이 자행된 이유는 조선인에 대한 뿌리깊은 적대적 멸시감과 관료제적 동원구조라고 여겨진다.

다섯째, 부인은 제노사이드 범죄의 요건이 아니다. 그러나 제노사이드 범죄와 같은 심각한 범죄에서는 범행전단계, 범행단계, 범행후단계에서 범죄를 부인하는 특성이 강력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범죄자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전가를 반복하는데 비해, 집단적 범죄에서는 그러한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사회대중들이 사후에 부인행위에 동참한다. 처음부터 조선인을 잠재적인 폭동범죄자로 만들고, 그들에 대한 선제적 살해를 정당방위로 주장하고, 피살자를 매장하여 은폐하고, 피해자 규모를 축소하고, 진실에 드러날 즈음에는 국가의 관여를 부인하고, 일부 민간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솜방망이 처벌로 정의를 희롱하고, 진실의 외부유출과 진실보도를 극도로 통제하고,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러한 학살이 없었다고 부인하는 패턴을 보여주었다.[56] 실제로 제노사이드를 자행한 국가로서 제노사이드 범죄를 인정하고, 나아가 국가의 법적 책임을 명료하게 인정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일본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책임을 부인하고 대학살 관련 자료를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동대학살에서 부인은 대학살 당시에도 두드러졌지만 최근 십수년 사이에는 도쿄 도지사의 부인행태가 독보적이다. 그레고리 스탠튼은 제노사이드 10단계 중 마지막 단계를 부인(denial)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열 번째 단계만이 부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단계가 학살을 정당화하고 그 범죄성이나 불법성을 사소화하는 의식을 촘촘하게 보여준다. 결국 제노사이드의 단계는 부인 의식의 발전단계이다. 그러한 의식은 무책임, 불처벌, 정당화를 추구한다.

---

54) 중국인, 사회주의자에 대한 의도적인 학살도 이루어졌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으므로 서술도 한계가 있다.

55) William Shabas, William A. Schabas, "The "Odious Scourge": Evolving Interpretations of the Crime of Genocide," *Genocide Studies and Prevention: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1(2006), p. 98.

56) 야마다 쇼지/ 이진희 옮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일본 국가와 민중의 책임, 논형, 2008, 98쪽 이하.

## 4. 한일과거사로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이 조약의 배경 아래서 체결된 1965년 한일협정의 관할범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으나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는 청구권의 협정이 이른바 불법적인 인권침해 사건들을 해결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한국 정부가 과거에 개인의 청구권 행사와 관련해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정도의 정치적 약속을 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피해자들의 개인적 청구권을 국가가 임의로 처분한다는 것은 법리상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원폭피해자, 강제징용자, 강제동원된 군인.군속, 성노예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청구권실현에 외교적 보호권 행사를 등한시한 정부당국의 행태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으로 확인되었다.[57] 나아가 대법원은 강제징용에 관여한 기업에 대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본기업의 책임을 확정하였다.[58] 관동대학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의미 있는 정부의 행동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는 헌법상 명백하고, 앞의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 피해자 및 그 후손들의 권리실현을 위해 포괄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한국정부는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거사에 대한 책임정치는 인권의 심화라기보다는 국가폭력의 재정당화에 대한 트라우마를 야기한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한일관계의 정상화라는 명분 아래 대통령과 정부는 법과 국제정의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권리를 함부로 다루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해 3자변제안을 내놓았다. 강제징용 또는 강제노동은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의 공동범죄로서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한국정부는 국제정의와 국제법에 합치하는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제범죄이자 국제불법을 자행한 당사자가 책임의 인정이나 이행을 거부하는데 대한민국의 기업에게 대신 변제하라는 것은 이상하다. 3자변제는 3자가 변제할만한 성질의 채무에만 허용된다. 그것은 보험사고에 따른 채권자대위와 같은 사인간의 채무나 불법행위를 범한 공무원이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의 변제와 같이 순전히 물적 필요의 충족이 문제되는 경우에 적합하다. 한편,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있어서 피해자가 속한 국가나 그 나라의 기업에 의한 변제는 상식에 반한다. 피해자가 속한 국가나 기업은 제3자가 아니라 피해자 측에 해당하므로 경우에 따라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을뿐,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강제징용의 피해자들이 3자 변제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는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다. 물론 인권침해 국가나 기업이 실효적 배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자력 상태라면 그 경우 제3국이나 제3국의 기업이 지원할 수는 있을 것이다. 엘살바도로의 진실위원회가 미국정부로부터 10억 달러를, 우간다 진실위원회가 포드재단과

57) 일본군위안부문제-부작위위헌확인소송(2006헌마788 2011.8.30.), 원폭피해자문제-부작위위헌확인소송(2008헌마648 2011.08.30.)

58) 미쓰비시 강제징용판결(대법원2012.5.24.선고2009다22549/68620 판결), 신일본제철(대법원2018.10.30.선고2013다61381전원합의체판결)

덴마크 다니타 그룹에서 주요재원을 지원받은 사례도 있다.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행위는 가해자의 인격특수적인 범죄이자 불법이므로 오로지 그에 대한 책임 이행은 가해자에 전속적인 사항이라고 여겨진다. 피해자중심주의와 똑같은 무게로 가해자중심주의가 존재하는 것이다. 일본의 식민지배에 미국이 사과할 수도 없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과할 수도 없다. 사과나 재발방지체제의 구축은 가해국가만이 지는 부담이다.

한국정부는 일본기업과 한국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한 기금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하자는 방안까지 제안하였다. 그러나 강제징용의 법적 책임자인 일본정부와 일본기업들이 보상금을 출연하더라도 한국측의 출연은 피해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의미할 뿐이다. 혼합해서는 안 될 일이다.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다수의 독일기업을 상대로 미국에서 진행된 강제노동 소송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설립한 <기억책임미래재단>에 독일정부(국유기업 및 공기업 포함)와 독일기업들이 각각 50억 마르크를 출연하였다. 법적 배상금이든, 도의적 자금이든, 경제적 협력자금이든 가해국가와 가해기업이 제공해야 한다.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일련의 부작위 위헌확인소송과 기업소송의 귀결은 좋지 못하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의 독도 방문 사진으로 협상책임을 날려버렸고,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일본에서 돈만 받아오면 된다는 안이함으로 혼란을 초래하였고, 현 정부는 징용 피해자에게 돈만 주면 된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관동대학살을 법률적 정치적 쟁점으로 만드는 것이 급선무로 보인다. 그 다음은 해결방안의 모색이다. 피해자들의 가상적 요구사항을 <피해자권리장전>에서 간추려 보았다. 다른 한일과거사와 마찬가지로 관동대학살의 자료 은폐 및 파괴의 중단, 자료공개, 아카이브 구축과 보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이고 연례적인 추도식과 공식적 사과의 계속, 한국 정부의 대학살 애도일 지정, 일본 사회 및 정계 지도자들의 험오발언의 중단 및 부인주의 문화 극복, 관동대학살의 피해자와 그 후예들에 대한 피해배상, 재일한국인에 대한 혐오범죄의 엄중 처벌, 재일한국인의 지위향상, 한일 양국의 화해를 위한 협력 등이다. 이 모든 사항은 하나같이 양국의 정부와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서는 이루지 못할 일들의 목록이다.

# 植民地ジェノサイド

李在承(建国大)

## 1. 植民地ジェノサイド

植民地の民のための国際法は存在しない[1]。たとえそのような国際法があるとしても、効果的な実行体制はない。もちろん、救済手段の不完全性は国際法だけに限らない。それにもかかわらず、国際法は国内法に比べれば依然として道のりが遠い[2]。「禁止されていないことは許される」といった単純な思考は、国際法では文字通り妥当ではないようである。そのため、関東大虐殺に1948年の集団殺害処罰協約は時際法として適用できないという主張や、当時大虐殺を禁止する国際規範がなかったという主流の立場[3]の前に立つと、このような「国際法的空白」が真の空白であるかを問い詰めるようにする。そして国際法の源泉と歴史に戻るようにする。国際法の裁判所または源泉は、条約法だけでなく法典に押し上げた慣習法、ひいては人間の慣行に法理的確信を与える自然法的思考（法の一般原則と学者の見解）まで含む。最初から法的確信と法的慣行、明白な適用事例のような完成態だけを国際法としていたなら、国際法は存在することもできず、国際軍事裁判所も存在しなかったのであろう。太陽の下で完成したものは存在しない。あらゆる歴史の中で存在した片鱗を発見し、発明し革新する作業だけが必要である。植民地ジェノサイドの不処罰を打破するためには、支配的解決策の下で抑圧された離脱的解決策を発見し、これを対抗的ビジョンに発展させる批判的且つ形成的な思考が必要である[4]。

報告者は関東大虐殺(Kantō Massacre)[5]を植民地ジェノサイド（colonial genocide）と呼ぶ。植民地残虐行為（colonial atrocities）という言葉は包括範囲が広いため、この言葉も広く使われている。このような言葉が広く使われているが、国際刑事法の領域において独立

1) 国際法では第３世界接近法という類型的思考が存在する。Makau Mutua & Antony Anghie,“ What is TWAIL?”, *ASIL Proceedings o Annual Meeting*, 2000, Vol. 94, pp. 31-40.

2) ハートは「国際法は本当に法なのか?(Is International law really Law?)」と質問し、実証主義的な法的観念の検証的限界の事例として国際法を議論する。H.L.A. Hart, The Concept of Law 3rd. Oxford U.P., 2012, p. 214.

3) チョン·ダウンは、関東大虐殺に対する集団殺害処罰協約の適用可能性および大虐殺当時のジェノサイド禁止規範の存在可能性を否定し、代わりに日本刑法上殺人罪を中心に日本の国家責任を認める。また、日本における国内的救済手続きの完了を韓国政府の外交的保護権行使の前提だと主張する。정다은, 관동대진재「조선인 학살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 제노사이드와 국가책임 -」(チョン·ダウン、「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に対する国際法的分析 - ジェノサイドと国家責任 -」)ソウル大学校大学院法学 修士学位論文、2021/2。

4) 離脱主義的原理については로베르토 웅거/ 이재승 옮김, 비판법학운동, 앨피(ロベルト·ウンガー/李在承訳、『批判法学運動』、アルフィー)、2019、179頁以下。

5) ボストン虐殺(Boston Massacre)は1770年3月ボストンで植民当局に抗議する市民のうち11人が英国軍の銃に撃たれて5人が死亡し、関東大虐殺は1923年関東地域一帯で少なくとも6,000人以上の朝鮮人が死亡したが、同様に「masscre」と表現される。英語の表現で多くの人が無念に殺されれば、一様に「massacre」と呼ぶようである。

した犯罪類型として確立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このような用語は植民帝国の極端な暴力に対する歴史的正義が実現していないという事情を悟らせる。同時に植民帝国の軍隊や警察が植民地（定着地）において抵抗する原住民を大量に虐殺する事件（スペインと米国のアメリカ先住民虐殺、ドイツのヘレロ-ナマ族虐殺、日本の東学農民軍虐殺）を思い浮かばせる。関東大虐殺の現場が植民地ではなく日本の心臓部という点が異例であるが、植民体制の設置と維持に関わる暴力と呼べるだろう。国際法学者たちは戦争と平和の二分法によって植民地状態を平和状態と見なしているようである。しかし、植民体制は本質的に平和状態ではなく、変形した戦争状態（強占状態）だと考える。植民地ジェノサイドあるいは植民地残虐行為のような用語は、植民地主義または帝国主義時代の野蛮をよく表しているため、これらの用語は今後も有用であろう。まず植民地支配責任と関連して現在の規範的現状を要約すると、以下の通りである。

第一に、第２次世界大戦後、東京やニュルンベルクに設置された国際軍事裁判所は1930年代後半以降、枢軸国の行為を戦争犯罪の枠内で処罰しただけで、それ以前の国際犯罪や植民地残虐行為を処罰対象として扱わなかった。特にドイツは第１次世界大戦後に植民地を喪失したため、1919年以降は植民地犯罪としてジェノサイドを犯すことはなかった。

第二に、1990年代以降設置された臨時国際軍事裁判所（ICTR、ICTY、カンボジア特別法廷）と常設国際刑事裁判所（ICC）も規定に明示された管轄犯罪のみを処罰してきた。特に国際刑事裁判所は導入過程で広範囲な支持を得るために将来の犯罪だけを処罰する割引政策を採択することで[6] はるかにさかのぼらなければならない植民地犯罪を扱うことができなくなった。

第三に、国際社会は植民地人民の自決権(right of self-determination)[7]や発展権(right to development)[8]に対する重要な決議を引き出したが、植民地犯罪に対する明示的な責任追及手段として発展させ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9]。1985年イタリアの法学者アゴ(Ago)が作成した国家責任暫定草案にしばらく存在したが、削除された植民地犯罪[10]が概念的最大値で

---

6) 国際刑事裁判所規定第24条(遡及効力禁止)
1. 何人も、この規定が発効する前の行為について、この規定による刑事責任を負わない。

7) The right of peoples and nations to self-determination(1952), A/RES/637; 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1960), A/RES/1514(XV).

8)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1986), resolution /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A/RES/41/128; The right to development(2017), resolution /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A/RES/71/192.

9) 国連総会は先住民の経済的、政治的権利に対する侵害を「人道に反する犯罪」と非難した。Question of Territories Under Portuguese Administration(1966), A/RES/2184(XXI); The Policies of Apartheid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1966)、 A/RES/2202(XXI).

10) 暫定草案第19条
② 国際共同体の根本的利益の保護のために、全体の共同体がその違反行為を犯罪と認めるほど本質的な国際義務に対する国家の侵害に起因する国際的な違法行為は国際犯罪を構成する。
③ 第2項により効力を有する国際法の規則に則り、何よりも次の行為から国際犯罪が由来する。
(a) 侵略行為の禁止など、国際平和と安全の維持に本質的に重要な国際的義務の深刻な違反
(b) 暴力による植民地支配の設置や維持の禁止など、人民の自決権の維持に本質的に重要な国際義務の深刻な違反
(c) 奴隷制、ジェノサイド、人種隔離政策の禁止など、人間の保護に本質的に重要な国際的義務の広範な規模において深刻な違反

あった。

第四に、植民地犯罪に対する民事的な国際責任を判断する強制的な国際裁判所が不在であり、仮称「植民地支配責任の清算に関する協約」に基づいた「植民責任清算委員会」のような機構もない。したがって植民地支配責任を問う過程は当事国間の交渉しか残らないが、このような交渉の結果は国際正義と法理ではなく交渉力の格差と経済的必要によって左右される。強大国は法的責任を否定し、新生国は血のついた金を経済協力と友好の証拠として受け入れる[11]。

第五に、植民帝国と原住民の武力衝突(インディオ、東学農民軍、ヘレロ原住民など)をハーグ協約の適用対象である戦争と呼ぶべきか疑問を抱かせる。むしろ植民帝国が戦争を口実に戦争の合法的イメージを簒奪し、一方的な殲滅を施行するためである。戦争という用語は基本的に武器平等の原則に基づいた正常な戦争[12]に限るべきである。圧倒的な大量破壊兵器で合法的戦争を口実に抵抗する原住民に対する殲滅(annihilation)は最初から植民地ジェノサイドに当たるからである。

英語版ウィキペディアにはKantī Massacre[13]項目が登録されているが、「ゼノサイド·リスト」(list of genocide)[14]及び「歴史の中のジェノサイド」(genocides in the history)[15]項目は数多くのゼノサイドに関する情報を伝え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関東大虐殺や南京大虐殺など日本によるゼノサイドは載っていない[16]。とにかくウィキペディアの関連項目を概観すれば、人類の歴史がジェノサイドの歴史であることが分かる。ジェノサイドは種族的区分の習俗と同時に始まったようである。クラストルは記録を持たない未開民族の間でも民族抹殺が行われたと指摘する[17]。16世紀、ヨーロッパ人の中で最も高邁な人物と言われ

---

(d) 大気や海洋における大規模な汚染の禁止など、人間環境の保護と保存に本質的に重要な国際義務の深刻な違反

④ 第2項の国際犯罪に至らない国際違法行為は、国際不法行為(an international delict)を構成する。

11) 2008年、イタリアとリビアの間で友好協力条約(Treaty of Friendship, Partnership and Cooperation Between the Italian Republic and the Great Socialist People's Libyan Arab Jamahiriya)が締結された。イタリアは毎年2億ドルずつ25年間、計50億ドルを援助の形でリビアに支給することにした。同条約は賠償(reparation)という用語を使用しておらず、条約第8条第1項により50億ドルはリビアの基盤施設建設のために投資し、イタリア企業が独占的に事業に参加するという内容であった。逆にリビア当局はリビア人がイタリアに移動できないよう国境統制義務を負わ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12) 戦争は武器対等の原則に従って試合をするように遂行しなければならず、裁判においても同様である。Huizingaのアゴン主義(agonism)思想は「ホモ·ルーデンス」、「中世の秋」に現れる。カントは「永久平和論」で和解が不可能なほど相手に過度な暴力を行使してはならないという原則と殲滅戦が禁止されるという原則を提示した。フランシス·リバーは『リバー·ユード』でカントの洞察に加え、「戦争中も神の前で人間であることを放棄しない」という人道性の原則を標榜している。東学農民戦争において牛禁峙(ウグムチ)は戦場ではなく東学農民軍を対象にした日本軍の武器性能試験場にほかならなかった。ラス·カサスの表現を借りれば、東学徒(原住民)は当然日本軍(スペイン人)に戦争を開始する権利があるが、日本軍には東学徒を殺害する権利がない。

13) https://en.wikipedia.org/wiki/Kant%C5%8D_Massacre

14)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genocides#List_of_genocides

15) https://en.wikipedia.org/wiki/Genocides_in_history

16) これはアジアのジェノサイドが研究されていないという意味ではない。*Frank Jakob(ed), Genocide and Mass Violence in Asia: Genocide and Mass Violence in the Age of Extremes Vol.1,* Walter de Gruyter, 2019.

17) 삐에르 클라스트르/변지현·이종영 옮김, 폭력의 고고학, 울력(ピエール·クラストル/ピョン·ジヒョン·イ·ジョンヨン訳、『暴力の考古学』、ウルリョク)、2002、67頁以下。

るラス·カサス(Bartolomé de las Casas)神父はラテンアメリカにおいてスペイン人が行った略奪と殺戮を原住民破壊の歴史の中で詳しく記録した[18]。最近出版された著作は、北アメリカに定着した欧州人が特に19世紀後半から20世紀初めまでわたり恣行したインディアン大虐殺(抹殺)を植民地ジェノサイド(colonial genocide)、アメリカジェノサイド(American Genocide)、アメリカホロユースト(American Holocaust)と呼ぶこともある。それはバッファロー狩りと変わらない人間狩りであった。20世紀初め、ドイツ軍隊がアフリカで先住民抵抗勢力を大規模に虐殺し、最近までドイツとナミビア間の交渉が進められてきた。オスマントルコ帝国が第1次世界大戦において1915年前後に約100万人にのぼるアルメニア人を大規模に虐殺したにもかかわらず、現在、テュルキエ政府はアルメニアのジェノサイドを公式に否定している。

ジェノサイドは犯罪中の犯罪として扱われる。アーレントが言った「法の限界を越える犯罪」である。植民地ジェノサイドは植民地残虐行為(colonial atrocities)の中で最も極端な犯罪に当たる。植民地残虐行為を植民化の犯罪(crimes of colonization)と植民体制下での犯罪(crimes under the colonial regime)に区分するとすれば、前者は植民体制を樹立するための犯罪であり、後者は植民体制を維持するための犯罪である。ジェノサイドは如何なる状況でも起こり得る。朝鮮侵略、東学農民虐殺、義兵虐殺、外交権強奪、軍隊解散、併合条約などを植民化の犯罪とするならば、3·1運動鎮圧、関東大虐殺、戦時強制動員、歴史教育禁止、韓国語使用禁止、独立運動家迫害、資源収奪、強制動員、「慰安婦」などは植民体制下での犯罪と言える。先に言及した残虐行為の中には、国際人権法または国際人道法上独自の犯罪と不法行為して接近できる事例[19]がある一方、植民体制の総体的不法性を前提にしてこそ完全にその責任を問うことができる事例もある[20]。

## 2. 人道に反する犯罪としてジェノサイド

### 1) 新造語ジェノサイド

ユダヤ系ポーランドの法律家ラファエル·レムキンが1944年『占領されたヨーロッパにおける枢軸国の支配(Axis Rule in Occupie d Europe)』という本で初めてジェノサイドという新造語を使用し、この用語はわずか2年で国連の決議文に反映されるほど大成功を収めた[21]。レムキンは1933年に国際連盟が開催した刑法統一のためのマドリード会議で、野蛮犯罪(Crime of barbarism/crime of vandalism)という代替概念も使用した。レムキンはジェ

18) Las Casas, A Short Account of the Destruction of the Indies[Brevísima relación de la destrucción de las Indias], 1542.

19) 慰安婦被害者問題解決のための外交的交渉不履行に対する違憲決定(2011. 8. 30. 2006헌마788;原爆被害者問題解決のための外交的交渉不履行に対する違憲決定(2011. 8. 30. 2008헌마648)

20) 三菱強制徴用事件(大法院2012.5.24. 2009다22549)；新日鉄強制徴用事件(大法院2018. 10. 30. 2013다61381 全員合議体判決)

21) William Schabas, *Genocide in International Law: the crimes of crimes,* Cambridge U. P., 2000, p. 25。

ノサイドを大量殺害(mass　killing)に基づく民族の即時破壊に限定せず、民族生存の本質的基礎を破壊するための一連の操縦行為までも含めた。多様な行為類型は集団殺害処罰協約第2条に概して反映された。　しかし、保護集団に関するレムキンの開放的構想は1946年国連決議[22]および集団殺害処罰協約の基礎作業にまで維持され、最終案で国民的、民族的、人種的、宗教的集団の4つに限定された。

1945年10月、ニュルンベルク国際軍事法廷で連合国検事がジェノサイド罪目で起訴したが、法廷はこれを認めなかった。連合国裁判部は当時、genocideを独立的な犯罪として受け入れず、これを概ね人道に反する罪として扱った[23]。国際社会はこのようなニュルンベルク裁判の経験と限界を考慮し、1948年に集団殺害処罰協約を採択した。このような集団殺害処罰協約を過去に発生した植民地ジェノサイドに適用できるかどうかが問題となる。集団殺害処罰協約は過去に発生した事件にも適用されるとか、将来発生する事件にのみ適用されるという規定を設けていない。適用反対論は、時際法の問題[24]で接近し、条約発効日以前又は1940年代以前に発生したジェノサイドには適用できないという。これとは異なり、集団殺害処罰協約を国際慣習法の確認条約と見る場合、ジェノサイドにも適用できるという見解もある。1946年の国連総会決議は、今後のジェノサイドの防止と処罰だけでなく、すでに発生したジェノサイドの処罰に対する関心も放棄しなかった[25]。国連体制が登場した後、最初の多国間条約である集団殺害処罰協約の適用範囲を1968年条約に関するビエンナ条約の一般規定に確定できるか疑問である[26]。むしろ1945年の国際軍事裁判所規定と同様に、過去に発生した事件を処罰するための協約と見る余地もある。1968年の公訴時効不適用協約の焦点は、かえって協約発効日以後に発生した犯罪ではなく、1945年以前に発生した犯罪に合わせられた。

世界人権宣言第11条は、行為の際に国内法や国際法上の犯罪が成立する作為と不作為が処罰できると規定しており、自由権規約（1966）第15条は同様の罪刑法定主義を宣言し（第1項）、さらに行為の際に国際社会により認められた法の一般原則に従って犯罪となる作為や不作為が処罰できることを明らかにする（第2項）。しかし、罪刑法定主義でいう法が国際

---

22) UN General Assembly, The Crime of Genocide, 11 December 1946, A/RES/96.

23) 国際軍事裁判所憲章第6条第1項(c)人道に反する犯罪：この裁判所の管轄犯罪の遂行のため又はそれに関連して戦前又は戦争中に民間人住民に対して行われた殺害、絶滅(extermination)、奴隷化、強制移送その他の非人道的な行為又は政治的、人種的又は宗教的理由に起因した迫害、ただし行為地が国内法違反したかどうかは考慮しない。

24)　条約に関するビエンナ条約第28条（条約の不遡及）別途の意思が条約から現れず、又は他に確定しない限り、その条約規定はその発効以前に当事国に関連して発生した行為や事実若しくはなくなった事態に関してその当事国を拘束しない。 国際刑事裁判所規定第24条。

25)　「人種的、宗教的、政治的およびその他の集団が全体的または部分的に破壊された時、多くの事例のジェノサイドが起きた。/ジェドサイド犯罪の処罰は国際的な関心事である(Many instances of such crimes of genocide have occurred when racial, religious, political and other groups have been destroyed, entirely or in part./The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is a matter of international concern.)”UN General Assembly, The Crime of Genocide, 11 December 1946, A/RES/96. この二つのセンテンスから過去の犯罪は後悔の対象であり、将来の犯罪だけが処罰の対象だという遮断的見解を読み取ることは難しい。

26) 条約に関するウィーン条約自体の遡及効果が問題となった。条約の議論過程で、米国代表のKierneyはウィーン条約発効日以後採択された条約に対してウィーン条約が適用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た。この問題はウィーン条約第4条に反映されたのである。

法の領域では条約法に限定されないという事情が重要である。国際法上の禁止は、国際慣習法や法の一般原則からも出てくることができる。もちろん関東大虐殺当時にジェノサイド禁止規範が条約法でなくても国際慣習法や法の一般原則や国際慣行として存在したかが重要である。国際司法裁判所の規定が裁判で国際法として考慮する基準は4つにまとめられる。紛争国によって明確に認められた規則を確立している一般的または特別な国際協約、法で受諾された一般慣行の証拠として国際慣習、文明国によって認められた法の一般原則、法則決定の補助手段としての司法判決及び帝国の最も優秀な国際法学者の学説などである(第38条)。「ジェノサイド」という新造語が1944年に作られたという事情から、ジェノサイド禁止規範が集団殺害処罰協約以前にはなかったと速断するのは誤りである。1948年に条約が採択される以前の状況は、国際法の本質により合致する国際慣習法の領域といえる。大虐殺を禁止する国際規範がすでに存在していたとすれば、これを新たにジェノサイドと呼ぶのは遡及的な再分類に過ぎないのである。今日、ジェノサイド禁止規範は強行規範(jus cogens)であることは明らかである。セルトンは強行規範の源泉を自然法、公共政策、法の一般原則、同意から求める[27]。しかし、いつから集団殺害が国際法的に禁止されたのかは明確ではない。殺人の禁止が自然法や宗教規範として現れるごとく、集団殺害禁止の源泉も自然法とみなすこともできる。このような自然法が契約的国際法に転換されていった。宗教的少数集団(プロテスタント)に対する国際的な保護は、1648年のヴェストファーレン条約で再確認される。19世紀にはヨーロッパのキリスト教国家はオスマントルコ帝国内でキリスト教徒に対する迫害が行われると、キリスト教徒の保護と少数民族の独立を支持するために人道的介入を敢行した[28]。

人道に反する犯罪の概念的起源[29]とされるアルメニア人大虐殺と関連して1915年、フランス、英国、ロシア政府はこのような大虐殺を「文明と人道に反する犯罪(crimes against civilization and humanity)」と糾弾し、大虐殺に関与した者を処罰すべきだと決議した[30]。米国側の反対により、そのような犯罪の法的内容は具体化されていないが、「戦争の張本人に対する責任と戦争の法と慣習の違反に対する刑罰の執行に関する委員会の報告書1919」は、「人道性の法(laws of humanity)」、「人道性の法の違反(offense against laws of humanity)」、「人道性の法に対する侵害(breach of laws of humanity)」という用語を繰り返し使用した。　この報告書はまた、今日の人道に反する犯罪と呼ばれるような犯罪のほとんどをリスト化した。　この報告書に参加した国々は「中央帝国とその同盟国であるトルコおよびブルガリアによる戦争は確立された戦争の法と慣習およびインドの基礎的な法に違反して野蛮で不法な手段で遂行された」と決議した。ジェノサイドは1944年以来最

27) Dinah Shelton, JUS GOGENS, Oxford U. P., 2021, p. 2.
28) Vahakn Dadrian, “Genocide as a Problem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The World War I Armenian Case and Its Contemporary Legal Ramifications”, 14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4(1989), pp. 232-242.
29) 今日の国際法で定型化した人道に反する犯罪(crime against humanity)のもう一つの起源は奴隷制である。リンカーンは1860年代の南北戦争期に奴隷制を非難しながらこの用語を使用し、それより先立って1815年頃フランス革命の波が過ぎ去った後、ヨーロッパの諸国代表は会合で奴隷制廃止と奴隷取引の禁止を促し類似した用語を使用した。
30) M. Cheriff Bassiouni, Crimes Against Humanity in International Criminal Law, Kluwer Law In ternational, 1999, p. 64.

悪の犯罪となった。ジェノサイドで処罰した実際の事例の有無で国際法が存在するかどうかを判定すれば、国際法に対する誤解を深め、国際法の形成と持続的な発展を妨げるだろう。

### 2) 国際軍事裁判所憲章上の人道に反する犯罪

[ニュルンベルク]国際軍事裁判所憲章第6条（ｃ）と極東軍事裁判所憲章第5条（ｃ）は、ともに人道に反する罪の成立時期を「戦前や戦中（beforeor during the war）」と想定することで、平和時の犯罪（peacetime crimes against humanity/peacetime genocide）まで開いている。「戦前」はどの時点まで含めるのかも問題である。日本の犯罪は第1次世界大戦の終結、満州侵略、それとも日中戦争勃発時点まで包括できるのか、あるいはドイツの犯罪はナチス体制の発足またはオーストリア合併、ポーランド侵攻まで包括するのか規定上明らかではない。条文化作業において人道に反する犯罪に対する概念的規定の課題と臨時軍事裁判所の管轄範囲に対する実用的規定課題が衝突したと言える[31]。ニュルンベルクに設置された国際軍事裁判所はナチス体制の登場時点から人道に反した罪に対して管轄権を持つという態度を示したが、実際の裁判では第二次大戦勃発以後に恣行した犯罪に限り有罪を宣告した。国際軍事裁判所の規定は人道に反する犯罪に関していくつかの概念的革新を成し遂げたが、「この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その他の犯罪の実行やその犯罪と関連して(in execution of or in connection with any crime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Tribunal)」行われた場合のみ処罰するようにした(warnexus)。これは結論的に平時ジェノサイドの排除を意味する。常設国際刑事裁判所でない臨時国際軍事裁判所としては予定された限界と考えられる。極東軍事裁判所は、人道に反する犯罪に対する尊重という面では、ニュルンベルク国際軍事裁判所に及ばなかった。軍事裁判所は概して枢軸国の犯罪を戦争犯罪であれ人道に反する犯罪であれ、いずれも処罰することができ、概して二つの犯罪を併せて起訴し有無罪を判断した。極東軍事裁判所は人道に反する犯罪（Ｃ）を独自の訴因として扱わなかった一方[32]、[ニュルンベルク]国際軍事裁判所は人道に反する罪を独立的な罪目にして有罪を宣告した[33]。ニュルンベルク国際軍事裁判所はユダヤ人に対する犯罪を人道に反する犯罪として扱ったとすれば、極東軍事裁判所はアジア人に対する民族的迫害と虐殺を人道に反する犯罪として独立して扱わなかった点も目立つ。概念的に見れば関東大震災は平時ジェノサイドや平時人道に反する罪だが、国際軍事裁判所の規定は戦争との関連性を持つ人道に反する犯罪

31) レムキンは、国際軍事裁判所規定の成案過程で平時人道に反する犯罪（平時ジェノサイド）が排除されることに非常に失望したという。William Schabas, Nuremberg and The Drafting of The Genocide Convention, *Washington University Global Studies Law Review, Vol. 21*(2022), p. 74.

32) 清水正義、「ニュルンベルク裁判の再検」、日本の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出版/서각수.신동규 옮김, 세계의 전쟁책임과 전후보상, 동북아역사재단（ソ·カクス·シン·ドンギュ訳、『世界の戦争責任と戦後補償』、東北亜歴史財団、2009、93-96頁。

33) 核心戦犯裁判の被告人のうちシュトライハーは人道に反する犯罪(30年代初めからナチス迫害に関与した扇動的な執筆)に対しては有罪が宣告され、フォン·シラフは1940年以降オーストリア·ウィーン総督としてオーストリア人およびユダヤに対する迫害などを理由に人道に反する罪として処罰された。IMT, judgment of 1 October 1946, in The Trial of German Major War Criminals.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sitting at Nuremberg, Germany, Part 22 (22nd August ,1946 to 1st October, 1946), p. 501, 512.

のみを管轄犯罪とした。1945年国際軍事裁判所憲章の人道に反する犯罪は、正確な概念定義ではなく、当面の裁判所の作業範囲の制限と解釈する。いずれにせよ1950年に国連総会が採択した「ニュルンベルク原則」は、国際軍事裁判所憲章と同様、人道に反する犯罪の戦争関連性を要件としたが、1954年の「人類の平和と安全に対する犯罪法典草案」は戦争関連性をもはや要求しなかった。

### 3) 戦争関連性と人道主義の原則

文明国によって認められた法の一般原則は、すでに1899年および1907年の戦争の法と慣習に関するハーグ条約前文のマルテンス条項（文明国家の法原則、人道主義法、公共良心からの命令）で確認されている。したがってハーグ条約上の個別的な人権保護条項だけでなく、マルテンス条項も関東大虐殺と関連して重要な考慮事項である。連合国統制委員会法律第10号（Control Council Law No.10）第6条第3項「人道に反する罪（crime against humanity）」として提示された禁止は、1863年の米軍刑法（Liber Code）、1899年のハーグ条約、1907年のハーグ条約、1864年のジュネーブ条約、1929年のジュネーブ協約に含まれている。後にニュルンベルク国際軍事裁判所はこれらの規範を国際慣習法として認めた[34]。第一次世界大戦後、パリ講和会議の過程で当時まで国際的な慣行として蓄積された禁止規範に基づいて戦争犯罪リストが作成されて提示された[35]。ところがハーグ協約を含めて国際人道法およびマルテンス条項は戦争関連性(war nexus)によって関東大虐殺のような平時ジェノサイドまたは平時人道に反する犯罪に対して適用できないという主張が堅持されている。筆者は関東大虐殺当時においても少数集団に対する国家の迫害と抹殺は国際慣習法違反であったと判断する。

まず、人道主義原則の戦争関連性のため平時に適用できないという主張は論理的に問題がある。平時に認められる自由と権利が展示にむやみに侵害されてはならないという主張はあり得るが、展示にも禁止されたことが平時に許されるという主張は過度に衒学的に見える。戦時に人権が最も深刻に侵害されるため、戦時に人権の核心的内容を保護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だが、平時には人権をさらに侵害してもいいという免許状を国際法が発給したとすれば、国際法は秩序ではなく無秩序を追求することになる。人道主義の原則は戦時状況でのみ出現するということではないため、平時にも国家公権力は人道主義の原則から脱することができない。自由権規約第4条（公共非常事態の逸脱措置）も、戦争だけでなく他の非常事態においても不可侵的な権利を明示的に列挙することで、このような保護の重複的過程を原理的に表現する[36]。1948年の集団殺害処罰協約も平時ジェノサイドを禁止対象と規定する（第1条）。こ

34) M. Cheriff Bassiouni, 前掲書、p. 71。
35) 1919 Report of the Commission on the Responsibility of the War, and on Their Punishment(excerpts), https://assets.cambridge.org/97811087/29086/excerpt/9781108729086_excerpt.pdf
36) 第四条（緊急事態下の逸脱措置）
1. 国民の生存を脅かす公共の緊急事態が発生し、また緊急事態の存在が公式に宣布された場合、加盟国は事態の緊急性に徴し、必要な限度内で、この協約により負うこととなる他の義務から逸脱する措置をとることができる。しかし、その措置は国際法によって負うべき他の義務に抵触してはならず、また人種·肌色·性別·言語·宗教·社会的出身を唯一の理由とする差別をその中に含んではならない。

の条項は当然のことを確認した規範である。一言で言えば、マルテンス条項が人道主義法（laws of humanity）を作ったのではなく、人道主義原則（principle of humanity）がマルテンス条項に反映されたのである。国際司法裁判所も人道主義原則が戦時と平時の両方に適用される法の一般原則であり、戦時より平時にはもっと厳しいという点を認めた[37]。

次に戦争関連性に基づいた主張は、平時ジェノサイドは国内政治の問題であり、国際法の領域ではないという認識を示している。しかし、平時にも深刻なレベルの人権侵害なら、国内的な問題だけに止まらない。人道的介入の問題は今日国連安保理を中心に正式化されたが、介入戦争の起源は国際法学者フランシスコ·ヴィトーリア[38]やヒューゴ·グロティウス[39]に見つけられ、19世紀以降現在まで数多くの介入事例を提示することができる。オッフェンハイムは1920年に出版された国際法（第3版）で19世紀後半、オスマン帝国のキリスト教徒迫害に対抗してヨーロッパが介入した事例を取り挙げた後、「多くの法律家は平時および戦時中（in time of peace and war）宗教的迫害と果てしない残忍な行動を中断させる目的で人道性を名分とする介入が行使される際には介入が許され、さらに介入が権利の基礎を持つ」と主張する。列強がこのような理由で過去に介入を行使したという事実は明らかである。そこで1827年革命的ギリシャとトルクの間の闘争中に行われた残忍な行動に対して世論(public opinion)が驚愕したため、英国、フランス、ロシアがこの闘争に介入した。そしてテュルキエでキリスト教徒に対する迫害を中断させるために随時介入が行われた。しかし、そのような介入を認める国際法規範が存在するかどうかについての疑問も一理ある。一方、世論と列強の態度がそのような介入を支持するという点は否定できず、恐らく介入が列強の集団的介入の形で（in the form of a *collective* intervention:原文イタリック体）行使されるという条件の下で人道性を名分とする介入（interventions in the interest of humanity）が認められるという規範を近いうちに国際法が認めるだろう」と述べた[40]。

オッフェンハイムの悩みは後に国連体制の登場で基本的に解決された。彼の悩みの重点は介入の状況的要件-禁止規範の違反-ではなく（武力）介入の方式-集団的collective-にあったと考えられる。一国の国内的政治が引き起こした集団に対する迫害が国際的事案に上昇したという点を確認した。国内の少数集団に対する迫害は概して平時ジェノサイドの形で行われる。いずれにせよ、大地震の状況で戒厳を宣布して秩序を回復するという欺瞞的名分の下、

---

37) イギリスは1946年コルフ海峡を国際水路と規定し無害通行権を主張して2隻の軍艦を派遣したが、紛争水域という立場を持つアルバニアが該当水域に機雷を設置して2隻の軍艦を破壊し多数の水兵を死亡させた。この事件にめぐり国連の勧告で英国が国際司法裁判所にアルバニアを提訴し、国際司法裁判所はアルバニアに84万4000ポンドの賠償を命じる判決を下した。国際司法裁判所はアルバニアの義務は「戦時に適用できる1907年ハーグ条約に基づくものではなく、一般的かつ広く認められた原則、例えば戦時よりも平時により厳しい人道主義の基礎的考慮（elementary considerations of humanity）に基づく。」と判決した。 Corfu Channel Case(UK v. Alb.)(Merits), 1949 ICJ Rep. 4,22(Apr. 9)。Theodor Meron, *The Humanization of International Law*, Martinus Nijhoff, 2006, p. 21.

38) ヴィトーリアはインディオ先住民統治者の専制や人身攻撃を強要する慣行を施行する場合、極悪非道な慣行を止めさせ、罪のない人を救出するために介入戦争を開始できるとした。もちろん、ラス·カサスはこの帝国主義的見解を決して容認しなかった。Francisco Vittoria, De Indis recenter Inventis, Relectio Prior, Sectionis.Ⅲ. 15.

39) Grotius, On the Law of War and Peace, Bk.Ⅱ, Chap.XXV（VIII）. 外国の主権者がその国民を抑圧する場合に介入できると主張する。

40) L. Oppenheim, *International law: A Treatise Vol.I.*- Peace, Longmans, Green and Co., p. 229.

軍隊と民間の合作で異民族を抹殺した事件に対して平時の虐殺であるため、人道性原則の効力を否認するということは国際法の常識にも反する。少なくとも関東大虐殺時点で国家内の少数集団に対する迫害と抹殺を禁止する国際社会の規範が存在したと考えられる。もちろん、今日の国際社会は戦時と平時を問わず、公共の非常事態において少なくとも共通して適用できる基準を提示している（Minimum Humanitarian Standards参照）。

### 4) 合併国家の国際法上の保護義務

関東大虐殺と関連して日韓併合条約に関して検討してみよう。大韓民国と日本は1965年6月22日の日韓基本条約において、日韓併呑条約を含め大韓帝国と日本帝国との間で締結されたすべての条約及び協定がすでに無効であることを確認した。日本政府は1965年当時無効だと解釈しているが、韓国政府は締結時点から源泉的に無効と見ており、韓国の最高裁は2018年日韓併合が根本的に無効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乙巳勒約や日韓併合条約の帰結として併合（annexation）はいわゆる植民化の犯罪（crime of colonization）に該当するため、関東大虐殺の責任を議論するために併合条約の内容を再論することが適切でないかもしれない。しかし、併合条約も重要な国際法の原則を認めているという点は注目しなければならない。不法的な併合だが、事実上併合が行われたため、併合（annexation）または征服（subjugation）を貫徹した国家は併合された国家の国民を自国民と同様に保護しなければならない国際法上の義務を負う。　征服国家は新しい国民として併合された地域住民の財産を剥奪したり国籍人としての保護を放棄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のである[41]。この国際法の原則は日韓併合条約においても次のように規定されている。「第6条日本国政府は、前記の併合の結果として、全然韓国の施政を擔任し、同地に施行する法規を遵守する韓人の身体及び財産に対し十分なる保護を与え且つ其の福利の増進を図るべし。」　この条項は半島居住者だけでなく関東地方に移住した韓人も含むべきであろう。

## 3. ジェノサイド要件の再検討

ジェノサイドの要件として、普通保護集団（protected group）、犯行（actus reus）、犯意（mens rea）の3つを議論されるが、責任問題と関連してジェノサイドの主体と否認行為を追加してみた。集団、犯行、犯意という要件に関連してジェノサイドの要件を再規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傾向も広く感知できる。

第一に、ジェノサイド犯罪の主体に関する要件である。犯罪の主体は自然人だけが可能であるため、国家はジェノサイド犯罪の主体ではない。比喩的に国家にジェノサイド防止義務と処罰義務があるが、それを履行しなかったからといって国家自体がジェノサイド犯罪者にはならない。もっとも国家はジェノサイド犯罪において責任主体として登場する。国家犯罪（crime of state）という用語は、政治·社会学的観点では統合的実体概念で有用性を持つ

41) L. Oppenheim, 前掲書、p.398。

が、法学的観点はむしろ権力者の陰謀的犯罪という刑事的次元（自然人）と被害救済に関する責任という非刑事的次元（法人）に分けられる。ジェノサイドは極端な犯罪であるため刑事責任が発生し、国際的強行規範の違反であるため賠償責任も発生する。刑事責任はジェノサイド犯罪の企画と実行に関わった個人（権力者、閣僚、軍警指揮官、実行者）に追及する。関東大虐殺の過程で戒厳を宣布し朝鮮人に対するデマを流布した公職者、デマで虐殺を煽ったジャーナリスト、現場で朝鮮人を制圧し虐殺に加担した軍人、警察、自警団員がこれに該当する。軍隊や警察、官僚組織のような国家機関やその所属する個人の行為は国家の行為と見なされ民事的な国家責任が生じる[42]。国家機関でなくても、政府の公権力を行使する権限を与えられた団体や個人の行為も国際法上、国家の行為とみなされる[43]。国家機関やそれに属する個人または公権力行使権限を与えられた民間人が権限を越えて違法行為を行った場合にも、事実上の指示や統制を受けた場合にも、その行為は国際法上国家の行為とみなされる。国家の関与なしに民間人や民間組織が犯罪を主導的に犯したとすれば、国家に責任が帰属しないこともありうる。例えば、国家が統制不可能な状況で民間人が主導的にそのような犯罪を犯したとすれば、国家の責任が発生しないこともありうるのである。グレゴリー·スタントンのジェノサイド10段階（分類、象徴化、差別、非人間化、組織化、両極化、準備、迫害、絶滅、否認）のうち5段階である組織化からも分かるように加害者がある集団で組織されなければジェノサイドは起きられない。自然発生的なジェノサイドは存在しない。これまで出た研究結果が、日本の軍警と自警隊間の組織的連携活動（国家主導の自警隊組織、自警隊に対する武器供給と犠牲対象者の配分、不処罰）を確認してきたため、日本政府の国家責任は明らかに存在する。

第二に、ジェノサイドの保護集団または標的集団(targeted　group)に関する要件である。標的集団は、別の言葉で表現すれば保護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集団である。関東大虐殺で標的集団になった朝鮮人や中国人は、それぞれ民族あるいは民族と国籍から日本人と区別されるため、集団殺害処罰協約上、標的集団の関門は簡単に通る。それでも標的集団の再規定に対する談論を簡略に検討する必要はある。レムキンの本来の立場と国連の決議[44]じゃ様々なタイプの集団を予定しているが、集団殺害処罰協約(1948)は集団を国民的(national)、民族的(echnical)、人種的(racial)または宗教的(religious)集団に限定した(第2条)。当時の採択過程で国民的集団、民族的集団、人種的集団、宗教的集団は安定し且つ帰属的な特徴を現しているが、政治的集団で重要な思想や信念は流動的で選択的な特徴を持つと見たのである[45]。国籍や宗教も変更可能な反面、政治的信念を変えることは難しい。政治的虐殺が恣行された時、家族を老若男女問わず屠殺する行動は、政治的信念の不変性と継続性を反映したものと考えられる[46]。また宗教的、人種的、民族的、国民的集団も特定の社会の中で政治的影響力

42) 国家責任草案第4条。
43) 国家責任草案第5条。
44)　総会決議は集団に対して「人種的、宗教的、政治的そしてその他の集団」と表現し、非常に開放的な態度を取った。UN General Assembly, *The Crime of Genocide*, 11 December 1946, A/RES/96。
45) William A. Schabas, "The “Odious Scourge”: Evolving Interpretations of the Crime of *Genocide," Genocide Studies and Prevention: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1(2006), p. 98-99.
46) Beth van Schaack, “The Crime of Political Genocide: Repairing the Genocide Convention's Blind Spot”, The Yale Law Journal, Vol. 106(1997), pp. 2259-2291.

を保有するためジェノサイドが発生する。したがって、政治的集団や政治的集団殺害がより根本的だと言える。しかもカンボジアで行われた大量虐殺や済州4·3事件のような大虐殺をジェノサイドと呼ばなければ、一体何のためにジェノサイドという用語を使おうとしているのか反問する。ジェノサイドを犯罪の極まりという前提の上に立てば、そう問わざるをえない。集団的制約性を突破しようとする多様なジェノサイド概念が存在する。genocideを代替または変形する概念であり、ethnocide，politicide，sociocide[47]，gendercide，democide，cultural genocide，linguistic genocideなどである。これらの用語がすべて物理的、身体的な死を意味するわけではない。日本による歴史歪曲や歴史教育禁止、朝鮮語教育禁止は韓国人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抹殺しようとする試みとして民族抹殺（ethnocide）に当る。これらの規定が示す特徴、集団の限定性に対する批判的考え方が国際刑事裁判所規定第7条（人道に反する犯罪）からうかがえる[48]。標的集団の限定性問題は、いくつかの新しい類型の集団を追加することで解決することはできない。標的集団は標的にしようとする加害者の観点から続けて生成され、確定されるためである。結局、ある人がある集団の構成員という点で標的になるならば、それがまさにジェノサイドに当する[49]。

第三に、ゼノサイド行為（genocidalact）に関する要件である。ジェノサイド処罰協約第2条は、1）集団構成員の殺害　2）集団構成員に深刻な身体的または精神的危害を加える行為　3）集団構成員の全部または一部物理的破壊を招く目的で生活条件に意図的に害を及ぼす行為　4）集団内での出生防止を意図する措置を課す行為　5）集団の児童を他の集団へ強制的に移動させる行為をジェノサイド犯罪と規定した。処罰協約では集団構成員の殺害だけをジェノサイドと規定しないという点に留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甚だしくは民族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破壊するための政策や少数民族に対する過度な同化政策もジェノサイドの犯罪として問題になりかねない。　関東大虐殺は本質的に朝鮮民族の構成員を狙った大規模虐殺であるため、ジェノサイドを認めるのに難点はない。ただ、刑事法廷は特定の行為者をジェノサイド犯罪者と規定すべきであるため、ジェノサイド犯罪の実行行為が問題となる。ジェノサイド犯行（genocidal　act）は作為（commission）や不作為（ommission）によって可能になる。例えば、政府の高位当局者や民間人がジェノサイド犯罪の計画に関わったり、軍警の指揮部が大虐殺を指導したり現場で虐殺に関与したとすれば、作為によるジェノサイドになるわけである。しかし、ジェノサイドを阻止する責任のある地位にある者が、ジェノサイドが発生しているという事情を知りながら阻止しなかったとすれば、不作為によるジェノサイドに当る[50]。関東大虐殺で日本の軍隊と警察は積極的に朝鮮人を虐殺し、自警団の活動を支援

47) sociocideは社会的下層(障害者、貧困層、ジプシー、浮浪児)に対する深刻な迫害と受容などを意味する。

48) 国際刑事裁判所規程第7条（人道に反する罪）第1項
ア.この項に規定されたいかなる行為や裁判所管轄犯罪に関して、政治的·人種的·国民的·民族的·文化的および宗教的理由、第3項に定義された性別または国際法上許されないものとして普遍的に認められる他の理由に基づいて何らかの同一視されることができる集団または集合体への迫害。

49) Thomas W. Simon, Defining Genocide, Wisconsin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15(1996), p. 251.

50) The Prosecutor v. Jean Kambanda (Judgement and Sentence), ICTR97-23-S,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ICTR), 4 September 1998, para. 39.(ⅲ), available at:https://www.refworld.org/cases,ICTR,3deba9124.html [accessed 23 July 2023]. ルワンダ国際軍事裁判所は、カンバンダがルワンダ首相として進行中の虐殺のことを知っており、児童と住民のための保護措置を要請されながらも何の措置も取らず大量虐殺に至ったため、不作為によるジェノサイド

し、さらに朝鮮人の外部脱出を防ぎ救出するという美名の下、収容所に拿捕して殺害したり朝鮮人を自警団に割り当て虐殺するようにした。しかも、集団殺害処罰協約第3条は、ⅰ）集団殺害、ⅱ） 集団殺害のための共謀、ⅲ） 集団殺害を犯すための直接的かつ公開的な教師（direct and public incitement to commit genocide）、ⅳ）集団殺害の未遂 ⅴ）集団殺害の共犯などのジェノサイド犯罪の様々な段階を設定し、それぞれの関与行為を処罰している。ルワンダ国際刑事裁判所は虐殺が行われたり差し迫った状況で憎悪発言をしたり民族イデオロギーを伝播するジャーナリストをジェノサイド教唆犯として処罰した[51]。

第四に、標的集団を破壊しようとする意図（genocidal intent）に関する要件である。レムキンは集団を破壊する意図(intent to destroy)を確認できる行為を5つ提示したが、それは前述の集団殺害処罰協約第3条に反映された。実際、先の行為が発生したなら、破壊する意図のような特別な故意を追加で要求する必要はないという見解もなくはない。破壊する意図は非常に厳格な主観的要件であるため、このような要件はややもすれば犯罪者に逃避先を提示する公算が大きいからである[52]。人道に反する犯罪の成立には差別的な意図に即した攻撃だけで十分であるが、ジェノサイド犯罪が成立するためには標的集団を破壊するという故意は欠かせない。個人を特定の民族集団に所属したという理由で殺害した場合、それをもってジェノサイドと当ると言える。手に負えない大地震という自然的暴力の前で、人間の集団的狂気で対称性を見つけようとする原始的かつ祭祀的は無意識の暴力、朝鮮人を犯罪者集団や悪の種族にする過程で、朝鮮人に対する非人間化[53]が行われた。偶発的な自然災害の前で発生したが、日本の近代史で蓄積された朝鮮人に対する嫌悪感情が朝鮮人を対象として暴力的に噴出したのである。朝鮮人に対する極端な差別と憎悪のエネルギーは4~50年前から関東大震災直前の3·1運動に至るまで内的に蓄積され、ユダヤ人虐殺の文化的·政治的条件として反ユダヤ主義と類似したものと見ることもできる。植民地出身の民[54]に対する差別と嫌悪、日

---

が成立すると判示した。

51) The Prosecutor v. Nahimana, et al. (Nahimana) 2003(ICTR)。「不処罰闘争原則（UN Principles to Combat Impunity、2005）」に基づOrentlicherは、Hate Speechをジェノサイドとして処罰したことを国際刑事法の拡張解釈だと批判し、一種の遡及処罰だと指摘する。さらに、オレントリッヒャーはジェノサイド処罰協約の成案過程で参加者がhate speechとdirect and public incitement to commit genocideを区別したと指摘する。ソ連代表らはもともと二つとも処罰しようと何度も提案していたが、他国の代表らはこの提案を拒否したという。Diane F. Orentlicher, "Criminalizing Hate Speech: A Comment on the ICTR's Judgmentin The Prosecutor v. Nahimana, etal.", *Human Rights Brief* Vol.13, no.1 (2005), pp.1-5. 意図主義に忠実であるか、適切なタイミングで国際法の形成発展を擁護するかの問題である。

52) Siswo Pramonoが「An Account of the Theory of Genocide(2002)」でジェノサイド処罰協約が加害者が抜け出す穴を多く作っておいたという点を指摘し、ジェノサイド要件と関連してジェノサイドを3等級に分類した。「破壊する意図」ということを強調しすれば、ジェノサイド処罰協約が働くことが難しいという点である。「破壊する意図」が明らかであると同時にジェノサイド犯行が行われた場合には一級ジェノサイド(first-degree genocide)と規定し、破壊する意図が不明であるが、ジェノサイド犯行が行われた場合には二級ジェノサイド(second-degree genocide)と、意図や犯行に欠けているものの過誤によりある集団がやむを得ず破壊された場合には三級ジェノサイド(third-degree genocide)と規定する。三級ジェノサイドはジェノサイドを経済発展や地球的資本主義のような政策の副産物とみなすこともある。John Ahni Schertow, “The Need to Redefine Genocide”, https://intercontinentalcry.org/the-need-to-redefine-genocide/

53) 朝鮮人または不逞鮮人はナチス時代の非アリアンを指す言葉として人間ゴミ（Untermensch）やジプシー、遺伝病、政治的異端者、同性愛者などを指す反社会的存在（Asoziale）と同様の意味を持っていると考えられる。一方、有事の際には戦争にまで追い込まれたりもしたため、朝鮮人はスパルタの国家奴隷(heilotai)と似ているようにも見える。

本人の民族的偏見、第1次世界大戦後の景気低迷や下層労働者間の競争、3.1運動に対する反発心、大正デモクラシーに対する不満要因が複合的に作用したという点も指摘される。日本の内閣、日本の軍隊、警察、自警団に至るまで高位職から平凡な人に至るまで朝鮮人に対する激しい偏見で武装していたため、そのようなことが可能だったのである。さらに横浜市の朝鮮人のうち50~90%が虐殺されたという。また、「15円50銭」の発音が生死を分ける判別語（shibboleths）だったという点も注目すべきである。不幸にもこの単語の発音を完璧に駆使できない人は朝鮮人だけではなかった。ジェノサイドのための国家的計画や政策は、ジェノサイド犯罪の構成要素ではない[55]。非常に偶発的な状況で大量虐殺が恣行われた理由は、朝鮮人に対する根強い敵対的蔑視感と官僚制的動員構造だと考えられる。

第五に、否認はジェノサイド犯罪の要件ではない。しかし、ジェノサイド犯罪のような深刻な犯罪では、犯行前段階、犯行後段階で犯罪を否認する特性が強く現れる。一般的に犯罪者は自分の行為を正当化する過程で犯行を否認したり責任転嫁を繰り返すのに対して、集団的犯罪ではそのような犯罪に直接加担しなかった社会大衆が事後に否認行為に参加する。最初から朝鮮人を潜在的な暴動犯罪者にし、彼らに対する先制的殺害を正当防衛と主張し、被殺者を埋葬して隠蔽し、被害者の規模を縮小し、真実が明らかになる頃には国家の関与を否定し、一部の民間人に責任を転嫁して軽い処罰で正義を惑わせ、真実の外部への流出と報道を極度に統制し、長い時間が経った後にはその虐殺はなかったと否認するパターンを見せた[56]。実際、ジェノサイドを行った国家としてジェノサイド犯罪を認め、ひいては国家の法的責任を明瞭に認めた事例は見当たらない。日本は依然として公式的に責任を否認し、大虐殺関連資料を破棄したという。関東大虐殺で否認は大虐殺当時にも目立ったが、ここ十数年の間には東京都知事の否認行動が独歩的である。グレゴリー·スタントンは、ジェノサイド10段階のうち最後の段階を「否認（denial）」と想定している。しかし、10番目の段階だけが否認を示すのではなく、すべての段階が虐殺を正当化し、その犯罪性や不法性を些細化する意識を詳細に示している。結局、ジェノサイドの段階は否認意識の発展段階である。そのような意識は無責[57]　中国人、社会主義者に対する意図的な虐殺も行われたが、この部分については十分に検討していないため、叙述にも限界がある。 任、不処罰、正当化を追求する。

---

54) 朝鮮人または不逞鮮人はナチス時代の非アリアンを指す言葉として人間ゴミ（Untermensch）やジプシー、遺伝病、政治的異端者、同性愛者などを指す反社会的存在（Asoziale）と同様の意味を持っていると考えられる。一方、有事の際には戦争にまで追い込まれたりもしたため、朝鮮人はスパルタの国家奴隷(heilotai)と似ているようにも見える。

55) 朝鮮人または不逞鮮人はナチス時代の非アリアンを指す言葉として人間ゴミ（Untermensch）やジプシー、遺伝病、政治的異端者、同性愛者などを指す反社会的存在（Asoziale）と同様の意味を持っていると考えられる。一方、有事の際には戦争にまで追い込まれたりもしたため、朝鮮人はスパルタの国家奴隷(heilotai)と似ているようにも見える。

56) 朝鮮人または不逞鮮人はナチス時代の非アリアンを指す言葉として人間ゴミ（Untermensch）やジプシー、遺伝病、政治的異端者、同性愛者などを指す反社会的存在（Asoziale）と同様の意味を持っていると考えられる。一方、有事の際には戦争にまで追い込まれたりもしたため、朝鮮人はスパルタの国家奴隷(heilotai)と似ているようにも見える。

57) 朝鮮人または不逞鮮人はナチス時代の非アリアンを指す言葉として人間ゴミ（Untermensch）やジプシー、遺伝病、政治的異端者、同性愛者などを指す反社会的存在（Asoziale）と同様の意味を持っていると考えられる。一方、有事の際には戦争にまで追い込まれたりもしたため、朝鮮人はスパルタの国家奴隷(heilotai)と似ているようにも見える。

## 4. 日韓過去史としての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事件

1951年の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とこの条約の背景の下で締結された1965年の日韓協定の管轄範囲について多くの論議が提起されたが、2005年の官民合同委員会は、請求権の協定がいわゆる違法な人権侵害事件を解決していないと判断した。ただ、韓国政府が過去に個人の請求権行使に関連して外交的保護権を行使しないという程度の政治的約束をしたようだ。いずれにせよ、重大な人権侵害事件の被害者の個人的請求権を国家が任意に処分することは法理上不可能である。　したがって、原爆被害者、強制徴用者、強制動員された軍人・軍属、性奴隷の被害者が受けた被害は請求権協定によって解決されず、被害者の請求権の実現に外交的保護権の行使を怠った政府当局の行為は憲法裁判所によって違憲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た。[58]　さらに、最高裁は強制徴用に関与した企業に対する被害者らの損害賠償訴訟で日本企業の責任を確定した。[59]　関東大虐殺については、法的にも政治的にも意味のある政府の行動が全くなかった。　しかし、重大な人権侵害を受けた国民を保護する国家の義務は憲法上明らかであり、先の事件と同様に長い年月が経過し、被害者及びその子孫の権利実現のために包括的な措置が必要な状況であるため、韓国政府は外交的保護権を行使する義務がある。

しかし、現在韓国で行われている過去史に対する責任政治は、人権の深化というよりは、国家暴力の再正当化に対するトラウマを引き起こす。国際的なレベルでは、日韓関係の正常化という名目で、大統領と政府は法と国際正義を無視したまま、被害者の権利を軽視しているからだ。最近、政府は強制徴用被害者のために3者弁済案を出した。強制徴用または強制労働は日本政府と日本企業の共同犯罪であり、人道に対する犯罪に該当するため、韓国政府は国際正義と国際法に合致する解決策を見つけなければならない。国際犯罪であり、国際不法を犯した当事者が責任の認識や履行を拒否しているのに、韓国の企業に代わりに弁済を求めるのはおかしい。3者弁済は、3者が弁済できる性質の債務にのみ許される。　それは、保険事故による債権者代位のような　私人間の債務や、違法行為を犯した公務員が弁済能力がない場合の国家の弁済のように、純粋に物的ニーズの充足が問題となる場合に適している。一方、国際人道法に違反した重大な人権侵害行為において、被害者が属する国やその国の企業による弁済は常識に反する。被害者が属する国や企業は、第三者ではなく被害者側に該当するため、場合によっては被害者を支援することはできるが、日本政府や日本企業の債務を代わりに弁済することはできない。　したがって、強制徴用被害者が第三者弁済に同意しないという意思表示は最初から必要ない。もちろん、人権侵害国や企業が実効的な賠償ができないほど無力な状態であれば、その場合、第3国や第3国の企業が支援することはできるだろう。エルサルバドルの真実委員会が米国政府から10億ドルを、ウガンダの真実委員会が

58) 日本軍慰安婦問題・不作為違憲確認訴訟(2006憲馬788　2011.8.30.)、原爆被害者問題・不作為違憲確認訴訟(2008憲馬648　2011.08.30.)

59) 三菱強制徴用判決(最高裁2012.5.24.判決2009ダ22549/68620判決)、新日本製鐵(最高裁2018.10.30.判決2013ダ61381全員合意体判決)

フォード財団とデンマークのダニータグループから主要財源を支援された事例もある。国際人道法の重大な違反行為は加害者の人格特殊的な犯罪であり違法であるため、それに対する責任履行はもっぱら加害者に専属的な事項であると考えられる。被害者中心主義と同じ重さで加害者中心主義が存在するのである。日本の植民地支配にアメリカが謝罪することもできず、韓国の大統領が謝罪することもできない。謝罪や再発防止体制の構築は加害国だけが負うべき負担である。

韓国政府は、日本企業と韓国企業が共同で拠出した基金で被害者に補償する案まで提案した。　しかし、強制徴用の法的責任者である日本政府と日本企業が補償金を拠出しても、韓国側の拠出は被害者に対する人道的支援を意味するだけだ。混同してはならないことだ。強制労働被害者が多数のドイツ企業を相手に米国で進行中の強制労働訴訟を中止することを条件に設立した「記憶責任未来財団」に、ドイツ政府(国有企業及び公営企業を含む)とドイツ企業がそれぞれ50億マルクを拠出した。法的賠償金であれ、道義的資金であれ、経済協力資金であれ、加害国と加害企業が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2011年、李明博政府から始まった一連の不作為違憲確認訴訟と企業訴訟の帰結は良くない。李明博政府は大統領の独島訪問の写真で交渉責任を放棄し、朴槿恵政府は2015年、慰安婦被害者のために日本からお金だけもらえばいいという安易さで混乱を招き、現政権は徴用被害者にお金だけあげればいいという認識を示した。

関東大虐殺を法的・政治的な争点にすることが急務と思われる。その次は解決策の模索である。被害者たちの仮想的な要求を「被害者権利章典」から要約してみた。他の日韓過去史と同様に、関東大震災の資料隠蔽及び破壊の中止、資料公開、アーカイブの構築と保存、日本政府の公式的で年次的な追悼式と公式的な謝罪の継続、韓国政府の大虐殺哀悼日の指定、日本社会及び政界指導者の嫌韓発言の中止及び否定主義文化の克服、関東大虐殺の被害者とその子孫に対する被害賠償、在日韓国人に対する嫌韓犯罪の厳重処罰、在日韓国人の地位向上、日韓両国の和解のための協力などである。これらはすべて、両国の政府と市民社会が積極的に参加しなければ成し遂げられないことのリストである。

국제학술심포지엄
관동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 100년: 진실·책임· 기억

# 난징사건과 관동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을 연결시켜 생각하다.

**사이토 가즈하루(斎藤一晴,** 일본후쿠시대)

# 난징사건과 관동대지진 때의 조선인·중국인 학살을 연결시켜 생각하다

## - 역사 인식·국제법·역사 대화를 단서로 -

사이토 가즈하루(齋藤一晴, 일본복지대)[1)]

## 머리말

심포지엄의 제2부 주제는 '책임'이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이란 역사에 대한 것으로, 현재 관동대지진에서 학살당한 피해자와 유족, 그리고 본 보고에서 주로 다루는 난징사건의 희생자와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가라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일본 역사학에서 난징사건에 관한 연구는 이미 상당한 연구성과를 축적해 왔으며,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학살은 없었다. 혹은 있었다고 해도 대단한 일은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정치가와 연구자, 서적의 간행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그러한 역사수정주의에 어떻게 대치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간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같은 조기 교육 단계부터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어 있다.

본 보고는 다음 세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다룬다.

① 왜 지금 난징사건인가? 관동대지진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② 난징사건은 어떻게 처벌되었고, 현재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가?

③ '책임'과 마주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가?

올해는 관동대지진으로부터 100년임과 동시에 일중평화우호조약이 조인된 지 45년의 전환점이 되는 해이다. 동아시아가 경험한 전쟁,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100년을 국경을 초월하여 검토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본 보고에서는 난징대학살이 아니라 난징사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것은 학살을 부정하거나 과소평가하기 때문이 아니라, 난징에서 발생한 중국 측의 피해는 학살에 그치지 않고 재산의 파괴, 가족의 이산, 여성에 대한 강간, 방화 등 다방면에 이른다. 그것들은 일본이 전쟁에 패한 후에도 중국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생활을 고통스럽게 한 큰 요인이다. 그러므로 학살뿐 아니라 난징에서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보여

1) 사이토 가즈하루 : 1975년, 야마가타현 출생. 박사(사학·메이지대학). 아이치현에 있는 일본복지대학에서 역사학 및 사회과 교육법 등의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전문 분야는 동아시아 근현대사·역사교육. 구체적으로는 한중일공동역사교재의 제작, 활용과 같은 역사 대화. 일본과 중국, 한국과 일본의 수업교류 등을 통해 전쟁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지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과교육에서 아이들의 행복을 어떻게 가르쳐 왔는지, 그리고 중일전쟁 때 화북(華北)에서 일본어 교육의 실상과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는 총칭으로, 또 일본에서 난징사건 연구의 도달점을 보여주는 역사용어로 난징사건을 사용한다.

## 1. 왜 난징사건과 관동대지진 때의 조선인·중국인 학살을 연결시켜 생각하는가?

관동대지진과 조선인·중국인 학살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난징사건을 취급하는 데 약간 위화감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아래에서 드는 몇 가지 이유에서 현재까지 계속되는 역사 인식의 과제가 공통으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난징사건과 관동대지진을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도 소중한 것이 아닐까?

① 난징사건과 마찬가지로 관동대지진 때 중국인이 학살되었다. 그 수는 700명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공통점은 양쪽 모두 군과 경찰 등의 지시로 학살이 이루어진 점이다. 또 관동대지진 때의 학살사건이라고 하면, 조선인에 대한 잔학행위를 취급하는 기회나 보도, 간행된 서적, 교과서 기술 등이 많은 것으로 생각한다. 중국인의 학살에 대해서도 새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1923년은 한국병합으로부터 13년째이며,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1937년에 난징사건이 발생했다. 요컨대 한국병합으로부터 약 30년 후에 난징사건이 일어난 것인데, 30년이라고 하면 1세대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관동대지진 당시의 수상은 야마모토 곤베(山本権兵衛, 海軍兵学寮 졸업·1877년 임관), 육군대신은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 육군사관학교 구[舊] 8기·1886년 임관), 해군대신은 다카라베 다케시(財部彪, 해군병학교 15기·1899년 졸업), 외무대신은 이주인 히코키치(伊集院彦吉), 사법대신은 히라누마 기이치로(平沼騏一郎), 내무대신은 고토 신페이(後藤新平)이다. 그들은 러일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제1차 세계 대전 때 유럽 전선에서 나타난 전쟁 스타일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채, 조선반도와 중국에의 침략, 불평등조약의 체결 등을 추진했던 세대에 해당한다. 또 제1차 세계 대전 후의 세계적인 군축에 불만을 품으면서 제1선에서 물러난 자도 적지 않다.

등 뒤에서 그들을 보며 정치와 군사, 외교 등을 배우고 무대에 등장하는 것이 난징사건에 참가하는 부대의 장관(將官)들이다. 난징사건이 일어난 1937년 1월 당시는 제1차 고노에(近衛) 내각인데, 육군대신이 스기야마 하지메(杉山元, 육군사관학교 12기·1901년 임관), 이타가키 세이시로(板垣征四郎, 동 16기·1904년 임관), 해군대신이 요나이 미쓰마사(米內光政, 해군병학교 29기·1901년 졸업)이다.[2] 또 야마모토 내각에서 사법대신이었던 히라누마 기이치로는 제1차 고노에 내각을 이어받아, 1939년 1월부터 내각총리대신이 되

2) 도쿄재판에서 난징사건과 관련하여 사형된 마쓰이 이와네는 9기, 난징군사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다니 히사오(谷寿夫)는 15기이다. 그리고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国昭)는 12기, 우메즈 요시지로(梅津美次郎), 나카시마 게사고(中島今朝吾, 제16사단 사단장)는 15기, 오카무라 야스지(岡村寧次)와 도이하라 겐지(土肥原賢二)는 16기, 도조 히데키(東条英機)는 17기, 아나미 고레치카(阿南惟幾)와 야마시타 도모유키(山下泰文)는 18기이다.

었다. 그러나 그해 유럽에서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자. “유럽 정세는 복잡기괴하다”라고 발언하며 취임 반년여 만에 정권을 내던지고 총사직해 버린다.

이렇게 한국병합에서 난징사건까지 약 30년은 일본군이 조선반도에서 중국으로 침략을 확대해 나가는 과도기, 말하자면 제국 일본으로서의 자국 인식, 아시아관을 형성해 나가던 시기에 해당한다.

제1차 세계 대전이라는 세계 규모의 총력전체제를 몸소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에서 나타난 전술과 전략, 사회의 변화, 혹은 전쟁 위법화 체제의 구축이라는 시대의 조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러일전쟁과 같이 희생을 전제로 한 작전, 부족한 국제법 인식, 편협한 아시아관 등 일본군의 특징은 계속되고 있어, 1923년과 1937년은 공통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다.[3)]

③ 관동대지진 때의 조선인·중국인 학살과 난징사건에 대해 역사수정주의에 입각한 역사 인식을 발언, 피력하는 연구자, 출판물 등은 현재도 존재한다. 또 그런 역사를 역사교과서에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는 오랫동안 논의되었는데, 이에나가(家永) 교과서소송으로 대표되듯이 재판으로도 번졌다. 역사 인식이 문제가 되어, 관계국에서 국경을 초월하여 내셔널리즘을 자극하여, 대립의 장으로 자리매김되는 일이 적지 않았던 점도 공통된다.

④ 난징사건은 전후에 자국민이 자국민(난징전투에 관련된 당사자들)을 처벌한 일이 없다.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져, 세대를 초월하여 사실(史實)에 ‘뚜껑’을 덮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때문에 국민의 기억이 될 수 없었다. 이것은 관동대지진 때의 조선인과 중국인 학살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어떻게 처벌되었는가? 국제법에의 영향

난징사건은 국제법에서 어떻게 처벌되었을까? 도쿄재판(극동국제군사재판)을 사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① 국제법이 전쟁범죄를 처벌할 때 남긴 성과와 특징, 과제와 한계를 정리함으로써 현재의 과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점. ② 역사수정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 중에는 재판과정과 판결 내용의 일부를 비판적으로 문제로 삼음으로써 난징사건 전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어떻게 부정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난징사건뿐만 아니라 도쿄재판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측면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도쿄재판은 1946년 5월부터 48년 11월에 연합국에 의해 이루어진 재판인데,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했다. 그 특징과 한계로 일본 역사학에서 공유되어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특징 … ① ‘통례의 전쟁범죄’뿐만 아니라, 종전에는 국제법의 개념으로 정착해 있지 않았던 ‘평화에 대한 죄’, ‘인도에 대한 죄’를 추가한 것. 이것은 「집단 살해죄의 방지 및 처

3) 일본군의 군사 사상의 연속성·변화에 대해서는 山田朗, 『近代日本軍事力の研究』(校倉書房, 2015년)과 동, 『軍備拡張の近代史　日本軍の膨張と崩壊』(吉川弘文館, 1997년) 등을 참조할 것.

벌에 관한 조약」과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에 대한 시효 부적용 조약」 등의 성립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며, 1967년 5월에 열린 베트남전쟁범죄국제법정(러셀 법정)에 대표되듯이 권력의 기반을 갖지 않는 지식인과 시민에 의해 이들 이념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4)]

또 현재 헤이그 상설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 범죄, 인도에 대한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의 4가지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다는 것이 로마규정에 적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침략범죄란 '평화에 대한 죄'에 상당하는데. 도쿄재판의 경험이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다만, 로마규정의 가맹국에만 적용되고, 비가맹국에는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과제도 함께 가지고 있다.[5)]

② 국가가 아니라 개인의 전쟁범죄 책임을 물어 처벌이 이루어진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피해자의 존엄 회복을 의식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는 2000년에 이루어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취급한 민중법정인 여성국제범죄법정에서 쇼와천황 개인이 피고가 되어 '인도에 대한 죄'로 유죄가 된 것에도 활용되었다.

한계 … ① 미국 주도의 재판으로, 일본의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받은 국가들로부터의 증언이나 판사 등의 참가가 크게 제한되었다. ② 냉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일정책이 변화하여, 전쟁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대소 전략을 우선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③ 천황과 재벌, 세균전, 화학전과 같이 처벌되지 않은 인물과 전쟁범죄가 있었던 것. 이것들이 미국과 일본 정부의 관련성, 혹은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요청에 의해 역사의 어둠 속에 묻혀 버린 것.

난징사건에 관련되어 기소된 것은 마쓰이 이와네(松井石根, 中支那方面軍 사령관), 히로타 고키(広田弘毅, 외무대신), 무토 아키라(武藤章, 중지나방면군 참모장)의 3명이다.[6)] 일반 시민에 대한 학살 등 비인도적인 전쟁범죄(인도에 대한 죄)로 난징사건 재판에서 유일하게 마쓰이 이와네가 '위반행위 방지 책임 무시에 의한 법률 위반'(무작위의 책임)의 책임을 물어 사형 판결을 받았다.[7)]

'무작위의 책임'이란 일본군을 통솔하는 책임자로서 일본군을 통제하여 국적을 불문하고 전화에 휘말린 인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포기하여, 일본군의 학살과 방화, 강간 등을 방임한 결과, 쓸데없이 전쟁 희생자를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난징사건을 오래 연구해 온 가사하라 도쿠시(笠原十九司)에 따르면, "마쓰이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 일본군 자체의 특질이었다. …… 일본군 내부의 강권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만이 중시되고, 전시국제법을 준수하게 만드는 군규(軍規), 군율 규정의 작성과 교육이라는 발상이 결여되어 있었다. 따라서 중국 전선에서 일본군 장병은 전시국제법에 대해 거

4) 東京裁判ハンドブック編集委員会 편, 『東京裁判ハンドブック』(青木書店, 1989년), 5~6쪽.
5) 도쿄재판이 현재의 국제법과 전쟁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는 戸谷由麻・デイヴィット・ユーエン, 『実証研究　東京裁判　被告の責任はいかに問われたか』(筑摩選書, 2023년)에 자세하다.
6) 3명의 직책은 난징사건 당시의 직책이다.
7) 히로타는 침략전쟁의 계획、준비、개시、수행 등 '평화에 대한 죄'뿐만 아니라, 난징사건에서의 '부작위의 책임'도 물어 사형 판결을 받았다. 무토는 난징사건에 관해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평화에 대한 죄'와 필리핀에서의 잔학행위의 '부작위의 책임' 등에 의해 사형 판결을 받았다.

의 무지했고, 사령관, 지휘관들은 이 법을 위반해도 전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문제로 삼지 않았다. 그렇다기보다 전시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자각조차 없었다. 마쓰이는 그런 일본군 사령관의 전형이었다."라고 기술하여,[8] 일본군의 특질을 지적함과 동시에 학살이 난징 이외의 장소에서도 빈발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역사수정주의의 입장에서는 국제법 해석으로 난징사건을 정당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예컨대 '편의병(便衣兵)의 처형은 적법하다'는 것인데, 편의병은 게릴라로, 살해해도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레토릭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군사재판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간주한 인간을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하는 것은 국제법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역사수정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난징사건 때의 학살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9]

## 3. 책임과 마주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다음 세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세 가지 모두 책임, 즉 피해자 개인의 존엄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열심히 모색하고 있는 사례이다.

① 난징에 있는 난징대학살기념관의 전시 리뉴얼의 특징과 그 배경에 대해. ② 한중일 공동역사교재의 제작과 활용에 대해. ③ 난징에서의 일본과 중국의 수업교류에 대해.

①과 관련하여 난징대학살기념관은 2017년 10년 만에 대규모 전시 리뉴얼을 단행했다. 동 기념관의 연구원인 장국송(張國松)에 따르면, 리뉴얼의 목적과 특징은 견학자가 감정적인 일본 비판에 빠질 수 있는 전시 내용은 피하고, 피해자 개인의 존엄에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하는 것. 중국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 독일 등 최근의 연구성과에 입각하여, 사실(史實)의 전시에 철저를 기한 것. 난징사건 당시뿐 아니라 전후사에서 역사 인식 문제로서의 난징사건을 취급한 것. 일본의 연구자와 공동으로 전시 내용이나 견학 코스를 검토하여 리뉴얼에 활용하고 있는 점 등이다.[10]

최근 중국에서의 연구 동향을 반영하여 종래와 같은 정치외교사, 군사사, 혹은 공산당사 등의 시각뿐 아니라 생활사, 동시대사, 국제관계와 같은 내용을 듬뿍 담음으로써 교조적인 전시 내용을 피하고, 견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 인식을 묻는 장치가 되어 있는 점에 특징이 있다.

난징대학살기념관은 독자적으로 견실한 연구、조사를 계속해 왔을 뿐 아니라, 일본 측과 공동 연구를 계속해 왔다.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시키기 위한 국경을 초월한 노력은 책임과 마주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데, 즉 피해자 및 유족들과 계속 마주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8) 笠原十九司, 『南京事件論争史　日本人は史実をどう認識してきたか』(平凡社新書, 2007년), 64~65쪽.
9) 吉田裕, 「国際法の解釈で事件を正当化できるか」(南京事件調査研究会　편, 『南京大虐殺否定論13のウソ』, 柏書房, 1999년), 160~179쪽.
10) 張国松・齋藤一晴　역, 「南京大虐殺記念館『南京大虐殺史実展』リニューアルの趣旨と概要」(歴史教育者協議会, 『歴史地理教育』, 2018년 8월호), 60~65쪽.

②와 관련하여 한중일공동역사교재는 2003년부터 제작이 시작되어, 이미 20년간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2005년과 2012년에 합계 3권의 공동역사교재를 간행했고, 내년에는 최신판 출판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국경을 초월한 역사 대화에서 난징사건의 희생자 수와 규모 등에 대해 편집 멤버들 사이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일은 이미 없다.

일본 측은 중국 측의 공식 견해인 희생자 수 30만 명이 국가와 국민의 기억으로 존재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중국 측도 자신들의 연구·조사에서 밝혀진 희생자 수와 일본 측의 연구성과에 큰 격차가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작 당시부터 논란이나 대립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논쟁점은 피해자나 유족의 기억이나 생각, 전후까지 계속된 고통스러운 생활 경험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였다. 중국 측은 때때로 객관성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선행시킨 적도 있었다. 그러나 삼국의 멤버가 논의를 통해, 일본 측은 중국 측이 왜 그런 대응, 집필을 하는지 이유를 이해했고, 중국 측은 사람들의 마음을 공동역사교재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객관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공동역사교재의 제작이라는 구체적인 역사 대화를 계속해 나가는 것도 난징사건과 관동대지진 때의 학살사건을 계승해 나가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공동교재를 활용한 국경을 초월한 계속적인 수업교류의 조기 실현이 기대된다.

③과 관련하여 2013년부터 역사교육자협의회·일중교류위원회는 난징에 있는 금릉중학(金陵中學)과 난징시 제1중학이라는 두 개의 고등학교와 수업교류를 계속하고 있다. 수업교류란 양교의 고교생을 상대로 일본과 중국의 교원이 각각 수업을 진행하고, 종료 후에 수업 내용과 방법, 교재 연구의 방식 등을 둘러싸고 일본과 중국 쌍방의 교원이 의견을 교환하고, 고교생으로부터의 질문과 감상도 접수하는 그런 내용이다.[11)]

2016년 난징시 제1중학에서 동교의 사회과 교원 담해군(譚海軍)이 난징사건 수업을 진행했다. 그 내용은 교원이 난징사건에 대해 교수하는 것이 아니라, 생도가 그룹으로 나뉘어 학교 밖에 나가 사적의 필드 워크와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그것에 따르면, 난징에 사는 사람도 난징사건의 기억은 먼 것이 되어 있는 점, 여행이나 비즈니스 등으로 난징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인식은 더욱 부족한 것을 데이터를 통해 밝혔다. 또 난징시내와 교외에 있는 사적을 조사하여, 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은 지역의 전쟁 피해를 그룹별로 발표하는 것이었다.[12)]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혹은 교원의 난징사건 인식을 일방적으로 피력하는 수업이 아니라, 생도가 조사하고 싶은 것을 그룹 토론이나 그룹 발표를 통해 표현하는 스타일은 교원과 생도의 신뢰관계에 입각한 수업만들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난징사건과 주체적으로 마주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학과 역사교육, 혹은 대학에서 교원양성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와 같은 중국

11) 역사교육자협의회·일중교류위원회의 난징에서의 수업교류에 대해서는 齋藤一晴,「日中授業交流を通じて平和とは何かを考える　歴史教育者協議会・日中交流委員会の活動を事例として」(山田朗・師井勇一 편,『平和創造学への道案内　歴史と現場から未来を拓く』, 法律文化社, 2021년)을 참조할 것.

12) 譚海軍・齋藤一晴, 역,「歴史を記憶し平和を祈念する　日中歴史教師交流『記憶と国家追悼』の授業報告」(歴史教育者協議会,『歴史地理教育』, 2017년 7월호), 12~17쪽.

에서의 역사학습의 현재를 충분히 이해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맺음말

본 보고에서는 난징사건과 관동대지진 때의 조선인·중국인 학살을 연결시키면서, 현재 우리에게 그런 역사로부터 부과된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일견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두 가지 역사 사상(事象)도 역사 인식과 역사교육, 내셔널리즘, 역사수정주의, 역사 대화 등의 키 워드로 살펴보면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관동대지진으로부터 100년, 동아시아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다시 한번 사실(史實)에 시선을 돌려, 스스로의 역사 인식이 자기 중심, 자국 중심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자기 체크할 필요가 없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장소, 기회가 필요하다. 머리말에서도 언급했지만, 세대에 관계없이 짊어져야 할 책임, 과제라고는 하지만, 특히 젊은 세대가 국경을 초월하여 대화할 수 있는 장이 학교나 대학에 요구되고 있다.

나는 대학에서 장래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교원으로 교단에 서는 것을 꿈꾸는 학생들을 상대로 교직과정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각국에서 난징사건과 관동대지진 때의 조선인과 중국인 학살에 대해 어떤 교재를 사용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학생들은 흥미진진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역사 인식의 차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며, 원인을 알면 대화의 실마리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학생들의 문제의식에 부응하는 수업을 해나고자 한다.

난징사건과 관동대지진 때의 조선인·중국인 학살을 연결시켜 생각해 봄으로써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전시 때와 식민지 때의 폭력에 대해 알고, 생각하는 방법을 몸에 익힐 수 있지 않을까?

# 南京事件と関東大震災における朝鮮人・中国人虐殺を結びつけて考える
## ー歴史認識・国際法・歴史対話を手がかりにー

齋藤一晴(日本福祉大学)[1)]

### はじめに

シンポジウムの第2部のテーマは、「責任」となっている。ここでいう責任とは、歴史に対するものであり、関東大震災で虐殺された被害者や遺族、そして本報告で主にとりあげる南京事件の犠牲者に、今日どう向き合うのか、という課題だと考える。

日本の歴史学において、南京事件に関する研究はすでに相当の研究成果を積み重ねてきており、それを否定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ころが、様々な理由をあげて虐殺が無かった、もしくはあったとしても大したことは無かったかのように語る政治家や研究者、書物の刊行が続いている。今日、そうした歴史修正主義にどう対峙するか、それを批判的にとらえられる人間を小学校や中学校といった早い教育段階からどのように育むのかが問われている。

本報告は、以下にあげる三つのポイントを中心に扱う。

①なぜ今、南京事件なのか、関東大震災とどう結びつくのか。

②南京事件はどう裁かれ、今日、それがどのように扱われているか。

③「責任」に向き合うために、いかなる取り組みが続けられているのか。

今年は、関東大震災から100年であるとともに、日中平和友好条約が調印されてから45年の節目の年にあたる。東アジアが経験した戦争、植民地支配の歴史を振り返り、これからの100年を国境を越えて検討する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

なお、本報告では、南京大虐殺ではなく、南京事件という用語を使うこととしたい。これは虐殺を否定したり過小評価するためではなく、南京で生じた中国側の被害は虐殺にとどまらず、財産の破壊、家族の離散、女性へのレイプ、放火など多方面に及ぶ。それらは日本が戦争に敗れてからも中国人に負の影響を与え、生活を苦しめた大きな要因である。そのため虐殺にとどまらない南京での被害を総合的に示す総称として、また日本における南京事件研究の到達点を示す歴史用語として南京事件を使う。

---

1) 齋藤一晴（さいとうかずはる）1975年、山形県生まれ。博士（史学・明治大学）。愛知県にある日本福祉大学で歴史学や社会科教育法などの科目を担当している。専門分野は、東アジア近現代史・歴史教育。具体的には日中韓共同歴史教材の作成、活用といった歴史対話。日中や日韓の授業交流などを通じて戦争をどう教え、学ぶのかといった内容を扱っている。近年は、社会科教育で子どもたちの幸せをどのように教えてきたのかや日中戦争下の華北における日本語教育の実相といったテーマについても研究を進めている。

## 1　なぜ南京事件と関東大震災における朝鮮人・中国人虐殺を結びつけて考えるのか

関東大震災と朝鮮人・中国人虐殺をテーマにしたシンポジウムで南京事件を扱うことは若干の違和感があるかもしれない。しかし、以下にあげるいくつかの点に、現在まで続く歴史認識の課題が共通して存在していることが分かるだろう。そう考えると、南京事件と関東大震災を結びつけて考えることも大切なことではないだろうか。

①南京事件同様、関東大震災において中国人が虐殺されていること。その数は、約700人と考えられており、共通しているのは、どちらも軍や警察などの指示で虐殺が行われた点である。また、関東大震災における虐殺事件というと、朝鮮人への残虐行為を扱う機会や報道、刊行されている書籍、教科書記述なども多いように思う。中国人の虐殺についても改めて考えてみる必要があるだろう。

②1923年は、韓国併合から13年目であり、それから14年が経った1937年に南京事件が生じたことになる。つまり韓国併合から約30年後に南京事件が起きるわけだが、30年と言えばひと世代に相当する時間である。

関東大震災当時の首相は山本権兵衛（海軍兵学寮卒・1877年任官）、陸相は田中義一（陸軍士官学校旧8期・1886年任官）、海相は財部彪（海軍兵学校15期・1899年卒業）、外相が伊集院彦吉、司法相が平沼騏一郎、内相が後藤新平である。彼らは、日露戦争で「勝利」を経験し、第一次世界大戦におけるヨーロッパ戦線で生じた戦争スタイルの変化を経験せずに、朝鮮半島や中国への侵略、不平等条約の締結などを行った世代にあたる。また、第一次世界大戦後の世界的な軍縮に不満を持ちつつ第一線を退いていった者も少なくない。

彼らの背中を見て政治や軍事、外交などを学び、表舞台に登場してくるのが南京事件に参加する部隊の将官たちである。南京事件が起こった1937年12月当時は、第一次近衛文麿内閣であり陸相が杉山元（陸軍士官学校12期・1901年任官）、板垣征四郎（同16期・1904年任官）、海相が米井光政（海軍兵学校29期・1901年卒業）である[2)]。また山本内閣で司法相であった平沼騏一郎は、第一次近衛内閣を引き継ぎ、1939年1月から内閣総理大臣になっている。ところが、同年、ヨーロッパで第二次世界大戦が起こると、「欧州情勢は複雑怪奇」と発して就任半年余りで政権を投げ出し総辞職してしまう。

このように韓国併合から南京事件までの約30年間は、日本軍が朝鮮半島から中国へと侵略を拡大していく過渡期、いうなれば帝国日本としての自国認識、アジア観を形成していった時期にあたる。

第一次世界大戦という世界規模の総力戦体制を身をもって経験していないため、ヨーロッパで生じた戦術や戦略、社会の変化、もしくは戦争違法化体制の構築という時代の潮流を理解できておらず、日露戦争のように犠牲を前提とした作戦、乏しい国際法認識、偏狭なアジア観など、日本軍の特徴は継続しており、1923年と37年とでも共通している部分

2)　東京裁判で南京事件に関わり死刑となった松井石根は9期、南京軍事法廷で死刑判決を受けた谷寿夫は15期である。なお、小磯国昭が12期。梅津美治郎、中島今朝吾（第16師団師団長）は15期。岡村寧次や土肥原賢二は16期。東条英機は17期。阿南惟幾や山下奉文が18期である。

が少なくないだろう[3]。

③関東大震災における朝鮮人や中国人への虐殺と南京事件について、歴史修正主義にもとづいた歴史認識を発言、披露する研究者、出版物などは現在も存在する。また、そうした歴史を歴史教科書にどのように記述するかは、長く議論され、家永教科書訴訟に代表されるように裁判にもなってきた。歴史認識が問われ、関係国で国境を越えてナショナリズムを刺激し、対立の場と位置づけられることも少なくなかった点も共通している。

④南京事件は、戦後、自国民が自国民（南京戦に関わった当事者たち）を裁いたことが無い。責任の所在が不明確になり、世代を越えて史実に「蓋」をしてきたといえるだろう。そのため国民の記憶となり得なかった。これは関東大震災における朝鮮人や中国人虐殺にも当てはまるといえるだろう。

## 2　どう裁かれたのか　国際法への影響

南京事件は、国際法でどのように裁かれたのだろうか。東京裁判（極東国際軍事裁判）を事例に考えてみたい。その理由は二つある。①国際法が戦争犯罪を裁くうえで残した成果や特徴、課題や限界についてまとめることで、今日的課題がどこにあるのかを考えられること。②歴史修正主義の立場をとる者のなかには、裁判過程や判決内容の一部を批判的に取り上げることで南京事件全体を否定しているからである。何がどう否定されているのかを見ることは、南京事件だけでなく東京裁判をどのように評価するのかという面からも学ぶ点が多いと考える。

周知のとおり、東京裁判は、1946年5月から48年11月に連合国によって行われた裁判で、実質的にはアメリカ主導だった。その特徴と限界として日本の歴史学で共有されているのは、以下になる。

特徴…①「通例の戦争犯罪」だけでなく従来は国際法の概念として定着していなかった「平和に対する罪」、「人道に対する罪」を加えたこと。これは、「集団殺害罪の防止及び処罰に関する条約」や「戦争犯罪及び人道に対する罪に対する時効不適用条約」などの成立に結びついているといい、1967年5月に開かれたベトナム戦争犯罪国際法廷（ラッセル法定）に代表されるように、権力の基盤を持たない知識人や市民によってこれらの理念の継承がなされているという[4]。

また、今日、ハーグ常設国際刑事裁判所は、集団殺害犯罪、人道に対する犯罪、戦争犯罪、侵略犯罪の四つについて管轄権を持つことがローマ規定に書かれている。ここでいう侵略犯罪とは「平和に対する罪」に相当し、東京裁判の経験が活かされていることが指摘されている。ただし、ローマ規定の加盟国にだけあてはまり、非加盟国には捜査や裁判を行う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課題も併せ持つ[5]。

---

3) 日本軍の軍事思想の連続性、変化などについては、山田朗『近代日本軍事力の研究』校倉書房、2015や同『軍備拡張の近代史　日本軍の膨張と崩壊』吉川弘文館、1997などを参照のこと。
4) 東京裁判ハンドブック編集委員会編『東京裁判ハンドブック』青木書店、1989、pp.5-6。

②国家ではなく個人の戦争犯罪の責任が問われ、処罰が行われたことも特徴といえるだろう。責任の所在を明確にし、被害者の尊厳の回復を意識したものであったことが分かる。この点は、2000年に行われた日本軍「慰安婦」問題を扱った民衆法廷である女性国際戦犯法廷において、昭和天皇個人が被告とされ「人道に対する罪」で有罪とされたことにも活かされている。

限界…①アメリカ主導の裁判であり、日本の戦争や植民地支配を受けた国々からの証言や判事などの参加が大きく制限されていた。②冷戦が深まるなかでアメリカの対日政策が変化し、戦争犯罪を裁くことよりも対ソ戦略を優先させたため十分な議論が尽くされなかったこと。③天皇や財閥、細菌戦、化学戦といった裁かれなかった人物や戦争犯罪があったこと。それらがアメリカと日本政府との関係性もしくはアメリカからの軍事的な要請によって歴史の闇に葬り去られたこと。

南京事件に関わって起訴されたのは、松井石根（中支那方面軍司令官）、広田弘毅（外相）、武藤章（中支那方面軍参謀副長）の3名である[6]。一般市民に対する虐殺など非人道的な戦争犯罪（人道に対する罪）として唯一、南京事件が裁かれ松井石根は「違反行為防止責任無視による法律違反」（無作為の責任）が問われ死刑判決を受けている[7]。

「無作為の責任」とは、日本軍を率いる責任者として、日本軍を統制し、国籍を問わず戦火に巻き込まれた人間を保護すべき責任を放棄して、日本軍の虐殺や放火、レイプなどを野放しにした結果、いたずらに戦争犠牲者を増やした、というものである。

南京事件を長く研究してきた笠原十九司によれば、「松井個人の責任というよりは、日本軍そのものの特質であった。[中略]日本軍内部の強権的秩序を維持することのみが重視され、戦時国際法を順守させるための軍規、軍律の規定の作成や教育という発想が欠落していた。したがって、中国戦線において日本軍の将兵は戦時国際法についてはほとんど無知であり、司令官、指揮官たちは同法に違反してもまったくともいえるほど問題にしなかった。というより戦時国際法に違反しているという自覚さえなかった。松井はそうした日本軍司令官の典型だった」と述べ[8]、日本軍の特質を指摘すると同時に、虐殺が南京以外の場所でも頻発していたことを示唆している。

一方、歴史修正主義の立場からは国際法の解釈で南京事件を正当化しようとする動きもある。例えば、「便衣兵の処刑は適法である」というもので、便衣兵はゲリラであり殺害しても国際法に違反していないというレトリックである。しかし、重要なことは軍事裁判などの手続きが省略され、日本側が一方的にみなした人間を何の手続きを経ることなく殺害することは国際法で認められていない。よって、歴史修正主義者が主張するような南京事件における虐殺を正当化することはできない[9]。

---

5)　東京裁判が今日の国際法や戦争被害者を救済するうえでどのように活かされようとしているのかについては、戸谷由麻・デイヴィット・ユーエン『実証研究　東京裁判　被告の責任はいかに問われたか』筑摩選書、2023に詳しい。

6) 3人の肩書は、南京事件当時のもの。

7)　広田は侵略戦争の計画・準備・開始・推敲などの「平和に対する罪」だけでなく南京事件における「不作為の責任」にも問われ死刑判決を受けた。武藤は、南京事件に関わっては無罪とされたが、「平和に対する罪」とフィリピンにおける残虐行為の「不作為の責任」などによって死刑判決を受けた。

8) 笠原十九司『南京事件論争史　日本人は史実をどう認識してきたか』平凡社新書、2007、pp.64-65。

## 3　責任に向き合うために

ここでは、以下の3点を紹介したい。いずれも責任、つまり被害者個人の尊厳の回復のために何ができるのかを懸命に模索している事例である。

①南京にある南京大虐殺記念館の展示リニューアルの特徴とその背景について。②日中韓共同歴史教材の作成と活用について。③南京における日中授業交流について。

①に関わって、南京大虐殺記念館は、2017年に10年ぶりとなる大規模な展示のリニューアルを行った。その目的や特徴は、同館の研究員である張国松によれば、見学者が感情的な日本批判に陥るような展示内容は避け、被害者個人の尊厳に焦点を合わせたものにすること。中国だけでなく日本やアメリカ、ドイツなど近年の研究成果に基づき、史実の展示を徹底したこと。南京事件当時だけでなく戦後史における歴史認識問題としての南京事件を扱ったこと。日本の研究者と共同で展示内容や見学コースを検討し、リニューアルに活かしていることなどである[10)]。

近年の中国における研究動向を反映して、従来のような政治外交史、軍事史、もしくは共産党史といった視点だけでなく、生活史、同時代史、国際関係といった内容をふんだんに盛り込むことで、教条的な展示内容を避け、見学者一人ひとりの歴史認識を問う仕掛けがなされている点に特徴がある。

南京大虐殺記念館は、独自に地道な研究・調査を続けてきただけでなく、日本側との共同研究を継続してきた。被害者の尊厳を回復させるための国境を越えた取り組みは、責任に向き合う方法を考えるうえで、つまり被害者や遺族たちに向き合い続けるうえで欠かせないといえる。

②に関わって、日中韓共同歴史教材は、2003年から作成が始まり、すでに20年間、作業が続けられている。これまでに、2005年と2012年に、合計3冊の共同歴史教材を刊行しており、来年には最新版の出版を準備している。そうした国境を越えた歴史対話において、南京事件の犠牲者数や規模などについて、編集メンバー間で議論が平行線をたどるといったことはもはや無い。

日本側は中国側の公式見解である犠牲者数30万人が国家や国民の記憶として存在していることを理解しているし、中国側も、自分たちの研究・調査から明らかになった犠牲者数と、日本側の研究成果とに大きな隔たりが無いことを分かっているからだ。

しかし、作成当初から議論や対立が無かったわけではない。論争点は、被害者や遺族の記憶や思い、戦後まで続いた苦しい生活経験をどのように共有するか、ということである。中国側は、ときに客観性より人々の思いを先行させることもあった。しかし、3国のメンバーが議論することを通じて、日本側は中国側がなぜそうした対応、執筆をするのかと

9) 吉田裕「国際法の解釈で事件を正当化できるか」南京事件調査研究会編『南京大虐殺否定論13のウソ』柏書房、1999、pp.160-179を参照のこと。

10) 張国松・齋藤一晴訳「南京大虐殺記念館『南京大虐殺史実展』リニューアルの趣旨と概要」歴史教育者協議会『歴史地理教育』2018年8月号、pp.60-65。

いう理由を理解するとともに、中国側は、人々の思いを共同歴史教材に反映させるためには、むしろ客観性が必要であることを改めて認識するに至ったのである。

こうした共同歴史教材の作成という具体的な歴史対話を継続していくことも、南京事件や関東大震災における虐殺事件を継承していくうえで役割を果たし得ると考える。共同教材を活用した国境を越えた継続的な授業交流の早期実現が望まれる。

③に関わって、2013年から歴史教育者協議会・日中交流委員会は、南京にある金陵中学および南京市第一中学という二つの高校と授業交流を続けている。授業交流とは、両校の高校生を相手に日本と中国の教員がそれぞれ授業を行い、終了後、授業内容や方法、教材研究のあり方などをめぐって日中双方の教員が意見交換を行い、高校生からの質問や感想も受けつけるという内容である[11)]。

2016年に南京市第一中学で同校の社会科教員・譚海軍が南京事件をめぐる授業を行った。その内容は、教員が南京事件について教授するものではなく、生徒がグループになって学校の外に出て史跡のフィールドワークやアンケート調査を行うものだった。それによれば、南京で暮らしている人であっても南京事件の記憶は遠いものになっていること。旅行やビジネスなどで南京を訪れている人たちの認識はさらに乏しいことをデータによって明らかにした。また、南京市内や郊外にある史跡を調査して、教科書に載っていない地域における戦争被害を班発表するというものだった[12)]。

教科書の内容をそのまま、もしくは教員の南京事件認識を一方的に披露するという授業ではなく、生徒が調べたいことを班討論や班発表を通して表現するスタイルは、教員と生徒との信頼関係に基づいた授業づくりが行われ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るとともに、南京事件に主体的に向き合う方法を生徒自身が模索していることを示唆している。

日本の歴史学や歴史教育、もしくは大学で教員養成にたずさわる者は、上記のような中国における歴史学習の現在を十分に理解しておく必要があるだろう。

## おわりに

本報告では、南京事件と関東大震災における朝鮮人・中国人虐殺とを関連づけながら、今日、私たちにそうした歴史から課せられた責任について考えてきた。一見、関係ないようにも思える二つの歴史事象も、歴史認識や歴史教育、ナショナリズム、歴史修正主義、歴史対話といったキーワードから見てみると、結びつけられるように思う。

関東大震災から100年。東アジアで暮らす私たちは、いま一度、史実に目を向け、みずか

11) 歴史教育者協議会・日中交流委員会の南京における授業交流については、齋藤一晴「日中授業交流を通じて平和とは何かを考える　歴史教育者協議会・日中交流委員会の活動を事例として」山田朗・師井勇一編『平和創造学への道案内　歴史と現場から未来を拓く』法律文化社、2021を参照のこと。

12) 譚海軍・齋藤一晴訳「歴史を記憶し平和を祈念する　日中歴史教師交流『記憶と国家追悼』の授業報告」歴史教育者協議会『歴史地理教育』2017年7月号、pp.12-17。

らの歴史認識を自己、自国中心に陥っていないかセルフチェックする必要が無いだろうか。そのためには、具体的な場所、機会が必要である。はじめにでもふれたが、世代に関係なく問われる責任、課題とは言え、とりわけ若い世代が国境を越えて対話できる場が学校や大学で求められているだろう。

私は大学において、将来、小学校や中学校の教員として教壇に立つことを夢見る学生たちを相手に教職課程科目を担当している。各国で南京事件や関東大震災における朝鮮人や中国人の虐殺について、どのような教材を使って、いかに教えられているのか、学生たちは興味津々である。なぜなら、彼らは歴史認識の相違がどのように生じるのかを知りたがっているからであり、原因が分かれば対話の糸口を導き出せるのでは、と考えているからでもある。そうした学生たちの問題意識に応える授業をしていきたい。

南京事件と関東大震災における朝鮮人・中国人虐殺を結びつけて考えてみることで、時代や地域を問わず、戦時下や植民地下の暴力について知り、考える方法を身に付けられ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국제학술심포지엄
관동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 100년: 진실·책임· 기억

# 식민지 지배책임과 조선인학살; 일본인의 역사인식

**가토 게이키(加藤圭木,** 일본 히토쓰바시대)

# 식민지 지배 책임과 조선인 학살
## 일본인의 역사 인식의 과제 -

가토 게이키(加藤圭木, 히토쓰바시대)

## 머리말

10여년 전 대학원 시절에 학생이 주최하는 대형 이벤트의 기획 중 하나로 관동대지진 때의 조선인 학살을 다룬 영화 『불하된 조선인(払い下げられた朝鮮人)』(吳忠功 감독, 1986년)의 상영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1] 이 영화는 지바현 나라시노(習志野)에서 일본군이 조선인을 주민에게 '불하'하여 주민이 학살한 문제를 다룬 영화이다.[2] 기획서를 제출했더니, 주최자 측 학생으로부터 "조선인은 차별용어이며, 또 그것이 '불하되었다'는 과격한 표현이 사용되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므로 타이틀을 변경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왔다.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무사안일주의'에 따른 요청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인이 '조선인'이라는 민족명을 모욕의 의미를 담아 불렀고, 현재도 일본 사회에서 '조선인'이라는 말이 차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조선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는 '조선인'은 본래는 차별용어가 아니며, '조선인'이라는 말을 숨기는 것은 문제를 은폐하는 것으로, 도리어 차별을 강화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조선인'이라는 민족명을 정당한 형태로 부를 수 없는 일본 사회의 상황이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이며, 바로 그 때문에 우리 일본인은 '조선인'이라는 민족명에 집착할 필요가 있다.[3]

나라시노에서 일어난 사건은 관동대지진 때의 조선인 학살 중에서도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이 사태를 '불하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정도로 '과격하다'고 생각될 정도의 사건이었음을 일본 사회가 모르는 것이 문제이다. '불하되었다'는 말이 '과격'하다고 그 실태를 은폐해서는 안 된다.

항의의 결과, '요청'은 철회되었지만, 이 건은 학생을 비롯한 일본인의 인식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차별은 안 된다' '인권은 소중하다' '헤이트 스피치는 좋지 않다'고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차별' '인권' '헤이트 스피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이해가 없다.

본 보고는 내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을 중심적인 사례로 들면서 일본인의 침략전쟁·식민지 지배의 인식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1) 졸고, 「「慰安婦」問題をめぐる法廷闘争」(歴史学研究会編『第4次 現代歴史学の成果と課題 < 3 > 歴史実践の現在』, 績文堂出版, 2017년).

2) 나라시노의 학살에 관해서는 千葉県における追悼·調査実行委員会 편, 『いわれなく殺された人びと――関東大震災と朝鮮人』(青木書店, 1983년). 田中正敬·専修大学関東大震災史研究会 편, 『地域に学ぶ関東大震災――千葉県における朝鮮人虐殺 その解明·追悼はいかになされたか』(日本経済評論社, 2012년) 등.

3) 본 보고에서 '조선'은 민족명·지역명을 가리킨다.

##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책임

강덕상은 관동대지진 때의 조선인 학살을 논할 때 “대지진 때 학살사건의 전제로서 적어도 30년이 이르는 전사(前史), 즉 갑오농민군과의 전쟁, 그리고 러일전쟁 후 일본의 강점에 반대하여 전 국토를 선혈로 물들인 7년에 걸친 의병전쟁을 포함한 ‘적시(敵視)’의 사상 형성을 거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다. 나아가 1910년대의 헌병 지배와 3.1운동 탄압 때의 무력행사 등을 언급하면서, 이상과 같은 조선에 대한 적시와 무력행사의 연장선 위에 대지진 때의 학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4)]

강덕상의 문제 제기를 이어받아 신창우(愼蒼宇)와 세키하라 마사히로(関原正裕)가 일본의 침략전쟁과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의 연속성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5)] 또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나는 바로 러일전쟁에 일본의 조선 침략전쟁의 본질이 나타나 있다고 생각하여, 그것의 구체적인 양상의 해명을 추구하여 조선 측에 대한 ‘적시’의 형성 과정을 고찰하였다.[6)]

현재 일본 사회에서는 차별이나 헤이트 스피치 문제를 다룰 때 ‘다양성’ ‘다이버시티 diversity’의 문제로만 논의하는 경향이 강하다. 행정 측 등의 문서에서는 타자에 ‘배려심’을 갖는 것이 차별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조선인 차별의 본질을 문제로 삼는다면, 일본의 침략전쟁과 그에 수반된 강제적인 식민지화, 대학살, 민족의 자주 결정권의 부정 등의 문제가 정면에서 비판되어야 한다.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의 책임과 일본인이 정면에서 마주하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로서 조선 침략과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며, 중대한 국가범죄라는 인식이 없는 데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 일본인의 식민지 지배 인식의 배경

패전 이래 시종일관 일본 정부와 일본인 대다수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책임과 정면에서 마주하지 않았다.[7)]

---

4) 姜徳相, 「日韓関係史からみた関東大震災－－国史を超えて－」(姜徳相 외 편, 『関東大震災と朝鮮人虐殺』, 論創社, 2015년).

5) 愼蒼宇, 「日本の朝鮮植民地支配と朝鮮人虐殺－－義兵戦争・シベリア戦争・三一独立運動から関東大震災へ」(『朝鮮大学校学報』 제29호, 2019년) 등. 関原正裕, 「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における国家と地域 －日本人民衆の加害責任を見すえて－」(一橋大学大学院社会学研究科博士論文, 2021년). 그리고 関原의 박사논문은 関原, 『関東大震災 朝鮮人虐殺の真相－－地域から読み解く』(新日本出版社)로 2023년 7월에 간행되었다(이 책은 원고를 제출한 7월 24일 시점에 간행되지 않아 보지 못했다).

6) 졸고, 「朝鮮植民地化過程における軍用地収用－－鎮海湾一帯を対象として」(『大原社会問題研究所雑誌』, 제764호, 2022년), 졸고, 「日露戦争下における朝鮮東北部の「軍政」」(『一橋社会科学』 제8권, 2016년), 졸고, 『紙に描いた「日の丸」－－足下から見る朝鮮支配』(岩波書店, 2021년) 등.

7) 본 항목은 졸고, 「現代日本における朝鮮人への差別・暴力と歴史認識」(須田努 편, 『社会変容と民衆暴力－－人びとはなぜそれを選び、いかに語られたのか』, 大月書店, 2023년) 및 졸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세우기 위한 일본 시민사회의 과제」(『동북아역사재단뉴스』 2023년 8월호)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일본 현대사 연구자인 요시다 유타카(吉田裕)에 따르면, 일본의 전후 처리에는 특수성이 있었다고 한다.[8] 첫째, 연합국에 의한 대일 점령이 사실상 미국의 단독 점령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이 우선되었다는 점이다. 대일 점령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천황제를 의식적으로 이용하려 하여, 쇼와천황의 전쟁 책임이 면죄되었다. 둘째, 냉전의 논리가 우월했던 점이다. 1951년에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미국의 대소 전략상의 정치적 배려가 우선되었기 때문에 '관대한 강화'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교전국이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 등이 구체적인 사례이다. 셋째, 침략전쟁의 최대 희생자였던 아시아 각국이 탈식민지화 과정에 있어서, 아시아 각국이 일본의 전후 처리 형태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던 점이다.

이상의 이유로 인해, 요시다는 "일본은 전쟁 책임 문제를 사실상 덮어둔 채,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경제적 부담의 고통을 받지 않고 경제성장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지적했다.

그 후, 일본의 가해 책임을 불문에 부친 채 1965년 한일기본조약、한일청구권협정 등이 체결되었다. 그에 따라 형성된 것이 '65년 체제'이다. 러시아、중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견제하는 미국을 정점으로 한 한미일에 의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체제를 유지、안정화하기 위해 역사문제의 분출이 억제된 것이다.[9]

그 후, 1990년대에 피해자들의 고발로 전쟁 책임、식민지 지배 책임이 커다란 쟁점이 되었지만,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과 배상을 부정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존엄이 회복되는 일은 없었다. '65년 체제'가 재편、유지된 것이다.

동시에 1998년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 그리고 2002년의 한일 월드컵, 2003년 이래의 '한류 붐'에 의해 '한일우호'가 연출되어, 전쟁 책임、식민지 지배 책임 문제는 은폐되었다. 일본인 다수는 역사문제를 망각하고, 표면적인 '한일우호'만 계속되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어 버렸다.

이런 상황은 1990년대말 이래 역사부정론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더욱 악화되었다. 2001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역사교과서가 검정에 합격한 이후, 우파 역사교과서가 영향력을 확대했을 뿐 아니라, 기타 교과서의 침략전쟁、식민지 지배에 관한 기술의 후퇴도 발생하였다.

최근 30년 사이에 일본의 교육이 더욱 우경화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강화된 것은 간과할 수 없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교육 현장에 대한 '히노마루、기미가요'의 강제가 본격화하고 사상통제가 이루어졌다. 더욱이 2006년 제1차 아베 정권에서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어, 교육에 대한 국가 통제가 한층 강화되었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역사교과서에 대한 정치 개입을 강화하여, 2021년부터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이라는 용어를 교과서회사에 수정하게 하는 등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2018년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한국의 대법원판결이 나온 후에는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에 대한 부당한 비난을 강화하고, 매스컴도 한국때리기[bassing]를 되풀이하였다.

---

8) 吉田裕, 『現代歴史学と戦争責任』(青木書店, 1997년), 12～13쪽.
9) 権赫泰(鄭栄桓 역), 『平和なき「平和主義」』(法政大学出版局, 2016년), 14～16쪽.

2019년 3.1 독립운동 100주년에 즈음하여 일본 정부는 조선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어야 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한국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3.1 운동 100주년 관련 집회·데모에 대한 주의 환기를 발령하였다. 정치가와 매스컴은 '반일'인 한국인은 '위험'하다는 정보를 확산시켰다.

일본인 대부분은 이상과 같은 프로파간다에 영향을 받고 있다. 역사부정론 주장을 믿는 사람도 적지 않으며, 식민지 지배의 가해 실태를 인정하는 사람도 '이미 해결된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는 한국'이라는 언설을 믿고 있다. 일본의 책임을 부정하기는커녕, '나쁜 것은 한국' 등과 같이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을 전도시키는 인식마저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가해 역사를 비판하는 사람은 '반일'이며, '극좌'라고 매도당한다.

현재까지 일본에서 계속되는 한국 문화 붐은 '65년 체제'를 유지·강화하는 정치적 역할을 했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리 '혐한(嫌韓)' 보도가 행해지고 역사부정론이 발호해도 '그런 사람은 극히 일부의 극단적인 사람들이며, 우리는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있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 또 '한일 문화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한일 간의 대립을 뛰어넘자'는 역사문제를 무시한 제언이 나오고, 그것이 많은 일본인의 지지를 받는 상황이기도 하다. 문화 교류의 의의를 부정할 생각은 아니지만, 한일 교류의 다수는 역사문제로부터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 역사 인식 문제를 '다른 사람의 일'로 만들어 버렸다. 또 이러한 역사에 대한 시각이 결여된 한일 교류의 추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재일 조선인 때리기의 강화와 표리일체였다.

## 일상화된 역사 부정과 차별

전술한 것처럼, 특히 2000년 전후부터 교육 현장에 대한 '히노마루·기미가요'의 강제가 더욱 강화된 결과, 현재 30대 이하는 '히노마루·기미가요'의 존재가 당연시되는 상황 속에서 인격 형성을 도모하게 되었다. 일본인 중에도 '히노마루·기미가요'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있으며, 또 '히노마루·기미가요'가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문제시되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아시아 각국의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일이 있어도, 부당한 '반일'적 언동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비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스포츠 행사는 물론, SNS에서도 자신의 국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캐주얼'하게 '히노마루'가 게시된다. '한일 교류'의 장면에서도 주저없이 '히노마루'를 사용하는 경우가 보인다.

천황에 의한 시간의 지배를 의미하는 원호는 일본 사회에 완전히 정착했다. 과거 식민지 지배하에서 원호가 강제되었던 것도 알려져 있지 않다.

조선에 대한 경제 침략을 했던 시부사와 에이이치(渋沢栄一)는 대하 드라마에서 다루어지고, 내년부터 1만 엔권 지폐의 초상이 된다. 이런 시부사와 예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거의 없다.[10]

10) 몇 개 되지 않는 비판으로 牛木未来・熊野功英・李相眞・朝倉希実加에 의한「一橋大生が迫る　渋

이상은 일부 사례에 불과하지만,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이것들은 침략전쟁、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긍정하는 것이며 차별이다. 많은 일본인은 노골적인 '혐한 데모'를 직접 목도하면 거부반응을 나타낼지 몰라도, 결국은 이상과 같은 형태로 역사 부정과 차별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학부 이래 내 연구실에 소속하고 있는 일본인 대학원생(석사과정) A씨는 후배 학부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천황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11)]

> 천황제의 역사를 공부하면 일본의 가해와 침략은 늘 따라다니는 문제입니다. 예컨대 독일이라면 나치의 깃발이나 상징, 히틀러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할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쇼와천황이 한 것은 국제적으로는 히틀러와 같은 문제로 파악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본 사회에서는 그런 인식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침략과 가해 역사의 상징인 천황과 천황제, 또 '히노마루、기미가요'와 원호가 지금도 일본에 남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학생의 시각에서 생각하는 차별

일본의 대학생에게 조선사와 식민지 지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문제에 관해 아무리 사실을 전달해도 그 중요성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조선인 차별의 역사에 관해 설명했을 때, 과거에 심각한 가해의 역사가 있었던 것과 현재도 차별적 언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차별 문제를 자기 자신의 문제로 생각할 수는 없다는 사람이 많다. 단적으로 말하면 '자기 자신은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관계 없다'는 주장이다.

학부 이래 내 연구실에 소속하고 있는 대학원생(석사 과정) B씨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 일본 사회에 조선에 대한 멸시 감정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자신은 '특별히 한국인들이 더럽다거나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지 않는데, 왜 그렇게 멸시한다는 말을 들을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상대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 혹은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문제가) 상대방의 인생 이야기라는 것을 보지 않는 것은, 말하자면 상대방을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여 존중하지 않는

---

沢栄一と朝鮮侵略」(『週刊金曜日』 29권 44호～47호, 2021년 11월～12월).。

11) 加藤圭木 감수, 朝倉希実加・李相眞・牛木未来・沖田まい・熊野功英 편, 『ひろがる「日韓」のモヤモヤとわたしたち』(大月書店, 2023년 11월 간행 예정). 본서는 加藤圭木 감수, 一橋大学社会学部加藤圭木ゼミナール 편, 『「日韓」のモヤモヤと大学生のわたし』(大月書店, 2021년)의 속편이다. 2021년에 간행된 前著 『「日韓」のモヤモヤと大学生のわたし』는 한국 문화팬 등을 포함한 일본 시민을 대상으로 한일관계사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해설하면서, 동시에 식민지 지배 책임과 마주할 것을 호소한 것이다. 한국 문화팬들 사이에 화제가 되기도 하여, 현재까지 누계 11,000부를 달성했다.

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도 포함해서 멸시라고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12]

현재 일본 사회는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피해자들을 멸시하고 있다. 그런 상황은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일본인이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가해의 역사를 배우지 않으며, 일본 사회의 모습에 의문을 갖지 않았던 것 자체가 멸시라고 B씨는 깨달은 것이다.

B씨는 후배 학부생에게 식민지 지배 책임을 다할 것을 호소하는 심포지엄에서 한일 교류의 함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 한일 교류의 장면에서는 일본인 측의 인식으로서 '자신에게는 차별 의식이 없다'든가 일본과 한국은 '피차일반'이라는 생각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예컨대 '일본이 과거에 한 일은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이 일본을 역사문제로 집요하게 공격하여 일본인도 기분이 상했으므로 한국인도 사과해야 한다'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 나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이 일본 측을 비판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에 대해 소리를 높이는 것이지, 부당하게 공격하는 것과는 질이 다릅니다. 그것을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가해 역사와 마주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일본이 나쁜 짓을 했다'는 말을 들으면, '좋은 일도 있었다'고 말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은 과거에 나에게도 있었습니다. 일본 근현대사에서 일본인에게 '좋다'고 느끼던 것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존재했던 것을 의식하면, '일본인의 관점' '한국인의 관점'이라는 형태로 이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로서 인식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13]

## 일본 매스컴에 의한 역사 부정

마이니치신문의 〈정치 프리미어〉에 2023년 1월 15일부로 정치부 기자 오누키 도모코(大貫智子)의 서명 기사 「한국 문화를 즐긴다면 가해 역사와 마주해야 하나?」가 게재되었다.[14]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에서는 '리버럴'하다는 신문사이다.

이 기사는 내 연구실의 학생들이 만든 근대한일관계사 입문서 『「日韓」のモヤモヤと大学生のわたし』(전게)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 책에서는 식민지 지배 책임을 일본이 다할 것을 호소하였다.[15] 이런 주장이 오누키에게는 허용하기 어려운 것이었을 것이다.

---

12) 전게, 『ひろがる「日韓」のモヤモヤとわたしたち』.
13) 상동.
14) 본 항목은 전게 졸고, 「現代日本における朝鮮人への差別・暴力と歴史認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또 기사가 삭제된 경위에 대해서는 加藤圭木・吉田裕, 「大貫智子「韓国文化を楽しむなら加害の歴史に向き合うべきか」(毎日新聞)の記事削除について」https://researchmap.jp/blogs/blog_entries/view/92532/73276bdf391f276759604406be5f8d4f, 2023년 2월 16일. 그리고 오누키의 기사는 모두 삭제되어 있어서, 내가 PDF 파일로 보존해 둔 복사에서 인용했다.
15) 기사 제목만 보면, 이 책이 가해 역사와 마주하는 것에 대해 '문화를 즐긴다면'이라고 조건이 붙어

우선 오누키는 “이 책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의 전문가로부터 ‘학생의 문제의식은 좋지만, 결론이 균형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와 있었다. 참고문헌이 한일의 좌파계 식자의 저서에 편중되어 있어, 한국 전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불충분하기 때문이다.”라고 썼다. ‘한일 관계의 전문가’가 문제를 지적했다고 하지만, 전문가는 익명이었기 때문에 불공정한 비판이다. 더욱이 그 지적의 내용 또한 ‘좌파계 식자’라는 색안경에 입각한 것으로, 학문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 다음에 오누키는 문학연구자 박유하의 인터뷰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 22년 8월에 게재한 한국 세종대 박유하 교수의 인터뷰를 떠올렸다. 1990년대 이후 한일의 리버럴이 연대하여 일본의 전쟁 책임을 법적으로 묻는 데 집착한 나머지, “구 종주국과 구 식민지라는 관계에 지나치게 구속된 것은 아닐까? 이래서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박씨는 역설했다.

그런 다음 오누키는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65년의 국교 정상화 후 최악이라 일컬어지던 한일 관계는 코로나로 인한 교류의 단절을 거쳐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양국 모두 과거의 역사에 지나치게 구속되지 말고, 대등한 파트너로 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식민지 지배와 마주해야 한다는 학생을 비판하면서 “역사에 지나치게 구속되지 말라.”라고 주장한 것은 가해국 기자로서 있어서는 안될 행위이다.

덧붙이자면, 오누키는 본 기사를 작성할 때, 연구실 측에 단 한 번도 직접 연락이나 취재를 하지 않았다. 우리가 항의한 결과, “취재에 불충분한 점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마이니치신문 정치부장과 사장실 홍보담당이 히토쓰바시대학에 와서 사죄하고 기사를 취소했다(2023년 2월). 그러나 오누키 본인은 한 번도 설명이나 사죄를 하지 않았다. 그 후에도 특별히 논조를 바꾸지 않고 기사를 집필하고 있는데, 불성실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오누키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현재 일본의 역사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야 한다. 과거를 망각한 다음 한일 양국의 ‘화해’를 실현하자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매스컴회사 대다수에 공통된 자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주장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 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충분히 확립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 버리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 책은 문화를 즐기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식민지 지배 책임과 마주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 맺음말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일본의 조선 침략·식민지 지배 전체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력하지만, 일본 사회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 학생들과 함께 배움을 심화시키고, 그것을 사회에 확산시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자 한다.

# 植民地支配責任と朝鮮人虐殺
## －日本人の歴史認識の課題－

加藤圭木（一橋大学）

### はじめに

10年ほど前の大学院生時代に、学生が主催する大型イベントの一企画として、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を扱った映画『払い下げられた朝鮮人』（呉充功監督、1986年）の上映会を開催したことがある[1]。この映画は、千葉県習志野で日本軍が朝鮮人を住民に「払い下げ」て住民が虐殺した問題を扱った映画である[2]。企画書を提出したところ、主催者側の学生から「朝鮮人は差別語であり、またそれが「払い下げられた」などという過激な表現が用いられるのは尋常ではないのでタイトルを変更してほしい」との要請があった。「問題が起こったらいけない」という「事なかれ主義」による要請だったように思われる。

日本人が「朝鮮人」という民族名を侮蔑の意味を込めて呼んだということや、今日も日本社会において「朝鮮人」という言葉が差別的に用いられることがあることはたしかに事実である。しかし、日本において朝鮮民族全体を指す用語として用いられる「朝鮮人」は、本来的には差別語ではないのであり、「朝鮮人」という言葉を隠すことは問題の隠蔽に他ならず、かえって差別を強化することになりかねない。「朝鮮人」という民族名を正当な形で呼ぶことができない日本社会の現状こそが問題とされるべきであるし、だからこそ私たち日本人は「朝鮮人」という民族名にこだわる必要がある[3]。

習志野の事件は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の中でも重要な事件の一つであり、この事態を「払い下げられた」と表現することは当然のことである。それほどに「過激」と思われるような出来事があったことを日本社会の側が知らないことの方が問題なのである。「払い下げられた」という言葉が「過激」だからと、その実態を隠蔽してはならない。

抗議の結果、「要請」は撤回されたものの、この出来事は学生をはじめとした日本人の認識の特徴をよく示しているように思われる。「差別はいけない」「人権は大切だ」「ヘイトスピーチはよくない」と誰もが口を揃える。しかし、実際に「差別」「人権」「ヘイトスピーチ」の中身については適切な理解がないのである。

本報告では、私が大学で教えている学生を中心的な事例としつつ、日本人の侵略戦争・植民地支配の認識の問題を考えてみたい。

---

1) 拙稿「「慰安婦」問題をめぐる法廷闘争」（歴史学研究会編『第4次 現代歴史学の成果と課題＜3＞ 歴史実践の現在』績文堂出版、2017年）。

2) 習志野の虐殺に関しては千葉県における追悼・調査実行委員会編『いわれなく殺された人びと――関東大震災と朝鮮人』（青木書店、1983年）、田中正敬・専修大学関東大震災史研究会編『地域に学ぶ関東大震災――千葉県における朝鮮人虐殺　その解明・追悼はいかになされたか』（日本経済評論社、2012年）など。

3) 本報告においては、「朝鮮」は民族名・地域名を指すものとする。

## 侵略戦争と植民地支配の責任

姜徳相は、関東大震災下の朝鮮人虐殺を論じる際に、「震災での虐殺事件の前提としてすくなくとも30年に亘る前史、即ち甲午農民軍との戦争、そして露日戦争後日本の強占に反対して全土を鮮血で染めた7年に亘る義兵戦争を含めた「敵視」の思想形成を語らねばならぬ」と述べた。さらに、1910年代の憲兵支配や、三・一運動弾圧における武力行使などをとりあげ、以上のような朝鮮に対する敵視と武力行使の連続線上に震災下の虐殺があったと指摘した[4]。

姜徳相の問題提起を受け、愼蒼宇や関原正裕が日本による侵略戦争と関東大震災下の朝鮮人虐殺の連続性に関して研究を進めてきた[5]。また、かかる作業の一環として、私は日露戦争にこそ日本による朝鮮侵略戦争の本質が現れていると考え、その具体的な様相の解明にとりくみ、朝鮮側に対する「敵視」の形成過程を考察してきた[6]。

今日、日本社会においては、差別やヘイトスピーチの問題をとりあげる際に、「多様性」「ダイバーシティ」の問題としてのみ議論される傾向が強い。行政側などの文書では、他者へ「思いやり」を持つことが差別の解決策であるとされることもある。

朝鮮人差別の本質を問うのであれば、日本による侵略戦争とそれに伴う強制的な植民地化、大虐殺、民族の自主決定権の否定などの問題が正面から批判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の責任と日本人が正面から向き合えないのは、根本的な問題として朝鮮侵略と植民地支配が不法であり、重大な国家犯罪だという認識がないことに起因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

## 日本人の植民地支配認識の背景

敗戦以来一貫して、日本政府と日本人の大多数は、朝鮮に対する植民地支配の責任と正面から向きあってこなかった[7]。

日本現代史研究者の吉田裕によれば、日本の戦後処理には特殊性があったという[8]。第1に、連合軍による対日占領は事実上アメリカによる単独占領であったため、アメリカの国益

---

4) 姜徳相「日韓関係史からみた関東大震災――国史を超えて」(姜徳相ほか編『関東大震災と朝鮮人虐殺』論創社、2015年)。

5) 愼蒼宇「日本の朝鮮植民地支配と朝鮮人虐殺――義兵戦争・シベリア戦争・三一独立運動から関東大震災へ」『朝鮮大学校学報』第29号、2019年など。関原正裕「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における国家と地域 ―日本人民衆の加害責任を見すえて―」(一橋大学大学院社会学研究科博士論文、2021年)。なお、関原の博士論文は、関原『関東大震災 朝鮮人虐殺の真相――地域から読み解く』(新日本出版社)として2023年7月に刊行された(同書は原稿提出の7月24日時点で未刊行のため未見)。

6) 拙稿「朝鮮植民地化過程における軍用地収用――鎮海湾一帯を対象として」(『大原社会問題研究所雑誌』第764号、2022年)、拙稿「日露戦争下における朝鮮東北部の「軍政」」(『一橋社会科学』第8巻、2016年)、拙著『紙に描いた「日の丸」――足下から見る朝鮮支配』(岩波書店、2021年)など。

7) 本項は、拙稿「現代日本における朝鮮人への差別・暴力と歴史認識」(須田努編『社会変容と民衆暴力――人びとはなぜそれを選び、いかに語られたのか』大月書店、2023年)ならびに拙稿「올바른 역사인식을 세우기 위한 일본 시민사회의 과제」(『동북아역사재단뉴스』2023년 8월호)を踏まえたものである。

8) 吉田裕『現代歴史学と戦争責任』(青木書店、1997年)、12～13頁。

が優先されたという点である。対日占領政策の遂行のために天皇制の意識的な利用が図られて、昭和天皇の戦争責任が免罪された。第2に、冷戦の論理が優越したことである。1951年に調印された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は、アメリカの対ソ戦略上の政治的配慮が優先されたために「寛大な講和」という側面を持っていた。アメリカを中心とした主要交戦国が賠償請求権を放棄したことなどがその具体例である。第3に、侵略戦争の最大の犠牲者であったアジア諸国が脱植民地化過程にあり、アジア諸国が日本の戦後処理のあり方に影響力を及ぼ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

以上から、吉田は「日本は戦争責任問題を事実上棚上げしたうえで、巨額な賠償支払いの経済的負担に悩まされることなく、経済成長することが可能になった」と指摘する。

その後、日本の加害責任を不問に付した上で、1965年に日韓基本条約・日韓請求権協定などが結ばれた。これに伴い形成されたのが「65年体制」である。ロシア・中国・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を牽制する米国を頂点とした米韓日による体制といえるだろう。この体制を維持・安定化するために歴史問題の噴出が抑えられたのである[9]。

その後、1990年代に被害者たちの告発により戦争責任・植民地支配責任が大きな争点となったが、日本政府は法的責任や賠償を否定したため、被害者たちの尊厳が回復されることはなかった。「65年体制」が再編・維持されたのである。

同時に、1998年の「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そして2002年のサッカー日韓ワールドカップ、そして2003年以降の「韓流ブーム」により「日韓友好」が演出され、戦争責任・植民地支配責任の問題は隠蔽された。日本人の多くは歴史問題を忘却し、表面的な「日韓友好」さえ続いていればよいという認識を持つようになってしまった。

このような状況は、1990年代末以来歴史否定論が影響力を拡大する中で一層悪化してきた。2001年に「あたら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の歴史教科書が検定に合格して以来、右派の歴史教科書は影響力を拡大させてきただけでなく、その他の教科書の侵略戦争・植民地支配に関する記述の後退も生じた。

この30年ほどの間に、日本の教育がより一層右傾化し、教育に対する国家統制の強化されてきたことは見逃せない。1990年代後半からは教育現場に対する「日の丸・君が代」の強制が本格化し思想統制が行われた。その上に2006年に第1次安倍政権下で教育基本法が改正され、教育への国家統制が一層強化された。さらに、日本政府は歴史教科書への政治介入を強め、2021年からは日本軍「慰安婦」問題や強制動員の用語を教科書会社に書き換えさせるなど、露骨な介入を行っている。

2018年に強制動員問題に関する韓国・大法院判決が出された後は、日本政府は「国際法違反」などと主張し、韓国への不当な非難を強め、マスメディアもバッシングを繰り広げた。

2019年の3・1独立運動100周年にあたって日本政府は朝鮮侵略と植民地支配に対する反省と謝罪を表明すべきであった。ところが、日本外務省は韓国への渡航者に対して韓国での3・1運動100周年関連の集会・デモに対する注意喚起を発した。政治家やマスメディアなどは「反日」の韓国人は「危険」であるという情報を拡散した。

日本人の大部分は、以上のようなプロパガンダに影響を受けている。歴史否定論の主張を

9）権赫泰（鄭栄桓訳）『平和なき「平和主義」』（法政大学出版局、2016年）、14〜16頁。

信じている人も少なくないし、植民地支配の加害の実態を認めている人であっても「解決済みのことを蒸し返す韓国」という言説を信じ込んでいる。日本の責任を否定するどころか、「悪いのは韓国」といったような被害者側と加害者側を転倒させた認識すら広がりを見せている。日本の加害の歴史を批判する人は「反日」であり、「極左」などと罵倒される。

現在まで続く日本における韓国文化ブームは、「65年体制」を維持・強化する政治的役割を果たしたという他ないだろう。どれだけ「嫌韓」報道がなされ、歴史否定論が跋扈しようとも、「そういう人たちはごく一部の極端な人たちで、私たちは韓国文化を愛好しているし、何の問題もない」と考える場合が少なくないようである。また、「日韓文化交流をすすめることで、日韓の対立を乗り越えよう」という歴史問題を無視した呼びかけがなされるようになり、それが多くの日本人の支持を受ける状況もある。文化交流の意義を否定するつもりはないが、日韓交流の多くは歴史問題から目を背け、歴史認識の問題を「他人事」としてしまったのである。また、このような歴史への視点を欠いた日韓交流の推進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や在日朝鮮人に対するバッシングの強化と表裏一体であった。

## 日常化した歴史否定と差別

前述のとおり、特に2000年前後から教育現場への「日の丸・君が代」の強制が一層強化されてきた結果、現在の30代以下は「日の丸・君が代」の存在が当然視される状態のなかで人格形成を図ることになった。日本人のなかでも「日の丸・君が代」に賛否があること、また、「日の丸・君が代」がアジア諸国側から問題視されてきたことを認識できていない。仮にアジア諸国の人々から批判を受けることがあっても、不当な「反日」的言動の一つとして受け止め、批判の本質を理解できない場合が多いだろう。現在、スポーツ行事はもちろんのこと、SNSでも自らの国籍を示すものとして「カジュアル」に「日の丸」が掲げられる。「日韓交流」の場面でも、躊躇なく「日の丸」を用いることが見られる。

天皇による時間の支配を意味する元号は、日本社会のなかですっかり定着してしまっている。かつて植民地支配下において元号が押しつけられたことも知られていない。

朝鮮に対する経済侵略を行った渋沢栄一は大河ドラマでとりあげられ、来年から1万円札の紙幣の肖像とされる。こうした渋沢への礼賛に対する批判の声はほとんどない[10]。

以上は事例の一部に過ぎないが、意識的にせよ無意識的にせよ、これらは侵略戦争・植民地支配の歴史の肯定であり、差別に他ならない。日本人の多くは露骨な「嫌韓デモ」を目の当たりにすれば拒否反応を示すかもしれないが、結局のところ以上のような形で歴史否定と差別が日常化されているのである。

学部以来、私のゼミに所属する日本人の大学院生（修士課程）のAさんは、後輩の学部生たちに向けて開催したシンポジウムで、天皇制について次のように述べている[11]。

---

10) 数少ない批判として牛木未来・熊野功英・李相眞・朝倉希実加による「一橋大生が迫る　渋沢栄一と朝鮮侵略」『週刊金曜日』（29巻44号～47号、2021年11月～12月）。

11) 加藤圭木監修、朝倉希実加・李相眞・牛木未来・沖田まい・熊野功英編『ひろがる「日韓」のモヤモヤとわたしたち』（大月書店、2023年11月刊行予定）。本書は、加藤圭木監修、一橋大学社会学部加藤圭

天皇制の歴史を学べば日本の加害と侵略はつきまとう問題です。たとえばドイツだったら、ナチスの旗や象徴、ヒトラーは当然批判されるべきものとなっています。国際的には昭和天皇がやったことはヒトラーと並ぶ問題として捉えられていると思うのですが、日本社会ではそのような認識が欠如しています。侵略や加害の歴史の象徴である天皇や天皇制、また「日の丸・君が代」や元号が、日本に今も残り、「あたりまえ」とされていることはアジアをはじめとした世界の人びとから見たらどういうふうに映るのか考えてみる必要があります。

**学生の視点から考える差別**

日本の大学生に朝鮮史や植民地支配、日本軍「慰安婦」問題や強制動員の問題に関して、どれだけ事実を伝えてもその重要性を受け止めてもらえないことが少なくない。

たとえば、朝鮮人差別の歴史に関して説明した際に、過去に深刻な加害の歴史があったことや現在も差別的言動をしている人がいることは理解できるとしつつも、差別の問題を自分自身の問題として考え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人が多い。端的に言えば、「自分自身は差別していない。だから関係がない」という主張である。

学部以来私のゼミに所属する大学院生（修士課程）のBさんは次のように回顧している。

> 日本社会には朝鮮に対する蔑視感情があるという説明を聞いたときに、自分のなかで「別に、韓国の人たちが汚いとか、頭が悪いなどとは思っていないのに、なんでそんなふうに蔑視しているって言われるんだろう」と思っていたのです。でも、今になってみて思うのは、相手の顔を見ていない、あるいは、（侵略戦争や植民地支配の問題が）相手側の人生の話なのだということを見ていないことは、言ってしまえば相手のことをどうでもいいと思っていて、尊重していないということなのですよね。そういうものも含めて、蔑視というべきものなのだと思います。[12]

現在、日本社会は侵略戦争と植民地支配の歴史と正当化し、被害者たちを蔑ろにしている。そうした状況を支えているのは、一人一人の日本人である。被害者たちの声を黙殺し、加害の歴史を学ばず、日本社会のあり方に疑問を持っていなかったこと自体が蔑視なのである、とBさんは気がついたのである。

Bさんは、後輩の学部生に向けて植民地支配責任を果たすことを訴えたシンポジウムの中で、日韓交流の陥穽について次のように指摘している。

> 日韓交流の場面では、日本人側の認識として「自分には差別意識はない」ですとか、日

---

木ゼミナール編『「日韓」のモヤモヤと大学生のわたし』（大月書店、2021年）の続編である。2021年に刊行された前著『「日韓」のモヤモヤと大学生のわたし』は、韓国文化ファンなどを含む日本の市民に向けて、日朝関係史に関する歴史的事実を解説するとともに、植民地支配責任を向きあうことを訴えたものである。韓国文化ファンのあいだで話題になったこともあり、現在までに累計1万1千部を達成した。

12）前掲『ひろがる「日韓」のモヤモヤとわたしたち』。

本と韓国は「お互い様」という考え方をよく目にします。たとえば、「日本が過去にしたことは悪いと思っているけれど、韓国が日本を歴史問題で執拗に攻撃したことで日本人も気分を害したのだから、韓国人も謝ったほうがいい」というような意見を持つ人もいます。かつての自分もそうでした。でも、韓国人が日本側を批判するのは、不合理なことに対して声を上げているのであって、不当に攻撃をしているのとは質が違います。そこをきちんと考える必要があります。日本の加害の歴史に向き合うのに慣れていない人の場合、「日本が悪いことした」と言われると、「いいこともあった」と言いたくなってしまう気持ちがあるのだろうと思います。それはかつての自分にもありました。日本の近現代史において、日本人にとって「良い」と感じていたことが、誰かの犠牲の上にあったことを意識すれば、「日本人の見方」「韓国人の見方」という形で二分するのではなくて、ひとつの歴史として認識できると思います。[13]

## 日本のマスコミによる歴史否定

毎日新聞の「政治プレミア」に2023年1月15日付で政治部記者・大貫智子の署名記事「韓国文化を楽しむなら加害の歴史に向き合うべきか」が掲載された[14]。毎日新聞は日本では「リベラル」とされる新聞社である。

この記事は、私のゼミの学生たちがつくった近代日朝関係史入門書『「日韓」のモヤモヤと大学生のわたし』(前掲)に対する批判であった。同書では、植民地支配責任を日本が果たしていくことを訴えていた[15]。そのような主張が大貫にとっては許容しがたいものだったのであろう。

まず大貫は「この本に対しては、日韓関係の専門家から「学生の問題意識は良いが、結論がバランスを欠いている」という指摘が出ていた。参考文献が日韓の左派系識者の著書に偏っており、韓国全体を正確に理解するには不十分なためだ」と述べた。「日韓関係の専門家」が問題を指摘していたというが、専門家は匿名だったのでアンフェアな批判である。しかも、その指摘の内容もまた「左派系識者」などというレッテル貼りに基づくものであり、学問的とはいえない。

このようにゼミの書籍に対してレッテルを貼った上で、大貫は、文学研究者朴裕河のインタビュー内容を次のように紹介している。

22年8月に掲載した韓国・世宗大の朴裕河(パク・ユハ)教授のインタビューを思い出し

13) 同上。

14) 本項に関しては、前掲拙稿「現代日本における朝鮮人への差別・暴力と歴史認識」を踏まえたものである。また、記事が削除された経緯については、加藤圭木・吉田裕「大貫智子「韓国文化を楽しむなら加害の歴史に向き合うべきか」(毎日新聞)の記事削除について」https://researchmap.jp/blogs/blog_entries/view/92532/73276bdf391f276759604406be5f8d4f、2023年2月16日。なお、大貫の記事はすでに削除されているので、私がPDFファイルとして保存しておいた複写から引用した。

15) 記事のタイトルだけを見ると、同書が加害の歴史を向き合うことについて、「文化を楽しむなら」と条件付けしているように思えてしまうが、それは事実と異なる。同書は文化を楽しむか否かに限らず、植民地支配責任と向きあうことを訴えている。

た。1990年代以降、日韓のリベラルが連帯して日本の戦争責任を法的に問うことにこだわるあまり、「元宗主国と元植民地という関係にとらわれすぎていたのではないか。これでは前進しない」と朴氏は訴えた。

その上で、結論として大貫は次のように主張した。

65年の国交正常化後最悪と言われた日韓関係は、コロナ禍における交流の断絶を経て、政治的にも文化的にも新たな段階に入りつつある。両国とも過去の歴史にとらわれすぎず、対等なパートナーとして接することが重要ではないかと思う。

植民地支配責任と向きあうべきとした学生を批判し、「歴史にとらわれすぎず」と主張したことは加害国の記者としてあるまじき行為である。

なお、大貫は本記事にあたってゼミ側に一度たりとも直接の連絡や取材をしていなかった。私たちの抗議の結果、「取材に不十分な点があった」として毎日新聞政治部長ならびに社長室広報担当が一橋大学に来校し謝罪し、記事を取り消した（2023年2月）。ところが大貫本人は一度も説明や謝罪をすることはなかった。その後も、特に論調を変えることなく記事を執筆しており、不誠実というしかない。

この問題は大貫個人の問題というよりも、現在の日本の歴史認識を端的に示す事例だと考えるべきである。過去を忘却した上で日韓両国の「和解」を実現しようという主張である。このような主張は、マスコミ各社の大多数に共通している姿勢といわざるをえない。

以上のように植民地支配を正当化する主張が影響力を発揮している限り、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の問題に対する批判的認識を十分に確立することはできないだろう。

## おわりに

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の本質を理解しようとするのであれば、日本の朝鮮侵略・植民地支配全体に対する批判的な認識を確立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微力ながら、日本社会の現状を変えるために、学生たちとともに学びを深めそれを社会に広げるとりくみを継続していきたい。

국제학술심포지엄
관동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 100년: 진실·책임· 기억

# 하버드발 간토학살 역사왜곡과 학살부정론에의 대응

**이진희**(미국 이스턴일리노이대)

관동대지진과 조선인·중국인 학살 100년 국제학술심포지엄

# 하버드발 간토학살 역사왜곡과 학살부정론에의 대응

Jinhee Lee
JLEE@EIU.EDU
HISTORY PROFESSOR, EASTERN ILLINOIS UNIVERSITY
RESEARCH ASSOCIATE, THE REISCHAUER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AT HARVARD UNIVERSITY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독립기념관 공동주최

2023. 8. 30.

# 글로벌 포퓰리즘 시대의 역사부정론

## - 하버드발 간토학살 역사부정론을 예로 -

## Outline

i. [What] "역사부정론," "제노사이드," "간토학살"
ii. [Who and Where] 학살부정론은 누가 어디서
iii. [When] 언제
iv. [Why] 왜
v. [How & How NOT] 어떻게 제조 유포하는가 파악 후 대응

## I. [What] 역사부정론, 제노사이드, 간토학살

■ 정의와 분류

1. "**역사부정론**"이란? (하드코어와 소프트코어 형태의 다양한 역사부정론)
2. "**제노사이드**"관련 역사부정 (전면부정, 부분부정, 피해자 책임론, 부정에의 동조, 침묵 등으로 학살에 정당성을부여해 합리화 → 차별, 증오범죄, 학살 재발 조장)
3. **학살 범죄 부정론 메뉴얼** (No 구조적/계획적/조직적 학살, No 증거 문서, No 정확한 피해자수, No 특정 형태의 잔학 행위/시설, 정치/경제/개인 이익위한 음모...)
4. **간토학살** 관련 역사부정론의 패턴 (사건의 5W1H를 전면/부분 부정 및 왜곡 시도)

## II. [Who & Where] 간토학살 역사부정론의 출처

- **첫발**: 세계사적 패턴인 "관제" 제노사이드와 정부/관헌 주도의 역사부정론
- **끝발**: 반세계화 종족/냉전/군국/제국/식민주의자들의 책임없는 "자유" "민주" "물질"지상주의에 입각한 관민 복합 역사부정론 ("표현/학문/언론의 자유 박해")
- **소위 "역사전** (History Wars)"과 "**문화전** (Culture Wars) " 자칭전사들의 부정론 제조, 유포, 확산을 위한 **글로벌 연대 시도, 테크닉 공유, 전지구적 출판** 시도

**예)** 하버드대 John M. **Olin** 법경제학 센터의 Faculty Discussion Papers Series를 통해 2018년 이래 숨가쁘게 등장한 십여편의 일본사 관련 왜곡 논문들 ('위안부,' 강제동원, 피차별민들의 피해에 대한 군/정부 책임 면제, 패해자책임론, 좌파음모론) → 디지탈 시대의 反지성주의를 반영한, "실증"의 탈을 쓰려다 걸린 게으른 역사부정 시도의 예

## III. [When] 간토학살 부정론의 등장 시기

. 간토학살 부정론의 등장: 100년 전 그 때(1923)와 지금(2023)

. 20세기=제노사이드의 시대? (민족국가, 신제국주의, 식민지주의, 냉전주의, 인종주의의 연속 하에 식민지배 전쟁범죄 역사 부정 시도)

. 100년에 걸친 간토학살 역사부정의 미시적, 거시적 맥락과 계보
- 세계사적 맥락
- 지역사적 맥락
- 국가적 맥락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내 역사부정 세력과 그들의 접점)
- 학문사적 맥락 (법경제학, 역사학, 교육계의 경제/정치/문화적 추세)

## IV. [Why] 역사부정론 제조, 유포, 확산의 원인

■ 동기와 욕망

- 심리적, 정치적, 경제적 동기로 제조 확산 재생산 되는 역사부정론
- 개인적/집단적 욕망에 의한 역사부정론 (민족, 인종, 지역, 종교적 이유)

■ 간토학살 역사부정론의 생산/유포/확산 과정을 통해 본 책임 소지
- 제조 과정과 생산자
- 확산 과정과 유포자
- 소비 과정과 소비자

→ 난징대학살, '종군위안부', 강제동원, 간토학살의 역사부정론 제조, 확산, 소비 과정 및 중심세력 비교를 통한 패턴 파악: 군/정부 책임 면제 시도

## V-1. [How] 제노사이드 역사부정론자들의 테크닉

. 역사부정론 생산을 위한 다양한 기법들

- 역사적 사건과 현상의 피해자들 및 그들을 위한 지원자들을 위험한 병적인 거짓말쟁이라고 노골적 간접적으로 선전, 사실관계 왜곡
- 피해자들을 집단살해 현상을 일어나게 만든 가해자 또는 공모자로 몰아세우며 그럴싸하게 들리는 유사 과학으로 포장해 "이론화"시킴으로써 집단폭력을 정당화/합리화
- 길거리에 나가 외치거나, 대학 펀딩, 학교 수업, 서적 출판 등을 통해 영향력을 키우거나, 미디어와 SNS을 통해 사람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공포/불안감을 부추기며 사실과 배치되는 음모론으로 왜곡된 "역사"를 가공해 확산시키는 한편, 세력을 확산시키기 위해 역사부정론자 그룹들과 편의적 동맹 형성, 연대 활동 (***간토학살 역사부정론 기법 관련 별첨자료 참조**)

## V-2. [How] 학살 역사부정론에의 대응책

. 역사부정론 대응 방안

- 개인적, 조직적 모니터링 및 직접 대질 (Watchdog organizations)
- 학계/제도/언론과 시민활동을 통한 문제인식 공유와 개입
- 글로벌 언론, 정치적/재정적/법적 압력
- "표현/학문/언론의 자유" 개념의 오용과 피해자 시늉에 대한 대처
- 역사부정론 테크닉의 패턴 별 맞춤형 대응 (또는 무대응)

. 효과적/비효과적임이 드러난 학살부정론에의 대응 방안의 전례

. 미국 내 하버드발 간토학살 역사부정론의 현황과 대응책 및 활용(!)법

## 결론을 대신하며

- 미국 내 "역사전"/"문화전" 현황에 비춰본 간토학살 관련 연구와 교육
- 세계사로서의 한국사, 동아시아사, 식민지배 범죄 부정대항 운동사
- 제노사이드 및 반인류적 범죄에 대해 세계사 관점에서 적극 조사, 성찰, 기억, 추모, 교육, 연대에 힘써 100년 전 일본제국 간토에서 일어난 한인 학살 케이스가 탈식민주의, 탈냉전주의 시대의 인류 공익을 위한 역사 인식과 역사 교육 롤모델로 알려지고 기록될 수 있도록

***별첨자료** 1. 하버드법대 발 간토학살 역사 왜곡 논문 리스트

2. 간토학살 관련 역사부정론의 패턴 예

3. 영문기록 간토학살 1차 사료 예 (번역본 당일 배포)

関東大震災と朝鮮人·中国人 虐殺 100年 国際学術シンポジウム

# ハーバード発関東虐殺の歴史歪曲と虐殺否定論への対応

Jinhee Lee
JLEE@EIU.EDU
HISTORY PROFESSOR, EASTERN ILLINOIS UNIVERSITY
ARCH ASSOCIATE, THE REISCHAUER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AT HARVARD UNIVER

東北亜歴史財団、国史編纂委員会、韓国学中央研究院、独立記念館共催
2023. 8. 30.

# グローバルポピュリズム時代の歴史否定論

## - ハーバード発関東虐殺歴史否定論を例に -

### Outline

I. [What]「歴史否定論」「ゼノサイド」「関東虐殺」
II. [Who and Where] 虐殺否定論は誰がどこで
III. [When] いつ
IV. [Why] なぜ
V. [How & How NOT] 製造流布の手法を把握したうえで対応

## I. [What] 歴史否定論、ジェノサイド、関東虐殺

■ 定義と分類

1. **「歴史否定論」**とは？ （ハードコアとソフトコア形の様々な歴史否定論）
2. **「ゼノサイド」** 関連歴史否定 (全面否定、部分否定、被害者責任論、否定への同調、沈黙などで虐殺に正当性を与え合理化 → 差別、憎悪犯罪、虐殺再発助長)
3. **虐殺犯罪否定論マニュアル** (No構造的/計画的/組織的虐殺、No証拠文書、No正確な被害者数、No特定形態の残虐行為/施設、政治/経済/個人の利益のための陰謀…)
4. **関東虐殺**関連の歴史否定論のパターン (事件の5W1Hを全面/部分的否定及び歪曲の試み)

## II. [Who & Where] 関東虐殺 歴史否定論の出典

■ **最初**:世界史的パターンの「官制」ジェノサイドと政府/官憲主導の歴史否定論

■ **最後:**反グローバル化 種族/冷戦/軍国/帝国/植民地主義者の責任のない「自由」「民主」「物質」至上主義に基づく官民複合の歴史否定論(「表現/学問/言論の自由に対する迫害」)

■ **いわゆる「歴史展**(History Wars)」と「**文化展**(Culture Wars)」の目称戦士による否定論の製造、流布、拡散を目指した**グローバル連帯の試み、テクニック共有、世界的な出版**の試み

**例)** ハーバード大学John M. Olin 法経済学センターのFaculty Discussion Papers Seriesを通じて2018年以来息を切らして登場した十数編の日本史関連の歪曲論文('慰安婦',強制動員、被差別民の被害に対する軍/政府責任免除、被害者責任論、左派陰謀論) → デジタル時代の反知性主義を反映した、"実証"の仮面をかぶろうとしてばれた怠惰な歴史否定試みの例

## III. [When] 関東虐殺否定論の登場時期

■**関東虐殺否定論の登場:100年前の当時(1923)と今(2023)**

■20世紀=**ジェノサイド**の時代？ (民族国家、新帝国主義、植民地主義、冷戦主義、人種主義の連続下で植民支配や戦争犯罪の歴史否定を試み)

■100年にわたる関東虐殺の歴史否定のミクロ的･マクロ的**脈絡**と**系譜**
-世界史的な脈絡
-地域史的な脈絡
-国家的な脈絡(韓国、日本、米国、中国に於ける歴史否定勢力とその接点)
-学問史的な脈絡(法経済学、歴史学、教育界の経済/政治/文化的傾向)

## IV. [Why] 歴史否定論の製造･流布･拡散の原因

■**動機と欲望**
- 心理的、政治的、経済的動機により製造･拡散･再生産される歴史否定論
- 個人的/集団的欲望による歴史否定論 (民族、人種、地域、宗教的理由)

■関東虐殺歴史否定論の生産/流布/拡散過程から見る責任の所在
- 製造過程と生産者
- 拡散過程と流布者
- 消費過程と消費者

→南京大虐殺、「従軍慰安婦」、強制動員、関東虐殺の歴史否定論の製造･拡散、消費過程および中心勢力の比較によるパターン把握:軍/政府の責任免除の試み

## V-1. [How] ジェノサイド歴史否定論者のテクニック

■**歴史否定論を生み出すための様々な手法**

- 歴史的事件と現象の被害者および彼らの支援者は危険な病的嘘つきだと露骨または間接的に宣伝し、事実関係を歪曲
- 被害者を集団殺害現象を起こした加害者または共謀者に追い込み、もっともらしく聞こえる類似科学で包装して「理論化」することで集団暴力を正当化/合理化
- 街頭に出て叫んだり、大学ファンディング、学校授業、書籍出版などを通じて影響力を拡大したり、メディアとSNSを利用して人々の現在と未来に対する恐怖/不安感を煽ることで、事実に反する陰謀論に歪曲された「歴史」を加工して拡散させる一方で、勢力を拡散するため歴史否定論者グループとの便宜的同盟を形成、連帯活動(***関東虐殺歴史否定論の手法関連は別添の資料参照**)

## V-2. [How] 虐殺歴史否定論への対応策

■**歴史否定論への対応策**

- 個人的、組織的モニタリング及び直接対質(Watchdog organizations)
- 学界/制度/マスコミと市民活動による問題認識の共有と介入
- グローバルメディア、政治的/財政的/法的圧力
- 「表現/学問/言論の自由」概念の誤用と被害者の振りへの取り組み
- 歴史否定論テクニックのパターンに合わせた対応(または非対応)

■効果的か非効果的かの可否が明らかになった虐殺否定論への対応策の前例

■米国におけるハーバード発関東虐殺歴史否定論の現状と対応策及び活用法

## 結論にかえて

■米国における「歴史展」/「文化展」の現状に徴する関東虐殺に関する研究と教育

■世界史としての韓国史、東アジア史、植民地支配に於ける犯罪否定 対抗運動史

■ジェノサイド及び反人類的犯罪について世界史の観点から積極的に調査、省察、記憶、追悼、教育、連帯に努め、100年前に日本帝国の関東で起きた韓国人虐殺のケースが脱植民主義、脱冷戦主義時代の人類公益のための歴史認識と歴史教育の範として知られて記録されるように

*別添資料　1.ハーバード大学法学部発関東虐殺歴史歪曲論文リスト
2. 関東虐殺に関する歴史否定論のパターン例
3. 英文記録 関東虐殺一次史料例(翻訳本当日配布)

국제학술심포지엄
관동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 100년: 진실·책임· 기억

# 관동대지진 때의 조선인 학살 부정론 비판

**정영환**(일본 메이지가쿠인대)

# 관동대지진 때의 조선인 학살 부정론 비판
# 영국 외교문서의 조선인 관련 기록을 해독하다-

정영환(鄭栄桓, 메이지가쿠인대)

## 1. 관동대지진 때의 조선인 학살 부정론과 영국 외교문서

본 보고의 과제는 최근 일본에서 관동대지진 때의 조선인 학살 부정론(이하 부정론이라 한다)의 중요한 발신원이 되어 있는 구도 미요코(工藤美代子)의 『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の真実』(産経新聞出版, 2009)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1)]

본서는 조선인 학살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학살 부정론의 저술인데, 그것의 레토릭은 다음과 같다. 진재(震災) 당시 실제로 조선인은 "섭정궁(攝政宮)을 암살하려고까지 획책" 하고 있었고, "그런 국난을 회피하기 위한 계엄령이었고 보면, '조선인 학살'이라는 말을 들을 이유는 터럭만큼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학살은 없었으며', 있었다면 그것은 학살이 아니라 국가의 자위권 행사라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한다.[2)] 그리고 "테러리스트를 '학살당했다'고 하지 않는 것이 계엄령하의 국제 상식"이라고 단정한다.[3)] 요컨대 본서의 핵심은 '조선인을 죽이지 않았다'는 의미에서의 학살 부정론이 아니라, '죽였지만 정당한 살인이었다'라는 학살의 정당화론이다.

조선인 학살 문제의 선행연구를 거의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서는 간행 이래 적지 않은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하나의 사례가,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가 조선인 희생자 추도 식전에 추도문 송부를 중지한 일이다. 고이케 도지사는 2017년 역대의 도지사가 계속해 왔던 조선인 희생자 추도 식전에의 추도문 송부를 중지하고, 이후 6년 연속 추도문을 보내지 않고 있는데, 다나카 마사타카(田中正敬)에 따르면, 중지 결정의 계기는 2017년 3월 2일, 본서의 기술을 근거로 고가 도시아키(古賀俊昭) 도의원(자민당)이 도의회에서 했던 일반 질문이었다.[4)] 고가 도의원은 요코아미초(横網町)공원 안에 있는 조선인희생자추도비의 "잘못된 책동과 유언비어 때문에 6,000여 명에 달하는 조선인이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습니다."라는 비문을 문제시하며, '6,000여 명'은 "근거가 희박한 숫자"이고, 또 조선인이 "당시 황태자 전하였던 훗날의 쇼와천황의 혼례에 맞춰 위해행위를 준비"했다고 주장하며, 조선인 폭동이 '유언비

1) 그리고 본서는 후에 저자명을 남편인 가토 야스오(加藤康男) 명의로, 제목을 『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はなかった！』로 바꾸어 WAC에서 2014년에 다시 간행되었다. 가토·구도 두 사람의 합의를 거쳐 다시 간행되었다면, 두 사람 중 누군가가 대필한 것이 된다.
2) 工藤美代子, 『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の真実』(産経新聞出版, 2009년), 270쪽.
3) 상게서, 304~305쪽.
4) 田中正敬, 「小池都知事の追悼辞送付取りやめとは何か　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をめぐって」(『歴史学研究』 제968호, 2018년 3월) 47쪽.

어’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면서 추도문 송부의 중지를 요구했다.[5] 그때 고가 도의원이 “고이케 지사가 꼭 읽어주었으면 하는 책”으로 든 것이 논픽션 작가 구도 미요코의 저작이었다. 그에 대해 고이케 도지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잘 읽어본 다음에 적절하게 판단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고, 그 후 전술한 것처럼 추도문 송부 중지가 결정되었다.

고이케 도지사는 올 2023년 2월 21일의 정기 도의회에서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질문에 대해 “관동대지진에 관해 여러 가지 내용이 사실(史實)로서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이 명백한 사실(事實)인가에 대해서는 역사가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여, 학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제시하는 것을 피했다.[6] 여기서 “사실로서 발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란, 이상의 경과로 봐서, 고가 도의원이 개진한 조선인 피해자 수를 둘러싼 각종 주장과 조선인 폭동을 유언비어가 아니라 사실(事實)이라고 간주하는 주장임을 알 수 있다. 물론 고이케가 구도의 저작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진재의 ‘사실(史實)’에 관해 경청할 만한 “여러 가지 내용”의 하나로서 부정론이 취급되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본서는 과연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에 관한 ‘사실(史實)’을 밝혔다고 할 수 있을까? 본서에 대해서는 이미 야마다 쇼지(山田昭次)와 가토 나오키(加藤直樹)가 면밀하게 비판을 가했다.[7] 예컨대 야마다는, 구도는 9월 2일부터 6일경에 발행된 신문기사를 자설(自設)의 근거로 삼고 있지만, 당시의 관헌도 신문에 보도된 정보를 ‘폭동’의 확증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관헌조차 믿지 않았던 신문기사에 나타난 조선인 폭동의 기사”를 근거로 하는 “구도의 견해는 극도로 무리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한다.[8] 또 가토는 본서가 이용한 사료에는 여러 가지 ‘트릭trick’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수법으로서 “인용 사료의 자의적인 절취”와 “원문을 (중략)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슬쩍 절단하며”, 나아가 “원전에 없는 것을 ‘참조’”하는 행위 등을 들고 있다.[9] 요컨대, 그 자체가 유

---

5) 「平成二九年第一回定例会第四号」(2017년 3월 2일). 그리고 본 보고에서는 희생자 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했다. 공문서에 기재된 희생자 숫자만을 ‘사실’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후에도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데, 예컨대 NHK 종합텔레비전에서 2023년 1월 16일에 방송된 「映像の世紀バタフライエフェクト　危機の中の勇気」의 내레이션에서는 관동대지진에 대해 언급하면서 “혼란 속에서 각지에서 조선인이 습격당했다. 사법성의 조사에 따르면, 희생자 수는 231명에 이르렀다. 그런 한편, 샌프란시스코와 마찬가지로 서로 도우는 사람들의 모습도 여기저기에 있었다.”라고 하여, 학살 희생자를 수천 명으로 보는 현재의 연구에 비해 극히 적은 희생자 수를 채택하고 있다. 진재 후의 진상규명을 일본 정부가 방해한 것을 감안하면, 이런 공문서 중심주의는 오히려 피해 실태의 왜소화로 귀결될 것이다. 이 논점에 대해서는 田中正敬 전게 논문 47쪽, 田中正敬, 「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とその犠牲者をめぐって」(専修大学人文科学研究所 편, 『移動と定住の文化誌 人はなぜ移動するのか』, 彩流社, 2011년), 山田昭次, 『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とその後　虐殺の国家責任と民衆責任』(創史社, 2011년), 鄭永寿, 「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に対する植民地期在日朝鮮人運動と100年目の課題」(『人権と生活』 제56호, 在日本朝鮮人人権協会, 2023년) 외에 후술하는 가토 나오키(加藤直樹)씨의 저작도 함께 참조해주기 바란다.

6) 「令和五年第一回定例会（第二号）」(2023년 2월 21일), 「東京都議会」 HP 중의 회의록 검색 시스템(https://www.record.gikai.metro.tokyo.lg.jp)에서 열람(2023년 7월 21일 최종 확인). 이하 도쿄도의회 중의 발언에 대해서는 모두 동 HP에서 열람했다.

7) 山田昭次, 「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は「正当防衛」ではない　工藤美代子著『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の真実』への批判」(『世界』 제809호, 2010년 10월), 加藤直樹, 『トリック　「朝鮮人虐殺」をなかったことにしたい人たち』(ころから, 2019년).

8) 야마다, 전게 논문, 46쪽.

언비어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신문기사를 사료 비판 없이 사실(事實)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들 사료의 해석과 인용에도 최소한의 학술적인 룰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고자는 이들 비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실은 구도의 책에서 트릭이 장치된 사료는 그밖에도 존재한다. 그것은 관동대지진에 관한 영국 외교문서이다. 구도의 책에서는 신발견 사료라고 하면서, 영국국립공문서관(The National Archives, Kew. 이하 TNA라고 약기한다) 소장 외교문서 중 다음 3개의 사료를 사용하고 있다. 즉 문서(A) 「제국호텔에 숙박하게 된 미국인의 기록」(구도 책, 146~147쪽. 이하 구도 책에서의 인용은 쪽수만을 표기한다), 문서(B) 「1924년 12월 24일 도쿄 주재 영국대사관으로부터 본성(本省)에의 보고」(216~217쪽) 및 문서(C) 조선 독립운동에 관한 소책자(242~254쪽)이다. 이들 중 문서(C)는 영국 외교당국의 인식을 직접 보여주는 사료가 아니므로, 본 보고에서는 문서(A)와 문서(B)를 중심으로 구도의 사료 인용과 해석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 2. 영국 외교문서 속의 관동대지진

### (1) 제국호텔의 공포체험기?

우선은 구도 책에서 문서(A)의 자리매김에 대해 확인하기로 한다. 이 문서는 「제4장 '습래보도(襲來報道)'를 막은 고토 신페이(後藤新平)의 속내」에서 사용되고 있다. 구도는 「제국호텔의 공포체험기」라는 제목을 붙인 부분에서 "두 명의 미국인 여행자가 요코하마에서 재난을 당했는데, 호기심도 있어서 도쿄로 가서 제국호텔에 투숙했다. 실제로 그들이 본 현실이 어떠했는지 실정(實情)을 엿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문서(A)를 소개한다.[10] 인용부분 중에서 조선인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안은 인용자).

> 요코하마의 황폐를 관찰한 후 두 사람은 도쿄로 향해, 오후 7시에는 시나가와에 도착했다. 여기서 4마일 앞에 있는 제국호텔까지 가줄 택시를 잡았다.
> '조선인'과 '빨갱이[赤]'에 대해서는 설명할 가치가 있다. 과거 수년 사이에 다수의 조선인이 노동력으로 일본에 유입되었다. 또 일본 군대에는 시베리아에서 귀국하여 볼셰비키의 영향을 받은 병사들도 있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 [중략]
> 3일, 월요일 밤 10시 20분경 호텔 관리부에서 모든 객실의 불(작은 양초였다)을 끄라는 연락이 군부에서 왔다고 전했다.
> 조선인과 빨갱이가 10분 이내에 습격해 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 그리고 호텔에서 야영하고 있던 여러 부대는 머신건을 보급받았다.

구도의 책은 이 문서(A)를 여행자들이 조선인의 습격에 공포를 느낀 '증거'라고 본다.

9) 가토, 전게서, 97쪽, 101~102쪽.
10) 구도, 전게서, 146쪽.

그것은 “제4장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진재 당일 일본에 있던 외국인 여행자의 체험에서도 이야기는 거꾸로이다. 제국호텔에 피난한 외국인 손님도 조선인의 습격에 공포의 밤을 보냈다.”(216쪽)라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도 분명하다. 요컨대, 일본인이 조선인을 학살한 것이 아니라, ‘역’으로 조선인이 일본인을 습격한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한다.

그러나 과연 이 문서가 전하는 것이 조선인의 ‘습격’ 사실일까? 이 물음을 검토하기 위해 우선 어떤 목적에서 이 문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해 두기로 한다.

### (2) 존、W、도티의 보고서

이 문서는 요코하마 주재 영국총영사관 문서의 「잡찬(雜纂, Miscellaneous)」(FO 908) 중의 「지진보고(Earthquake repots)」(FO 908/6)에 수록되어 있다.[11] FO 908/6에는 주로 영국총영사관의 로버트 볼터(Robert Boulter) 총영사 대리가 찰스 엘리엇(Charles Eliot) 주일대사 및 본성에 보내는 보고를 위해 작성한 보고서(안)와 관련 자료, 서간 등 총 188매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그중 구도 책이 「공포체험기」라고 부른 문서는 존、W、도티(John W. Doty)가 볼터에게 보낸 「1923년 9월 1일 요코하마、도쿄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과 화재에 관한 보고」(이하 도티 보고라고 한다)의 일부이다.[12]

도티는 뉴욕에 본사를 둔 파운데이션 컴퍼니(Foundation Company)의 사장이었다[13](단, 볼터에 따르면 도티는 영국 국적이다[14]). 이 회사는 1902년에 설립된 교각과 건물의 기초 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다.[15] 도티가 방일한 것은 1923년 7월 23일이며, 방문 목적은 이 회사와 도쿄지하철도주식회사의 투자 협상을 위해서였다. 또 방일을 보도한 『도쿄아사히신문』이 “박사는 지하철도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로 뉴욕, 워싱턴, 시카고 등은 모두 박사가 설계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듯이 그는 지하철 설계자로 널리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16] 도티는 중국의 전기사업 시찰을 위해 일단 8월 4일 일본을 떠났지만, 8월 중순에 다시 방일하여 도쿄의 지하철사업에 2,000만 엔을 투자하기로 약속하고, 9월 1일 일본을 떠날 예정이었다.[17]

1923년 9월 1일 투자 협상을 마친 도티가 승선한 것은 대형 여객선 엠프레스 오브 오스트레일리아(Empress of Austrailia)호이다. 이 배는 Canadian Pacific사가 운항하는 캐나다 선적의 증기선으로, 1923년 9월 1일 홍콩에서 요코하마에 입항하여, 그날 밴쿠버

---

11) 그리고 구도는 이 문서의 출전으로 「『ロンドン・ナショナル・アーカイブス所蔵』File No. FO/3160」라고 하고 있지만(148쪽), 「File No. FO3160」이라는 파일 번호는 존재하지 않는다.

12) John W. Doty, W. W. Johnston “Report on Earthquake and Fire Which Occurred in the Vicinity of Yokohama and Tokyo, September 1, 1923”, FO 908/6, TNA.

13) Letter from John W. Doty to Charles E. Hughes, 1923/10/10., FO 908/6, TNA.

14) Enclosure 1 in No. 1, Acting Consul-General Boulter to Sir C. Eliot. (No. 66.), 1923/12/21, FO 908/6, TNA.

15) “Guide to The Foundation Company Records”, *Smithsonian Institution,* https://sova.si.edu/record/NMAH.AC.0974.

16) 「東京の地下鉄道　設計に来たド博士」(『東京朝日新聞』, 1923년 7월 24일).

17) “Social and Local”, *Japan Times* 30 Jul. 1923. 도티의 방일과 투자 협상의 전말에 대해서는 野田正穂、原田勝正、青木栄一 편, 『大正期鉄道史資料〈第2集〉国有・民有鉄道史　第8巻　東京地下鉄道史（乾）』(日本経済評論社, 1983년) 290－291쪽을 참조

로 떠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기항 중에 대지진을 만나, 도티도 배 안에서 대지진을 경험하게 되었다.[18] 연안에서 옮겨붙는 불길을 막기 위한 진화 활동이 9월 2일 드디어 성공하고, 이후에는 피난민 구조의 거점이 되었다.

그러면 왜 도티는 총영사 대리에게 보내는 보고서를 작성했을까? 후술하는 것처럼 그는 지진 발생 직후인 9월 3일, 파운데이션 컴퍼니사의 기술자[19] 존스턴(W. W. Johnston)과 함께 도쿄로 가게 되는데, 그때 만난 미국 대사로부터 피해 상황을 국무장관에게 보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래서 도티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 보고 들은 것은 바탕으로 밴쿠버로 향하는 배 안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10일 휴즈 국무장관에게 송부한 것이다.[20] 보고서는 영국 총리, 캐나다 총리, 볼터 총영사 대리에게도 보내졌기 때문에 요코하마 총영사관문서에도 남게 되었다. 이것이 도티 보고가 작성된 경위이다.

도티 보고는 3부로 나뉘는데, 제1부는 지진과 화재 손해의 개요 및 구제를 위한 제안, 제2부는 1923년 9월 2일 현재 요코하마 부근의 사망자, 행방불명자, 생존자 리스트(단, FO 908/6에는 표지만 있고 본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3부가 도티와 존스턴의 일기(이하 도티/존스턴 일기라고 약칭한다)와 관찰 기록이며, 부록으로 '엠프레스 오브 오스트레일리아'호 함장이 볼터 총영사 대리에게 보내는 서한, 피해 지도, 요코하마만의 스케치, 도쿄 지도, 요코하마·도쿄의 피해를 보여주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 (3) 도티/존스턴 일기에 보이는 1923년 9월 3일의 '체험'

구도의 책이 이용한 문서(A)는 도티 보고의 제3부에 있는 일기이다. 일기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일어난 일을 2단 구성으로 10쪽에 걸쳐 기록한 것으로, 전술한 구도 책의 인용보다 훨씬 분량이 많다. 문제는 어떤 사실이 생략되어 있는가이다. 자세하게 일기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21]

도티와 존스턴은 '엠프레스 오브 오스트레일리아'호의 화재가 일단락된 9월 3일 12시 45분, 요코하마와 도쿄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여 미국 대사에게 보고하기 위해 하선한다. 동행인은 두 명의 일본인 통역이다.

두 사람이 항구에 내리자, 곧바로 총으로 무장한 자경단으로부터 "조선인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오른팔에 흰색이나 녹색 밴드를 두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22] 그 후 두 사람은 항구 주변과 요코하마시 청사, 상공회의소, 요코하마쇼킨은행(横浜正金銀行, 이곳에서 50구의 불에 타죽은 사체를 목격)을 돌아, 사쿠라기초역(桜木町駅), 요코하마역(이 부근에서도 질식사, 불에 타죽은 사체를 목격)을 거쳐 가나가와에서 가와사키(川崎)로 향했다. 그리고 로쿠고가와(六郷川)를 건너 시나가와역(品川駅)에 도착한 것이 오후 19시였다. 항구

18) "Shipping Movement Yokohama", *Japan Times* 29 Aug. 1923.
19) Letter from John W. Doty to R. Boulter, 1923/10/11, FO 908/6, TNA.
20) Letter from John W. Doty to Charles E. Hughes, 1923/10/10., FO 908/6, TNA.
21) "Part III Joint diary and personal observations of John W. Doty and W. W. Johnston, who were due to leave Yokohama as passengers on the "Empress of Australia" September 1st", 1923., FO 908/6, TNA
22) *Ibid.*, p.19.

를 나선 지 6시간 이상 경과했으므로, 도보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자면, 두 사람의 통역은 요코하마에서 4마일 이동한 지점에서 "우리를 내버려두고 가버려, 그곳부터는 통역이 없는 상태였다."라고 한다.[23]

시나가와역에서 택시를 잡는 데 성공한 두 사람은 제국호텔로 향하지만, 그때 그들은 다음과 같은 끔찍한 체험을 하게 된다.[24]

> 택시에 타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몇 차례나 자위단이나 자경단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정지당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칼이나 날카로운 죽창, 혹은 머스킷musket총으로 무장한, 매우 흥분하여 공포에 가득 찬 젊은이들이었다. 이들 집단에는 어떤 리더나 규율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각자가 개인적으로 면식이 없는 통행인들에게 한껏 성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그 사이 한번은 그들이 우리 차에 올라타, 계속 "조선인이다"라고 외치며, 혼신의 힘을 다하여 운전기사를 거기서 끌어내려고 했다. 다행히 그들 중 한 사람이 영어를 알았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그 자리에서 총을 맞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이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패닉에 빠져 있었을까? 일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25]

> '조선인'과 '빨갱이'에 관한 패닉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다. 과거 수년 사이에 다수의 조선인이 노동력으로 일본에 유입되었다. 또 일본 군대에는 시베리아에서 귀국하여 볼셰비키의 영향을 받은 병사들도 있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그리고 그들 '조선인들'은 일본의 대도시로 흩어져 주민들의 무해(無害)한 일부가 되었다. 그러나 많은 음모가 끊임없이 소수의 조선인들을 요구하고 있었다. 일본군 병사가 시베리아에서 돌아온 이후 그 병사의 상당수가 볼셰비키 사상으로 전향하기 시작함으로써, 볼셰비키와 적군(赤軍)의 위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그래서 일본에서 일어난 모든 무질서와 잔학행위를 조선인이나 볼셰비키, 혹은 두 쪽 모두 때문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지진 직후부터 모든 피해지에 잔학행위의 황당무계한 소문이 유포되어, 당국의 양해 유무(有無)와 관계없이, 패닉에 빠진 자경단의 눈에 띈 조선인들은 곧바로 살해되었다. 그리하여 수백 명의 무고[無實]한 조선인과 우연히 혼자였기 때문에 신원을 증명할 수 없었던 일본인들까지 살해되었다.

두 사람은 19시 45분 간신히 제국호텔에 도착했다. 미국 대사관이 소실되어, 대사는 호텔에 본부를 두었지만, 외출하고 없었다. 그래서 다시 자동차로 거리에 나갔지만, 그때도 '200피트마다' 자경단이나 병사에게 정지당해 수하를 받았다.[26] 21시 30분 호텔에 돌아오자, 이번에는 호텔 경영자가 "조선인과 빨갱이가 10분 이내에 공격할" 것이므로 객실의 불을 끄라는 군의 명령을 전달했다.[27] 22시 20분의 일이었다. 호텔 주변의 부대는 기관총

23) *Ibid.*, p.21.
24) *Ibid.*, p.21.
25) *Ibid.*, p.21.
26) *Ibid.*, p.21.
27) *Ibid.*, p.22.

으로 무장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튿날 9월 4일, 두 사람은 격렬한 여진의 충격으로 새벽에 눈을 떴다. 오전에는 인력거로 호텔 주변을, 그리고 자동차로 도쿄의 각지를 돌아보았다. 드디어 우즈 미국 대사를 만난 것은 오전 10시였다. 도티는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도쿄에 남겠다고 했지만, 대사는 곧바로 피해 상황을 국무장관에게 전해 달라고 요청하여, 두 사람은 요코하마로 돌아와 '엠프레스 오브 오스트레일리아'호에 승선하였다. 그리고 도티는 9월 5일부터 요코하마에서 미국인이 만든 구조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후, 9월 12일 밴쿠버를 향해 출항하여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보고서의 집필에 착수하게 된다.

이상이 도키/존스턴 일기에 기록된 진재 직후 두 사람의 발자취이다.

### (4) 도티/존스턴 일기와 구도의 「개요」의 낙차

일기에 남겨진 9월 1일부터 4일까지 요코하마、도쿄에서의 체험과 전술한 구도 책의 「개요」를 비교하면 무엇이 보일까? 우선 확인해 두어야 할 것은 도티/존스턴 일기가 단순한 "두 사람의 미국인 여행자"의 견문록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은 도티가 미국 대사의 요청에 따라 기록한 보고서의 일부이며, 나아가 구도의 책에서는 "호기심도 있어서 도쿄로 가서 제국호텔에 투숙했다"라고 마치 구경 삼아 간 것처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요코하마와 도쿄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도쿄로 간 것이었다.

다음으로, 구도의 책에서는 9월 3일 요코하마와 도쿄에서 두 사람이 경험한 것이 완전히 왜곡되어 '인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도의 「개요」에서는 일기가 자세하게 기록한 자경단의 행동이 거의 빠져 있다. 항구에서 조선인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밴드를 하라는 말을 들은 것, 시나가와에서 제국호텔까지 가는 길에서 자경단의 검문을 받았고, 택시기사가 살해될 뻔한 것 등이 그것이다.

오히려 도티/존스턴 일기가 주목하는 것은 조선인과 사회주의자에 대한 일본인의 패닉이다. 실제로 일기는 조선인의 폭동이나 습격에 대한 공포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일기 중의 「지진과 화재의 영향 및 도쿄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관찰」에서도 도쿄의 피난민들이 "낮에는 자신들의 운명에 납득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밤이 되면 요코하마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조선인'과 '빨갱이'의 공포로 많건 적건 패닉 상태가 되었다."라고 오로지 민중의 패닉에 대해 기재하고 있다.[28] 한편, 구도 책이 '공포체험'의 근거로 삼고 있는, 9월 3일 밤 호텔을 통한 군으로부터의 '조선인 습격' 통지(이 사실은 다른 의미에서 극히 중요하다)에 대해서는 일기에 감상이 적혀 있지 않다. 두 사람은 '제국호텔의 공포체험'에 떤 것이 아니라, 자경단의 폭력과 그것을 보고도 못본 체 하는 일본 경찰에 '공포'를 느낀 것은 아닐까?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도티/존스턴 일기에 있는 자경단의 패닉과 조선인에 대한 학살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완전히 생략한 점이다. 즉, 보고는 조선인은 일본의 "무해한 일부"였지만, 시베리아 출병 후에 혼란이나 잔학행위를 조선인이나 사회주의자에게 전가하려는 풍조가 생겨, 그것이 피해지에서 "황당무계한 소문"의 유포와 "무고[無實]한 조선인"이 수

28) *Ibid.*, p.23.

백 명 살해되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구도 책은 이 부분을 완전히 생략한 다음, 원문에서는 "'조선인'과 '빨갱이'에 관한 패닉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에 관한 패닉"을 생략했기 때문에, 마치 일기 작성자가 조선인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편집'되어 있다. 극히 악질적인 개찬(改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5) 조선인 학살을 믿는 "해외 영사관은 없었다"?

다음으로 문서(B)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구도는 본서에서 이 문서를 근거로 조선인 학살을 사실이라고 인식한 "해외 영사관은 없었다."라고 주장한다.[29] 근거로 삼은 것은 다음 기술이다.

> 그러나 시내에서는 극소수의(원문은 a few) 조선인이 사람들에게 살해된 것처럼 보입니다. 조선인 노동자입니다. 조선인 중에는 얼마간 불평분자가 있어서 그들이 방화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서가 살해된 조선인을 'a few'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도는 "영국대사관에서는 2, 3명 정도가 살해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도쿄의 영국대사관의 조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정보 수집 능력이 뛰어났을 터"이기 때문에 살해인 숫자에 대해서도 정확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그 여세를 몰아 당시 재일 조선인이 조사한 학살자 수는 과장된 숫자라고 주장한다.[30]

그러나 이 문서(B)의 해석과 인용에도 문제가 있다. 우선 이 문서를 구도는 "1923년 12월 24일 도쿄 주재 영국대사관이 본성에 보낸 보고"라고 하고 있지만, 부정확하다. 정확하게는 이 기술은 1923년 12월 21일부로 도쿄 주재 영국영사 대리 맥레이(H. A. Macrae)가 작성한 「1923년 9월 1일의 지진과 화재의 영향에 대한 보고」(이하 맥레이 보고)에 있다.[31] 맥레이가 엘리엇 주일대사에게 문서를 제출한 날짜가 12월 24일이며, 다시 엘리엇이 커즌 외무장관에게 송부한 것이 12월 27일이었다.[32]

다음으로 구도는 맥레이 보고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생략하고 있다. 위의 기술은 보고 중에서 「구조 조치(Relief Measure)」 절(節)에 있는데, 서두에서 맥레이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안은 원문).

> 당국은 곧바로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했다. 계엄령이 발포되어 군에 의한 효과적인 조치 덕분에 심각한 폭동이나 약탈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도시에는 상당수의 노선인 노동자가 있는데, 어느 지역의 폭도가 건물에 방화했다고 비난한 사람들 중 몇 명을 살해한 것이 확인되었다. 조선인 중에도 방화 범죄를 저지른

29) 구도, 전게서, 216쪽.
30) 상게서, 217쪽.
31) "Report on the Effects of the Earthquake and Fire of September 1, 1923", FO371/10305, TNA.
32) From Sir C. Eliot to the Marquess Curzon of Kedleston. FO371/10305, TNA.

불만분자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일본인은 노동시장에서 조선인과의 경쟁에 분개하고 있어서, 흥분과 혼란이 만연하는 가운데 일본인 일부는 외국인을 배제할 기회를 얻었을 것이다. 몇 명의 중국인도 조선인과 운명을 같이한 것 같다.

[The authorities at once took steps for the preservation of law and order. Martial law was declared, and, owing to the effective measure taken by the military, there was no serious rioting or looting. There were, however, in the city considerable numbers of Korean labourers, and it appears to be established that the mob in certain localities murdered a few of these people, whom they accused of setting fire to buildings. It is possible that there were among the Korean certain malcontents who were guilty of incendiarism, but the Japanese in any case resent the competition of the Koreans in the labour market, and in the prevailing excitement and confusion some of the Japanese probably took the opportunity of ridding themselves of the foreigner. Several Chinese appear to have shared the fate of the Koreans.]

위에서 언급한 구도의 문장과 비교하면 분명한 문제점이 두 개 있다. 첫째, 원문이 지역을 한정하여 폭도(mob)가 몇 명의(a few) 조선인을 살해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고 있는 데 반해, 구도는 "the mob in certain"을 번역하지 않고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맥레이가 살해자 측을 '폭도'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이 은폐되었고, 나아가 마치 도쿄 전역에서 몇 명의 살해만 확인된 것처럼 인용되어 있다. 둘째, 인용문 중 원문의 "but" 이하 밑줄 친 부분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맥레이 보고서가 조선인에게 반감을 품고 있던 일본인이 진재를 기회로 삼아 이 사람들을 배제하려 한 데서 이러한 사태의 원인을 찾은 것이 완전히 은폐되어 버리고, 오히려 조선인의 방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원문이 왜곡되고 있다.

또 구도는 영국대사관의 정보 수집 능력이 뛰어났다고 주장하지만, 진재 직후 도쿄와 요코하마의 영사관도 피해를 입었고, 영사들의 관심도 오로지 자국민 보호에 있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맥레이 보고는 학살을 부정한 기록이 아니라, 이러한 혼란 상황에 있으면서도 영국 영사가 조선인이 '폭도'에게 살해된 사례를 확인한 사례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당시 영국 영사가 작성한 기록으로부터는 영국 외교당국이 조선인 학살을 사실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전술한 요코하마 주재 영국영사관의 로버트 볼터 총영사 대리가 1923년 12월 19일에 작성한 「1923년 9월 1일 요코하마의 지진、화재 및 그 후의 경과에 관한 보고」(이하 볼터 보고)는 제8장 「무질서(Disorder)」에서 지진 발생 직후 요코하마에서 유포된 '소문'과 조선인에 대한 박해가 언급되어 있다.[33]

볼터 보고는 유럽인의 생명을 위험에 직면하게 하는 혼란이 존재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는 한편, "혹독한 체험으로 신경이 곤두선 난민(難民)으로 구성된 공동체에서는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지만"이라고 유보한 다음, 지진 발생 직후에 소문이 확산된 것,

33) "Report of the Earthquake and Fire at Yokohama on September 1, 1923 and Subsequent Events" By Mr. R Boulter, Acting Consul General, FO 908/6, TNA.

그리고 전보 등의 통신수단이 단절된 상태에서는 그 소문에 반론할 방법이 없었다고 지적한다.[34] 구체적으로 볼터는 9월 1일 밤에 조선인이 방화했다, 우물에 독약을 던졌다. 혹은 여성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등의 소문을 들은 이외에, 이튿날 2일 저녁에는 1명 혹은 그 이상의 경찰관이 살해된 것이 목격되었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4, 5명의 조선인이 살해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다만, 이들 소문에 대해 보고서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고 있다).

또 조선인에 대한 박해에 대해 볼터 보고는 다음과 같은 증언을 소개하고 있다.[35]

> 일본에 20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영국인의 말에 따르면, 9월 4일 혹은 5일에 조선인 1명이 철사로 꽁꽁 묶여, 그 철사가 그 남자를 처참하게 잘라 죽일 때까지 죄어지는 것을 실제로 봤다고 한다. 또 다른 사람은 기둥에 묶여 죽을 때까지 날카로운 죽창으로 찔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것을 한 사람은 25세가량의 일본인으로, 경찰관은 보고 있었지만, 참가하지는 않았다. 현장은 요코하마 근교의 철포장(鐵砲場) 근처 경찰서 앞이었다. 정보 제공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당시 일본옷을 입고 있었다고 한다. 나는 정보원으로서의 그의 신뢰성을 보증할 수 없다.

볼터는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유보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재 때의 '무질서'를 보여주는 증언으로 보고서에 기재한 것을 보면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아닐 것이다.

또 영국 외교당국의 학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엿볼 수 있는 것이 1924년 1월의 서면 질문에 대한 회답이다. 1월 17일 허드슨(James Hindle Hudson) 의원은 서면 질문에서 지진 후 노동조합원과 외국인에 대한 학살 및 폭동, 그리고 영국인의 피해에 대해 맥닐(Ronald Mcneill) 외무정무차관에게 물었다.[36] 질문을 받고 작성한 회답 초안은 다음과 같다.[37]

> 공산주의자 선동가였던 오스기 사카에(大杉栄)와 그 가족이 헌병대장에게 살해된 사건(F.3457 참조)을 제외하고는 지진 직후에 일어난 학살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다. 알고 있는 것은 지진 후에 패닉이 일어난 것, 조선인과 공산주의자의 활동에 대해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확산된 것, 보복으로 많은 조선인(many Koreans)과 몇 명의 유명한 공산주의자가 살해된 것, 조선인으로 간주되거나 공산주의자로 보였기 때문에 많은 일본인과 중국인이 같은 운명을 걸었다는 것뿐이다(F.3234). 죄가 있는 인물은 가능한 한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고 있다. 그들은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현지의 청년단 멤버이다.
>
> 요코하마에서는 상당한 약탈이 있었는데, 특히 외국인 집에 대한 것이 많았다. 부상당한 영국인은 없다.

34) *Ibid.*, p.20.
35) *Ibid.*, p.20.
36) "Disorders in Japan after earthquake", FO371/10305, TNA.
37) *Ibid.*

이 초안을 바탕으로 맥닐은 1월 21일 “도쿄와 그 주변에서는 조선인과 일본의 공산주의자가 수도에서 문제를 일으키려 한다는 소문으로 인한 패닉의 결과, 몇몇 학살이 이루어진 것 같다. 영국인에게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요코하마의 외국인 주택에서는 어느 정도의 약탈이 있었다.”라고 간결하게 회답하고 있다.[38]

이상으로부터 구도의 조선인 학살을 사실로 인식한 “해외 영사관은 없었다.”라는 기술은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기는커녕 오히려 영국 외교당국은 “많은 조선인”이 살해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3. 맺음말을 대신하여

일찍이 피에르 비달 나케(Pierre Vidal-Naquet)는 대화의 전제에는 “진리에 대한 공통의 경의”가 존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39] 그러므로 그런 전제가 결여된 역사수정주의자와의 ‘대화’는 성립될 리가 없으며, 그런 주장을 ‘학설’인 것처럼 인정하는 것은 그런 대화의 토대 그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본 보고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도의 책에는 사료의 인용과 해석, 비판 등 극히 심각한 결함이 있으며, 그 ‘폭동 실재설’은 실증에 입각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자신의 편의에 맞춰 사료를 자의적으로 인용、편집한 결과, 실제 내용과는 정반대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마저 있다. “실증적인 논증을 완전히 결여한 비학문적인 저작”(야마다 쇼지)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40]

그리고 다른 사료의 취급과 마찬가지로, 영국 외교문서에 관한 구도 책의 취급도 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밝혀졌다. 도티와 존스턴이 1923년 9월 3일 요코하마와 도쿄에서 체험한 것, 그리고 그 체험에 입각한 기록은 구도의 악질적인 사료 편집과 개찬에 의해 여행자들이 조선인의 습격에 공포를 느낀 ‘공포체험’이란 것으로 바뀌어 버렸다. 구도는 도티/존스턴 일기를 통해 “실제로 그들이 본 현실이 어떠했는지 실정을 엿볼 수 있다.”[41]라고 하지만, 이 책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들이 본 현실’을 자기의 주장에 맞게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또 조선인 학살을 사실로 인식한 “해외 영사관은 없었다”는 주장도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오히려 영국 외교당국은

38) 서면 질문장 및 회답은 영국 의회 의사록 Hansard의 web 페이지(https://hansard.parliament.uk/Commons/1924-01-21/debates/45144a54-9ea3-42a9-8321-bee1e3b542ce/Japan(EarthquakeVictims)?highlight=earthquake#contribution-f2a794ea-9467-43b6-a161-6561ca55a344 ) 에서 열람 ( 2023년 7월 25일 최종 확인).

39) ピエール・ヴィダル=ナケ ( 石田靖夫訳 ) (『記憶の暗殺者たち』, 人文書院, 1995년) 9~10쪽.

40) 야마다, 전게 논문, 49쪽. 야마다 쇼지씨의 이 지적의 역점은 “실증적인 논증을 완전히 결여한 비학문적인 저작인” 것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현재 그것을 방치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경고 쪽에 두어져 있다. 그것은 야마다씨가 이 책을 성립시키고 있는 ‘사상적 동향’이 조선학교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 그리고 정부의 조선고교 무상화 제외 조치로 현대에 나타나고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고이케 도지사가 추도문 송부를 중지한 것은 이 보고로부터 7년 후의 일이었다.

41) 구도, 전게서, 146쪽.

“많은 조선인”의 살해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이런 주장을 전개하기 위해 구도가 사료를 악질적으로 편집하고 개찬하여, 그들 사료가 본래 갖고 있던 풍부한 내용을 왜곡해 버린 점이다.

관동대지진으로부터 100년이 지난 현재, 일본의 정치와 사회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치졸한 ‘역사수정’을 통해 조선인 학살을 정당화하는 데마고기에 입각한 저작이기 때문에 사태는 극히 심각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본 사회에서 학살을 부정하는 목소리가 고조되는 와중에 공인(公人)이 “여러 가지 내용이 사실(史實)로서 발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학살 부정론을 하나의 ‘사실(史實)’의 기술로 인정하는 것으로, “진리에 대한 공통의 경의”가 결여된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에서는 학살 부정론을 바탕으로 한 질문에 이해를 표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학살을 사실로 인정하는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내용이 사실로서 발표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회답을 피하는 자세는 ‘중립’을 가장한 언사와는 반대로, 마음속에서는 학살 부정론에 공감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도 어쩔 수 없다.[42]

42) 2022년에 일어난 공익재단법인 ‘東京都人権啓発センター’ 개최 예정의 기획전을 둘러싸고 발생한 검열사건은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해 5월 도쿄도 인권시책 담당자는 동 센터의 기획전 담당자에게 메일로 기획전 출품작품(미술가 이이야마 유키[飯山由貴]씨의 작품)에 관동대지진 후의 조선인 학살을 사실이라고 한 인터뷰가 있는 것에 언급하면서 “도쿄도에서는 이 역사인식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고이케 지사가 추도문을 보내지 않고 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도지사가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학살을 ‘사실(事實)’이라고 발언하는 동영상을 사용하는 데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 후 센터는 “재일 코리안의 어려움에 초점이 맞춰 있어서 기획전의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상영 연기 의향을 전달하고, 도쿄도가 중지를 결정했다. 메일 내용으로부터 저간의 도지사의 자세가 이런 조선인 학살 언급에 대한 검열의 배경에 있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다. 이 검열사건에 대해서는 飯山由貴, 「東京都人権部による歴史否定と在日コリアンへの差別を理由とした『検閲・上映中止決定』が明らかにしたこと」(『人権と生活』, 제56호, 在日本朝鮮人人権協会, 2023년)을 참조.

# 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否定論批判
## ーイギリス外交文書の朝鮮人関連記録を読み解くー

鄭栄桓(明治學院大)

## 1. 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否定論とイギリス外交文書

本報告の課題は近年の日本における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否定論（以下、否定論）の重要な発信源となっている工藤美代子『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の真実』（産経新聞出版、2009年）の批判的な検証を行うところにある[1]。

本書は、朝鮮人虐殺は「なかった」、と主張する虐殺否定論の著作であるが、そのレトリックは次のようなものだ。すなわち、震災当時、実際に朝鮮人は「摂政宮を暗殺しようとまで画策」しており、「そうした国難を回避するための戒厳令であってみれば、『朝鮮人虐殺』などといわれる筋合いは微塵もない。その意味では『虐殺はなかった』し、あったとすればそれは『虐殺』ではなく、国家の自衛権行使だといっていい」と主張する[2]。そして「テロリストを『虐殺された』とはいわないのが戒厳令下での国際常識だ」と断定する[3]。つまり本書の核心は、「朝鮮人を殺さなかった」という意味での虐殺否定論ではなく、「殺したが正当な殺人であった」とする虐殺の正当化論なのである。

朝鮮人虐殺問題の先行研究をほぼ全面的に否定する主張を展開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本書は刊行以来少なくない政治的・社会的影響力を及ぼしてきた。その一例が小池百合子東京都知事の朝鮮人犠牲者追悼式典への追悼文送付中止である。小池都知事は2017年に歴代の都知事が続けてきた朝鮮人犠牲者追悼式典への追悼文送付を中止して以来6年連続で追悼文を送っていないが、田中正敬によれば、中止決定のきっかけは、2017年3月2日の本書の記述を根拠にした古賀俊昭都議（自由民主党）による都議会での一般質問であった[4]。古賀都議は横網町公園内にある朝鮮人犠牲者追悼碑の「誤った策動と流言蜚語のため六千余名にのぼる朝鮮人が尊い生命を奪われました」との碑文を問題視し、「六千余名」は「根拠が希薄な数」であること、また、朝鮮人が「当時皇太子殿下であった後の昭和天皇のご成婚に合わせての危害行動を準備」したと主張して朝鮮人暴動は「流言蜚語」ではなく事実であると述べ、追悼文送付の中止を求めた[5]。その際、古賀都議が「小池知事にぜひ目を通してほしい本」とし

---

1) なお本書は後に、著者名を夫の加藤康男名義に、タイトルを『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はなかった！』に替えてWACより2014年に再度刊行されている。加藤・工藤両氏の合意の上で再刊されたのだとすれば、いずれかがゴーストライティングをした、ということになろう。

2) 工藤美代子氏の著作『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の真実』産経新聞出版、2009年、270頁。

3) 同前書、304-305頁。

4) 田中正敬「小池都知事の追悼辞送付取りやめとは何か　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をめぐって」『歴史学研究』第968号、2018年3月、47頁。

5) 「平成二九年第一回定例会第四号」（2017年3月2日付）。なお、本報告では犠牲者数の問題については触れ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公文書に記載された犠牲者数のみを「事実」とみなすべきとする主張はその後

て挙げたのが、ノンフィクションライターの工藤美代子の著作であった。これに対して、小池都知事は「今後につきましては、私自身がよく目を通した上で、適切に判断をいたします」と答弁し、その後、上述の通り追悼文送付中止が決定されたのである。

小池都知事は、今年2023年2月21日の定例都議会でも、朝鮮人虐殺事件についての質問に対し「関東大震災に関して、様々な内容が史実として書かれていると承知をいたしておりまして、何が明白な事実かにつきましては、歴史家がひもとくものだと申し上げております」と答弁し、虐殺問題について自らの認識を示すことを避けた[6]。ここでの「史実として書かれている」「様々な内容」とは、以上の経過からみて、古賀都議の開陳した朝鮮人被害者数をめぐる諸説と朝鮮人暴動を流言蜚語ではなく事実であるとする主張であることがわかる。もちろん小池は工藤の著作に直接言及したわけではないが、震災の「史実」に関して傾聴すべき「様々な内容」の一つとして否定論が扱われていることは確かである。

だが、本書は果たして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に関する「史実」を明らかにしたといえるのだろうか。本書に対してはすでに山田昭次や加藤直樹による周到な批判がなされている[7]。例えば山田は、工藤は9月2日から6日頃に発行された新聞記事を自説の根拠としているが、当時の官憲も新聞に報じられた情報を「暴動」の確証と見ておらず、「官憲すら信用しなかった新聞記事に現われた朝鮮人暴動の記事」を根拠とする「工藤の見解は、無理を極めたものと言わざるを得ない」と指摘する[8]。また、加藤は本書の用いた史料には様々な「トリック」が施されており、その手口として「引用史料の恣意的な切り取り」や、「原文を（略）と示さずにこっそり切り刻む」こと、さらには「原典が書いていないことを“参照”」する行為などを挙げる[9]。つまり、それ自体が流言蜚語を含んでいる可能性のある新聞記事について、史料批判無しに事実とみなす過ちを犯しており、さらにそれら史料の解釈や引用においても最低限の学術的なルールを守っていないのである。

報告者はこれらの批判に全面的に同意するものであるが、実は工藤の本において「トリック」を施された史料は他にも存在する。それは関東大震災に関連するイギリス外交文書であ

---

も影響力を増しており、例えばNHK総合テレビジョンにて2023年1月16日に放映された「映像の世紀バタフライエフェクト　危機の中の勇気」のナレーションでは、関東大震災に触れて「混乱のなか各地で朝鮮人が襲撃された。司法省の調べによると犠牲者の数は231人にのぼった。その一方でサンフランシスコと同じく、互いに助け合う人々の姿もここかしこにあった」として、虐殺による犠牲者を数千人とする今日の研究に比して極めて少ない犠牲者数を採用している。震災後の真相究明を日本政府が妨害したことをふまえるならば、こうした公文書中心主義はむしろ被害実態の矮小化に帰結することになろう。この論点については田中、前掲論文、47頁、同「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とその犠牲者をめぐって」、専修大学人文科学研究所編『移動と定住の文化誌　人はなぜ移動するのか』彩流社、2011年、山田昭次『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とその後　虐殺の国家責任と民衆責任』創史社、2011年、鄭永寿「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に対する植民地期在日朝鮮人運動と100年目の課題」『人権と生活』第56号、在日本朝鮮人人権協会、2023年のほか、後述の加藤直樹氏の著作もあわせて参照されたい。

6) 「令和五年第一回定例会（第二号）」（2023年2月21日）、「東京都議会」HP中の会議録検索システム（https://www.record.gikai.metro.tokyo.lg.jp）より閲覧（2023年7月21日最終確認）。以下、東京都議会中の発言についてはすべて同HPより閲覧した。

7) 山田昭次「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は「正当防衛」ではない　工藤美代子著『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の真実』への批判」『世界』第809号、2010年10月、加藤直樹『トリック　「朝鮮人虐殺」をなかったことにしたい人たち』ころから、2019年。

8) 山田、前掲論文、46頁。

9) 加藤、前掲書、97、101-102頁。

る。工藤本では新発見の史料と銘打ち、イギリス国立公文書館（The National Archives, Kew. 以下、TNAと略記する）所蔵の外交文書のうち、次の三つの史料を用いている。すなわち文書（A）「帝国ホテルに宿泊することになったアメリカ人の記録」（工藤本、146-147頁。以下、工藤本からの引用は頁数のみを記す）、文書（B）「1923年12月24日　在東京イギリス大使館より本省への報告」（216-217頁）及び文書（C）朝鮮独立運動に関する小冊子（242-254頁）である。このうち、文書（C）は直接にイギリス外交当局の認識を示す史料ではないため、本報告では文書（A）と（B）に中心に工藤の史料の引用と解釈の問題点について検討したい。

## 2. イギリス外交文書のなかの関東大震災

### (1) 帝国ホテルの恐怖体験記？

まずは工藤本における文書（A）の位置づけを確認しよう。この文書は「第四章　「襲来報道」を抑えた後藤新平の腹」にて用いられている。工藤は「帝国ホテルの恐怖体験記」との見出しをつけた箇所で、「二人のアメリカ人旅行者が横浜で被災し、好奇心もあって東京へ向い帝国ホテルに投宿した。実際に彼らが見た現実がどうであったのかという実情がうかがえる」として文書（A）を紹介する[10]。引用のうち、朝鮮人に関連する箇所は次の通りである（［ ］内は引用者）。

> 横浜の荒廃を観察した後に二人は東京へ向かい、午後七時には品川へ到着した。ここで四マイル先の帝国ホテルまで行ってくれるタクシーをつかまえた。
> 『朝鮮人』と『赤』については説明する価値がある。過去数年の間に多数の朝鮮人が労働力として日本に流入してきた。また、日本の軍隊には、シベリアから帰国してボルシェヴィキの影響を受けた兵たちもいるといわれていた。
> ［中略］
> 三日、月曜日の夜十時二十分頃に、ホテルの管理部からすべての部屋の灯り（小さなローソクだった）を消すようにと軍部からの報せがあったと言ってきた。
> 朝鮮人と赤が十分以内に襲撃してくるからとのことだった。
> それからホテルで野営をしていたさまざまな部隊はマシンガンを補給された。

工藤本はこの文書（A）をもって、旅行客たちが朝鮮人の襲撃に怯えていた「証拠」であるとする。それは「第四章でも紹介したように、震災当日在日した外国人旅行者の体験でも話は逆である。帝国ホテルに避難して来た外国人客も、朝鮮人の襲撃に怯えた夜を過ごしたのだ」（216頁）との解釈を示していることからも明らかである。つまり、日本人が朝鮮人を虐殺したのではなく、「逆」に朝鮮人が日本人を襲撃したことを示す証拠だというのである。

だが果たしてこの文書が伝えるのは、朝鮮人による「襲撃」の事実なのだろうか。この問

10）工藤、前掲書、146頁。

いを検討するため、まずはいかなる目的でこの文書が作成されたかを確認しておこう。

### (2) ジョン・W・ドーティーの報告書

この文書は、在横浜イギリス総領事館文書の「雑纂（Miscellaneous）」（FO　908）中の「地震諸報告（Earthquake reports）」（FO 908/6）に収録されている[11]。FO 908/6には主として在イギリス総領事館のロバート・ボールター（Robert　Boulter）総領事代理が、チャールズ・エリオット（Charles　Eliot）駐日大使及び本省への報告の為に作成した報告書（案）や関連資料、書簡など計188枚の文書が含まれる。このうち工藤本が「恐怖体験記」と呼んだ文書は、ジョン・W・ドーティー（John W. Doty）がボールターに送った「1923年9月1日に横浜・東京付近で発生した地震と火災に関する報告」（以下、ドーティー報告）の一部である[12]。

ドーティーはニューヨークに本社を置くファウンデーション・カンパニー（Foundation Company）の社長であった[13]（ただしボールターによればドーティーはイギリス国籍である[14]）。同社は1902年に設立された橋脚や建物の基礎の建設を専門とする会社である[15]。ドーティーが来日したのは1923年7月23日であり、その目的は同社と東京地下鉄道株式会社との投資交渉のためであった。また、来日を報じた『東京朝日新聞』が「博士は地下鉄道に対する世界的権威で紐育、ワシントン、シカゴ等はみな同博士の設計になったもの」と紹介しているように、彼自身は地下鉄の設計者として広く名を知られていた[16]。ドーティーは中国の電気事業の視察のため一旦8月4日に日本を離れたが、8月中旬に再び来日し東京の地下鉄事業に二千万円を投資することを約束し、9月1日に日本を離れるはずであった[17]。

1923年9月1日、投資交渉を終えたドーティーが乗船したのは大型客船「エンプレス・オブ・オーストラリア（Empress　of　Australia）」号である。同船はカナディアン・パシフィック社が運航するカナダ船籍の蒸気船で、1923年9月1日に香港より横浜へ来港し、同日にバンクーバーへ向かう予定であった。だが、不幸にも寄港中に震災に見舞われることになり、ドーティーもまた船内で大地震を経験することになる[18]。沿岸から燃え移る火の手を防ぐための消火活動がようやく9月2日に成功し、以後は避難民の救助の拠点となった。

---

11) なお、工藤はこの文書の出典として「『ロンドン・ナショナル・アーカイブス所蔵』File No. FO/3160」と記しているが（148頁）、「FO 3160」というファイル番号は存在しない。
12) John W. Doty, W. W. Johnston “Report on Earthquake and Fire Which Occurred in the Vicinity of Yokohama and Tokyo, September 1, 1923”, FO 908/6, TNA.
13) Letter from John W. Doty to Charles E. Hughes, 1923/10/10., FO 908/6, TNA.
14) Enclosure 1 in No. 1, Acting Consul-General Boulter to Sir C. Eliot. (No. 66.), 1923/12/21, FO 908/6, TNA.
15) “Guide to The Foundation Company Records”, Smithsonian Institution, https://sova.si.edu/record/NMAH.AC.0974.
16)「東京の地下鉄道　設計に来たド博士」『東京朝日新聞』1923年7月24日付。
17) “Social and Local”, Japan Times 30 Jul. 1923. ドーティー来日と投資交渉の顛末については、野田正穂、原田勝正、青木栄一編『大正期鉄道史資料〈第2集〉国有・民有鉄道史　第8巻　東京地下鉄道史（乾）』日本経済評論社、1983年、290－291頁を参照。なお、震災によりファウンデーション・カンパニーの東京地下鉄道への投資は白紙に戻された。
18) “Shipping Movement Yokohama”, *Japan Times* 29 Aug. 1923.

それでは、なぜドーティーが総領事代理宛の報告書を作成したのだろうか。後述するように彼は地震発生直後の9月3日、ファウンデーション・カンパニー社の技術者[19]のジョンストン（W. W. Johnston）とともに東京へと向かうことになるが、その際に会った米国大使より被災状況を国務長官に報告するよう要請される。このため、ドーティーは9月1日から12日までの見聞をもとにバンクーバーへと向かう汽船のなかで報告書を作成し、10月10日付でヒューズ国務長官へ送付したのである[20]。報告書はイギリス首相、カナダ首相、そしてボールター総領事代理にも送られたため、横浜総領事館文書にも残されることになった。これがドーティー報告作成の経緯である。

ドーティー報告は三部に分かれ、第一部は地震と火災の損害の概要と救済のための提案、第二部は1923年9月12日現在の横浜近辺の死者、行方不明者、生存者のリスト（ただしFO 908/6には表紙のみで本文が含まれていない）、第三部がドーティーとジョンストンの日記（以下、ドーティー／ジョンストン日記と略記する）と観察の記録となっており、付録として「エンプレス・オブ・オーストラリア」号艦長よりボールター総領事代理宛書簡、被害地図、横浜湾のスケッチ、東京の地図、横浜・東京の被害を示す写真が添付されている。

### (3) ドーティ / ジョンストン日記にみる1923年9月3日の「体験」

工藤本が用いた文書（A）は、ドーティー報告の第三部の日記である。日記は9月1日から12日までの出来事を2段組10頁にわたり記したもので、前述の工藤本の引用よりもはるかに分量が多い。問題は、どのような事実が省略されているか、である。詳しく日記の内容をみてみよう[21]。

ドーティーとジョンストンは、「エンプレス・オブ・オーストラリア」号の火災が一段落した9月3日12時45分、横浜と東京の被害状況を把握して米国大使に報告するために下船する。同行者は二人の日本人通訳である。

二人が港に降り立つと、ただちにライフルで武装した自警団に「朝鮮人と間違われないように右腕に白か緑のバンドを巻く」ことを指示される[22]。そこから二人は、港周辺と横浜市庁舎、商工会議所、横浜正金銀行（ここで50体の焼死体を目撃）を周り、桜木町駅、横浜駅（この近辺でも窒息死、焼死の遺体を目撃）を経て神奈川から川崎へと向かう。そして六郷川を渡り品川駅に到着したのは午後19時であった。港を出て6時間以上が経過しているため、徒歩で移動したものと思われる。ちなみに二人の通訳は横浜から4マイル歩いた地点で「私たちを置き去りにし、そこからは通訳がいない状態だった」という[23]。

品川駅でタクシーをつかまえることに成功した二人は帝国ホテルへと向かうが、そこで彼らは以下のような恐るべき体験をすることになる[24]。

---

19) Letter from John W. Doty to R. Boulter, 1923/10/11, FO 908/6, TNA.

20) Letter from John W. Doty to Charles E. Hughes, 1923/10/10., FO 908/6, TNA.

21) “Part III Joint diary and personal observations of John W. Doty and W. W. Johnston, who were due to leave Yokohama as passengers on the “Empress of Australia” September 1st”, 1923., FO 908/6, TNA.

22) *Ibid.*, p.19.

23) *Ibid.*, p.21.

乗車している間、私たちは何度も自衛団や自警団らしき人びとに止められた。この人々は主に剣や鋭い竹槍、あるいはマスケット銃で武装した、非常に興奮し恐怖に満ちた若者たちであった。これらの集団にはいかなるリーダーや規律がないように見えた。それぞれが個人的に面識ない通行人たちに、思い切り声を荒げていた。そのうちの一度、彼らは私たちの車に乗り込み、始終「朝鮮人だ」と叫びながら、渾身の力を込めて運転手をそこから引きずり出そうとした。幸い彼らのうちの一人は英語を理解したので、運転手が即座に撃たれなかった唯一の理由はこれだと私たちは判断している。

なぜ人々はこれほどのパニックに陥っているのだろうか。日記は次のように説明する[25]。

「朝鮮人」と「赤」に関するパニックについては少し説明する必要がある。過去数年の間に多数の朝鮮人が労働力として日本に流入してきた。また、日本の軍隊には、シベリアから帰国してボルシェヴィキの影響を受けた兵たちもいるといわれていた。そして彼ら［朝鮮人たちは］は日本の大都市へと散らばり、住民たちの無害な一部となった。しかし多くの陰謀は絶えず少数の朝鮮人たちを求めていた。日本軍兵士がシベリアから帰って以降、その兵士たちの多くがボルシェビキの思想に転向しはじめたことで、ボルシェヴィキや赤軍の脅威を懸念する声があり、そして、日本で起きたあらゆる無秩序や残虐行為を、朝鮮人かボルシェヴィキ、あるいは両方のせいにする傾向がある。地震の直後からすべての被災地に残虐行為の荒唐無稽な噂が流れ、当局の了解の有無にかかわらず、パニックに陥った自警団に遭遇した朝鮮人たちはただちに殺された。そして数百人の無実の朝鮮人たちや、たまたま一人だったために身元を証明できなかった日本人たちまでもが殺された。

二人は19時45分、ようやく帝国ホテルに到着する。アメリカ大使館は焼失し、大使はホテルに本部を置いていたが外出して不在であった。このため再び自動車で街へ出たが、そこでも「200フィートごと」に自警団や兵士に止められて誰何された[26]。21時30分にホテルに戻ると今度はホテルの経営者が「朝鮮人と赤が10分以内に攻めてくる」から部屋の明かりを消せとの軍の命令を伝えた[27]。22時20分のことであった。ホテル周辺の部隊は機関銃により武装していたという。

翌9月4日、二人は激しい余震の衝撃で明け方に目を覚ます。午前には人力車でホテル周辺を、さらに自動車で東京の各地を見て回った。ようやくウッズ米大使に会えたのは午前10時である。ドーティーは役に立てることがあるならば東京に残ると申し出たが、大使はただちに被害の状況を国務長官に伝えて欲しいと要請したため、二人は横浜へと戻り「エンプレス・オブ・オーストラリア」号に乗船する。そしてドーティーは9月5日より横浜でアメリカ人による救助委員会の委員として活動した後、9月12日にバンクーバーへ向けて出港し、国

24) *Ibid.*, p. 21.
25) *Ibid.*, p. 21.
26) *Ibid.*, p. 21.
27) *Ibid.*, p. 22.

務長官宛の報告書の執筆に着手することになる。

以上がドーティー／ジョンストン日記に記録された震災直後の二人の足跡である。

### （4）ドーティー／ジョンストン日記と工藤の「概要」の落差

日記に残された9月1日から4日までの横浜・東京での体験と、前述の工藤本の「概要」を比較すると、何が見えてくるだろうか。まず確認しておかねばならないのは、ドーティー／ジョンストン日記は単なる「二人のアメリカ人旅行者」の見聞録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これはドーティーが米国大使の求めに応じて記した報告書の一部であり、さらに、工藤本では「好奇心もあって東京へ向い帝国ホテルに投宿した」とあたかも物見遊山のように記しているが、実際には横浜と東京の被害状況を確認するために東京に向かったのである。

次に、工藤本では9月3日に横浜と東京で二人が経験したことが、全く歪められて「引用」されていることがわかる。工藤の「概要」からは、日記が詳しく記録した自警団の行動がほとんど抜け落ちている。港で朝鮮人と間違われないようバンドを巻けと言われたこと、品川から帝国ホテルまでの道で自警団の検問に遭い、タクシーの運転手が殺されかけたこと、などがそれである。

むしろドーティー／ジョンストン日記が注目しているのは、朝鮮人や社会主義者に対する日本人のパニックである。実際、日記は朝鮮人の暴動や襲撃への恐怖には触れておらず、日記中の「地震と火災の影響と東京の一般的な状況についての観察」のなかでも、東京の避難民たちが「昼間は自分たちの運命に納得しているように見えたが、夜になると横浜で起きたような『朝鮮人』や『赤』の恐怖で多かれ少なかれパニック状態になった」と専ら民衆のパニックについて記載している[28]。一方、工藤本が「恐怖体験」の根拠としている、9月3日夜のホテルを通した軍からの「朝鮮人襲撃」の知らせ（この事実は、別の意味で極めて重要である）については、日記には感想が記されていない。二人は「帝国ホテルの恐怖体験」に怯えたのではなく、自警団の暴力やそれを見て見ぬ振りをする日本の警察に「恐怖」を覚え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

そして最大の問題は、ドーティー／ジョンストン日記の自警団のパニックや朝鮮人への虐殺の原因についての分析を完全に省略したことである。すなわち、報告は朝鮮人は日本の「無害な一部」であったが、シベリア出兵後に混乱や残虐行為を朝鮮人や社会主義者になすりつけようとする風潮が生じ、それが被災地での「荒唐無稽な噂」の流布と「無実の朝鮮人」が数百人殺される事態に至ったと指摘した。だが工藤本はこの箇所を完全に省略したうえ、原文では「『朝鮮人』と『赤』に関するパニックについては少し説明する必要がある」のうち「に関するパニック」の語を省略したため、あたかも日記の書き手が朝鮮人に対する恐怖心を持っているかのように「編集」されている。極めて悪質な改ざんといわざるをえない。

### （5）朝鮮人虐殺を信じる「海外領事館はなかった」のか？

次に文書（B）について検討しよう。工藤は本書においてこの文書を根拠に、朝鮮人虐殺

28）*Ibid.*, p. 23.

を事実と認識した「海外領事館はなかった」と主張する[29]。根拠としたのは次の記述である。

しかしながら市内では、僅かな（原文でa　few）の朝鮮人が人々に殺されたように見受けられます。朝鮮人労働者です。朝鮮人の中には一定の不平分子がいて、彼らが放火の罪を犯した可能性があります。

この文書が殺された朝鮮人を"a　few"としていることから、工藤は「イギリス大使館では二、三人程度が殺害されたと報告している」と解釈し、「東京のイギリス大使館の調査というのは、他の追随を許さないほどその情報収集能力に長けていたはずである」から、殺害人数についても正確であろうと解釈し、返す刀で当時の在日朝鮮人の調査による虐殺者数が誇張された数字であると主張する[30]。

だがこの文書（B）の解釈や引用にも問題がある。まず、この文書を工藤は「1923年12月24日　在東京イギリス大使館より本省への報告」としているが、不正確である。正確にはこの記述があるのは、1923年12月21日付で在東京イギリス領事代理のマクレー（H.　A. Macrae）が作成した「1923年9月1日の地震と火災の影響についての報告」（以下、マクレー報告）である[31]。マクレーがエリオット駐日大使に文書を提出した日付が12月24日であり、さらにエリオットがカーゾン外務大臣に送付したのが12月27日であった[32]。

次に、工藤はマクレー報告のうち重要な箇所を省略している。上の記述があるのは報告中の「救助措置（Relief　Measures）」の節だが、その冒頭でマクレーは次のように指摘する（[]内は原文）。

当局はただちに法と秩序を守るための措置を講じた。戒厳令が布告され、軍による効果的な措置のおかげで、深刻な暴動や略奪は起こらなかった。しかし、この都市にはかなりの数の朝鮮人労働者がおり、ある地域の暴徒が建物に放火したと非難した人々のうち数人を殺害したことが確認されている。朝鮮人のなかにも放火の罪を犯した不満分子がいた可能性はあるが、いずれにせよ日本人は労働市場における朝鮮人との競争に憤慨しており、興奮と混乱が蔓延する中で、日本人の一部は外国人を排除する機会を得たのであろう。何人かの中国人も朝鮮人と運命を共にしたようだ。

[The authorities at once took steps for the preservation of law and order. Martial law was declared, and, owing to the effective measure taken by the military, there was no serious rioting or looting. There were, however, in the city considerable numbers of Korean labourers, and it appears to be established that the mob in certain localities murdered a few of these people, whom they accused of setting fire to buildings. It is possible that there were among the Korean certain malcontents who were guilty of incendiarism, but the Japanese in any case resent the competition of the Koreans in the labour market, and in the prevailing excitement and confusion some of the Japanese

29）工藤、前掲書、216頁。
30）同前書、217頁。
31）"Report on the Effects of the Earthquake and Fire of September 1, 1923", FO371/10305, TNA.
32）From Sir C. Eliot to the Marquess Curzon of Kedleston. FO371/10305, TNA.

probably took the opportunity of ridding themselves of the foreigner. Several Chinese appear to have shared the fate of the Koreans.]

上述の工藤の文と比較すると、明らかな問題点が二つある。第一に、原文が地域を限定して暴徒(mob)が数人の(a few)朝鮮人を殺害したことが確認されたとしているのに対し、工藤は"the mob in certain"を訳さずに省略したため、マクレー報告書が殺害者の側を「暴徒」と記していることが隠され、さらにあたかも東京全域で数人の殺害のみを確認したかのような引用となっている。第二に引用のうち原文の"but"以下の下線を引いた箇所が省略されているため、マクレー報告書がこうした事態の原因を、朝鮮人への反感を抱いていた日本人が震災を機にこれらの人々を排除しようとしたことに求めたことが全く隠されてしまっており、むしろ朝鮮人による放火の事実を強調しているかのように原文が歪められている。

そもそも、工藤はイギリス大使館が情報収集能力に長けていたと主張するが、震災直後は東京や横浜の領事館も被災しており、領事らの関心ももっぱら自国民の保護にあったことは言うまでも無い。マクレー報告は虐殺を否定した記録ではなく、こうした混乱状況にあってもイギリス領事が「暴徒」に朝鮮人が殺された事例を確認した事例と考えるべきであろう。

実際、当時のイギリス領事が作成した記録からは、イギリス外交当局が朝鮮人虐殺を事実と認識していたことを確認できる。例えば前述の在横浜イギリス総領事館のロバート・ボールター総領事代理が1923年12月19日に作成した「1923年9月1日の横浜における地震・火災及びその後の経過に関する報告」(以下、ボールター報告)は、第8章「無秩序(Disorder)」で地震発生直後の横浜で流れた「うわさ」や朝鮮人への迫害に触れている[33]。

ボールター報告は、ヨーロッパ人の生命を危険にさらすような混乱が存在した事実は確認できなかったとする一方で、「ひどい体験で神経をすり減らした難民からなる共同体では当然予想されることだが」と留保したうえで、地震発生直後に噂が広まったこと、そして電報などの通信手段が途絶した状態ではこの噂に反論する術がなかったと指摘する[34]。具体的にボールターは9月1日夜に、朝鮮人が放火した、井戸に毒を投げた、あるいは女性に暴行を加えたなどの噂を聞いたほか、翌2日夕方には1名かそれ以上の数の警察官が殺害されたのが目撃され、その報復のため4、5人の朝鮮人が殺された、という話に接したと記している(ただし、これらの噂について、報告書は事実かどうか確認できなかったとしている)。

また、朝鮮人への迫害について、ボールター報告は次のような証言を紹介している[35]。

日本に20年以上滞在しているイギリス人の話では、9月4日か5日に、1人の朝鮮人が針金でぐるぐる巻きにされ、その針金がその男を切りさいなむまで引っ張られるのを実際に見たという。また、別の人は柱に縛られて、鋭い竹槍で死ぬまで突かれていたという。これをやっていたのは25歳くらいの日本人で、警官は見ていたが参加してはいなかった。現場は横浜郊外の鉄砲場近くの警察署の前であった。情報提供者の証言

33) "Report of the Earthquake and Fire at Yokohama on September 1, 1923 and Subsequent Events" By Mr. R Boulter, Acting Consul General, FO 908/6, TNA.
34) *Ibid.*, p.20.
35) *Ibid.*, p.20.

によれば、彼は当時和服を着ていたという。私は情報源としての彼の信頼性を保証できない。

ボールターは情報の信頼性について留保してはいるが、それでも震災時の「無秩序」を示す証言として報告書に記載したことからみて、全く信頼できないと判断したわけではあるまい。

さらに、イギリス外交当局の虐殺問題についての立場が垣間見えるのは、1924年1月の書面質問への回答である。1月17日、ハドソン（James Hindle Hudson）議員は書面質問にて、地震後の労働組合員や外国人への虐殺や暴動、さらにイギリス人の被害についてのマクニール（Ronald Mcneill）外務政務次官に問うた[36]。質問をうけて作成された回答草案は次の通りである[37]。

> 共産主義者の扇動者であった大杉栄とその家族が憲兵隊長によって殺害された事件（F.3457参照）を除いては、地震直後に起こった虐殺事件についての詳細はわかっていない。わかっているのは、地震後にパニックが起こったこと、朝鮮人や共産主義者の活動について荒唐無稽な話が広まったこと、報復として多くの朝鮮人（many Koreans）や何人かの有名な共産主義者が殺害されたこと、朝鮮人とみなされたり共産主義者に見られたりしたために、多くの日本人や中国人が同じような運命をたどったということだけである（F.3234）。有罪の人物は可能な限り逮捕され、裁判にかけられている。彼らは少数の例外を除いて、地元の青年団のメンバーである。
>
> 横浜ではかなりの略奪があり、特に外国人の家に対するものが多かった。負傷したイギリス人はいない。

この草案をもとに、マクニールは1月21日、「東京とその周辺では、朝鮮人と日本の共産主義者が首都で問題を起こそうとしているという噂によるパニックの結果、いくつかの虐殺が行われたようである。イギリス人に負傷者は出なかったが、横浜の外国人住宅ではある程度の略奪があった」と簡潔に回答している[38]。

以上から、工藤の朝鮮人虐殺を事実と認識した「海外領事館はなかった」との記述が全くの根拠のないものであることがわかる。それどころかむしろ、イギリス外交当局としては「多くの朝鮮人」が殺されたと認識していたのである。

---

36) “Disorders in Japan after earthquake”, FO371/10305, TNA.
37) *Ibid.*
38) 書面質問及び回答はイギリス議会議事録Hansardのwebページ（https://hansard.parliament.uk/Commons/1924-01-21/debates/45144a54-9ea3-42a9-8321-bee1e3b542ce/Japan(EarthquakeVictims)?highlight=earthquake#contribution-f2a794ea-9467-43b6-a161-6561ca55a344）より閲覧（2023年7月25日最終確認）。

## 3. 結びに代えて

かつてピエール・ヴィダル＝ナケは、対話の前提には「真理に対する共通の敬意」が存在し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と指摘した[39]。だからこそ、この前提を欠いた歴史修正主義者との「対話」は成り立つはずがなく、その主張を「学説」であるかのように認めることは、そうした対話の土台そのものを破壊する行為になりかねない。

本報告でみてきたように、工藤の本には史料の引用や解釈、批判などの極めて深刻な欠陥があり、その「暴動実在説」は実証に基づくものとは言い難い。自らの都合に合わせて史料を恣意的に引用・編集した結果、実際の内容とは真逆の主張の根拠として用いられている事例すらある。「実証的な論証をまったく欠いた非学問的な著作」（山田昭次）とする批判が生じるゆえんである[40]。

そして、他の史料の扱いと同様、イギリス外交文書に関する工藤本の扱いにも極めて深刻な問題が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ドーティーとジョンストンが1923年9月3日に横浜と東京で体験したこと、そしてその体験に基づく記録は、工藤の史料の悪質な編集と改ざんにより、旅行者たちが朝鮮人の襲撃に怯えた「恐怖体験」なるものに書き換えてしまった。工藤はドーティー／ジョンストン日記を通して「実際に彼らが見た現実がどうであったのかという実情がうかがえる」[41]などと記しているが、この本で実際に行われていることは「彼らが見た現実」を自説に都合よく歪めること以外の何ものでもない。さらに朝鮮人虐殺を事実と認識した「海外領事館はなかった」との主張も事実に反するものであり、むしろイギリス外交当局は「多くの朝鮮人」の殺害を認め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何よりも問題なのは、こうした主張を展開するために工藤が史料の悪質な編集と改ざんを行い、それらの史料が本来有していた豊かな内容を歪曲してしまっていることである。

関東大震災から100年を経た今日、日本の政治と社会に深い影響を及ぼしているのが、稚拙な「歴史修正」を通して朝鮮人虐殺を正当化するデマゴギーに基づく著作なのであるから、事態は極めて深刻であるというほかない。そして、日本社会で虐殺を否定する声が高まっているさなかに、公人が「様々な内容が史実として書かれている」とすることは、まさに虐殺否定論を一つの「史実」の記述と認めることで「真理に対する共通の敬意」を欠いた主張に力を与えることであるといわざるをえない。一方では虐殺否定論を下敷きにした質問に理解を示し、他方で虐殺を史実と認めるのかとの質問には「様々な内容が史実として書かれている」として回答を避けるような姿勢は、「中立」を装う言辞とは裏腹に、心の底では虐殺否定論への共感していると疑われても仕方あるまい[42]。

---

39) ピエール・ヴィダル=ナケ（石田靖夫訳）『記憶の暗殺者たち』人文書院、1995年、9-10頁。

40) 山田、前掲論文、49頁。但し、山田昭次氏のこの指摘の力点は「実証的な論証をまったく欠いた非学問的な著作である」ことにだけではなく、だからと言って「今日これを放置しておいて済むものではない」との警告の方に置かれている。それは山田氏がこの本を成り立たせている「思想的動向」が、朝鮮学校への嫌がらせや乱暴狼藉、さらには政府の朝鮮高校無償化除外措置となって、現代において現れていると認識していたからである。小池都知事が追悼文送付を中止したのはこの警告から7年後のことであった。

41) 工藤、前掲書、146頁。

42) 2022年に起きた公益財団法人「東京都人権啓発センター」開催予定の企画展をめぐり生じた検閲事件は、こうした懸念を裏書きする出来事であるといえる。同年5月、東京都人権施策担当職員は同センターの企画展担当者に対し、メールにて企画展出展作品（美術家・飯山由貴氏による）に関東大震災後の朝鮮人虐殺を事実としたインタビューがあることに言及し、「都ではこの歴史認識について言及をしていません」とし、小池知事が追悼文を出していないことにふれ、「都知事がこうした立場をとっているにも関わらず、朝鮮人虐殺を『事実』と発言する動画を使用する事に懸念があります」とした。その後、センターは「在日ユリアンの生きづらさに焦点が当たっており、企画展の趣旨にそぐわない」などとして上映見送りの意向を伝え、都が中止を決めた。メールの内容から、この間の都知事の姿勢が、こうした朝鮮人虐殺への言及への検閲の背景にあることが読み取れる。この検閲事件については飯山由貴「東京都人権部による歴史否定と在日ユリアンへの差別を理由とした『検閲・上映中止決定』が明らかにしたこと」『人権と生活』第56号、在日本朝鮮人人権協会、2023年を参照。

국제학술심포지엄
관동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 100년: 진실·책임· 기억

# 혐오와 인종주의: 이슬람 혐오를 중심으로

이소훈(경북대)

# 혐오와 인종주의: 이슬람혐오를 중심으로

이소훈 (고려대학)

이슬람혐오(Islamophobia)는 “이슬람을 향한 근거 없는 적대감”을 뜻하며 1997년 영국의 싱크탱크 러니미드트러스트(Runnymede Trust)의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다고 알려진다.[1] 현시대 이슬람혐오는 인종차별의 일종으로 이해되는데, 이를 의아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슬람과 이슬람교인(무슬림)에 대한 편견을 인종차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종이 생물학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학교에서 익히 들어 배운 내용에 잘 들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한국인은 학교에서 세계 인구가 인종적으로 황인, 백인, 흑인 등으로 ‘구분’ 된다고 배웠는데, 무슬림은 그 ‘생물학적’ (즉 ‘피부색’) 구분상 ‘인종’으로 정의할 수 없어서 혼란스러운 것이다.

혼란의 배경에는 한국인이 ‘황인종’에 속한다는 단호한 믿음이 있다. 7차 교육과정의 국사교과서는 한국인이 “인종상으로는 황인종에 속하고 언어학상으로는 알타이 어족과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단언적으로 서술한다.[2] 하지만 우리가 굳게 믿어 의심하지 않는 ‘황인종’의 구분은 실제로는 유럽 제국들이 식민지배를 위해 백인우월성의 깃발 아래 세계적 인종질서를 정리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효석은 마이클 키벅(Michael Keevak)의 책《황인종의 탄생》의 주장에 기초하여, 동아시아인이 ‘황인종’으로 탄생한 시대적 배경을 설명한다.[3] 황인종이라는 개념은 19세기 이후에서야 서구인(백인)과 비서구인(유색인종)을 인종적으로 구별하고 서구인의 우월함과 비서구인의 열등함을 ‘과학적’ 연구의 결과로 포장하여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편견,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널리 퍼졌다. 마르코 폴로와 같이 중세시대 중국을 여행하며 동양문명에 심취했던 유럽인 탐험가들은 동아시아인을 ‘백인(bianca)’이라 부른데 비해, 근대 이후 백인제국들이 동아시아 식민지배의 야욕을 드러내며, 자신과 동아시아인을 구별함과 동시에 이들의 열등함을 증명할 정치적인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동아시아인을 백인이 아닌 몽골인 또는 황인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의 생물학적 차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우생학 등의 유사과학 연구가 이뤄졌다. 이처럼 황인종이라는 ‘과학적’ 구분은 19세기 이후 식민주의의 맥락에서 백인과 구분의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인종과 인종주의는 그 사회의 시대적 특성에 따라 정의, 구분 및 발현된다. 현 시대 인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것이 역사사회적 구성물이며, 집단적인 상상의 결과라고 개

---

1) Runnymede Trust.《Islamophobia: A Challenge for Us All》Runnymede Trust. 1997.; Najib, K. and Hopkins. C.T. 2020. “Geographies of Islamophobia.” Social and Cultural Geography 21(4), 449-457.

2) ‘황인종’이라는 단언적 서술은 1차교육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김나연은 1차교육과정부터 현재까지 국사교육이 한국인이 ‘단일민족’임을 주장하며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민족’ 개념의 의미를 정의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초기에는‘민족’, ‘인종’ ‘종족’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가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어서는 인종, 민족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실체를 고민할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지적한다. 김나연. “국사(한국사) 교과서 속 <민족> 서술의 변화와 그 배경.”《한국문화연구》27 (2014): 149-182.

3) 이효석. "한국인에 대한 황인종 개념의 형성과 내면화 과정 연구."《한국민족문화》64 (2017): 145-167.

념화하며 인종을 정의하는 데 생물, 유전학적 근거는 없다는데 동의한다. 나치즘과 홀로코스트와 같은 고통스러운 역사와 연결된 20세기 우생학의 경험 이후로 인종을 유전적으로 구분하는 증거는 미비하기 때문이다. '백인', '흑인', 그리고 기타 인종에 관한 구별은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우월성'이란 정치적인 신념에 대한 반증으로 유사과학이 동원된 것이다. 이렇듯 유사과학은 인종의 개념적 정의와 그 담론적 역사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인종 및 인종화는 (1)구별과 다름이 생물학적이라는 믿음에 기초하며 (2) 우월성과 열등성을 내재한다. 인종화는 이 두개의 특징 때문에 타자화, 구분짓기, 경계짓기 과정과는 구분된 사회적 과정을 수반한다.

## *이슬람혐오: 19세기와 현재*

이슬람혐오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중동과 그 근방지역 아시아인을 일컫는 '오리엔탈인'이라는 인종적 구분이 제시된것이19세기라고 관찰하는데, 이는 황인종이라는 개념이 생긴 시기와 비슷하다.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는 제국주의시대의 도래 이후 유럽백인 제국이 이슬람세계를 식민지배하면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지식생산의 특징적 유형이 생겼다고 관찰하였다.[4]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스트'라고 명명한 중동 인근지역을 연구한 백인, 유럽인 학자들은 편견에 사로잡힌 관점에서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해 연구를 쏟아냈고, 그 내용은 중동세계의 아랍인, 특히 아랍남성이 야만적이고, 폭력적이며, 거짓말쟁이이며, '잘못된' 종교인 '모하메드교'를 신봉하여 미개하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생산된 지식은 이슬람세계의 열등함에 대한 증거로 쓰이며 유럽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정치적인 기능을 했고, 역사적으로 이슬람의 전형은 '반(反)서구적인 것'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식민역사를 배경으로, 이슬람혐오는 사무엘 헌팅턴이 "문명의 충돌"이라고 표현한 1990년대 1차 걸프전 등의 이슬람과 서구세계 간의 분쟁 속에서 심화되다가 2001년 알카에다의 9.11테러 사건으로 정점을 찍었다.[5] 이후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유럽 주요 도시에서 이슬람 테러분자의 자살폭발 사건이 연이어 터진데다 IS(Islamic State)의 폭력적인 모습이 2010년대 중반부터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었다.[6]

이슬람혐오라는 단어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반 세기 전, 사이드가 관찰한 이슬람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은 현시대에도 유효하다. 이슬람은 근본적으로 폭력적이고, 근대성을 거부하며, 서구문명과는 동화되지 않고, 야만적인 가르침을 펼치는 쿠란을 신봉한다는 '진단'은 현시대 이슬람혐오의 주요 주장이다. 이것은 이슬람혐오가 9.11이후 시작된 소위 '테러와의 전쟁'이란 시대적 특성에서 도출되었다기보다, 몇 세기에 걸쳐 케케묵은 편견에 의거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은 중동지역의 안보 불안을 미국/서방과 이슬람세계의 복잡한 군사관계와, 냉전 이후 걸프전 등에서 경제, 안보, 외교 방면에서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폭력적인 전쟁과 테러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복합적인 분석을 하기보다는 손쉽게 이슬람이 본질적으로 폭력적인 집단이라고 단정짓는다.

---

4) 에드워드 W. 사이드 (박홍규 옮김).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1995.
5) Huntington, Samuel P. 1993. "The Clash of Civilizations?" Foreign Affairs 72(3), 22-49.
6) 육주원, 이소훈.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을 통해 본 인종주의의 위장술." 《아시아리뷰》12.1(2022):33-65.

세린 라작(Sherene Razack)은 저서 《Nothing Has to Make Sense》에서 15세의 나이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체포되어 관타나모 군사수용시설에 10년간 수용된 아프가니스탄계 캐나다국적의 남성 오마르 카디르의 관타나모 군사재판을 비판하며, 군검사가 채용한 정신과전문의 마이클 웰너(Michael Welner)가 사용한 백인우월주의 및 이슬람혐오적 주장의 오류들을 지적한다.[7] 웰너는 이슬람이 근대성을 수용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슬림이 서구사회와 통합을 거부하며, 궁극적으로 유럽의 이슬람화를 도모하고 내전을 일으킬 것이며, 샤리아를 확립하려 지하드전을 계획하면서도 본심을 보이고 공격하기 전까지는 그럴듯 한 모습으로 자신을 숨긴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서구사회를 위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슬림에게 온전한 사람 대접을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며 이들이 이슬람을 믿는 이상 희망은 없다고 진단했다. 10년 후 카디르는 결국 캐나다로 환송되어 석방되었고 캐나다 정부는 이후 카디르가 관타나모 군사수용시설에서 당한 고문과 부당대우등에 개입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천만불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 *백인우월주의, '노고존', '쾰른 사태'*

인종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백인우월성 (white superiority)'에 대한 명시적이고 내재된 표현, 전제, 신념이다. 꼭 노골적인 인종주의적 표현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의 대중매체나 보도, 문화적 상품들이 유럽, 백인, 기독교적인 것은 문명적이며, 수준 높고, 선하고, 올바른 것으로 상정하고, 그 반대로 유색인종의 문화사회적 특징은 후진적이며, 낙후되고, 악하고, 고쳐야 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띄는 것을 쉽사리 관찰할 수 있다.

인종주의의 관념적 영향은 우리 사회의 깊숙한 곳에 침투해 있기 때문에 왠만한 노력으로는 완전히 떨쳐버리기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인과 같은 동질집단이 인종차별을 당했다거나 하면, 분노와 함께 강렬하게 거부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알수없는 이유로 '백인보다 한국인이 더 우월하다'라고 외치기 보다 '한국도 여느 서구 선진국들에 뒤지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백인의 우수성에 관한 강한 신념이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역설적인 것은, 이렇게 우리를 향했을때엔 거부하기 쉬운 인종주의의 시각을, 반대로 타 집단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자주 사용한다는 것이다. 라작이 비판한 웰너의 주장은 한국사회에 유포되고 있는 이슬람혐오의 주장과 매우 비슷하다. 예를 들어 유럽에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로 통치되는 '노고존'이 있다는 뉴스는 매우 빈번하게 보이는 가짜뉴스이다. 이러한 뉴스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가 현지법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무법 지대'를 양산한다고 말한다. 한편으로 엄격한 종교적 규율을 강제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마약과 범죄가 활개를 친다고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노고존'은 우범지역을 뜻하는 단어로 실제로 유럽 일부나라에서 쓰이는 표현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공공 주택 비율이 높고 주변화된 취약계층의 밀집 주거지역을 가르켜 '민감한 도시 구역'을 뜻하는 ZUS (Zones Urbaines Sensibles)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러한 구역에 무슬림의

7) Razack, Sherene H. *Nothing Has to Make Sense: Upholding White Supremacy through Anti-Muslim Racism*.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22.

비율이 높은 것은 프랑스제국이 이슬람세계를 식민주의 통치한 역사와 매우 높은 관련이 있다.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젠더, 민족, 인종을 연구하는 프랑스 학자 나시라 귀니프(Nacira Guénif)는 프랑스에서 2005년 소요사태의 주범으로 “아랍소년 (le garçon arabe)”이 “이상적 죄인 (ideal culprit)”으로 구성되었다고 말한다. “아랍소년”과 그들의 억압대상인 “머리수건을 쓴 무슬림 여성”은 보편적인 프랑스사회에 통합될 수 없는 무슬림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젠더화된 상상의 표상이며 이들에 대한 인종주의는 지양되야 할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virtuous)” 것으로 정당화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8] 무슬림남성을 비롯한 갈색(brown) 피부의 남성을 포식자로 상정하고 그의 억압과 폭력에서부터 무고한 갈색 피부의 여성을 구출하는 것은 고전적으로 유럽제국들이 식민주의를 정당화 해왔던 방법이다.[9]

자신의 부모가 알제리 출신 이민자가 아니라 식민지배를 받던 알제리에서 프랑스로 강제이주된 제국시민이라고 강조하는 귀니프는 포스트-식민주의 프랑스 사회와 식민주의 프랑스 사회의 연결성에 주목한다.[10] “아랍소년”들은 다름 아닌 제국시민들의 후손들이며, 도시구역(banlieue)을 중심으로 한 소요사태의 배경이 된 것은 70년대 이후 완전 고용시대의 종말을 가져온 세계화 자본주의 도입 이후 고용시장 변화와 교육기회의 불평등, 구조적인 청년실업과 차별이 불러온 사회적 반향이라고 설명한다.[11]

한국에서 유럽의 ‘노고존’이 ‘이슬람 때문’이라는 주장은 뉴스윈이란 매체의 이만석 목사의 컬럼에서 2015년 처음으로 등장하였다고 알려져 있고 이목사는 이 칼럼에서 백인우월주의적 시각에 매우 우호적인 미국 보수언론 폭스뉴스의 관련 뉴스를 캡쳐한 사진을 사용하였다.[12][13] 이 뉴스보도는 프랑스와 영국에 무슬림만 들어갈 수 있고 공권력이 개입을 안하는 노고존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도 이후 폭스뉴스는 프랑스 파리 시장이 고소할 뜻을 밝히는 등 강한 비판에 시달렸고 결국에는 정정 및 사과방송을 했는데 이러한 조치는 가짜뉴스 생산지라는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았던 폭스뉴스의 그동안 관행으로 볼때 매우 의뢰적인 일이다.[14]

노고존 외에도 이슬람혐오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짜뉴스는 다수이다. 이슬람에 ‘타하

---

8) Guénif-Souilamas, Nacira. The Other French Exception: Virtuous Racism and the War of the Sexes in Postcolonial France. French Politics, Culture & Society. 24(3):23-41. 2006.

9) Kiran Kaur Grewal. Racialized Gang Rape and the Reinforcement of Dominant Order: Discourses of Gender, Race and Nation. Routledge. 2017 참고

10) Guénif, Nacira. “Beneath Integration Lie Racism and Islamophobia: A French Situated Account.” XX ISA World Congress of Sociology. International Sociological Association. Melbourne, Australia. June 27, 2023.

11) Supra Note 8

12) 김동문. [팩트체크] 전광훈 목사 “경찰도 못들어가는 무슬림 집단촌 있다”: 한국판 노고존은 실제하는가?.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4 뉴스톱. 2019년 8월 20일 (2023년 8월 10일 접속)

13) 이만석. 할랄 산업 투자 전에 이슬람 율법을 알아야. http://www.newswinkorea.com/news/article.html?no=351 뉴스윈. 2015년 10월 29일 (2023년 8월 10일 접속)

14) McKey, Robert. Fox News Apologizes for False Claims of Muslim-Only Areas in England and France. https://www.nytimes.com/2015/01/19/world/europe/fox-news-apologizes-for-false-claims-of-muslim-only-areas-in-england-and-france.html New York Times. 2015년 1월 15일. (2023년 4월 9일 접속)

루시'라는 '강간문화'가 있다거나, '이슬람의 13교리'가 여성과 비신도를 흉폭하게 대할 것을 가르친다던가, 스웨덴이 무슬림 난민을 받아들여 '강간천국'이 되었다는 등, 서구의 극우세력이 생성한 왜곡된 뉴스들이 한국에 그대로 들어와서 팩트체크에도 불구하고 유포되고 있다.

특히 2015년 연말, 독일 쾰른 등 에서 새해를 즐기려고 모여든 광장의 시민들에게 '북아프리카 및 아랍계'남성이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 성폭행을 가했다고 보도되면서, '쾰른 성폭행 사건'의 불특정 용의자로 무슬림남성이 지목되었고, 국내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이는 당시 소위 '유럽 난민 위기'에서 유럽이 적극적인 난민 수용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고 리더십을 발휘했던 앙겔라 메르켈 수상의 주도로 중동 출신 난민이 대거 재정착 된 후였기 때문에 쾰른사태는 독일 및 유럽의 극우보수가 인종화된 이슬람혐오 메세지를 전파하는데 자양분이 되었다.[15] 폴란드 극우성향 잡지 wSieci가 EU국기를 몸에 두른 금발의 여성의 몸이 갈색피부의 팔과 손에 겁탈당하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사진을 커버사진으로 싣고 유럽 여러 곳에서 "Rapefugees Not Welcome"이란 팻말을 든 대규모 집회가 "Refugees Welcome"집회를 대신하여 광장을 메웠다.

쾰른 광장 등에서의 성폭행 사건이 이슈화 된 지 얼마 후, 타블로이드지 성격의 극우언론을 중심으로 아랍문화에 '타하루시'라는 강간놀이가 있으며, 이러한 이슬람 '고유문화'로 성폭행을 설명할 수 있다는 기조의 설명이 널리 퍼졌다. 타하루시라는 용어는 아랍의 봄이 중동지역을 강타하던 2011년 타히르 광장에서 집회를 취재하던 전 미국 CBS언론인 라라 로간을 보안부대원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이 둘러싸고 집단성폭행 한 사건으로 서구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2015년 쾰른사태 이후, 타하루시가 이슬람의 '민속적' 고유 풍습이라는 믿음은 무슬림 남성은 생물학적으로, 또 종교 문화적으로 성적 포식자라는 증거라는 논지로 사용되었다.

하지만Abdelmonem외가 이집트의 온라인 포럼 논의를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설명한 타하루시의 사회적 의미는 극우 언론의 주장과는 정 반대되는 것이었다. [16] Abdelmonem 외는 타하루시는 아랍어로 괴롭힘(harassment)을 뜻하고, 몇십년 전 까지는 성폭력을 뜻하는 여러 의미로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이 단어가 이집트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으로, UN 등 국제 여성인권 담론에 영향을 받아 NGO와 여성인권 활동가가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의 수단으로 '성추행'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기 사용했다고 관찰한다.

더 나아가 Abdelmonem외는 쾰른 사태의 주범으로 이슬람과 이주민을 소환하는 것은 '무슬림 없는' 유럽은 성폭력에서 자유로운 곳으로 상정한 것이라고 꼬집는다. 하지만 이러한 상상과는 다르게 성폭력은 유럽과 독일에서 빈번한 일이다.  그들은 유럽여성의 1/3

15) 소위 '2015년 유럽 난민 위기'는 이미 포화된 난민재정착 체계가 시리아 내전 등 급박해진 중동의 정세 불안정으로 터져나온 난민과 이주자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위기에 봉착한 시기를 가르키는 용어로 유럽 이주민 위기 (European migrant crisis)라고도 알려져 있다.

16) Abdelmonem, Angie, Rahma Esther Bavelaar, N Elisa Wynne-Hughes, & Susana Galán. "The 'Taharrush' Connection: Xenophobia, Islamophobia and Sexual Violence in Germany and Beyond". Jadaliyya. 2016년 3월 1일. https://www.jadaliyya.com/Details/33036/The-%60Taharrush%60-Connection-Xenophobia,-Islamophobia,-and-Sexual-Violence-in-Germany-and-Beyond (2023년 8월 13일 접속)

이 15세 이후 물리적 및 성적 폭력을 경험하였으며, 독일여성의 60% 이상을 포함한 15세 이상 유럽 여성의 대부분이 성추행이나 스토킹을 경험했다고 밝힌 EU 기본권기구(FRA)의 2014년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였다.[17] 즉, 안전한 독일과 유럽을 유린하는 포식자 무슬림남성에 대한 상상과는 반대로 성폭력은 이미 유럽 내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것이다.

## *나가며: 이슬람혐오와 한국*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을 포함한 이슬람교도는 그 수가 매우 미비하다. 한국엔 국제테러 사건이 일어난 적이 없고, 한국사회와 이슬람세계의 역사적 교류 또한 잘 알려진 바 없다. 다시 말해 한국사회에서는 최근의 반-이슬람 정서가 대대적으로 대두되기 전까지 이슬람에 대해 알려진 바가 적었으며, 알려진 내용도 70년대 중동 오일붐 시기 건설노동자 파견이나, 한국전쟁에 참전한 터키군 등 긍정적인 내용이 대부분을 이뤘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퍼진 이슬람혐오적 의식과 감정은 기묘하며 모순적인 일이다.

한국에서도 퀼른사태에 대해 타하루시라는 설명이 극우언론을 통해 일파만파 퍼졌고 인종화된 무슬림 남성의 '본질적'인 폭력성에 대한 반증으로 쓰였다.[18] 시기적으로 2015년 말 정부의 익산 할랄식품단지 조성단지 계획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조직되는 가운데, 퀼른사건은 이러한 반 이슬람 정서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할랄식품단지 반대진영은 왜곡된 가짜뉴스를 대거 사용하면서 식품단지를 유치하면 "테러"가 생기고 전국이 "이슬람화"되며 "여성강간피해가 폭증한다"는 대단히 비논리적인 주장을 펼쳤다.[19] 그럼에도 익산, 강원도,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식품단지 유치 계획을 백지화시키는 놀라운 성공을 거뒀다. 이러한 조직과 성공을 토대로 보수우파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집단들은 2018년 500여명의 예멘난민이 제주에 입국하였을 때 대규모의 난민 반대집회를 조직하며 '혐오'가 아니라 '안전'을 원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글은 이슬람혐오가 인종주의의 일원이라고 주장하며 서구 제국의 식민주의에 기반한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주목하였다. 서구사회에서 생산된 이슬람혐오적 담론이 유포되고 공감을 얻는 주요 요인중 하나는 한국사회에 내재된 유럽 등 '선진국'에 대한 선망이다. 한국에서 반다문화운동이 사회현상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총리 등의 '다문화주의 실패에 대한 인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의 '실패 선언'은 소위 선진국에서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한국도 다문화사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2000년대의 얄팍한 논리적 기반을 정면으로 무너뜨렸다. 한국에서 이슬람혐오주의의 부상은 반이민자를 기조로 한 극우정치의 출현과, 시리아를 포함한 중동의 정세불안으로 무슬림 다수 국가 난민들이 유럽으로 대거 유입되

17) 위의 글

18) KBS 뉴스. [팩트체크] '강간놀이'하는 무슬림이 한국 이슬람화를 꿈꾼다?. KBS. 2018년 7월 8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005899 (2023년 4월 9일 접속); 박현도. 인터넷에 떠도는 '이슬람의 13교리'는 사실인가?. 월간조선. 2018년 9월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nNewsNumb=201809100051 (2023년 8월 13일 접속)

19) 원성윤. '할랄'단지 유치하면 IS 본거지가 된다는 기적의 논리. 허프포스트. 2016년 3월 3일 https://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23944 (2023년 8월 13일 접속)

면서 극우정당이 이슬람혐오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과 어깨를 같이 하였다. 비록 2018년 예멘 난민과 관련한 사건들이 방아쇠를 당겼지만, 그 이전인 2015년부터 할랄푸드 산업을 반대하는 여러 움직임에서 그 전조가 다분히 보였다.  이 때문에 필자는 '이슬람혐오를 지양하는 것이 선진적이다'라는 기조의 말은 오히려 인종주의의 역사성과 역동을 곡해하는 것이라 말하고 싶다. 이는 인종주의가 선진, 문명, 근대를 핑계로 삼은 제국주의와 그 뿌리를 같이 하기 때문이며, 식민제국의 역사를 가진 유럽열강이 백인우월성의 근본에서 탈피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은 무역, 투자, 방산등의 방면에서 이슬람세계와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앞으로 전 세계인구의 ¼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무슬림이 한국사회에 같이 살지 않게 된 일은 없다. 식민지배와 인종주의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집단적 기억이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다른 인종주의의 대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결론이 "전 세계에 우월하고 열등한 인종은 없다!"라고 외치는 것이기를 희망한다.

# 嫌悪と人種主義：イスラム嫌悪を中心に

イ·ソフン(高麗大)

イスラム嫌悪(Islamophobia)は「イスラムに対する根拠のない敵対感」を意味し、1997年英国のシンクタンク、ラニーミード·トラスト(Runnymede　Trust)の報告書において初めて使われたと知られている[1]。現時代のイスラム嫌悪は人種差別の一種と理解されるが、これを疑問に思う人もいるかもしれない。イスラム教とイスラム教徒（ムスリム）に対する偏見を人種差別と言うのは、人種が生物学的に構成されていると学校で学んで慣れた内容と一致しないからである。多くの韓国人は学校で世界の人口は人種的に黄色人種、白色人種、黒色人種などに「区分」されると習うが、ムスリムはその「生物学的」（すなわち「肌色」）区分上「人種」と定義できず混乱するのである。

混乱の背景には韓国人が「黄色人種」に属するという断固たる信念がある。第7次教育課程の韓国史教科書は、韓国人が「人種上では黄色人種に属し、言語学上ではウラル·アルタイ語族と近い関係にある」と断言して述べる[2]。だが、我々が固く信じて疑っていない「黄色人種」という区分は実はヨーロッパの帝国が植民支配のために白人至上主義の旗の下で世界的人種秩序を決めたことと深い関連がある。イ·ヒョソクはマイケル·キーバック(Michael　Keevak)の著書『黄色人種の誕生』の主張に基づき、東アジア人が「黄色人種」にされた時代的背景を説明する[3]。黄色人種という概念は19世紀以降になってようやく西欧人(白人)と非西欧人(有色人種)を人種的に区別し、西欧人の優越さと非西欧人の劣等さを「科学的」研究の結果として包装し有色人種に対する差別、偏見、植民支配を正当化する意図で広く拡散した。マルユ·ポーロのように中世時代に中国を旅行しながら東洋文明に心酔した多くのヨーロッパ人探検家は東アジア人のことを「白人(bianca)」と呼んだのに対し、近代以降白人の諸帝国が東アジアの植民地支配への野心を表わし、自分たちと東アジア人を区別すると同時に、彼らの劣等さを証明する政治的必要が生じたからである。これに対し東アジア人のことを白人ではなくモンゴル人または黄色人種と規定し、彼らの生物学的相違を証明する目的で優生学などの疑似科学研究がなされた。このように黄色人種という「科学的」区分は19世紀以後、植民主義の脈絡で白人と区分する目的で構成された。

人種と人種主義は、その社会の時代的特性によって定義、区分、発現される。現時代の人種を研究する学者らは、これが歴史社会的構成物であり、集団的な想像の結果であると概念

1) Runnymede Trust.《Islamophobia: A Challenge for Us All》Runnymede Trust. 1997.; Najib, K. and Hopkins. C.T. 2020. “Geographies of Islamophobia.”*Social and Cultural Geography*21(4), p.449-457.

2) 「黄色人種」という断言的記述は、1次教育課程から始まった。キム·ナヨンは1次教育課程から現在までの韓国史教育は韓国人が「単一民族」であると主張し強調しながらも、具体的な「民族」概念の意味を定義していないと批判する。初期には「民族」、「人種」、「種族」を混用して使用し、多文化社会に入ってからは人種、民族についての説明を省略して実体を悩む機会を剥奪したと指摘する。김나연,「국사(한국사) 교과서 속 <민족> 서술의 변화와 그 배경」『한국문화연구』(キム·ナヨン、「国史（韓国史）教科書の＜民族＞叙述の変化とその背景」『韓国文化研究』) 27, 2014, 149-182頁。

3) 이효석,『한국인에 대한 황인종 개념의 형성과 내면화 과정 연구」『한국민족문화』(イ·ヒョソク、「韓国人に対する黄色人種概念の形成と内面化過程研究」『韓国民族文化』) 64、2017、145-167頁。

化し、人種を定義するのに生物、遺伝学的根拠はないということに同意する。ナチズムやホロコーストのような負の歴史と結びついた20世紀の優生学の経験以来、人種を遺伝的に区分する証拠は不十分だからである。「白人」、「黒人」、そしてその他の人種に関する区別は科学的なものではなく「生物学的優越性」という政治的信念に対する反証として疑似科学が動員されたものである。このように疑似科学は人種の概念的定義とその談論的歴史形成に決定的な役割を果たした。人種及び人種化は（1）区別と相違が生物学的だという信念に基づいており、（2）優越性と劣等性が内在する。人種化はこの二つの特徴のため、他者化、区分付け、境界付けの過程とは区分された社会的過程を伴う。

## イスラム嫌悪：19世紀と現在

イスラム嫌悪について研究する学者らは中東とその近隣地域のアジア人を指す「オリエンタル人」という人種的区分が提示されたのが19世紀であるとしているが、これは黄色人種という概念ができたのとほぼ同じ時期である。エドワード·サイード(Edward Said)は帝国主義時代の到来以後、ヨーロッパの白人帝国がイスラム世界を植民支配する過程において「オリエンタリズム」という知識生産の特徴的な類型が生み出されたと観察した[4]。サイードが「オリエンタリスト」と命名した中東近隣地域を研究した白人、ヨーロッパ人学者らは偏見にとらわれた観点からイスラムとムスリムについて研究を行った。その内容は中東世界のアラブ人、特にアラブ人男性が野蛮且つ暴力的で嘘つきであり、「誤った」宗教である「モハメド教」を信奉して未開だというものであった。このように生産された知識はイスラム世界の劣等さの証拠として使われ、ヨーロッパによる植民地支配を正当化する政治的な機能を果たし、歴史的にイスラムの典型は「反西欧的なもの」で構成された。

このような植民歴史を背景に、イスラム嫌悪はサミュエル·ハンティントンが「文明の衝突」と表現した1990年代第1次湾岸戦争などのイスラムと西欧世界間の紛争の中で深刻化し、2001年アルカイダの9·11テロ事件で頂点に達した[5]。その後、米国のブッシュ大統領がテロとの戦いを宣言し、ヨーロッパの主要都市においてイスラムテロリストの自殺爆発事件が相次いで発生したうえ、IS（Islamic State）の暴力的な姿が2010年代半ばからメディアにより広がり、世界中にイスラムに対する否定的なイメージが広がった[6]。

イスラム嫌悪という単語が存在しなかった半世紀前、サイードが観察したイスラムに対するオリエンタリズム的見解は現時代にも有効である。イスラムは根本的に暴力的で近代性を拒否し、西欧文明とは同化せず、野蛮な教えを繰り広げるクルアーンを信奉するという「診断」は現時代のイスラム嫌悪の主な主張である。これはイスラム嫌悪が9.11以後に始まった

4) 에드워드 W. 사이드(박홍규 옮김),『오리엔탈리즘』교보문고(エドワード·W·サイド（朴ホンギュ訳）、『オリエンタリズム』。教保文庫）1995。
5) Huntington, Samuel P. 1993. “The Clash of Civilizations?” *Foreign Affairs*72(3), p.22-49.
6) 육주원·이소훈,「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을 통해 본 인종주의의 위장술」『아시아리뷰』(ユク·ジュウォン、イ·ソフン、「大邱北区イスラム寺院葛藤から見た人種主義の偽装術」『アジアレビュー』)12.1(2022):33-65。

いわゆる「テロとの戦争」という時代的特性から導き出されたというより、数世紀にもわたったかび臭い偏見に基づくという点を示している。このような観点は中東地域の安保不安を米国/西欧とイスラム世界との複雑な軍事関係と冷戦後の湾岸戦争などで経済、安保、外交方面で絡み合った問題が暴力的な戦争とテロといった様相で現れるという複合的な分析をするよりは、簡単にイスラムは本質的に暴力的な集団だと断定するのである。

シェレン・ラザック(Sherene Razack)は著書『Nothing Hasto Make Sense』で15歳でアフガニスタンで逮捕され、グアンタナモ軍事収容施設に10年間収容されたアフガニスタン系カナダ国籍の男性オマール·カディールのグアンタナモ軍事裁判を批判し、軍検事が採用した精神科専門医マイケル·ウェルナー(MichaelWelner)が使用した白人至上主義およびイスラム嫌悪的主張の誤りを指摘する[7]。ウェルナー氏は、「イスラムには近代性を受け入れる能力がないため、ムスリムが西欧社会との統合を拒否し、究極的には欧州のイスラム化を図り内戦を起こすだろうし、シャリーアを確立しようとジハード戦を計画しながらも本音を出して攻撃するまではそれなりの姿で自分を隠す」と主張した。このように西欧社会を脅かす存在であるため、ムスリムに完全な人扱いをするのは適当ではなく、彼らがイスラムを信じる以上希望はないと診断した。10年後、カーディルは結局カナダに送還され釈放された。さらにカナダ政府は以後カーディルがグアンタナモ軍事収容施設で受けた拷問と不当待遇などに介入しなかったことに対して千万ドルの賠償金を支給した。

## 白人至上主義、「ノー ゴー ゾーン」、「ケルン事態」

人種主義の根幹を成すのは「白人優越性(whitesuperiority)」に対する明示的且つ内在した表現、前提、信念である。必ずしも露骨な人種主義的表現でなくても、我々の周りのマスメディアや報道、文化的な商品がヨーロッパ、白人、キリスト教的なものは文明的でレベルが高く、善良で正しいものと想定し、それに対して有色人種の文化社会的特徴は後進的であり、立ち遅れて悪くて直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ニュアンスを漂わせることが屡々見受けられる。

人種主義の観念的影響は我が社会の奥深くに浸透しているため、ある程度の努力では完全に吹き飛ばせないのが事実であるが、韓国人のような同質集団が人種差別を受けたりすると、怒りながら猛烈に拒否したりもする。しかしながら明確な理由が分からないが、「白人より韓国人の方が優越だ」と叫ぶより「韓国も普通の西欧先進国に劣らない」というような言い方に慣れているのは、それだけ白人の優秀性に関する強い信念が心の中に内在しているからであろう。

逆説的なのは、このように自分たちに向けられた時には直ぐ拒否する人種主義的視点を、逆に他集団を評価する基準としてはよく使うということである。ラザクが批判したウェル

7) Razack, Sherene H. *Nothing Has to Make Sense: Upholding White Supremacy through Anti-Muslim Racism*.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22.

ナーの主張は、韓国社会に流布しているイスラム嫌悪の主張と非常に類似している。例えばヨーロッパにイスラム律法であるシャリーアで統治される「ノーゴーゾーン」があると伝えるニュースは非常に頻繁に見られる偽ニュースである。このようなニュースはイスラム律法である「シャリーア」が現地法を無力化させるため「無法地帯」を量産するという。一方で厳格な宗教的規律を強制するとし、他方では麻薬と犯罪が横行していると論理的につじつまの合わない主張をしたりもする。「ノーゴーゾーン」は虞犯地域を意味する言葉で、実際にヨーロッパの一部の国で使われる表現である。例えばフランスは公共住宅の比率が高く周辺化された貧困階層の密集住居地域を指し「敏感な都市区域」を意味するZUS(Zones Urbaines Sensibles)という表現を使う。このような区域にムスリムの割合が高いのは、フランス帝国がイスラム世界を植民主義統治した歴史と非常に深い関係がある。脱植民地主義の視点からジェンダー、民族、人種を研究するフランス学者ナシラ·ギュニフ(Nacira Guénif)はフランスにおいて2005年の騒乱事態の主犯として「アラブ少年(le gaŗon arabe)」が「理想的罪人(ideal culprit)」で構成されたと述べる。「アラブ少年」と彼らの抑圧対象である「ヒジャブをかぶったムスリム女性」は普遍的なフランス社会に統合されることのできないムスリム男性と女性に対するジェンダー化した想像の表象であり、彼らに対する人種主義は止揚されるべきものではなく「道徳的な(virtuous)」ものと正当化されていると主張する[8]。ムスリム男性をはじめとする褐色(brown)肌の男性を捕食者と想定し、その抑圧と暴力から罪のない褐色肌の女性を救出することは古典的に欧州の諸帝国が植民主義を正当化してきた方法なのである[9]。

自分の両親はアルジェリア出身の移民者ではなく、植民地支配を受けていたアルジェリアからフランスに強制移住された帝国市民だと訴えるグウィニフは、ポスト-植民地主義のフランス社会と植民地主義フランス社会の連結性に注目する[10]。「アラブ少年」たちは他でもない帝国市民の子孫であり、都市区域(banlieue)を中心とした騒乱事態の背景になったのは70年代以後完全雇用時代の終末をもたらしたグローバル化資本主義導入以後、雇用市場の変化と教育機会の不平等、構造的な青年失業と差別が呼び起こした社会的反響だと説明する[11]。

韓国でヨーロッパの「ノーゴーゾーン」が「イスラムのせい」という主張は、ニュースウィンというメディアのイ·マンソク牧師のコラムで2015年に初めて登場したと知られており、イ牧師はこのコラムで白人至上主義的視点に非常に友好的な米国保守言論フォックスニュースの関連ニュースをキャプチャーした写真を使用した[12][13]。このニュース報道は、フランスと英

---

8) Guénif-Souilamas, Nacira. The Other French Exception: Virtuous Racism and the War of the Sexes in Postcolonial France. *French Politics, Culture & Society. 24*(3):23-41. 2006.

9) Kiran Kaur Grewal. Racialized Gang Rape and the Reinforcement of Dominant Order: Discourses of Gender, Race and Nation. Routledge. 2017 参照。

10) Guénif, Nacira. “Beneath Integration Lie Racism and Islamophobia: A French Situated Account.” XX ISA World Congress of Sociology. International Sociological Association. Melbourne, Australia. June 27, 2023.

11) Supra Note 8.

12) 김동문, 「 [팩트체크] 전광훈 목사 “경찰도 못들어가는 무슬림 집단촌 있다”: 한국판 노고존은 실제 하는가?」(キム·ドンムン、「[ファクトチェック]チョン·グァンフン牧師 " 警察も入れないムスリム集団村がある " :韓国版ノーゴーゾーンは在するのか。)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4 NEWSTOP、2019年8月20日(最終アクセス日:2023年8月10日)

13) 이만석, 「할랄 산업 투자 전에 이슬람 율법을 알아야」(イ·マンソク、「ハラール産業投資の前にイ

国にイスラム教徒だけが入ることができ、公権力が介入しないノーゴーゾーンがあると主張した。しかし、報道後、フォックスニュースはフランス·パリ市長が告訴する意思を明らかにするなど強い批判に苦しめられ、結局は訂正および謝罪放送をしたが、このような措置は偽ニュース生産地という批判など御構い無しだったフォックスニュースのこれまでの慣行から見て非常に異例的なことである[14]。

ノーゴーゾーンの他にもイスラム嫌悪的主張を裏付ける偽ニュースは多数ある。イスラム教にはタハラッシュという「強姦文化」があるとか、「イスラムの13教理」が女性と非教徒に対して凶暴に扱うことを教えたり、スウェーデンがムスリム難民を受け入れて「強姦天国」になったなど、西欧の極右勢力が生成した歪曲されたニュースが韓国にそのまま入ってきてファクトチェックにもかかわらず流布している。

特に2015年年末、ドイツのケルンなどで新年を楽しむため広場に集まった市民に「北アフリカおよびアラブ系」男性が不適切な身体接触など性的暴行を加えたと報じられ、「ケルン性的暴行事件」の不特定容疑者としてムスリム男性が名指しされ、韓国内にも大々的に報道された。これは当時、いわゆる「欧州難民危機」でヨーロッパが積極的な難民受け入れ政策を展開すべきだと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したアンゲラ·メルケル首相の主導で中東出身難民が大挙再定住した後だったため、ケルン事態はドイツおよびヨーロッパの極右保守が人種化されたイスラム嫌悪メッセージを広めるのに滋養分となった[15]。ポーランド極右雑誌wSieciがEU旗を身にまとった金髪の女性の体が茶色の肌の腕と手に脅かされる場面を連想させる写真をカバー写真として載せ、ヨーロッパの各地で「Rapefugees Not Welcome」というプラカードを挙げた大規模集会が「Refugees Welcome」集会に代わって広場を埋め尽くした。

ケルン広場などでの性的暴行事件が話題になって間もなく、タブロイド紙性格の極右メディアを中心にアラブ文化に「タハラッシュ」という強姦ゲームがあり、このようなイスラム「固有文化」で性的暴行を説明できるという基調の説明が広まった。「タハラッシュ」という用語は、アラブの春が中東地域を襲った2011年、タヒル広場で集会を取材していた元米CBSジャーナリストのララ·ローガンが保安部隊員と推定される不審者たちに取り囲まれて集団性暴行された事件で、西欧世界に広く知られた。2015年ケルン事態以後、タハラッシュがイスラムの「民俗的」固有風習だという信念はムスリム男性は生物学的に、また宗教文化的に性的捕食者であるという証拠として使われた。

しかし、Abdelmonemらがエジプトのオンラインフォーラム議論を研究した結果を基に説明したタハラッシュの社会的意味は極右メディアの主張とは正反対のものであった[16]。

---

スラム律法を知らなければ」） http://www.newswinkorea.com/news/article.html?no=351 NEWSWIN KOREA 2015年10月29日(最終アクセス日:2023年8月10日)

14) McKey, Robert. Fox News Apologizes for False Claims of Muslim-Only Areas in England and France. https://www.nytimes.com/2015/01/19/world/europe/fox-news-apologizes-for-false-claims-of-muslim-only-areas-in-england-and-france.htmlNew York Times. 2015年1月15日(最終アクセス日:2023年4月9日)

15) いわゆる「2015年ヨーロッパ難民危機」はすでに飽和した難民再定着体系がシリア内戦など緊迫した中東の情勢不安定の中で起きた難民と移住者の需要に耐えられず危機に直面した時期を指す用語でヨーロッパ移住民危機(European migrant crisis)とも知られている。

16) Abdelmonem, Angie, Rahma Esther Bavelaar, N Elisa Wynne-Hughes, & Susana Galán.

Abdelmonemらはタハラッシュはアラビア語でいじめ(harassment)を意味し、数十年前までは性的暴力を意味する色々な意味で混用されて使われてきた。この言葉がエジプトで本格的に使われ始めたのは2000年代半ばのことで、国連など国際女性人権談論に影響を受けNGOと女性人権活動家が性的暴力に対する問題提起の手段として「セクハラ」を意味する言葉として使ったと見られる。

さらにAbdelmonemらはケルン事態の主犯としてイスラムと移住民を召還することは「イスラム教徒のいない」ヨーロッパは性的暴力から自由なところであると想定したことだと批判する。しかし、このような想像とは違って、性的暴力は欧州とドイツで頻繁に起こることである。彼らはヨーロッパ女性の3分の1が15歳以後、物理的および性的暴力を経験し、ドイツ女性の60%以上を含む15歳以上のヨーロッパ女性の大半がセクハラやストーキングを経験したと明らかにした欧州基本権機関(FRA)の2014年報告書の内容を引用した[17]。すなわち、安全なドイツと欧州を蹂躙する捕食者ムスリム男性に対する想像とは逆に、性暴力はすでに欧州内で深刻な社会問題だということである。

## おわりに　:イスラム嫌悪と韓国

韓国社会において移住民を含むイスラム教徒はその数が非常に少ない。韓国においては国際テロ事件が起きたことがなく、韓国社会とイスラム世界の歴史的交流もあまり知られていない。言い換えれば、韓国社会では最近の反イスラム感情が大々的に台頭するまではイスラムに対して知られたことは少なく、知られた内容も70年代中東オイルブーム時期の建設労働者派遣や、朝鮮戦争に参戦したトルコ軍といった肯定的なものが大半であった。したがって、突然広がったイスラム嫌悪的意識と感情は奇妙で矛盾している。

韓国でもケルン事態についてタハラッシュを以て説明することが極右言論により波のように次々と広がり、人種化されたムスリム男性の「本質的」な暴力性に対する反証として使われた[18]。時期的に2015年末、政府の益山ハラール食品団地造成団地計画に対する反対の動きがキリスト教界を中心に組織される中で、ケルン事態はこのような反イスラム感情に翼をつける格好となった。ハラール食品団地に反対する側は歪曲された偽ニュースを多く使用し、食品団地を誘致すれば「テロ」が発生し、全国が「イスラム化」され「女性の強姦被害が急増する」という非常に非論理的な主張を展開した[19]。にもかかわらず益山(プサン)、江原道

---

"The 'Taharrush' Connection: Xenophobia, Islamophobia and Sexual Violence in Germany and Beyond". *Jadaliyya*. 2016年3月1日.

17) 前掲文。

18) KBSニュース、「[팩트체크] '강간놀이'하는 무슬림이 한국 이슬람화를 꿈꾼다?」([ファクトチェック]「強姦ゲーム」をするムスリムが韓国のイスラム化を夢見る?」), 2018年7月8日。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005899(最終アクセス日:2023年4月9日; 박현도, 「인터넷에 떠도는 '이슬람의 13교리'는 사실인가?」(パク·ヒョンド、「インターネットに出回っている'イスラムの13教理'は事実なのか。」 月刊朝鮮, 2018年9月。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nNewsNumb=201809100051(最終アクセス日:2023年8月13日)

19) 원성윤, 「'할랄'단지 유치하면 IS 본거지가 된다는 기적의 논리」(ウォン·ソンユン、「'ハラール'団地

（カンウォンド）、大邱（テグ）など全国各地で食品団地誘致計画を白紙化させる驚くべき成功を収めた。このような組織とその活動の成功を土台に保守右派、キリスト教を中心とした一連の集団は2018年に500人余りのイエメン難民が済州に入国した際、大規模の難民反対集会を組織し「嫌悪」ではなく「安全」を望むという主張を繰り広げた。

本稿はイスラム嫌悪が人種主義の一因であると主張し、西欧帝国の植民主義に基づいたイスラムとムスリムに対する否定的な認識に注目した。西欧社会で生産されたイスラム嫌悪的談論が流布され共感を得る主な要因の一つは韓国社会に内在したヨーロッパなど「先進国」に対する羨望なのである。韓国で反多文化運動が社会現象として定着するようになったのは、デービッド·キャメロン元英首相などの「多文化主義失敗に対する認定」と深い関連がある。デービッド·キャメロンの「失敗宣言」はいわゆる先進国で移民者を受け入れ、多文化主義を標榜するため、韓国も多文化社会に生まれ変わ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2000年代の浅はかな論理的基盤を正面から崩した。韓国におけるイスラム嫌悪主義の台頭は、反移民を基調とした極右政治の出現と、シリアを含む中東の情勢不安によりムスリム多数の国家難民がヨーロッパに大勢流入することによって、極右政党がイスラム嫌悪を政治的に利用したことと肩を共にした。たとえ2018年イエメン難民と関連した事件が引き金を引いたが、それ以前の2015年からハラールフード産業に反対する様々な動きでその前兆が多分に感知されたのである。このため筆者は「イスラム嫌悪を止揚することが先進的なことである」という基調の言い方はむしろ人種主義の歴史性と躍動を曲解するものだと言わざるを得ない。これは人種主義が先進、文明、近代を口実にした帝国主義とそのルーツを共にするためであり、植民帝国の歴史を持つ欧州列強が白人優越性の根本から脱皮していないからである。

今日、韓国は貿易、投資、防衛産業などの方面でイスラム世界と活発な交流をしている。今後、全世界人口の4分の1以上を占めるとされるムスリムが韓国社会に一緒に住まなくなることはない。植民地支配と人種主義の対象となることに対する集団的記憶を持つ社会の一員として、また別の人種主義の対象を如何に受け入れるべきかについて批判的に考えることが必要である。そしてその結論として「全世界に優越は人種も劣等な人種もない!」と叫ぶことを希望する。

---

を誘致すればIS本拠地になるという奇跡の論理」HUFFPOST、2016年3月3日
https://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23944(最終アクセス日:2023年8月13日)

국제학술심포지엄
관동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 100년: 진실·책임· 기억

# 2000년 이후 한국 현대예술에서 역사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소고
## : 임흥순, 제인 진 카이젠, 송상희

이은정(경희대)

# 2000년 이후 한국 현대예술에서 역사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소고
## : 임흥순, 제인 진 카이젠, 송상희

이은정 (경희대)

## Ⅰ. 들어가는 글: 역사 없는 시대의 난처함

100년 전 일본에서 일어난 대학살을 기념하는 것은 어떤 방식이어야 할까? 10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을 현재라는 시점과 연결 짓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1923년 일본 관동지방에서 일어난 조선인에 대한 대학살은 해결되지 못한 미완의 과거이다. 다양한 분야의 한일 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에서 불구하고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도 아직은 이 사건을 (역사적) 정의의 심판대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부쩍 높아진 일본의 험한 감정과 역사부정론은 그때의 참혹한 살해들을 날조된 '허구'로 매도하고 있다. 곤란한 점은 그것뿐만이 아니다. 역사학계에서는, 극소수 연구자들의 꾸준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희생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자료를 찾기 어렵고 제한된 구술과 증언 자료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들을 고백한다. 100년 전의 학살이 점차 "어렴풋한 기억으로"[1]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다.

100년이라는 시간의 거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그사이 조선인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국가의 시민이 되었으며, 민주화의 열망 속에서 군부독재를 마감시켰고, 속전속결의 압축근대화를 통해서 개발도상국을 탈출했으며, 2021년에는 그렇게 목놓아 열창했던 선진국 그룹에 편입되었다. 폭풍 같은 질주였고, 미군정과 냉전체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깔아놓은 유일한 트랙을 달려나가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 과거 따위는 등에 달린 불가피한 혹이었을 뿐이다.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History has failed us, but no matter.) 2019년 혜성처럼 등장해 베스트셀러가 된 이민진의 소설 『파친고』의 첫 문장은 역사학이 말하지 않는 몇 가지의 진실을 품고 있다. 역사의 진정한 행위자들(민중)이 먹을거리라는 구체적 현실 앞에서 과거를 성찰하기보다 도망치기로 했다는 것을 말이다. 역사 또는 역사학이 맞이한 또 하나의 난관은 우리가 당도한 여기가 '역사 없는 시대'라는 점이다. 사회학자이자 시각예술 비평가인 서동진은 역사적 과거를 저장하고 있는 아카이브가 디지털 플랫폼 안에서 자신이 속했던 시간성으로부터 풀려나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채굴되고 가공되는 현상들을 분석하면서 자본주의적 시간은 '현재화된 시간만이 군림하는 오늘'을 만들었다고 지적한다.[2]

---

1) 이규수, 「관동대지진과 한인 학살-그 망각과 기억의 소환」, 『공존의 인간학』, 제5집, 2021, 228쪽.
2) 서동진, 「아카이브의 시학-역사 없는 시대의 아카이브」, 『문학과 사회』, 제34권 제2호(통권 제134호), 2021, 350쪽.